

석사학위논문

제주 4·3의 전개과정과 미군정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 5·10 선거를 중심으로 -

제주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허 호 준

2003년 6월

제주 4·3의 전개과정과 미군정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 5·10 선거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장 원 석

허 호 준

이 논문을 정치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3년 6월 일

허호준의 정치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03년 6월 일

심사위원장 인

심 사 위 원 인

심 사 위 원 인

The Study on the Process of Cheju 4 · 3 Uprising  
and the Counter Strategy of USAMGIK  
-Focusing on holding of elections on 10 May-

Ho-Joon Huh  
(Supervised by Professor Won-Seok Jang)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POLITICAL SCIENC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 DIPLOMACY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2003. 6.

## - 목 차 -

Abstract .....	iii
<b>제 1 장 서론</b> .....	1
제1절 문제의 제기 .....	1
제2절 기존연구의 검토 .....	5
제3절 연구의 범위와 자료 .....	7
<b>제 2 장 해방직후 제주도의 정치·사회경제적 상황</b> .....	11
제1절 정치적 상황 .....	11
제2절 사회경제적 상황 .....	20
<b>제 3 장 미국의 대한정책과 단정안의 유엔 결의</b> .....	29
제1절 미국의 대한정책 .....	29
제2절 미국의 단정수립 계획과 단정안의 유엔 상정 .....	31
제3절 유엔조선임시위원단의 구성과 선거참관 결정 .....	37
<b>제 4 장 5·10선거와 제주도</b> .....	41
제1절 미군정의 선거준비 과정 .....	41
제2절 유엔조선임시위원단의 선거감시 활동 .....	44
제3절 제주도의 5·10선거 실시 양상과 결과 .....	48
<b>제 5 장 미군정의 국면별 대응전략</b> .....	64
제1절 미군정의 초기 실책과 5·10선거: 1947.3-1948.5 .....	64
제2절 5·10선거의 실패와 미군정의 공세, 그리고 정부수립: 1948.5-1948.10 .....	79
제3절 초토화작전과 재선거를 위한 정치작업: 1948.10-1949.5 .....	99
제4절 마지막 토벌과 미국의 인식: 1949.5-1954.9 .....	117
<b>제 6 장 결론</b> .....	123
참고문헌 .....	126
연 표 .....	131
제주도 주둔 미군 장교 일람 .....	160

## - 표 목 차 -

〈표 1〉 제주4·3의 전개과정과 국면전환의 계기 .....	10
〈표 2-1〉 해방 전후 제주도의 인구변동 .....	20
〈표 2-2〉 1947년의 도별 추곡 수집률 .....	25
〈표 2-3〉 1947년 11월의 제주도 식량 배급현황 .....	26
〈표 2-4〉 1947-1949.7.31 도별 하곡수집(단위: t) .....	27
〈표 4-1〉 5·10선거 선거인 최종 등록 결과 .....	49
〈표 4-2〉 5월 7일-5월 11일 오후 2시의 선거관련 소요현황 .....	53
〈표 4-3〉 5월 10일의 제주지역 선거반대 활동 .....	54
〈표 4-5〉 5·10선거 후보자의 소속정당 및 득표수, 선거구별 투표율 .....	61
〈표 5-1〉 1948년 4월 인명피해 상황 비교 .....	73
〈표 5-2〉 제주도 소요 현황(1948.5.1-5.10) .....	78
〈표 5-3〉 제9연대 활동내용(1948.7.21-8.22) .....	94
〈표 5-4〉 제주도 소요현황(1948.11.1-11.20) .....	105
〈표 5-5.1〉 초토화작전시기 제9연대 일일활동 내용(1948.11.21-11.30) .....	107
〈표 5-5.2〉 초토화작전시기 제9연대 일일활동 내용(1948.12.1-12.20) .....	108

## Abstract

This thesis tries to find the level of involvement of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USAMGIK) and the government of U.S. during the process of suppression of Cheju 4 · 3 Uprising.

The successful holding of 5 · 10 election was an essential accomplishments for USAMGIK during the occupation period.

USAMGIK was designated the cause of Cheju 4 · 3 Uprising as the instigation of Communists from North Korea and Soviet Union. And U.S. press criticized Cheju Uprising as the guerrilla warfare which was instigated by Soviet Union against the separated election for the founding of South Korea.

At that time, U.S. policy toward Asia was extremely shown in the special message to the U.S. Congress recommending continuation of economic assistance to Korea in June 7, 1949.

President Truman said in this message that the Korean Republic, by demonstrating the success an tenacity of democracy in resisting communism, will stand as a beacon to the people of northern Asia in resisting the control of the communist forces which have over-run them. It meant U.S. recognized Korea as a bulwark of anti-communism in Asia.

Moreover, U.S. and USAMGIK which designated Korea as a battle ground of ideology in Asia regarded Chejudo island where the election for the founding of South Korea was only defeated as 'ideological battle ground' of the frontline in Korean peninsula .

As Cheju 4 · 3 Uprising was occurred under the slogan of objection of the separated election, Military Governor of USAMGIK, Maj. Gen. Dean decided co-operation of the Korean Constabulary and Korean Coast Guard in Chejudo island. And He dispatched Constabulary and liaison plane L-5. The control of operations was under the Chief Civil Affairs Officer(CCAO) in Chejudo, Lt. Col. John S. Mansfield.

CG, USAFIK, Lt. Gen. John R. Hodge gave Lt. Col. Mansfield instructions for the suppression of Cheju 4 · 3 Uprising.

After the failure of the election in Chejudo, FEC dispatched the destroyer USS Craig near off Chejudo island. Even they concerned the use of fighters if the situation was more deteriorated.

Col. Rothwell H. Brown was named as the chief commander in Chejudo. During his time in Chejudo, About 5,000 Cheju islanders were randomly arrested by the constabulary.

His assignment in Chejudo was the intention of USAMGIK for the stern suppression of Cheju 4 · 3 Uprising and revival of U.S. prestige by the holding of by-election.

Despite of the stern operations by USAMGIK, the 6 · 23 by-election was postponed indefinitely because of guerrilla's activities.

Gen. Dean instructed all the government departments to give Chejudo high priority in their considerations. And He assured CCAO of 59th Military Government, Major, Edgar A. Noel that every effort will be made to secure for Chejudo its share of available means. After Chief of KMAG, Brigadier Gen. William L. Roberts was informed by his junior advisor about Chejudo situation, he ordered his junior to go down Chejudo right now. So, Chejudo 4 · 3 Uprising was very serious problem to the officials of USAMGIK.

G-2, USAFIK knew the 9th Regiment, Korean Army adopted the program of mass slaughter among civilians. U.S. Army advisor who stayed in Chejudo at that time knew that CO of 9th Regiment, KA regarded inland areas in Chejudo as enemy area before the start of the scorched-earth operation.

But They didn't resist 9th Regiment activities. Even the Chief of KMAG, Roberts appraised CO of 9th Regiment was done his job very well. It means U.S and USAMGIK was backed the massacre of Chejudo islanders at least.

Cheju 4 · 3 Uprising was ended when Cheju Police Headquarters announced the lift of ban to climb up to Mt. Halla in September 1954.

In conclusion, we can consider that U.S. and USAMGIK regarded South Korea as bulwark of anti-communism in Asia. So the failure of 5 · 10 election in Chejudo for the founding of South Korean was shock to U.S. and USAMGIK.

In spite that they knew the mass slaughter by the 9th Regiment and genocide by rightist groups in Chejudo, they did not resist such illegal and cruel activities. All what they did in this situation was to appraise activities of 9th Regiment. What does this mean?

It means that their purpose was to eliminate the communists forces in Chejudo and make South Korea as the frontline against Soviet Union.

But, in the process of the suppression on guerrillas in Chejudo, more that 30,000 Chejudo islanders including children and old people were killed.

# 제 1 장 서 론

##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미국은 전후 질서의 재건이라는 임무에 직면하면서 소련과 대결상태에 돌입하였고 세계는 동서 두 진영으로 분열되었다. 미국은 협상보다는 힘의 대결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정책방향을 결정하였다.<sup>1)</sup> 이에 따라 1947년 3월에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됐고, 같은 해 6월에는 마샬플랜, 7월에는 봉쇄정책 등이 쏟아져 나왔다.<sup>2)</sup>

트루먼 행정부는 중국 내전, 그리스와 터키 사태 등 국제정세의 악화와 국방예산의 삭감으로 초래된 외교정책의 목표와 가용자원간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새로운 대외전략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조지 케난(George F. Kennan)의 봉쇄전략이 트루먼 행정부 대외전략의 기본지침으로 채택되었다.

트루먼 독트린과 봉쇄전략에 의해서 냉전은 공식화되었고, 미국의 대소정책은 마샬플랜과 결합되어 러시아의 팽창주의에 대한 적극적인 저지에 초점을 맞추었다.<sup>3)</sup> 트루먼식의 접근법은 미국식의 가치와 정치체도를 공유하고 선호하는 모든 국가를 미국의 동반자로서 간주하는 것이었으며 그 결과 현실적으로 미국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부를 거의 전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sup>4)</sup>

- 
- 1) 국무성 정책기획국 국장 조지 케난(George F. Kennan)은 1948년 2월 24일의 'PPS 23'에서 '힘'이라는 개념으로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대가 머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단지 세계 인구의 6.3%로 전세계 부의 50%를 불균등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인은 감상적인 백일몽에 빠져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호응을 받는다거나, 고차원적인 국제적 이타주의의 본산이라고 생각하는 동경심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형제를 돌보는 입장에서 벗어나야 하고, 도덕적이고 이념적인 권고도 삼가야 한다. 또한 극동에서 모호하고 비현실적인 목표, 즉 인권, 생활수준 향상, 민주화 등에 대해 말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 이제, 오직 힘이라는 개념으로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대가 머지 않았다. 그때는 우리가 이상주의적 슬로건에서 더 자유로울수록 목적하는 바를 더욱 쉽게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PPS 23, February 24, 1948, *FRUS*, 1948, Vol I, Part 2, pp. 523-526, 김철범, 『한국전쟁과 미국』(서울: 평민사, 1990), 152쪽; 노암 촘스키는 전세계에서 일어난 저항운동의 진압사태 가운데 하나로 제주4·3을 들고 있다. 노암 촘스키 지음, 김보경 옮김,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서울: 한울, 1996), 22-25, 33-34쪽; 노암 촘스키는 필자에게 제주4·3에 대한 지속적이고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역사의 현장인 제주도를 방문하고 싶다고 밝혔다. 노암 촘스키가 필자에게 보내온 메일, 2003년 6월 10일.
  - 2) 존 메릴 지음, 신성환 옮김, 『침략인가 해방전쟁인가: 한국전쟁의 국내적 배경 1948-1950』(서울: 과학과 사상, 1988), 104쪽.
  - 3) 오재완, 『미국의 대한정책과 미군정의 국내 정치적 역할: 1945-1948』, 고려대 정치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1, 160-164쪽.



냉전시대에 유럽과 아시아지역에서는 반공주의의 이름으로 민간인 학살이 자행됐다. 그리스에서는 미군의 개입 하에 16만여명의 목숨을 앗아갔으며<sup>5)</sup>, 타이완에서는 '2·28사건'과 '1950년대 백색테러'가 일어나 수만명이 살해되거나 투옥되었고<sup>6)</sup>, 오키나와<sup>7)</sup>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줄곧 미군의 대아시아 전략기지로서 역할<sup>8)</sup>을 강요당하면서 미군에 의한 재산 및 인권침해사례가 종종 발생하였다.<sup>9)</sup>

트루먼 행정부의 아시아정책은 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세력균형의 회복과 대항세력 육성에 목표를 두었으나 소련이 미국의 외교적 압력에 굴하지 않자 한반도의 경우 남한만의 단독정권 수립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략은 미군철수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남한과 이승만 정권을 봉쇄의 도구로 활용하는데 의의가 있었다.<sup>10)</sup> 이는 미국의

- 
- 4) 제임스 I. 매트레이 지음, 구대열 옮김, 『한반도의 분단과 미국-미국의 대한 정책, 1941-1950』, 을유문화사, 1989, 50쪽.
- 5) 노암 촘스키, 앞의 책, 32쪽: 그리스(1946-1949)에서는 나치가 몰려간 뒤 영국이 부패정권을 강요해 저항운동을 불러일으켰다. 전후 이미 사양길에 들어선 영국이 이를 진압할 수 없게 되자 미국이 군사적, 경제적 원조, 그리스 군대에 대한 강력한 통제 등으로 개입했다. 그리스 상황에 대한 자세한 글은 스피로스 소포스의 '그리스 내전과 잃어버린 세대', 『역사비평』 통권 42호, 1998 봄호 참조, David H. Close, *The Origins of The Greek Civil War*(New York: Longman, 1995)
- 6) 타이완의 '2·28사건'은 1947년 2월 27일 민중들이 밀수 단속반원들이 민간인을 폭행치사한 데 불만을 품어 일어난 사건으로 장제스의 본토정권이 타이완 원주민에 대한 무차별 살륙작전으로 3만-4만명이 희생됐다. '1950년대 백색테러'는 한국전쟁 발발 뒤 미국의 원조·군사고문단, 중앙정보국(CIA) 등이 들어오면서 타이베이 정부가 타이완 전지역에서 정치적 '혐의자'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작전을 벌인 사건이다. 타이완 사건에 대한 개요는 리영희, 「2·28 대학살의 진상」, 『제민일보』 1993년 6월 2일; 2·28사건의 배경과 전개과정, 피해상황, 구출활동 등에 대해서는 臺灣 行政院 小組, 『二二八事件 研究報告』(臺北: 時報文化出版企業, 1994) 참조. 쟁지엔민은 타이완에서 동아시아 냉전의 역사를 미국의 냉전전략에 있어 타이완과 중국 사이에 분리와 대치라는 상태를 만들어내고 유지함으로써 그 속에서 막대한 이득을 취한 역사라고 규정했다. 쟁지엔민, 「타이완에서의 미국 50년」, 동아시아 평화인권 한국위원회, 『동아시아와 근대의 폭력1』(서울: 삼인, 2001), 56-78쪽.
- 7) 맥아더(MacArthur)는 조지 케난(George F. Kennan)과의 대화에서 "동아시아지역에서 오키나와가 최전방이고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며 "오키나와를 기점으로 하면 예상되는 상륙작전이 전개될 수 있는 동북아시아의 모든 항구를 손쉽게 통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Conversation between General of the Army MacArthur and Mr. George F. Kennan, March 5, 1948, *FRUS*, 1948, VI, pp. 699-706.
- 8) 1948년부터 1949년에 걸쳐 미국 정부는 오키나와를 분리·지배한다는 군부의 구상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군부의 생각은 한 발 더 앞서 있었다. 1949년 7월 4일, 맥아더는 미국 독립기념일에 즈음하여 '일본은 공산주의의 방패'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일본을 반공의 방패로 삼는 미 군부의 정책에는 세 기둥이 있다. 첫째, 일본을 재무장시키는 것, 둘째, 일본 전 지역을 미 군사기지로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 셋째, 일본에서 오키나와를 분리하여 세계전략의 거점으로서 지배하는 것이 그것이다. 아라사키 모리테루 지음, 김경자 옮김, 『또하나의 일본 오키나와 이야기』(서울: 역사비평, 1998), 75-77쪽.
- 9) 1952년 미국의 대일평화조약 발효에서부터 1956년 6월 이후의 '섬 전체 투쟁'에 이르는 4년 동안 오키나와에서는 미군의 무력을 동원한 강제 토지점수, 정당활동 탄압, 주민에 대한 폭행이나 살해가 제멋대로 자행됐다. 이에 대해서는 아라사키 모리테루, 위의 책, 72-126쪽 참조.

군사비 지출을 줄이고 아시아에서의 반공보루로 한국을 활용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아시아 이념대결의 장<sup>11)</sup>인 한국의 제주도에서 발생한 4·3도 이런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의 전형적인 사례다. 존 메릴(John R. Merrill)은 4·3 당시 일어난 수많은 인명 피해와 관련해 “미국의 점령에 대한 이러한 폭력적 민중저항은 전후 어느 곳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sup>12)</sup>

본 연구의 출발은 “왜 한반도의 최남단에 있는 제주도에서 대량학살로 귀결된 치열한 ‘폭력적 민중저항’이 발생했는가”라는 의문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데 있다.

4·3의 성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세계적 냉전의 전개과정과 미군정의 실정(失政), 한국사회의 성격과 제주도의 정치·경제적 상황 등을 총체적으로 고찰해야 한다.<sup>13)</sup> 특히 4·3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민간인 대량학살과 5·10선거의 상관관계, 그리고 이에 대한 미군정의 정책을 살펴봐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4·3 발발의 직접 원인은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위해 1948년 5월 10일 치러진 이른바 ‘5·10선거’의 반대였다. 이 선거는 해방 3년사의 정치과정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의 의의를 갖는 정치적 사건이었다.<sup>14)</sup> 미군정은 5·10선거를 한반도 점령기간 중에 수행하게 될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였다.<sup>15)</sup> 그러나 이런 미국과 일부 국내 정치세

---

10) 오재완, 앞의 글, 162-163쪽.

11) 한국이 아시아에서 미·소의 이념대결의 장이라는 주장은 트루먼 대통령과 국무성 고위관리들에 의해 언급되고 있다.

트루먼 대통령은 1946년 7월 16일 에드윈 폴리(Edwin W. Pauley) 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의 상황에 관한 폴리의 1946년 6월 22일자 서한과 관련해 그의 서한 가운데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본인은 귀하가 아시아에서 우리의 전체 성공이 달려있는 이데올로기의 전장터라는 데 대해 의견을 같이한다”고 언급했다. President Truman to Ambassador Edwin W. Pauley, July 16, 1946, *FRUS*, 1946, VIII, p. 713.

3성조정위원회(SWNCC)에 제출된 한국문제특별위원회의 보고서에는 “미국은 현재 한국에서 필연적으로 공산화가 될 여건 때문에 철수할 수 없다. 이에 따른 정치적 영향은 극동뿐 아니라 전세계에서의 ‘미국의 위신’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국내외적인 공산주의 압력을 저지하기 위해 그들을 지원하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소국가들에게도 좌절을 줄 것이다”고 언급하고 있다. SWNCC 176/30, Report by Ad Hoc Committee on Korea, August 4, 1947, *FRUS*, 1947, VI, pp. 738-741.

12) John R. Merrill, *The American Occupation of Korea*, 『한국현대사와 미군정』(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91), 53-54쪽.

13) 강성현, 『제주4·3학살사건의 사회학적 연구』, 서울대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2, 2쪽.

14) 이기명, 『5·10선거의 전개과정과 국내 정치세력의 대응』, 연세대 정치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0, 123-124쪽.

15) 하지 중장은 산하 지휘관들에게 보낸 전문을 통해 5·10 선거는 우리의 점령기간에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며, 선거의 성공은 미합중국 사절단의 성과에 핵심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Inclosure No. 1, Telegram, Hodge to CG, 6th Division, 7th Division, Military Government, Korea Base Command. April 2, 1948, Despatch No. 85, Subj: Orders Issued by USAFIK and USAMGIK Regarding South Korean Elections, Jacobs to the Secretary of State, April 9, 1948.

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남한에서 유일하게 5·10선거가 실패한 지역으로 남게 되었다. 이는 '4·3'의 여파로 정상적인 선거를 치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4·3 주도세력들의 입장에서 볼 때 4·3의 발발은 5·10선거 저지가 1차적인 목표였으며, 미군정의 입장에서는 5·10선거의 실패가 민간인 대량학살을 초래한 강경진압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4·3 전개과정과 5·10선거의 실시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제주도 유사 이래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4·3의 전개과정 중심부에는 남한의 유일정부라고 자처했고<sup>16)</sup> 정부 수립 이후에도 작전권<sup>17)</sup>을 갖고 있던 미군정과 미국이 자리잡고 있었다. 미군정은 한반도정책에 있어서 '좌익의 강력한 근거지'<sup>18)</sup>인 제주도에 대한 진압의 강도를 다른 지방과 차별화하였다.

본 연구는 5·10선거에 대한 미군정과 미국의 인식 및 대응관계를 중심으로 4·3의 전개과정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제와 관련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물음을 초점을 맞출 것이다.

첫째, 미국은 냉전 상황 속에서 '4·3'을 어떻게 인식했고 대응했는가? 이는 미국의 한반도정책의 일부로서 제주 4·3의 진압정책을 봉쇄정책의 연장선 속에서 규명하는 문제이다.

둘째, 미국과 미군정은 제주도 5·10선거의 성공적 실시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가? 이것은 미국과 미군정이 남한 단독정부의 성공적인 수립을 위해 동원했던 모든 수단들을 밝혀내는 일이다.

셋째, 미국과 미군정은 제주도 5·10선거가 실패하자 어떻게 대응했는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5·10선거가 실패한 데 대해 당혹한 미군정이 재선거의 성공을 위해 강력한 초토화작전을 채택했으며, 이것이 민간인 대량학살을 초래했다는 가설을 이곳에서 검토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는 제주 4·3 당시 민간인 대량학살에 대한 미군정 및 미국의 개입 수준을 살펴보기 위한 시도이지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를 찾아내지 못했음을 토로한다. 초토화작전 등에 대한 미군정 및 미국의 방침을 기록한 문서를 발굴해 보다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은 다음 연구자들의 몫으로 넘긴다.

---

16) 『매일신보』 1945년 10월 11일.

17) 정부 수립 후인 1948년 8월 24일 이승만 대통령과 하지 주한미군사령관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주한미군사령관간에 체결된 과도기에 시행될 군사안전에 관한 행정협정'을 맺었다. 이 협정의 제1조는 "주한미군사령관은 본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또한 자기의 직권 내에서, 현존하는 대한민국 국방군을 계속하여 조직, 훈련, 무장할 것을 동의한다. 단 동사령관의 이에 대한 책임은 군대의 한국 철퇴와 동시에 종료한다"고 돼 있다. 강성철, 『주한미군』, 일송정, 1988, 164-166쪽.

18) 제주도의 좌익에 대한 여러 보고는 좌익분자들이 제주도 인구의 60-80%에 이르고 있다고 언급되어 있다.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489, 26 March 1947.

## 제2절 기존연구의 검토

제주 4·3에 대한 연구는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전에는 반공이데올로기의 편향성으로 인해 역사적 진실에 대한 접근 자체가 가로 막혀 있었다. 6월 항쟁을 시점으로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민주화 물결이 분출되면서 4·3에 대한 학문적 접근도 이뤄지기 시작했다. '폭동론'<sup>19)</sup> 이외에는 논의 자체가 금기시됐던 4·3의 학문적 연구도 민주화의 물결 속에서 1980년대 말 이후 새로운 시각으로 다양한 접근을 통해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다.

민주화 이전의 시기에 4·3을 다룬 주목할만한 글은 우선 김봉현·김민주의 자료집<sup>20)</sup>을 들 수 있다. 4·3 참여자들이 4·3이 끝난 지 10여년만에 펴낸 이 책은 4·3을 미제국주의와 우익진영에 대한 남조선 해방운동의 일환으로 파악하고 있다. 4·3 당시 일본으로 건너간 관련자들의 증언과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작성된 이 책은 당시 좌익세력의 역량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이 책은 무장투쟁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바람에 인명피해의 당위성을 정당화하는데 어느 정도 일조하는 측면도 있다.

이와 함께 우익적 관점에서 기술한 김점곤의 『한국전쟁과 노동당 전략』(서울: 박영사, 1973)과 수정주의적 관점에서 쓴 존 메릴의 *The Chejudo Rebellion*<sup>21)</sup>이 있다. 김점곤은 4·3을 남로당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폭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는 '4·3폭동'이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주도당이 독자적으로 봉기한 무장투쟁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국내외를 통틀어 학술적 성격의 첫 논문인 존 메릴의 글은 미국 국립문서보존기록관리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에서 1975년 제정된 미국의 정보공개법(FOIA)에 따라 비밀해제된 당시 주한미군사령부 및 군정청 문서를 활용해 작성되었다. 존 메릴은 이 글에서 4·3이 제주도민의 자발적인 민중봉기로 시작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는 38선 이남 지역만의 단독선거를 저지하려던 남로당의 운동이 발전된 형태로 나타난 것이긴 하지만 남로당 제주도위원회의 독자적인 군사 지도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제주지역의 고립주의적인 성격과 농민봉기, 일제하 일본으로 갔던 제주 출신들에 의한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 등을 4·3의 원인으로 꼽고 있으나 해방 이후 좌익에 대한 우익의 탄압, 3·1절 기념식 이후의 대대적인 검거선풍과 이에 따른 민심 이반 등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19) 김점곤, 『한국전쟁과 남로당 전략』(서울: 박영사, 1973) ; 고문승, 『박헌영과 4·3사건』(제주: 신아문화사, 1991). 그리고 국방부 등 대부분의 관변자료가 이러한 시각을 반영한다.

20) 김봉현·김민주(공편), 『제주도 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자료집』(大阪: 文友社, 1963).

21) 존 메릴의 이 논문은 1975년 하버드대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나온 것이지만 국내에 알려지기는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2(1980)가 나온 한참 뒤인 1980년대 후반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1987년 이후 4·3과 관련한 논문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 양한권의 논문<sup>22)</sup>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4·3의 학문적 논의에 불을 당겼다는 점에서 기록할만하다. 그에 따르면 제주도민들은 조선말 봉건정부의 수탈과 외세의 침탈 등에 신음해왔는데, 이에 맞서 격렬히 저항해온 농민봉기의 경험과 해방 당시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 등이 4·3의 배경을 형성하게 됐다. 이러한 상황을 물리력으로 억압한 미군정의 정책실패가 항쟁을 일으킨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다.

박명림의 논문<sup>23)</sup>은 4·3을 전반적으로 다룬 주목할만한 논문으로서 사건을 민중항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는 이 논문에서 4·3이 통일민족국가 수립하려는 통일운동의 성격과 미국의 제국주의적 점령정책에 반대하는 반미투쟁이라는 두 개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으며 미군 점령기에 일어난 항쟁 가운데 가장 조직적인 투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양정심의 논문<sup>24)</sup>은 과거의 4·3에 대한 포괄적 논의에서 벗어나 4·3 주도세력, 즉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를 연구주제로 삼고 있다. 이 논문에서 그는 남로당 제주도위원회가 3·1절 발포사건, 3·10총파업 등의 대중투쟁 속에서 어떻게 도민들과 결합해 나갔으며 4·3봉기라는 무장투쟁노선으로의 전술적 변화에 있어서 역할은 무엇인지를 고찰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4·3 연구논의에서 빠뜨릴 수 없는 역작은 『제민일보』 4·3특별취재반이 펴낸 『4·3은 말한다』 전5권이다. 이 책은 지역 일간지가 갖고 있는 인적,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10여년에 걸쳐 4·3 진상규명 작업의 하나로 추진한 연재물 <4·3은 말한다>를 묶은 것이다.<sup>25)</sup> 『제민일보』는 이 작업을 통해 초토화작전의 실상과 미국의 개입 여부를 국내외 자료와 증언 등을 통해 4·3의 전모를 밝히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이 연재물은 4·3의 시기구분으로 1945년 8월 15일부터 한라산 금족(禁足)지역이 전면개방된 1954년 9월 21일까지를 10기로 나눠 학술적 성과와 방대한 국내외 자료, 6천여명에 이르는 증언을 종합해 실증적으로 4·3을 분석하고 있다.

제주4·3 제50주년 기념사업추진 범국민위원회가 펴낸 『제주4·3연구』(서울: 역사비평, 1999)는 정치학과 역사학, 법학, 의학, 문학, 인류학 등의 각 분과 학문의 연구자들이 참여해 종합적인 학문적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sup>26)</sup>

22) 양한권, 『제주도 4·3폭동의 배경에 관한 연구』, 서울대 정치학과 석사학위 논문, 1988.

23) 박명림, 『제주도4·3민중항쟁에 관한 연구』, 고려대 정의과 석사학위 논문, 1988.

24) 양정심, 『제주4·3항쟁에 관한 연구-남로당 제주도 위원회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5.

25) 『4·3은 말한다』는 1990년 6월 2일부터 1999년 8월 28일까지 456회에 걸쳐 연재됐다.

26) 『제주4·3연구』에 나와있는 논문은 다음과 같다.

김인덕, 「1920년대 후반 재일제주인의 민족해방운동」; 양점심, 「주도세력을 통해서 본 제주4·3항쟁의 배경」; 서중석, 「제주4·3의 역사적 의미」; 김순태, 「제주4·3당시 계엄의 불법성」; 정해구, 「제주4·3항쟁과 미군정 정책」; 임대식, 「제주4·3항쟁과 우익청년단」; 김성례, 「근대성과 폭력: 제주4·3의 담론정치」; 김재용, 「폭력과 권력, 그리고 민중」; 황상익, 「의학사 측면

문순보의 논문<sup>27)</sup>은 4·3의 원인과 제주도민 피해, 4·3의 성격을 미군정의 정책과 관련시켜 '미군정의 대제주도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했다. 미군정의 물리적 탄압이 좌익의 섬이라는 지역적 편견을 바탕으로 수행됐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한정책, 더 나아가 아시아정책과 4·3 진압의 유기적 관계를 밝히는데 있어 구체적인 논거 제시가 아쉽다.

기존의 논의는 대체적으로 4·3의 전반적인 전개와 그 배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무력진압에 따른 인명피해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1948년의 5·10선거와 미군정의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4·3을 분석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1948년 5월 10일의 선거가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실패한 뒤 미군정과 미국은 4·3의 심각성을 인식했고, 재선거의 성공을 위해 강력한 진압정책을 실시하기에 이른다는 가설에 입각하여 4·3, 5·10선거, 미군정과 미국 정부의 대응정책의 상관관계를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을 강조했던 미국이 제주도 4·3 전개과정에 있어서의 제주도민 학살에 대한 개입의 수준을 밝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 제3절 연구의 범위와 자료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물들이 소홀히 다루어 온 제주도 5·10 선거에 대한 미군정의 인식과 그것이 4·3의 전개과정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자료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미군정의 제주도 5·10선거에 대한 인식의 문제를 연구 주제로 택한 것은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 4·3 당시 제주도민 학살에 대한 미국의 개입수준을 살펴보고자 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4·3의 도화선이라고 할 수 있는 3·1절 발포사건이 일어난 1947년 3월 1일부터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1948년 5월 10일의 이른바 '5·10선거'가 실패한 뒤 이듬해인 1949년 5월 10일 실시된 재선거까지의 시기이며, 필요에 따라 그 전후의 시기도 살펴보겠다. 공간적 범위로서 제주지역의 정치적 상황뿐만 아니라 미국의 한반도정책과 동아시아의 정책까지도 검토될 것이다.<sup>28)</sup>

---

에서 본 4·3; 김종민, 「4·3 이후 50년」; 박명림, 「민주주의, 이성, 그리고 역사연구: 제주4·3과 한국현대사」

27) 문순보, 『제주민중항쟁의 원인과 성격-미군정의 대제주도 정책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1.

28) 존 메릴은 제주도 반란이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하는 민족주의 운동들이 식민지 구조를 다시 강요하려는 시도에 대한 저항으로 제2차 대전 이후 아시아 사회에서 폭발된 수많은 봉기 가운데 하나였다고 말했다. John R. Merrill, 앞의 글, pp. 53-54.

본 연구는 국내자료로서 당시 신문과 잡지<sup>29)</sup>, 각종 개인과 단체의 기록을 참조하였다. 또한 방송사의 4·3관련 특집 프로그램도 참조하였다.<sup>30)</sup>

이와 함께 미군정의 대응전략이라는 주제의 특성상 미군의 각종 보고서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가장 기본적인 자료는 주한미군 정보참모부(G-2)의 정보보고서<sup>31)</sup>, 방첩대(CIC)문서<sup>32)</sup>, 남조선과도정부 활동보고서<sup>33)</sup>, 브라운문서<sup>34)</sup>, 주한미군정청문서, 주한미군 사고문단 문서<sup>35)</sup>, 극동군사령부 문서<sup>36)</sup>, 국무성 문서<sup>37)</sup> 등이다. 이외에도 점령당국의 공식적 사료라고 할 수 있는 『주한미군사』<sup>38)</sup>와 『미군정청 관보』<sup>39)</sup> 등이 있다. 이들 문서들은 상당부분 국내에서 영인<sup>40)</sup>돼 있으나 일부 문서들은 미국립문서기록보존관리청과 맥아

29) 1945년부터 1954년까지의 제주도 상황과 4·3관련 기사를 망라한 자료집은 제주4·3사건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이하 제주4·3위원회), 『제주4·3사건 자료집: 신문편』 제1-3권(2001-2002)으로, 이 자료집에 실린 신문은 20개 중앙지 및 제주지역 일간지 『제주신보』와 전남지역 일간지 『동광신문』 등 2개 지방지다. 또 4·3 당시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신문 자료집은 『한국현대사 자료총서』(서울: 돌베개, 1986), 『제주신보』(제주4·3연구소 영인본, 1991), 『해방공간신문자료집』(선인문화사, 1996), 국사편찬위원회, 『자료 대한민국사』 제1-7권(서울: 탐구당, 1968-1974), 제8-9권(서울: 유일상사, 1998)에 수록돼 있다.

30) '일본으로 간 4·3영혼', 제주문화방송, 2001년 5월 10일 방송.

31) Hq. 6th Inf Div, G-2 Periodic Report; Hq. 7th Inf Div, G-2 Periodic Report;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Hq. USAFIK, G-2 Weekly Summary.

32) Hq. CIC, USAFIK, Memorandum: Weekly Information Bulletin; Semi-Monthly Report; Monthly Information Report; Summary of Information.

33)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USAMGIK), *South Korea Interim Government Activities*, Prepared by National Economic Board.

34) The Rothwell H. Brown Papers, U.S. Army Military History Institute.

35) Hq. KMAG, G-2 Periodic Report, letter.

36) GHQ, FEC, Summation of Non-Military Activities in Japan and Korea.

37) 국무성 문서들은 미국 국립문서보존기록관리청(NARA)의 '국무성 심진분류 문서철'에 따른 『740.00119 Control(Korea)』, 『895.00』, 『895.50』, 『501.BB Korea』 시리즈 등이 있다.

38)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 (HUSAFIK)*, Compiled under the supervision of Harol Larson, chief historian, Tokyo and Seoul, 1947, 1948. Manuscript in the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Washington, D.C.

39)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Official Gazette*(이하 미군정청 관보).

40) 해방공간의 미군정 문서와 미국무성 문서 등이 국내에 입수돼 영인된 자료집은 다음과 같다. 『주한미군사 HUSAFIK』 전4권(서울: 돌베개, 영인본, 1988); 『주한미군정보일지 G-2 Periodic Report』 전7권(강원: 한림대 아시아문제연구소, 1988-89); 『지방미군정자료사』 전3권(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편, 서울: 경인문화사, 1989); 『미군사고문단 정보일지 G-2 Periodic Report』 전2권(강원: 한림대 아시아문제연구소, 1989); 『주한미군북한정보요약 Intelligence Summary Northern Korea』 전4권(강원: 한림대 아시아문제연구소, 1989); 『주한미군정보일지 G-2 Periodic Report』 부록(강원: 한림대 아시아문제연구소, 1990); 『주한미군주간정보요약 G-2 Weekly Summary』 전5권(강원: 한림대 아시아문제연구소, 1990); 『미군정 활동보고서 Summation of U.S. Military Government Activities in Korea』 전6권(이길상편, 원주문화사, 1990); 『미군정청 관보 Official Gazette』 전4권(서울: 원주문화사, 1993); 『해방 전후사자료집』 전3권(이길상편, 서울: 원주문화사, 1993); 『한국분단사자료집』 전8권(신복룡

더기념관, 미육군 군사연구소 등에 소장돼 있다. 이들 국내의 자료는 기록자의 관점과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인식에 있어서 한계를 갖고 있지만 1차 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검토될 것이다.

4·3을 체험한 당사자들과 4·3 주도세력과 진압세력의 증언 역시 4·3 연구의 중요한 자료임에 틀림없다. 4·3 당시 제주도에서 근무했던 미군 고문관들의 증언을 포함해 국내외 관련자들의 증언들이 신중히 검토될 것이다.

본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된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4·3의 전사(前史)로서, 이의 배경이 되는 해방후 제주도의 정치·사회경제적 상황을 다룰 것이다. 제1절에서는 해방 이후 제주지역의 정치적 상황을 다룰 것이고, 제2절에서는 일제 강점기 때보다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사회경제적 상황을 살펴보겠다. 제3장에서는 5·10선거와 관련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분석하겠다. 여기서는 반공 교두보의 구축을 목표로 했던 미국의 한반도정책과 5·10선거를 위한 미군정과 유엔조선임시위원단의 선거준비 과정을 검토하겠다. 제4장에서는 이러한 5·10선거가 제주도지역에서는 어떻게 전개됐는지 살펴볼 것이다. 5·10선거의 진행과정과 급박했던 미군정의 대응 및 선거결과 등을 검토할 것이다. 제5장은 본 연구의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 4·3의 전개과정을 4개 시기로 나눠 시기별 국면전환의 계기와 이에 따른 미군정의 인식과 대응전략을 고찰할 것이다.

3·1사건으로 시작된 제1국면은 미군정의 정책실패로 5·10선거가 실패한 것을 계기로 제2국면으로 전환되었으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계기로 제3국면으로 전환되었다. 제3국면은 주한미군의 철수와 유엔의 남한 정부 수립 승인, 1949년의 5·10 재선거 실시 등이 이루어진 시기이며, 이 때 '공산주의자 섬멸'을 명분으로 대량학살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제4국면은 선거가 끝난 이후의 시기로 마지막 토벌기에 해당된다.

---

편, 서울: 원주문화사, 1993); 『해방 직후 정치사회사자료집』 전12권(정용욱편, 서울: 다락방, 1994); 『해방 전후 미국의 대한정책사자료집』 전13권(정용욱·이길상편, 서울: 다락방, 1995); 『미국무성 한국관계문서 Records of the U.S. Department of State relating to the Internal Affairs of Korea, 1945-1949』 전23권(서울: 아람출판사, 1995); 『시민·소요 여론조사 보고서』 전2권(강원: 한림대 아시아문제연구소, 1995); 『노동관련보고서』(강원: 한림대 아시아문제연구소, 1995); 『하지(John R. Hodge)문서집』 전3권(강원: 한림대 아시아문제연구소, 1995); 『CIC(방첩대) 보고서』 전3권(강원: 한림대 아시아문제연구소, 1995); 『질레트(F. E. Gillette)보고서 전범대재판기록』 전2권(강원: 한림대 아시아문제연구소, 1996); 『합동참모본부 기록 Records of Joint Chiefs of Staff』 전31권(서울: 아람출판사, 1996); 『주한미국 대사관 주간보고서 JOINT WEEKA』 전8권(서울: 영진, 1997); 『미국 극동군사령부 G-2 일일정보요약』 전10권(강원: 한림대 아시아문제연구소, 1999); 『KLO·TLO문서집:미국동군사령부 주한연락사무소』 전3권(강원: 한림대 아시아문제연구소, 2000); 『한국현대사자료집성』 전50권(국사편찬위원회, 1994-2000)



〈표 1〉 제주4·3의 전개과정과 국면전환의 계기

국면	시기	국면전환의 계기
제1국면	1947.3-1948.5	←3·1절 발포사건 ←극우파 유해진의 제주도지사 부임 ←4·3 봉기
제2국면	1948.5-1948.8	←5·10선거 실패 ←6·23재선거의 무기연기 ←남한 단독정부 출범
제3국면	1948.8-1949.5	←주한미군 철수와 여순사건 ←제주도 5·10재선거
제4국면	1949.5-1954.9	←마지막 토벌기

## 제 2 장 해방직후 제주도의 정치·사회경제적 상황

### 제1절 정치적 상황

한반도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미군과 소련군이 분할 점령하기로 규정된 일반명령 제1호에 따라 맥아더는 미군 점령지역에 진주할 부대를 선발하고 점령을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존 하지(John R. Hodge)<sup>1)</sup> 중장 휘하의 제24군단은 맥아더의 명령에 의해 38도선 이남의 점령군으로 결정됐다.<sup>2)</sup> 제24군단은 1945년 9월 8일 인천에 상륙하자마자 미국 태평양 방면 육군총사령관 맥아더 장군의 9월 7일자 포고 제1호에 따라 '재조선 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이하 미군정청)을 수립했다.<sup>3)</sup>

이에 앞서 8월 15일 일제의 항복이 발표되자 여운형과 안재홍을 중심으로 한 국내세력은 '자주적 민족국가 건설'을 목표로 일제 강점기의 통치기능을 떠맡을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이하 건준)를 수립하고 신속하게 전국조직을 건설해 나갔다.<sup>4)</sup>

조선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의 성립을 전후해 남한 각 지방에서도 지방 인민위원회가 단기간에 조직됐다. 10월까지 남한 일대에 기존 행정체계를 따라 7도, 12시, 131군<sup>5)</sup>에

1) 존 하지(John R. Hodge)(1893-1963). 일리노이스주 풀콘다 출신. 남일리노이스 교육대학과 일리노이스대학 졸업. 1917년 보병 예비군에 소위로 임관. 제1차 대전중인 1918-1919년 프랑스와 룩셈부르크에서 근무. 1942년 제25사단 부사단장(준장)으로 과달카날에서 근무. 1943년 피지 열도 미국사단 사령관(소장)으로 근무. 1944년 필리핀 작전에서 태평양 중부지역 제24군단 사령관으로 근무. 1945년 봄 오키나와 공격(중장). 1945년 9월 제24군단장겸 주한미군사령관으로 근무. 1948년 남한 정부 수립 때까지 점령지(남한)에서 근무. 1948-1950년 노스캐롤라이나 포트 블랙의 5군단장으로 근무. 1953년 전역. 매트레이는 강인하면서도 부드러운 야전군인으로 레이트, 부겐빌, 오키나와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운 하지는 정치와 행정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자랑으로 삼았다고 평가했으며, 핸더슨은 하지를 지성적이지 못하고 정치적 성격의 업무에 필요한 자격 같은 것은 전혀 없는 전형적인 군인이라고 평가했다. [http://www.arcent.army.mil/history/com\\_bios/cg\\_jrhodge.html](http://www.arcent.army.mil/history/com_bios/cg_jrhodge.html), 2002년 12월 1일; 제임스 메트레이, 앞의 책, 75쪽; 그레고리 핸더슨, 박행웅·이종삼 옮김, 『소용돌이의 한국정치』(서울: 한울, 2000), 202쪽.

2) 『HUSAFIK』 1, p. 32, 39.

3) 미육군 태평양방면 총사령관 명의의 포고문 전문은 점령군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FRUS*, 1945, Vol. VI, pp. 1043-1044.

4) 김희재는 건준지부가 9월 6일 인민공화국의 출현과 더불어 대개 인민위원회로 개편되었지만 건준지부가 갖는 성격과 이후 인민위원회가 갖는 성격을 구분했다. 건준지부(시·도를 범위로 하는)는 급진적 엘리트의 자주적 민족국가의 열의의 표현체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지방 인민위원회(군·면을 그 범위로 하는)는 민중의 구체적인 꿈들이 표현된 조직체라고 하고 있다. 김희재, 『미군정기 민중의 꿈과 좌절-인민위원회 운동을 중심으로』, 부산대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7, 131쪽.

결쳐 빠짐없이 145개의 인민위원회가 정비되었다.<sup>6)</sup> 건준의 존립기간은 8월 15일부터 조선 인민공화국이 선포<sup>7)</sup>된 9월 6일까지의 22일간이었다.<sup>8)</sup>

그러나 군정장관 아놀드(Archibald V. Arnold) 소장은 10월 10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에는 오직 한 정부가 있을 뿐이다. 이 정부는 맥아더 원수의 포고와 하지 중장의 정령과 아놀드 소장의 행정령에 의하여 정당히 수립된 것”<sup>9)</sup>이라며 매우 고압적인 태도로 성명을 발표하고 인공의 존재를 부인했다. 그 뒤 인공의 중앙조직은 흐지부지되다가 일부가 1946년 2월 민주주의 민족전선으로 흡수됐다.

이 과정에서 미군정은 1946년 2월 23일 미군정 법령 제55호 ‘정당등록법’을 공포해 좌익에 대한 탄압을 강화해 나갔으며, 1947년 들어 인민위원회는 완전히 소멸했다.<sup>10)</sup>

해방공간의 혼란이 증대될수록 경찰도 강력해졌다. 미군장교들은 치안을 우선시하였고 경찰에 대해서 동정적였다. 치안을 중시했던 미군정은 다른 어느 조직보다도 많은 수인 63명의 미국인 고문관들을 경찰에 파견했다.<sup>11)</sup> 해방 직전 남북한 통틀어 1만여명이던 한국인 경찰관은 해방 후 불과 3개월만인 1945년 11월 중순 남한에서만 1만5천명으로, 1946년 말에는 2만5천명 규모로 급증했다.<sup>12)</sup> 경찰은 군정당국의 통치와 우익세력의 정치적 결집을 위한 도구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민중들의 군정당국에 대한 혐오감도 증폭되었다.<sup>13)</sup>

미군의 제주도 최초 진주는 제24군단의 인천 상륙이 있은지 꼭 20일이 지난 1945년 9월

---

5) 민주주의 민족전선 편집, 『조선해방1년사』(경성: 문우인서관, 1946), 90쪽.

6) 리처드 E. 라우터백, 국제신문사 출판부 옮김, 『한국미군정사』(서울: 돌베개, 1984), 36쪽; 인민위원회의 숫자는 출처에 따라 다르다. 헨더슨은 135개의 인민위원회가 설립됐다고 밝혔다. 그레고리 헨더슨, 앞의 책, 194쪽; 인민위원회는 대체로 건준의 지방지부를 말한다. 김희재, 앞의 글, 129쪽.

7) 브루스 커밍스는 이에 대해 “건준은 한국인들이 스스로 자기의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미군에 의한 후원의 연장이나 미국의 환심을 산 다른 한국인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표면상의 한국정부를 세우고자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브루스 커밍스, 『한국전쟁의 기원』 上(서울: 청사, 1986), 156쪽.

8) 김희재, 앞의 글, 125-127쪽.

9) 『매일신보』 1945년 10월 11일.

10) 브루스 커밍스는 하지 장군과 그의 고문들이 인민위원회와 서울의 인민공화국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움직여지고 소련과 연계되어 있으며, 인공내의 공산주의자와 좌익분자들의 존재, 그리고 소련에 의한 인민공화국의 승인은 미국인들로 하여금 남한의 인민위원회를 탄압해도 정당하다는 생각을 갖게 했다고 분석했다. 브루스 커밍스, 앞의 책, 135-136, 206쪽.

11) 그레고리 헨더슨, 앞의 책, 226-227쪽.

12) 안진, 『미군정기 국가기구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0, 112쪽; 헨더슨은 일제 경찰 출신의 많은 수가 자신들의 동포들을 체포하고 고문한 잔혹한 기록을 가진 사람들로, 1947년 중반까지 약 2만2천명의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이것은 일제시대 남한 재소자 수의 약 2배에 해당되는 숫자라고 밝히고 있다. 그레고리 헨더슨, 앞의 책, 226-227쪽.

13) 그레고리 헨더슨, 앞의 책, 229쪽.

28일이었다. 이날 오전 8시 미 보병 제7사단 무장해제팀(팀장 파월(G. F. Powell) 대령·제24군단 군수참모)이 LSM 2척을 이용해 제주항에 도착했고, 뒤이어 1시간 뒤인 오전 9시에는 제24군단의 항복접수팀(팀장 로이 그린(Roy A. Green) 대령·제184연대장)이 C47 수송기 2대를 이용해 제주비행장에 도착했다.<sup>14)</sup>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무렵 일본은 전세가 기울어가자 연합군의 일본 본토 공격에 대비해 제주도를 본토 사수를 위한 전초기지<sup>15)</sup>로 삼아 관동군 등 6만여명에 이르는 대병력을 집결시키고, 제주도 곳곳에 중무장한 요새를 만든 상태였기 때문에 제24군단으로서는 주요 관심 지역이었다.<sup>16)</sup> 이들은 철저하게 사전계획을 수립한 후 일본군의 무장해제에 착수했다.<sup>17)</sup>

이어 제59군정중대가 11월 9일 제주도에 상륙했다.<sup>18)</sup> 제59군정중대 사령부와 사령부중대, 그리고 제주도를 위수지역으로 관할하는 미 보병 제6사단 제20연대 L중대가 LST 제657호를 타고 11월 9일 제주항에 상륙한 뒤 제주읍에 본부를 설치하고, 100여명으로 구성된 파견대를 모슬포에 파견했다.<sup>19)</sup> 이에 따라 제주도에 대한 미군정의 본격적인 점령정책은 제6사단이 11월 11일 자정부터 일본군의 철수작전을 책임졌던 제24군단 군수지원사령부(ASCOM)로부터 제주도에 대한 통제업무를 넘겨받으면서 시작됐다.<sup>20)</sup>

써먼 스타우트(Thurman A. Stout) 소령을 사령관으로 한 제59군정중대는 9월 17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편성<sup>21)</sup>돼 인천을 거쳐 제주도에 오기까지 한국에 대한 지식은 물론 제주도에 대한 지식은 거의 없었다.

제59군정중대가 제주도에 진주한 것은 이미 제주도 인민위원회가 '섬 내의 유일한 당이

14) Hq. XXIV Corps, G-3 Operations Report No. 25, 28 September 1945.

15) 연합군의 침공을 본토에서 격퇴하려는 일본 육·해군 결전작전을 암호명 '결호작전'으로 불렀다. 결1호작전부터 결7호작전까지 있으며, 결7호작전은 조선방면 방어계획이다. 이 작전의 주요 무대는 제주도로서 애초부터 유력한 병력을 배치하고 독립으로 동점을 확보케 하는 것이었다. 임종국, 『일본군의 조선침략사Ⅱ』(서울: 일월서각, 1989), 135-141쪽.

16) 오키나와와 거의 비슷한 크기로, 대단히 요새화된 제주도의 무장해제 문제는 미군으로서는 당연히 심각한 문제였다. 일본군의 무장해제에 대해서는 The Surrender and Disarmament of the Garrison on Cheju Do, Chapter VII, Demilitarization and Evacuation of Japanese Forces, USAFIK, 『HUSAFIK』 1, pp. 526-531.

17) 예를 들면 군단 정보참모부는 일본군 병력과 시설, 군대 배치 등의 상황을 파악했으며, 군정청 장교들은 일본인 도사와 경찰 책임자에게, 작전 장교들은 무장해제에 관해 도야마 장군과 그의 참모들에게 집중적인 질문을 던지고, 대부분의 탄약과 폭발물을 수장하거나 폭파했다. 위의 글, pp. 529-530; 무장해제팀은 모슬포에서 해군항공포탄 387개와 저장터널을 파괴하는 것을 목격했으며, 기타 장비들은 무장해제팀이 처리했다. Hq. XXIV Corps G-3 Operations Report No 32, 5 Oct 1945.

18) Subj: Unit History, Thurman A. Stout, Senior Military Govt. Officer of 59th Military Government Company to the Adjutant General, Washington, 23 January 1946.

19) Hq. XXIV Corps, G-3 Operations Report No. 64, 6 Nov 1945; No. 68, 10 Nov 1945.

20) 위의 글, No. 70, 12 Nov 1945.

21) Thurman A. Stout, 앞의 글.

며 목적과 내용을 지닌 유일한 정부<sup>22)</sup>로서 활동하던 시기였다. 해방 직후 제주도에서는 좌·우익간의 치열한 투쟁 등 정치적 갈등이 격렬하지 않았고, 민족해방운동세력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다.<sup>23)</sup> 일제하 3·1만세사건을 겪으면서 제주도에도 사회주의사상이 유입됐는데, 이는 사회주의 제1세대라 할 수 있는 김명식<sup>24)</sup>, 김문준<sup>25)</sup> 등의 영향이 컸다.

22) E. Grant Mead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in Korea*(NewYork: King's Crown Press, 1951), p. 185.

23) 박명립, 앞의 글, 49쪽.

24) 김명식(金明植·1891-1943). 호는 송산(松山). 제주도 조천면 조천리 출신으로, 일본 와세다대학 전문부 정치경제학과 시절인 1916년 4월 15일 도쿄 조선유학생학우회 주최로 열린 대학신입생활연회 자리에서 '적국(敵國)에서 배우려는 의미를 논함'이라는 연설을 할 정도로 민족의식이 강했다. 1920년 4월 1일 『동아일보』 창간 당시 논설반 기자로 입사해 창간호에 '대세와 개조'라는 논설을 쓰기도 했으며 1920년 4월 11일 조선노동공제회에 동향 출신인 죽암 고순흠과 함께 평의원으로 참가했다. 1921년 1월에는 김사국, 이영, 장덕수, 홍증식 등과 함께 서울 청년회를 조직하고 뒤이어 동아일보사를 퇴사했다. 1921년 3월 조선노동공제회 제2대 회장으로 선출됐고, 1922년 1월 『신생활』지(사장 박희도)가 창간되면서 이사겸 주필로 입사했다. 같은해 11월 11일 발간한 '러시아혁명 5주년 기념특집'을 다룬 제11호와 같은 달 18일 발간한 '민족운동과 무산계급의 전술'을 다룬 제12호를 문제삼아 일제는 박희도 사장과 노기정 인쇄인을 수감하고 인쇄기를 압류하는 동시에 김명식 주필과 유진희 기자를 구류처분하는 한편 신일용 기자를 소환심문한 뒤 이들에게 신문지법과 제령(정치에 관한 범죄처벌의 건) 제7호 위반으로 기소했다. 이 사건은 훗날 '조선 초유의 사회주의자 재판'으로 알려지면서 한겨울철인 데도 방청객만 500-600명이 참석할 정도로 세인의 관심을 모았다. 이 사건에서 박희도 사장은 징역 2년 6개월, 주필 김명식은 2년, 기자 신일용과 유진희는 각각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사장이 없는 동안에는 자신이 편집인겸 발행인 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 혁명 5주년 기념이라는 기사를 실은 것은 국외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을 기술한 것에 불과하며 자유노동조합 취지서를 등재한 것도 단순히 그 조합이 조직된 사실을 보도한 데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문제삼는 것은 조선인과 일본인을 차별하여 조선인의 인권을 부당하게 억압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함흥형무소에서 복역중 1923년 7월 26일 건강상태가 악화돼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뒤 제주도에 내려왔다가 1927년 신간회 제주지부가 결성되자 지회장을 맡았다. 이 때 송중현은 신간회 간사였고, 강창보와 김택수는 회원이었다. 1930년에는 일본 오사카에서 조선인 노동운동을 지도하다가 검거돼 일본의 동지형무소에 재수감된 뒤 잔여형기를 채웠다. 1938년께 고향에 돌아온 그는 일제의 강압으로 건강을 크게 해친 상태였는데도 꾸준히 국제문제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1940년 4월 1일부터 10일까지 7차례에 걸쳐 신문기고로는 마지막으로 보이는 '제1차 대전후의 세계사'를 연재했다. 그는 이 연재물을 통해 "역사관의 허무사상은 금물이며, 인류문화는 쉬지 않고 향상한다. 어떤 시기에 어느 문명이 파멸되도 다른 문명이 생겨 그를 대신한다"며 인류문화의 연속성을 역설했다. 고준석 감수, 문국주 편저, 『조선사회운동사사전』(도쿄: 사회평론, 1981), 517 -518쪽, 강철 편저, 『재일조선인사 연표』(도쿄: 웅산각, 1983), 22쪽, 제주도, 『제주도지』 제1권(제주: 동도, 1993), 1151-1152쪽, 김준엽, 김창순(공저), 『한국공산주의 운동사』 2(서울: 청계연구소, 1986), 36-37쪽, 『동아일보』 1920년 4월 1일; 1921년 12월 27일; 1922년 11월 22일; 1922년 12월 27일; 1923년 1월 17일; 1929년 3월 3일; 1930년 11월 21일; 1940년 4월1-10일.

25) 김문준(金文準·1893-1936). 호는 목우(木牛). 제주도 조천면 조천리 출신으로 일제하 일본에서 조선인들을 위해 노동조합 운동을 지도적으로 수행해 조선인뿐 아니라 일본인 노동운동가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탁월한 노동운동가로 평가받고 있다. 1912년 제주농업학교

같은 고향 출신인 무정부의자 고순흠<sup>26)</sup>도 제주도의 청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1930-1940년대에는 제주와 오사카간 일본인의 독점항로에 항거해 일어난 자주운향운동(1930), 제주농업학교 학생들의 '동맹휴학사건'(1931)을 비롯해 북제주군 구좌읍 세화리를 중심으로 제주 동부지역 해녀들이 봉기한 해녀투쟁(1932)<sup>27)</sup>, 조천소비조합사건(1942) 등

제1회 졸업생인 그는 1915년 조선총독부 수원고등농업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제주도에서 근대식 학교의 창립자 역할과 함께 교사로 활동했다. 그는 3·1운동 당시 제주에서 3·1운동과 농민운동을 지도했다. 1927년 9월 재일본 조선노동총동맹 산하 오사카조선인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위원장을 맡았다. 또 일본 화학노동조합 오사카지부, 서부전기노동조합 등 각종 노동조합을 결성해 파업을 주도하고 신간회 오사카지부 결성에 참여했다. 1929년 가을에는 오사카 치안당국이 김문준의 우수한 지도로 오사카 조선노동조합이 1만7천여명의 조합원을 가지게 됐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1930년에는 동대판(東大阪)고무공업 파업을 주도하다가 검거돼 2년간 복역했다. 일제 경찰은 “1930년 8월 17일 오사카에서 천호모공장(泉護謨工場) 쟁의 비밀지도부 회의중 ‘거괴(巨魁)’ 김문준(일본 화학산업노조 오사카지부 상임) 등 조선인 5명과 일본인 3명을 검거했다”고 밝힐 정도로 김문준을 평가하고 있다. 1935년 6월 15일에는 오사카에서 순한글신문 『민중시보』를 창간해 조선인의 생존권 투쟁과 권익옹호에 앞장서기도 했다. 그는 1936년 5월 25일 일본 오사카 도네야마치료소에서 치료 중 숨을 거두었으며, 장례식은 일본인 좌익단체와 합동장례식을 치렀으며, 일본 노동운동가들이 그의 시신을 제주도로 운구하겠다고 하자 일제 경찰이 막을 정도였다. 현재 북제주군 조천읍 조천공동묘지에는 당시 일본에서 보내온 비석이 서있다. 일제 경찰의 정보보고서라 할 수 있는 「특고월보」는 “민중시보사는 요주의 인물 김문준을 중심으로 지난해(1935년) 6월 15일 창간호를 발간하여 오로지 재판 좌익 조선인 지원 아래 전국적 민족운동의 기관지로서 그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려고 기도하고 이후 교묘한 전술을 채용해 신문 기사에 의한 선전활동은 그 이면에 있어서의 이 회사의 조직활동과 아울러 조선인 각층에 마수를 뻗치고 있었는데 올해(1936년) 5월 25일 김문준 사망 뒤에는 이신행이 대신 주간이 되어 활동이 더욱 노골화하고 각 친목단체 노동단체 등의 대동단결을 기도하고 민족운동의 주체를 결성하려고 광분하게 되었다.…이들은 모두 민족운동의 일단계로서 대동단결에 의해 각종 조선인 피압박문제를 내걸고 투쟁을 감행하여 정치적 목적의 획득을 꾀하고 있는 사실을 자백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특고월보」(소화 11년 11월분), 고준석 감수, 문국주 편저, 앞의 책, 518-519쪽.

- 26) 고순흠(高順欽·1893-1977). 호는 죽암(竹岩). 제주도 조천면 조천리 출신으로, 일제하 무정부주의운동가이며 노동운동가이다. 1914년 3월 경성전수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해 대한독립단에 입단했다. 당시 단장은 신채호이며, 고순흠은 단비서국장을 역임하면서 신채호의 영향을 받았다. 1920년 4월 11일 조선노동공제회 창립총회 때 서무간사로 참여해 선언문 작성에 일익을 담당했다. 고순흠은 이를 조선 노동운동의 시초라고 훗날 서술했다. 1924년 일본으로 건너간 뒤 조선인사회연맹, 오사카 조선인노동연맹, 오사카조선인자유노동단, 신진회, 고려평민기업사, 조선여공보호회 등에 관여하거나 조직해 활동했다. 김찬흠 편저, 『20세기 제주인명사전』(제주: 제주문화원, 2000), 77-78쪽.
- 27) 당시 제주도 야체이카운동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이익우는 “일제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혁우동맹사건, 야체이카사건 등1930년대는 제주 민족해방투쟁의 전성시대였다. 제주도 야체이카는 민중계몽을 하던 각 지역 지도자들에 의해 중문면 중심의 부정호세불납운동, 대정면의 3·1절 만세 시위사건, 구좌면의 해녀사건 등을 주도했다. 1930년대의 항일운동의 의의는 결과적으로 운동에 있어서 오류도 있었지만 이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본격 항일투쟁을 전개한 시기이다. 가령 해녀사건의 경우만 하더라도 단순히 자연발생적인 생존권 싸움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전개된 정치투쟁이다. 당시엔 해녀조합, 산림회, 농회, 수산회 등 많은 관제조합이 있었는데 일

일제 식민지 통치에 맞서는 조직적인 투쟁이 전개되었다. 일제하 제주도 민족해방운동의 경험은 해방후 제주도 민족운동에 그대로 연결되었다.<sup>28)</sup>

또 출가나 징용 등으로 제주도를 떠났던 5만여명이 넘는 인구가 일시에 유입되면서 이들의 활동 또한 정치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sup>29)</sup>

제주도 건준의 결성은 밑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형식이었다. 서귀면 건준이 8월 20일<sup>30)</sup>, 제주읍은 9월 7일, 대정면<sup>31)</sup>은 9월 6-7일경에 결성된 후 9월 10일 도 건준이 제주 농업학교에서 결성됐다. 이어 건준의 발전적 해소로 제주도 인민위원회가 9월 22일 제주 농업학교에서 각 읍·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성되기에 이르렀다.<sup>32)</sup>

인민위원회는 9월 말까지 짧은 기간에 각 면, 리에 이르기까지 수직적·수평적으로 조직을 확산했다.<sup>33)</sup> 이 시기 인민위원회는 좌우익의 정치적 갈등이 없이 각 마을별로 그 마을의 구장(이장)이나 유력자 등이 인민위원장을 맡기도 했다.<sup>34)</sup> 심지어 경찰서장이 인민위원장에게 신임 지서장을 잘 부탁한다는 내용의 소개장을 써주기도 했다.<sup>35)</sup>

또 인민위원회는 치안대와 보안대 등의 이름으로 치안활동에 적극 나서는 한편 거리청소 및 도로 정리, 체육대회와 연예대회 등을 주관하는 한편 국민학교와 중학교를 개설하는 등 행정기능과 공익활동을 벌이기도 했다.<sup>36)</sup> 또 구역리 인민위원회는 마을의 젊은이들

---

본인 도사가 모든 조합장과 경찰서장을 겸직 한 상태에서 혜택은 없이 조합비만 거둬가는 등 수탈이 심했다. 이런 때에 해녀사건이나 불납동맹은 일제에 대한 정면 항쟁인 것이다”고 일제하 제주도의 민족해방투쟁을 평가했다. 『제주신문』 1989년 9월 28일.

28) 박명림은 이에 대한 이유로 세가지들 들고 있다. 첫째, 일본과의 빈번한 교류, 강력한 민족해방투쟁을 통해 획득한 제주도 민중들의 이념, 즉 반제민족해방의식의 소유, 둘째, 운동지도부인 일제하 사회주의 민족해방운동의 중심인물과 해방후 민족운동의 중심인물들의 동일성, 인물사적 연결, 셋째, 적색혁명동맹, 재건조선공산당 제주도 야채이카, 제주도농민요구투쟁동맹 등의 조직경험(조직방식과 활동)이다. 박명림, 앞의 글, 26-27쪽.

29) 커밍스는 제주도는 일본과의 빈번한 접촉과 긴밀한 연관으로 인해 제주도 사람들의 의식이 매우 급진성을 띠었다고 분석했다. 브루스 커밍스, 앞의 책, 200쪽.

30) 조남수, 『4·3진상』(제주: 관광제주, 1988), 10쪽.

31) 대정면 건준은 리건준이 먼저 결성됐다. 당시 대정면 건준 선전부장을 지낸 이운방은 “직접 마을에 찾아가서 건준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 마을유지, 청년들이 모여서 조직했다”고 말했다. 「제주지방 건국준비위원회와 인민위원회 조직과 활동」, 제주4·3연구소, 『4·3장정』 5(제주: 나라출판, 1992), 11쪽.

32) 인민위원회의 노선은 일제의 잔재세력과 국제파시스트 주구를 청산하여 우리 민족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었다. 김봉현, 김민주(공편), 앞의 책, 16쪽.

33) 박명림, 앞의 글, 40쪽.

34) 남제주군 성산면 시흥리 민보단장과 성산면장을 지낸 강인옥은 “당시 시흥리 인민위원장은 좌익계통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며 1946년 5월까지도 정규 이장처럼 마을행정을 맡아봤다”고 증언했다. 제민일보사, 『4·3은 말한다』 1(서울: 전예원, 1994), 69쪽.

35) “발령통지서를 받을 때, 당시 김창희 경찰서장이 명함에다 문도배(구좌면)인민위원장에게 전하라면서 소개장을 써 주기도 했습니다. 내가 지서주임으로 부임하니 잘 부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인민위원회 주최 모임이 있을 때 지서 순경들이 참석하기도 했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정성순(당시 세화지서 주임)의 증언, 제민일보사, 앞의 책, 71쪽.

을 모아 순찰을 돌기도 하고 양담배, 양과자를 배척하는 모임을 갖기도 했다.<sup>37)</sup> 이러한 공익적 활동과 조직 확산을 통해 인민위원회는 빠른 속도로 통치력을 장악해 나갔고, 민중들의 광범한 지지를 받았다.<sup>38)</sup>

심지어 도 군정장관이 치안유지 확보 차원에서 협조 공문을 요청할 때도 지서장 보다 마을 청년동맹위원장의 이름을 먼저 썼다.<sup>39)</sup>

미군정 보고서에는 제주지방의 인민위원회가 '제주도의 유일한 다수당'이라고 평가하고, 구성원들이 온건 좌파 사회주의적 사상을 갖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sup>40)</sup>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군정은 인민위원회를 공식적인 통치기구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군정중대의 정책 또한 제24군단의 점령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제59군정중대는 점령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도농회 주사 김문희를 도사대리에 임명했으며, 일제하 경찰 출신인 신우균<sup>41)</sup>을 부감찰청장에 임명<sup>42)</sup>하는 등 통치기구 조직에 착수하였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일제 식민지 지배집단을 충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군정중대는 이미 제주도에서 민중들의 지지를 받고 있던 인민위원회를 활용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인민위원회의 협조없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가 없었다.<sup>43)</sup>

중앙 미군정청에서 파견된 공보부 직원은 1946년 12월 현재 경찰과 미군, 제주도민 모두를 포함해 제주도에는 어떠한 충돌이나 폭동이 전혀 없다고 보고<sup>44)</sup>할 정도로 미군정과 인민위원회간의 관계는 우호적으로 유지됐다. 인민위원회 대표들이 폭동은 없을 것이라고 경찰에게 약속하고, 경찰은 인민위원회가 제주도에서 일어날지도 모를 어떠한 사태에도

36) 제주4·3연구소, 「제주지방 건국준비위원회와 인민위원회 조직과 활동」, 앞의 책, 14-16쪽.

37) 4·3채록기행 '손 내놓으랜 허영 손이 판적허게 고우민 빨갱이라고...: 대정읍 구역리', 제주4·3연구소, 앞의 책 1.(제주: 동사, 1990), 68쪽.

38) 헨더슨은 인민공화국의 영향 아래서 지방 주민들의 존경을 받고 있던 인민위원회에 의한 사실상의 지배가 제주도와 완도 및 기타 몇 개 지역에서 계속됐다고 밝혔다. 그레고리 헨더슨, 앞의 책, 207쪽.

39) 고경흡(90세·당시 한림면 청년동맹위원장·북제주군 한림읍 강구동) 인터뷰, 2003년 5월 3일.

40) Arthur N. Feraru, Assistant Chief, Opinion Sampling Section,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USAMGIK, Subj: Report of trip to the Province of Cheju during the period 4-6 December 1946, 9 Dec, 1946.

41) 코리아퍼시픽프레스 특파원 설국환은 신우균이 일제하 특경대 소속으로 자신의 항일활동을 조사하기 위해 미행했던 인물이라고 밝혔다. 미군정 보고서에는 신우균 자신도 일제하 경찰관 출신이기 때문에 제주도의 경찰 책임자와 같은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는 안될텐데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보고했다. 위의 글.

42) 제주4·3연구소, 「제주지방 건국준비위원회와 인민위원회 조직과 활동」, 앞의 책, 19-20쪽; 제민일보사, 앞의 책 1, 117-118쪽, 123-124쪽.

43) 당시 한림면 치안대장 고경흡은 미군장교가 1945년 10월 말-11월 초 지방 치안대 간부들을 소집해 친일파 인물들에 대한 치안대의 폭력행위를 중단하고, 치안유지에 힘써 달라는 요지의 연설을 했다고 증언했다. 고경흡의 증언, 제민일보사, 앞의 책 1, 67쪽.

44) Arthur N. Feraru, 앞의 글.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할 정도였다.<sup>45)</sup>

1946년 12월 한 국내 일간지는 제주도 인민위원회의 구성원이 양심적인 항일투쟁의 지도자로 구성됐다고 보도하고, 자치능력을 높게 평가했다.

세간에서 제주는 좌익 일색이며 ‘인위’의 천하라는 말이 있으나 제주의 인위는 ‘건준’이래 양심적인 반일제 투쟁의 선봉이었던 지도층으로써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에 분립된 한독, 독촉국민회 등의 우익단체와도 격렬한 대립이 없이 무난히 자주적으로 도내를 지도하고 있다. 남선 일대를 요란시킨 지난번 민요가 제주에 없었다는 것은 지도층의 산하조직 대증이 육지와 상원(相遠)한 점도 있었겠지만 지도층이 자주적으로 선도한 것과 수뇌가 일제하의 경관이 아니었던 신인으로 구성된 경찰진과 호흡이 어느 정도 맞았던 것도 잠재한 이면의 하나일 듯하다.<sup>46)</sup>

이처럼 미군정과 제주도 인민위원회가 협조체제를 이루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까지 그러한 관계가 유지됐는가.<sup>47)</sup> 이는 세가지 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군정중대가 진주하기 전부터 이미 제주지역의 인민위원회가 활발한 활동을 벌이면서 제주도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진라남도 미군정 요원이었던 미드(Meade)는 “제주도의 인민위원회가 상당할 정도의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최대의 효율성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sup>48)</sup>

둘째, 인민위원회의 정책적 온건성은 군정중대로 하여금 인민위원회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미드는 또한 제주도가 전남에 종속돼 있어 군정중대로서는 정치적 어려움이 없는 반면, 인민위원회가 매우 협조적으로 활동함에 따라 군정은 인민위원회를 최대한 지원했다고 평가하였다.<sup>49)</sup> 사실, 우익단체는 인민위원회의 온건성이 제

---

45) 위의 글.

46) 『동아일보』 1946년 12월 21일.

47) 브루스 커밍스가 제시한 인민위원회의 발전과 지속성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1930년대와 1940년대 초반에 인구가 감소했다가 해방 후 인구가 갑자기 늘어난 지역 ② 소작농의 비율이 그리 높지 않으며 지주의 힘이 무너졌거나 약했던 지역으로 농민들이 어느정도의 독립성과 견제수단을 갖고 있던 지역 ③ 일제통치와 미군정의 정치적 공백기간이 길었던 지역 ④ 통신과 운송시설이 비교적 열악하거나 그러한 시설을 장악한 지역 ⑤ 역사적인 농민의 급진성 사례(1930년대 적색농민조합의 존재여부)가 있었던 지역 ⑥ 비교적 분화된 직업구조 ⑦ 상당한 기간 동안 좌익도 우익도 지배적이 못하면서 우세한 좌익이 온건한 정책을 취한 정치적 복합성이 존재한 지역 등이다. 제주도는 어떤 다른 지역보다도 위의 사항들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제주도에서는 인민위원회가 튼튼한 근거지를 확보했으며, 1948년까지 섬 전체를 통제했고, 2차 대전후 아시아에서 가장 잔인하고 지속적이며 강력한 소탕작전이 전개됐다. 브루스 커밍스, 앞의 책, 204쪽.

48) Meade, 앞의 책, p. 185.

주도민들의 호응을 얻어 더욱 강력해질 것을 두려워하였으며 경찰과 군정당국이 인민위원회를 탄압하지 않는데 불만을 나타냈다.<sup>50)</sup> 한 예로 인민위원회는 1946년 10월 봉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는 콜레라 창궐과 대흉년으로 극도로 궁핍했던 제주도의 상황을 고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이러한 온건성은 인민위원회와 미군정이 그 정책과 이념에 있어 상당부분을 공유할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한데서 기인하였다. 이것은 제주도 사회가 자작농·자소작농이 압도적인 다수였던 관계로<sup>51)</sup> 제주도에서는 해방직후 전국적으로 터져 나온 토지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등 미군정과 민중이 직접적으로 대립할 가능성이 낮은 상태였다.<sup>52)</sup>

셋째, 지역적 고립성으로 인하여 상급부대인 전남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제101군정단과 연락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도 군정중대가 어느 정도 독자성을 가지고 인민위원회와 협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였다. 당시 제101군정단 산하였던 제59군정중대는 1945년 12월까지 전남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제101군정단과 접촉을 거의 하지 못했다. 제59군정중대는 지리적 고립성 때문에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sup>53)</sup>

중앙의 좌익세력은 입법위원의 설립이 남조선 단정수립 기도, 일제 증추원의 재판(再版), 군정연장의 음모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전면적으로 거부<sup>54)</sup>했으나 제주도 인민위원회는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등 독자적인 길을 걸었다.<sup>55)</sup> 입법의원 선거에 좌익세력이 참여해 당선된 곳은 제주도가 유일했다.<sup>56)</sup>

이 선거에서 제주도에서만 유일하게 구좌면 인민위원장 문도배와 조천면 인민위원회 문예부장 김시탁 등 2명의 좌익인사가 당선됐으나 곧바로 사퇴했다.<sup>57)</sup> 남조선과도입법의

49) Meade, 앞의 책, pp. 185-186.

50) Arthur N. Feraru, 앞의 글.

51) 1946년 12월 31일 현재 전국의 자작농 비율은 제주(72.8%)→경남(25.6%)→강원(23.4%) 등의 순이며, 소작농 비율은 전북(58.2%)로 가장 높고, 제주(6.3%)가 가장 낮았다. Despatch No. 39, Subj: Land Reform in Korea, Arthur C. Bunce, Office of Economic Advisor, Hq. XXIV Corps to the Secretary of State, Feb 23, 1948.

52) 박명림, 위의 글, 42쪽.

53) Meade, 앞의 책, p. 99.

54) 박명림, 앞의 글, 55쪽.

55) 입법의원 선거에 참여했던 이운방은 “10월 인민항쟁 당시 제주도민은 호열자(콜레라 환자)와 흉년으로 굶주리고 있어서 이를 외면한 무조건적인 투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어. 입법의원 선거는 철저히 반대하고 거부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었지. 그러나 선거에 참여한 것은 이 기회를 역이용하여 우익의 진출을 못하게 하고 선거를 무효화함과 동시에 우리의 힘을 과시하는 일대 데몬스트레이션을 전개하기 위한 거야”라고 증언했다. 제주4·3연구소, 앞의 책, 21쪽.

56) Meade, 앞의 책, p. 158.

57) 과도입법의원 선거에 당선된 문도배와 김시탁은 기자회견에서 “제주도에서는 입법의원 선거에 대하여 10월 22일에 갑자기 발표하고 25일에 선거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일반 도민은 이 기관이 인민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며 반동을 합리화하는 것이고 민주주의적 발전을 하고 있는 북조선과의

원선거에서 좌익인사들이 당선되었다는 사실은 제주도 좌익세력의 강력함과 그들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지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제주도 좌익세력이 중앙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었거나 그들과는 다른 노선을 걷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제주도 인민위원회 조직이 1947년 초까지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커밍스의 지적대로 인민위원회의 존속을 위한 제반 조건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47년의 '3·1사건'을 기점으로 미군정의 제주도 정책은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좌익세력과의 결정적으로 긴장국면에 들어가며 5·10선거의 실패로 파국을 맞는다.

## 제2절 사회경제적 상황

해방은 종속으로부터의 자유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일반 민중들로서는 혼돈의 시작이기도 했다.

1938년 현재 제주도 가구당 1명 이상이 생계를 위해 일본으로 진출<sup>58)</sup>하고 있었으며, 해방 뒤 이들이 귀향했을 때는 제주지역의 경제상황은 빈사상태였다.

해방 직후 제주도가 직면했던 문제는 급격한 도민 인구의 증가였다. 급작스런 인구의 증가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제주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표 2-1〉 해방 전후 제주도의 인구변동

연도	1938 ①	1944 ②	1946 ③	1947 ④	1948 ⑤	1949 ⑥
인구	203,651	219,548	276,148	275,899	282,000	254,589

출처: ① 濟州島廳, 『제주도세요람』(제주: 동청, 1939), 7쪽. 이는 일본인과 기타 국적의 인구를 합한 수치로 순수 한국인은 202,241명이다.

② 미군정청 보건후생부 조사, Despatch No 6, Subj: The Economic Potential of An Independent Korea, Arthur C. Bunce to the Secretary of State, June 26, 1947.

③ 『남조선(38도이남) 지역급 성별 현주 인구』, 미군정청 보건후생부 생정국(1946년 9월), 70쪽.

④ 『경제연감』(1947), IV-20쪽, 제민일보사, 『4·3은 말한다』 1, 43쪽에서 재인용.

⑤ Inclosure No. 4, Total Population of South Korea as of 1 Apr 1948, MG Report.

⑥ 대한민국 공보처 집계 1949년 5월 1일 현재, Despatch No. 715, Subj: , American Embassy to the Secretary of State, Nov 10, 1949.

---

통일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인정하였기 때문에 투표가 거의 거부되었던 것이다...제주도내는 인위가 거의 8할의 인구를 통일하고 있으며..."라고 밝혔다. 『독립신보』 1946년 12월 15일.

58) 濟州島廳, 『濟州島勢要覽』(경성: 조선인쇄주식회사, 1939), 11쪽.

〈표 2-1〉에 나타난 것처럼 해방 전체인 1944년과 1946년의 인구변동을 보면 5만6600명의 인구가 제주도에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인구의 양적 팽창은 정치적인 측면은 물론 경제적 측면에서도 제주지역 사회를 압박하는 요인이 되었다.

존 메릴은 일제하 외부로 나갔던 사람들이 귀환하고 제주도에 남아있던 5만여명 가량의 일본인들이 1945년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빠져나가자, 제주도의 경제사정은 대규모의 인구가동뿐 아니라 군사기지가 철수함으로써 일본군들에 대한 본국의 송금이 끊기고 소련의 점령지역으로부터 받아온 비료와 기타 공업 생산품의 공급이 중단됨으로써 혼란에 빠져 들어갔다고 밝혔다.<sup>59)</sup>

이와 함께 일본에 진출했던 제주 출신 노동자들이 제주도의 가족들에게 보내던 송금도 끊겼다.<sup>60)</sup> 이러한 사태는 귀환자들은 물론 이들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았던 제주도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으며, 더 나아가 제주지역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쳤다. 또 제주와 일본을 드나들던 정기여객선의 운항과 일본과의 교역이 중단되었다.

이와 같이 제주지역의 경제상황이 일제 강점기 때보다 오히려 악화되자 사회는 혼돈 상태에 빠졌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귀환자들도 제주도에서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웠고, 1946년 11월 현재 실업률은 제주도가 7.5%로 경남의 8.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sup>61)</sup>

또 해방전인 1944년 6월 현재 72곳에 이르던 제주지역의 공장 가운데 1946년 11월 현재 가동중인 공장은 32곳에 불과해 감소율은 55.6%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sup>62)</sup> 제주지역에서 가장 큰 제조업체였던 제주주정공장의 가동상태를 보면 당시의 상황을 엿볼 수 있다. 해방전 한때 매달 1000드럼의 주정을 생산할 수 있었던 이 공장은 1946년 하반기에는 한달 240드럼을 생산하는데 그쳤다.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고구마를 원료로 주정을 생산해 냈지만 1946년 12월에는 가동조차 하지 못하는 형편에 놓였다.<sup>63)</sup> 1946년 말 제주도에 특파됐던 한 기자는 당시 심각했던 제주지역 경제상황을 이렇게 묘사했다.

제주도 인민 30만은 지금 역경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모든 공장은 대부분이 움직이지 않고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이 발호하여 이 땅의 민주화를 방해하고 있다. “미군정이 존속하는 한 경찰은 나를 체포치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을 말

59) 존 메릴, 앞의 책, 121쪽.

60) 1938년 일본에 건너간 제주 출신 4만5950명이 우체국을 통해 제주도에 보낸 송금액만도 147만 730원으로, 1인당 32.01원에 이르렀다. 濟州島廳, 앞의 책, 17쪽.

61) 브루스 커밍스, 『한국전쟁의 기원』 下, 242쪽.

62) 군정청 통계국의 1944년 6월과 11월의 산업 및 노동조사, Selected Economic Statistics for South Korea April 1947, Despatch No. 18, Subj: Selected Economic Statistics for South Korea No 4, Arthur C Bunce to the Secretary of State, July 16, 1947.

63) 위의 글.

하는 것일까? 쌀과 자유를 달라! 이것이 정의의 인민의 부르짖음이 아닐까? 이 땅의 특수한 공장시설을 본다면 작년 6월에 연합군의 폭격으로 일부 파괴당한 무수알코올공장, 조선에서 유일한 통조림을 만드는 관힐(罐詰)공장, 전분공장, 조선의 수요량을 훨씬 초과 생산하는 옥도정기 공장, 자개단추 공장 등이 있으나 무수알코올공장이 지난 11월 해방 후 처음으로 작업을 시작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제 공장은 좋은 계획은 있으나 기술 부족, 원료난으로 아직까지도 공장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sup>64)</sup>

이처럼 제주지역 산업시설의 절반 이상이 마비되자 귀환자는 물론 제주도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도 생존을 해결해야 할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해방은 됐지만 야단이 났네/이집가도 저집가도 먹을 걱정/보리쌀은 없고 감자도 없고/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네/코 큰 놈을 믿어서 앓아 있으면/굶어 죽은 사람이 2천8백명/우리들이, 근로대중이 힘을 합쳐서...”<sup>65)</sup>

당시 학생들이 제주도가 처한 경제상황을 빗대 노래를 만들어 부를 정도로 제주지역의 경제사정은 최악의 상태에 빠져들어가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1946년 8월 1일의 도제 실시는 또다른 면에서 제주도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었다. 도제(道制)가 실시된 뒤 도 단위 행정기구에 필요한 400만엔의 추가 비용을 마련할 여유가 없었다. 더욱이 제주도가 전라남도의 부속도서로 있을 때 가라앉았던 본토인들의 전통적인 반감이 다시 발생하고, 이것은 제주도가 필요로 하는 무역을 방해했으며, 이런 불만들은 제59군정중대로 쏟아졌다.<sup>66)</sup>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는 본토와는 떨어진 섬이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밀수입하는 장소로 인식됐으며, 이는 제주도의 물가 인상을 부채질하였다.<sup>67)</sup> 식량 부족으로 인해 박경훈 제주도지사는 1947년도분 5만5천석의 쌀을 배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상황에 이르렀다.<sup>68)</sup>

이처럼 경제상황이 악화일로를 치닫자 제주도민들은 미구축함의 해상경계에도 불구하고

64) 『독립신보』 1946년 12월 19일.

65) 김동일(당시 15세·조천중학원 출신·일본 도쿄 거주)은 학생 시절 이 노래를 만들어 불렀다고 증언했다. '일본으로 간 4·3영혼', 제주문화방송, 2001년 5월 10일.

66) Meade, 앞의 책, pp. 185-186.

67) 제주도에 성공적으로 도착한 물건들은 특정 목적을 위해 본토에서 들어간 돈으로 구입된다. 제주도의 식산은행 지점장은 1946년 10월 한달 동안 식산은행을 통해 (한)반도에서 들어온 금액이 1389만6499엔이라고 밝혔다. Arthur N. Feraru, 앞의 글.

68) 위의 글.

고 소형선박을 이용해 목숨을 내놓고 제주와 일본을 오가며 밀무역을 하거나 사람들을 실어나르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았다. 또 일자리를 찾아 일본으로 밀항을 하다가 조난을 당하거나 붙잡히기는 사례도 나타났다. 1946년 8월 하순 제주도 연안에서 일본으로 불법 밀항하던 한국인 175명을 태운 선박 4척이 미 제7함대 소속 구축함에 검거<sup>69)</sup>된 것은 운이 좋은 경우였다. 1947년 5월 20일께에는 함덕포구를 출항해 일본으로 가던 밀항선이 쓰시마 부근에서 파도에 휩쓸려 승객 40여명 가운데 20여명이 희생되기도 했다.<sup>70)</sup> 같은 해 9월 3일에는 제주환(CHEJU WHAN)이 해상에서 선박등록 서류를 소지하지 않았다가 미 구축함 배리(Barry)호에 나포<sup>71)</sup>됐는가 하면, 9월 9일에는 일본에서 목재를 싣고 제주도로 가던 제2복수환(PUKSUWHAN II)이 미구축함 노리스(Norris)호에 나포<sup>72)</sup>되는 등 제주와 일본을 오가는 선박의 밀수입과 나포가 계속됐다.

더욱이 1946년 발생한 콜레라의 기승과 보리농사의 흉작은 제주도민들의 생존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갔다. 1946년 6월부터 8월까지 제주도 전역을 휩쓴 콜레라는 단 3개월 사이에 적어도 369명 이상의 사망자를 낼 정도로 해방 이후 최악의 전염병이었다. 치사율 60% 이상<sup>73)</sup>을 보인 콜레라로 전국적으로 1946년 8월 27일까지 1만995명의 환자가 발생해 7193명이 목숨을 잃었다.<sup>74)</sup> 제주지역의 콜레라 환자 발생과 사망자수는 1946년 6월 중순 무렵 18명의 환자가 발생해 7명이 사망<sup>75)</sup>한 이후 마지막으로 보고된 8월 27일까지 2개월여 동안 369명으로 사망자수가 늘었다.<sup>76)</sup> 제주도 출신으로 당시의 생활고와 4·3을 겪고 일본으로 건너간 한 체험자는 이렇게 증언했다.

해방되니까 우리가 굶었지. 일제시대에는 우리가 굶은 예가 있었나하는 말들이 떠돌았어요. 그리고 알갭게도 해방 이후 46년인가 제주도에 호열자병(콜레라)이 유행됐고, 농사가 잘되지 않아 기근 현상이 제주를 휩쓸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제주도를 빠져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sup>77)</sup>

제주도가 콜레라 전염병으로 공포에 떨던 그해 제주도의 보리작황 또한 대흉작이었다. 이 해 제주도의 보리 수확량은 8만3785석으로 해방 이전인 1943년의 20만4796석,

69)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319, 3 September 1946.

70) 『제주신보』 1947년 5월 24일.

71) Hq. 6th Inf Division, G-2 Periodic Report No. 323, 6 September 1946.

72) 위의 글, No. 330, 13 September 1946.

73)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 48, 15 August 1946.

74)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317, 30 August 1946.

75) Hq. USAFIK, 위의 글, No. 256, 18 June 1946.

76) Hq. USAFIK, 위의 글, No. 298, 7 August 1946, 위의 글, No. 317, 30 August 1946.

77) 김민주(당시 17세 · 일본 도쿄 거주)의 증언, 제주문화방송, 앞의 프로그램.

1944년의 26만8133석에 비해 각각 41%, 31%에 그치는 것이었고, 해방되던 해인 1945년의 18만7480석에 비해서도 44.7%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sup>78)</sup> 1947년 전국의 하곡 생산량도 1940-1944년의 연평균 생산량의 54%에 불과할 정도로 낮았다.<sup>79)</sup> 그러나 다른 지방은 하곡 재배 대신 논농사를 할 수 있었으나 제주도는 토질이 나빠 여건이 달랐다. 이 때문에 제주도민들 가운데는 칩뿌리와 해산물 등을 채취해 목숨을 연명해 가는 사람들이 생겨났다.<sup>80)</sup>

제주도의 식량난이 계속된 것은 대흉년과 함께 다른 지방에서 쌀을 도입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미군정의 미곡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다. 한국의 미곡관리체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미군정이 1945년 미곡에 관한 법령(일반 고시 제1호)을 통해 미곡의 자유판매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심각한 인플레이션<sup>81)</sup>과 기아, 전반적인 경기침체를 유발시켰다.<sup>82)</sup> 1946년 2월에 이르러 미군정은 미곡의 자유판매제도를 취소하고 1인당 하루 3홉씩의 배급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해방전 배급량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었다.<sup>83)</sup> 미군정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일제가 실시했던 미곡수집체제, 즉 쌀공출제도를 부활시켰다.<sup>84)</sup> 그러나 콜레라와 대흉년 등으로 가중된 식량난과 공출 반대운동<sup>85)</sup>으로 제주지역의 곡물수집량은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표 2-2>에서 보듯이 1월 18일 이후 2월 8일까지 1%에 머물던 제주도의 미곡수집계획이 일주일만에 22%로 증가하고, 또다시 일주일만 지나자 44%로 급증한 것은 실적 부풀리기식의 통계상의 오류가 있거나 강제 공출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78) 조선은행, 『조선경제연보』(1948), 4쪽.

79) Despatch No. 213, Arthur C. Bunce, Office of Economic Advisor to the Secretary of State, Subj: Estimate of 1948 Summer-Grain Production in South Korea, 14 July 1948.

80) 제민일보사, 앞의 책 1, 154쪽.

81) 1943년 6월에 조선은행이 발행한 엔화는 10억엔 이하지만 이는 현저하게 많은 액수였다. 1945년 8월 6일에는 40억엔이 유통됐고, 10월에는 남한에서만 70억엔 이상이 유통되고 있었다. 생산과 적절한 세수가 없는데도 통화는 점점 더 팽창되어갔다. 1947년 1월에 183억엔, 1947년 12월에는 334억엔이 되었다. 1948년 말에는 정부가 조선은행에 초과 인출한 금액이 380억엔에 달했다. 소매물가는 1945년 8월부터 1946년 12월 사이에 10배로 올랐으며, 도매물가는 28배나 뛰었다. 그레고리 헨더슨, 앞의 책, 211-212쪽.

82) 브루스 커밍스, 앞의 책, 341쪽.

83) Despatch No. 119, Arthur C. Bunce, Office of Economic Advisor to the Secretary of State, Subj: Food Report for South Korea as of March 1948, 10 May 1948.

84) 『HUSAFIK』 3, p. 317.

85) 좌익은 8월에 접어들면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강제 곡물수집정책을 거부하자는 내용의 곡물수집 반대 배라를 제주도 전지역에 살포했다.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612, 20 August 1947.

〈표 2-2〉 1947년의 도별 추곡 수집률

지방	47.1.18	47.1.25	47.1.31	47.2.8	47.2.15	47.2.22
충북	86	87	88	89	89	89
충남	87	87	87	88	88	90
전북	34.9	40	47	51	54	58
전남	68	80	80	80	81	83
경북	62	63	63	64	64	66
경남	89	91	91	92	93	93
경기	76	81	85	86	87	94
강원*	16(169)	16(169)	16(169)	16(169)	175	175
제주	1	1	1	1	22	44
합계	69.5	73.8	76	77	78	81

출처: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445, 1 Feb 1947; 위의 글, No. 455, 13 Feb 1947; 위의 글, No. 468, 1 Mar 1947. \*강원도는 16%와 169%로 혼동돼 나와있다.

그러나 제주도민들이 1947년 한 해 동안 배급받은 식량은 1일 1인당 3홉이 아닌 2홉5작이 최대였다. 그것도 매달 초에 배급받는 것이 아니라 하순에 이르러서야 그 달의 상반기분을 배급받는 식이었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은 기아상태에 허덕여야 했다. 이마저도 질이 나빠 주민들이 구토를 하는 사례도 있었다. 배급된 식량 가운데 소맥분은 질이 좋지 않은 데다, 비료나 석유, 석탄분 등이 섞여 있어 이를 식량으로 먹은 주민들이 구토를 하는 증세까지 보여 배급을 중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sup>86)</sup>

제주도 산업국장 임관호는 “2월 배급 전에는 다른 지방으로부터의 미곡 반입이 순조롭지 못해 1홉씩 밖에 배급하지 않았다”면서 “장차 반입이 순조로우면 미곡 2홉, 잡곡 5작씩 비농가에 배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1947년 내내 미곡 2홉을 배급한 적은 없다.<sup>87)</sup>

제주도민들이 식량난에 허덕이는 상황에 대해 미군정은 심각성을 고민하지 않았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활용했다. 제주도 민정장관 스타우트(Stout) 소령은 1947년 3월 20일 “식량배급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배급을 받지 못해 대단히 곤란을 당하고 있는 줄 안다”며 “배급기한이 지연된 것은 파업으로 인해 배급사무소가 중지된 때문이고 읍내 각 직장이 전부 복구되면 즉시 배급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혀 식량배급을 파업과 연계시켰다.<sup>88)</sup>

1일 1인당 배급량도 실제 배분과정에서는 읍·면별로 달랐다. 제주지역의 1947년 11월

86) 『제주신보』 1947년 4월 8일.

87) 『제주신보』 1947년 2월 2일.

88) 『제주신보』 1947년 3월 22일.



분 배급량은 1일 1인당 미곡 1홉과 잡곡 1홉이었지만, 12개 읍·면 가운데 5개 읍·면의 실제 분배 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 2-3〉 1947년 11월의 제주도 식량 배급현황

읍면별	비농가(홉)		부분경작자(홉)		재산가(홉)*	
	미곡	잡곡	미곡	잡곡	미곡	잡곡
제주읍	1	-	-	-	-	-
중문면	1	1	.7	.8	.5	.5
남원면	1	1	.8	.7	.5	.5
서귀면	1	1	-	-	.8	.7
구좌면	1	1	-	-	-	-

\* 재산가는 암시장에서 추가 필요량을 살 재산이 있는 비농가이다. 서귀면의 재산가수를 요청했는데 5520명의 비농가 주민 가운데 재산가는 700명이었다.

출처: Peter J. Carroll, Administrative Assistant to Chee, Yong Eun, Director of National Food Administrator & Carroll V. Hill, Advisor, Subj: Operation of Rationing Program in Cheju Do, 3 January 1948.

또한 대부분의 면에서 배급량이 늦게 전달됐다. 한 예로 11월 제주읍 주민들에게 줄 미곡 1홉씩은 12월 8일까지 전달되지 않았다.<sup>89)</sup>

다른 지방에서는 미곡 수집을 반대하는 농민들이 경찰서에 연행, 구금된 상태에서 경찰에서 터무니없이 높은 값에 판매하는 양식을 제외하고는 식량을 제공받지 못하기도 했다.<sup>90)</sup>

심지어 제24군단사령부 경제고문관실의 아더 번스(Arthur C. Bunce) 조차도 “농민과 통계원들이 하곡 재배 면적을 적게 신고하는 주된 이유는 강제적인 하곡수집계획이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sup>91)</sup>

제주지역의 하곡 수집과정에서도 수집반원들과 주민들간에 마찰이 발생하였다. 마을주민들이 하곡수집을 거부하는 기미를 보이자 우익 청년단체원들을 동원<sup>92)</sup>하는가 하면 하곡수매를 독려하던 공무원들이 청년들에게 폭행당하기도 했다.<sup>93)</sup> 그러나 제주도 민정장관

89) Peter J. Carroll, Administrative Assistant to Chee, Yong Eun, Director of National Food Administrator & Carroll V. Hill, Advisor, Subj: Operation of Rationing Program in Cheju Do, 3 January 1948.

90) 『HUSAFIK』 3, p. 320.

91) Despatch No. 213, Arthur C. Bunce, Office of Economic Advisor to the Secretary of State, Subj: Estimate of 1948 Summer-Grain Production in South Korea, 14 July 1948.

92) 제민일보사, 앞의 책 1, 454쪽.

93) 제민일보사, 앞의 책, 453-456쪽;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608, 16 August 1947; 위의 글, No. 610, 18 August 1947.

러셀 베로스(Russel D. Barros) 중령은 우익단체를 동원한 강압적 방법에 의한 곡물 수집의 길을 열어놓았으며<sup>94)</sup>, 폭행사건 재발을 우려해 사복경관을 대동해 하곡수집을 실시하기도 했다.<sup>95)</sup>

1947년의 도별 하곡수집율을 보면 제주도의 심각한 식량부족을 볼 수 있다.

〈표 2-4〉에서 보듯이 제주도의 1947년도 하곡 수집률은 전국 평균이 99.2%인데 비해 18.9%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는 하곡 수집에 대한 반대 외에도 대흉년으로 기근이 심각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4·3봉기가 발발한 1948년도에는 113t이 할당됐으나 수집률은 4·3%에 지나지 않았고, 이듬해인 1949년에는 할당량 자체가 없었다.

또 1946년의 미곡 수집결과도 제주도가 백미 2500석을 할당받았으나 1207석만을 수집해 48.2%의 수집률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당시 전국의 할당량은 429만5500석으로 361만 5258석이 수집돼 84.2%의 수집률을 보였다.<sup>96)</sup>

〈표 2-4〉 1947-1949.7.31 도별 하곡수집(단위: t)

도별	1947		1948		1949	
	총수집량	수집율	총수집량 <sup>1)</sup>	수집율	총수집량	수집율
경기도	9,289	112.1	8,582	105.7	3,972	46.7
충청북도	6,159	116.5	6,807	101.9	2,211	36.1
충청남도	9,119	91.1	8,490	104.9	2,758	33.5
전라북도	13,481	100.3	13,995	113.1	4,838	30.3
전라남도	22,940	98.5	19,738	92.3	8,008	40.8
경상북도	16,435	100.1	20,757	103.0	8,862	47.9
경상남도	19,892	102.7	22,195	106.8	15,956	82.2
강원도	2,442	103.6	2,103	101.1	528	23.9
제주도	460	18.9	113	4.3	0	00.0
총계	100,217	99.2	102,780	100.5	47,133	48.0

1. 1948년 11월 10일 현재 최종 수집량 자료

출처: Republic of Korea Statistical Summation No. 7, July 1949.

이처럼 절대 위기 상황의 식량난이 계속되자 관민 식량사절단이 전남 지역을 방문해 중앙식량행정처로부터 지시받은 5만t의 미곡을 보내줄 것을 호소했다.<sup>97)</sup> 식량배급량을 조

94) 『제주신보』 1947년 7월 30일.

95) 『제주신보』 1947년 8월 22일.

96) Despatch No. 119, Food Report for South Korea as of March 1948, Arthur C. Bunce, Office of Economic Advisor, Hq. XXIV Corps to the Secretary of State, May 21, 1948.

97) 도 대표 제주도청 산업국장 임관호, 군대표 김영진, 읍면대표 고은삼, 식량영단 소장 박태훈,

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유명인구가 등장<sup>98)</sup>하는가 하면 호별세 채납자에 대해서는 식량 배급을 중지하겠다는 발표도 나왔다.<sup>99)</sup> 이런 과정에서도 극우파 인물인 유해진 제주도 지사는 식량 배급표를 임의대로 통제<sup>100)</sup>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귀환자와 실업자의 증가, 제조업체의 폐쇄, 해방으로 인한 갑작스런 대외교역의 중단, 미군정의 미곡정책의 실패와 식량난, 극우파 제주도지사의 식량 배급표에 대한 정치적 이용 등 빈사상태의 제주지역 경제상황은 호전의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제주도민들을 심리적인 공황상태로 몰아가면서 사회적 긴장감을 조성해 나가기 시작했다.

---

제주신보사 백찬석, 민간측 박명효, 홍순녕씨 등 7명은 4월 28일부터 광주를 비롯한 전남 각 지방을 돌아다니며 식량을 보내줄 것을 호소하고 5월 7일 귀향했다. 『제주신보』 1947년 4월 12일; 5월 10일.

98) 제주읍이 조사를 벌인 결과 용담리에서만 200명이 적발됐다. 제주읍은 부정으로 식량을 배급 받는자가 적발되면 그 세대는 물론 당해 반의 전세대에 대한 배급을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신보』 1947년 5월 8일.

99) 1947년 9월 15일부로 부과된 호별세의 완납 기일이 9월말일 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납세자가 1할 정도에 불과하니 금번 호별세 채납자에 한해서는 불일 배급될 10월분 식량미 배급은 물론 그 외 일반 배급을 일절 중지할 예정이다. 『제주신보』 1947년 10월 22일.

100) 식량을 배급받는 가족의 책임자는 가족 배급표를 받기 위해 각각의 배급기간에 면장실을 방문하고, 면장이나 면직원들은 구입을 승인한 곡물 양을 표에 적는다. 구입한 다음에는 표를 면장실로 반환하기 위해 배급받은 주민이 속한 구장(이장)에게 준다. 즉 배급표는 월별 공급량을 구입하기 위한 일종의 허가증으로, 이러한 제도는 관리들에게 강력한 무기를 제공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Peter J. Carroll, 앞의 글.

## 제 3 장 미국의 대한정책과 단정안의 유엔 결의

### 제1절 미국의 대한정책

트루먼 행정부는 1947년 3월 12일 동유럽에서의 영향력을 확보하고 서유럽의 영향력 강화를 위해 소련의 압력을 받고 있던 그리스와 터키에 대규모 군사원조와 재정지원을 제공할 것을 결정하는 이른바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했다.<sup>1)</sup> 이날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있었던 트루먼의 연설요지는 안정된 세계질서 속에서만 미국의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에 소수 무장세력이나 외부세력에 의해 시도되는 정복을 막기 위한 힘과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트루먼은 그리스와 터키에 대한 원조가 평화구축의 중요한 단계라고 언급했다.<sup>2)</sup> 미국의 그리스와 터키에 대한 개입은 영국이 수행했던 전통적인 세력균형자 역할을 대행하는 것이었다.<sup>3)</sup>

다음날 이승만은 트루먼에게 보낸 트루먼 독트린을 지지하는 서한에서 “한국은 그리스와 비슷한 전략적 상황에 놓여있다”며 “미 점령지역에 과도 독립정부의 즉각적인 수립은 공산주의 진출에 대한 보루를 세우는 일”이라고 주장했다.<sup>4)</sup>

트루먼 독트린은 오랫동안 지속돼온 고립주의 정책을 끝내고 전후 세계적 차원의 지도력의 발휘를 의미하였다. 트루먼 독트린의 근간이 되는 조지 케난의 전략은 미국이 군사비용을 증대시키거나 미국인의 생명을 희생시키지 않고도 소련의 팽창에 저항하는 토착 세력의 육성을 통해 국제적 안정을 촉진시킬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었다. 군사력을 무조건적으로 투입하지 않고도 소련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이 전략은 트루먼 행정부에 영향을 미쳤다.<sup>5)</sup>

이런 상황에서 트루먼 행정부의 아시아정책 목표는 유럽에서와 같이 세력균형의 회복

1) 트루먼의 연설 내용 전문은 트루먼 도서관 웹사이트에 나와있다.

<http://www.trumanlibrary.org/trumanpapers/frameset/index.htm>, 2002년 12월 1일.

2) 트루먼은 1947년 3월 22일 트루먼 독트린 인준안 서명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그리스와 터키에 대한 미국의 원조는 평화구축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며 “상하 양원에서의 압도적인 지지는 미국이 평화를 갈망하고, 평화의 조건을 창출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Statement by the President Upon Signing Bill Endorsing the Truman Doctrine, March 22, 1947, 위의 인터넷 웹사이트.

3) 오재완, 앞의 글, 159쪽.

4) 이승만이 트루먼에게 보내는 서한, 1948년 3월 13일, 제주4·3위원회, 『제주4·3사건 자료집: 미국자료편⑤』 11(서울: 동화, 2002), 193쪽.

5) 오재완, 앞의 글, 164쪽; 제임스 메트레이, 구대열 옮김, 『한반도의 분단과 미국』(서울: 을유문화사, 1989), 13쪽.

과 대항세력의 육성에 두었다. 트루먼은 새행정부의 출범에서부터 아시아에서 소련의 행동을 동유럽에서 스탈린의 정책과 동일선상에서 이해했다.<sup>6)</sup> 트루먼은 소련의 팽창주의를 종전후의 국제관계에 있어 주요 요소로 간주하려 했다. 그는 전후 식민지 경험을 갖고 있던 신생국가들이 미국식의 정치, 경제, 사회 발전 모델을 선택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식민 지역에 대한 트루먼의 정책은 미국의 민주적 원칙에 대해 이들 정부가 갖는 애정의 정도에 관계없이 미국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부를 거의 전적으로 지원하는 결과를 낳았다.<sup>7)</sup>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중국을 아시아 전략의 주요 기지로 간주해 국민당이 공산당에 대해 발동한 내전을 적극 지지했다. 그러나 1949년 국민당은 내전에서 패해 타이완으로 물러나자 중국은 곧바로 아시아에서 미국의 주요 적대국이 됐다. 이로 인해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있어 일본의 지위는 명확하게 상승했고, 냉전체제의 중요한 기지가 되었다.<sup>8)</sup>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중과 그 직후 미국의 전후 재건계획에 있어 단지 조그마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불과했다고 알려지고 있지만, 한국에서의 불안정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일본의 패배 이후 아시아문제에 대한 미국의 일반적인 접근법을 대표하는 것이었다.<sup>9)</sup>

트루먼 대통령의 배상금에 관한 개인 특사로 특별임무를 띠고 극동을 순방한 에드윈 폴리(Edwin W. Pauley)는 일본 도쿄에서 트루먼에게 한국은 마땅히 받아야 할 만큼의 주목과 고려를 받지 못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했다.

한국이 작은 나라이고, 미국의 전체 군사력이 극히 일부분의 책임만을 맡고 있지만 아시아에서 미국의 성공 전체가 달려있을지도 모르는 이데올로기의 전장터입니다. 한국은 실패한 봉건주의의 도전에 직면해 민주적인 경쟁력 있는 체제가 채택될 수 있는지의 여부나, 다른 체제 즉 공산주의가 보다 강력해질지의 여부를 시험할 장소입니다.<sup>10)</sup>

이런 인식을 갖고 있던 미국의 대한정책 목표 또한 트루먼 독트린의 기본방침을 적용한 대소봉쇄였다.<sup>11)</sup> 미국은 소련이 고무하는 국내 혁명의 조류를 저지하는 반공보루를 남

6) 오재완은 유럽이 정책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중국 내전은 그리스 내전과 질적으로 다른 성격의 것이며, 미국의 아시아 개입 확대는 유럽에서 소련의 모험주의를 격려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기본 인식에 입각해 미국은 중국 내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실질적인 군사적 조치를 자제했다고 주장했다. 오재완, 앞의 글, 162쪽.

7) 제임스 매트레이, 앞의 책, 49-50쪽.

8) 榮維木, 「제2차 세계대전후 동아냉전체제의 형성이 전쟁 책임 청산에 대해 끼친 영향-중국의 예-」, 동아시아 평화·인권 국제학술회의 사무국, 『제6회 동아시아 평화·인권 국제학술회의 여수대회』(2002년 10월 17-20일, 전남 여수대), 42-43쪽.

9) 제임스 매트레이, 앞의 책, 12쪽.

10) Ambassador Edwin W. Pauley to President Truman, June 22, 1946, *FRUS*, 1946, VIII, pp. 706-709.

한에 구축하려 했으며, 이에 따라 미군정은 소련의 한국지배를 저지하는 동시에 남한의 공산화를 초래할 혁명세력의 확산을 봉쇄하는데 초점을 맞춰 점령정책을 수행했다.<sup>12)</sup> 이로서 한국은 트루먼의 아시아 정책의 시험대로 떠올랐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소련이 미국의 외교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자 트루먼 행정부는 신탁정책을 완전히 포기하게 됐다.<sup>13)</sup> 이는 미소 양국의 지도자들이 통일 한국의 국가발전 모델로서 자국체제를 선택하도록 이식시키려 경쟁한 결과다.<sup>14)</sup> 이의 실패에 따라 미국은 대안으로서 미군 철수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남한과 이승만 정권을 봉쇄의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남한만의 분단정권 수립을 의미하는 전략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게 됐다.<sup>15)</sup>

한국이 미국의 아시아정책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1949년 6월 7일 트루먼이 한국에 대한 경제원조의 제공과 관련해 의회에 보낸 교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그는 이 교서에서 “한국은 공산주의에 대항해 민주주의의 원칙과 이상의 실효성 및 실질적인 가치를 증명하는 민주주의의 시험무대가 되어왔다”며 “신생 대한민국의 경제적 발전은 동남아 및 태평양 제도의 국민들에게 공산주의의 선전을 거부하도록 용기를 주고, 민주주의의 성공을 증명해 보임으로써 한국은 북부 아시아인들에게 공산주의에 저항하는 횃불로 상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sup>16)</sup> 전후 미국은 남한을 아시아에서의 민주주의 실험대이자 반공의 보루로 상징했다.

## 제2절 미국의 단정수립 계획과 단정안의 유엔 상정

미국의 남한 단정수립 계획은 유엔을 통한 한국문제 해결이라는 방식과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진행됐다. 미국은 유엔헌장의 신탁통치 대상지역을 규정한 제12장 제77조 제1항(나)에 근거해<sup>17)</sup> 한반도를 유엔하의 탁치로 묶어둘 것을 구상했는데, 이것이 유엔을 통해

---

11) 오재완, 앞의 글, 162쪽.

12) Rose, 'Roots of Tragedy', pp. 104-105, 오재완, 앞의 글, 60쪽에서 재인용.

13) 오재완, 앞의 글, 163쪽.

14) 제임스 매트레이, 앞의 책, 74쪽.

15) 오재완, 앞의 글, 163쪽.

16) Special Message to the Congress Recommending Continuation of Economic Assistance to Korea, June 7, 1949.

<http://www.trumanlibrary.org/trumanpapers/frameset/index.htm>, 2002년 12월 1일.

17) 유엔헌장 제77조

1. 신탁제도 적용은 신탁협정에 의해 이 제도 밑에 다음과 같이 각 종류의 영토로 분별한다.

(가) 현재 위임통치하의 영토

(나) 제2차 세계대전 결과로 인하여 자연 적국으로부터 분리된 영토

한반도 문제를 처리해 보려는 첫 시도였다.<sup>18)</sup> 이 구상은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협정으로 4대국의 신탁통치로 변하게 되었다.

한반도의 임시민주정부 수립과 4대국에 의한 신탁통치를 결정한 모스크바 3상회의 결과에 따라 이듬해 1월 16일 소련측 스티코프 중장과 미국측 전군정장관 아놀드 소장을 양측 대표로 해 3주일 동안 예비회담이 열린데 이어 3월 20일 열린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이하 미소공위)는 '협의 대상' 선정 문제로 논란을 겪다가 5월 8일 무기한 휴회됐다.

제1차 미소공위가 결렬되자 유엔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논의가 다시 대두됐다. 트루먼 대통령의 개인특사로서 극동을 순방중이던 에드윈 폴리는 1946년 6월 22일 트루먼에게 소련에 한국의 상황에 대한 모스크바 협정을 준수하도록 강요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로 '한국문제를 유엔 또는 4대강국에 회부할 것'을 건의했다.<sup>19)</sup>

맥아더 장군은 1947년 1월 22일 미소공위의 결렬로 인해 남한의 상황이 심각함을 제기하고 첫 번째 건의사항으로 '한반도 문제의 유엔 이관'을 본국 정부에 제기했다.<sup>20)</sup>

이처럼 모스크바 3상 결정에 대한 재고 요구가 높아가는 상황에서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했다.

1947년 2월 워싱턴에서는 한국문제와 관련해 장관들에게 정책건의를 하기 위해 구성된 '한국문제에 관한 부처간 특별위원회'가 한국에서의 미국의 정책방향에 관한 일반적인 합의에 이르렀다. 특별위원회가 구상한 정책방향은 소련과의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와 가능할 경우를 전제로 한 대안을 분석한 뒤 전체적인 정책건의를 했다.<sup>21)</sup> 이 위원회가 마련한 소련과의 합의가 불가능함을 전제로 한 대안으로 첫째, 현 정책과 계획의 유지, 둘째, 남한 단독정부의 인정, 셋째, 한반도 문제의 4대국 또는 유엔 이관, 넷째, 남한에 대한 '적극

(대) 관리책임을 부한 국가가 자원하여 차 제도하에 놓여있는 영토

2. 상기 종류중 어떤 영토든지 장차 신탁제도하에 놓으려는 그 조건에 관하여는 차후 타당한 규정의 사정으로 협정한다.

18) 김동국,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처리에 관한 연구-1947.9~1948.12』, 연세대 정치학과 석사학위논문, 1989, 7쪽.

19) Ambassador Edwin W. Pauley to President Truman, June 22, 1946, *FRUS*, 1946, VIII, pp. 706-709.

20) 한국문제 해결을 위한 맥아더의 4가지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한반도 문제의 유엔 이관 ② 현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해결방안 건의 목적을 지닌 비관계국들을 포함하는 위원회 조직에 대한 미국 정부의 추천 ③ 실행가능한 해결방안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한국과 관련있는 한 모스크바협정의 제3장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견지에서 미국, 영국, 중국, 소련 정부 간의 추가 회담 ④ 독립국가로서 예상되는 출현에 따른 정치적, 경제적 단위로서의 성공적인 한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미소 대표간의 최고위급 회담 등이다. Memorandum by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Far Eastern Affairs(Vincent) to the Secretary of State, January 27, 1947, *FRUS*, 1947, VI, pp. 601-603.

21) 특별위원회의 정책건의 핵심은 첫째, 모스크바 회담의 종료에 앞서 소련 정부에의 접근, 둘째, 한국의 경제부흥과 교육 및 정부차원의 발전, 정치적 지도를 위한 적극적인 계획에 대한 적절한 재정지원을 승인하기 위한 의회의 특별 법률안 제정이었다. Memorandum by the Special Inter-Departmental Committee on Korea, February 25, 1947, *FRUS*, 1947, VI, pp. 608-618.

적인 정책' 추진 등이 고려됐다.<sup>22)</sup> 이는 미국이 본격적으로 한반도 문제의 유엔 이관과 남한 단독정부 수립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게됐음을 의미했다.

4월 8일 미국무장관 마샬은 소련 외상 몰로토프에게 서신을 보내 미소공위 재개 촉구와 함께 공위 재개가 성사되지 않으면 "미국은 모스크바협정의 책임을 느껴 미군 점령지대에서만이라도 협정의 목적을 달성시키는데 필요한 계단을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혀 유엔을 통한 단정수립 의지를 암시했다.<sup>23)</sup>

1947년 5월 22일부터 10월 18일까지 열린 제2차 미소공위도 협의 대상 문제로 논란을 겪다가 7월 중순부터 미국측 대표단이 공위 결렬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이후의 대비책을 본국에 촉구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는 미국의 봉쇄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시기이기도 했다. 비슷한 시기에 하지 중장은 합동참모본부에 보낸 전문에서 미소공위의 결렬은 미국의 대한정책을 근본적으로 변경시킬 것이라면서 정책방향을 제안했다. 하지 중장이 제시한 방향은 첫째, 미소공위가 실패하면 이를 지체없이 선언하고 향후 행동계획을 수립할 것, 둘째, 미소공위 결렬 이후 신속하게 남한 자치정부를 수립하고 GARIOA 이상의 원조를 할 것, 셋째, 본 사령부의 전투부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 등이었다. 미군정의 이런 요청은 사실상 모스크바 결정을 통한 한반도 문제해결이 실패했음을 자인하는 것이고, 미국의 대한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sup>24)</sup>

국무성과 육군성, 해군성 등 3성조정위원회(SWNCC)는 7월 23일 동위원회가 확정해 대통령이 재가한 <SWNCC 176/28>을 다음날 맥아더 장군에게 보냈다. 이는 주한미군사령관 하지 중장에게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3성조정위원회는 이 지침에서 남한의 행정에 한국인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책임있는 지위에 유자격 한국인들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한국인들을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보통선거를 활용하는 방안과 모든 정치단체의 역량에 비례해 임명직을 선출할 것 등을 제시하는 한편 남한의 정치, 사회, 경제적 개혁을 위해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sup>25)</sup>

---

22) 특별위원회의 고려사항 가운데 '현 정책과 계획의 유지'에 대해 한국인들이 날마다 군정과 한국에 있는 미국의 대상, 미국 자체에 대한 반감이 높아가고 있으며, 이들 반감이 이미 인명피해를 낳는 폭동과 소요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비효율적인 계획에만 매달리는 것은 극히 현명치 못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국문제의 4대국 또는 유엔 이관'에 대해서는 한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 실패하면 궁극적으로는 유엔에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위의 글.

23) 몰로토프 소련 외상에게 보내는 마샬 미국무장관의 서한(1947년 4월 8일), 송남현, 『해방3년사』Ⅱ(서울: 까치, 1985), 469-471쪽.

24) 정용욱, 『1942-1947년 미국의 대한정책과 과도정부형태 구상』,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6, 234쪽.

25) Interim Directive to General of the Army Douglas MacArthur, at Tokyo, for Lieutenant General John R. Hodge, at Seoul. <SWNCC 176/29>, July 24, 1947, *FRUS* 1947, VI, pp.



1947년 7월 말 제2차 미소공위가 협의대상 문제로 휴회돼 결렬되는 것이 확실해지자 유엔으로의 한국문제 이관은 이제 '현실적인 안'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 이후 미국의 대한정책 방향은 1947년 8월 4일자 <SWNCC 176/30>을 통해 구체화됐다. 이 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미국은 현시기 한반도가 공산주의의 지배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철수할 수 없다. 이에 따른 정치적 반향은 극동과 전세계에서의 미국의 위신을 심각하게 손상하고, 미국이 지지하는 대내외의 공산주의자들의 압력에 저항하는 소국가들의 의욕을 꺾을 것이다.

2. 8월 7일까지 미소공위의 교착상태가 계속된다면 통일, 독립 한국의 수립을 촉진하기 위한 향후 단계에 관해 주어질 수 있는 즉각적인 고려를 하기 위해 8월 17일까지 그와 같은 진전상황에 대해 공위로부터 보고서를 받고자 하는 미국 정부의 희망을 소련 외상에게 알려야 한다. 미소공위가 공동보고서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미국 대표단은 미국 정부에 단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8월 18일에는 공위나 미국 대표단의 보고서를 받은 뒤 미국 정부가 모스크바 협정과 관련된 3개국에 공위의 교착상태와 모스크바 협정의 목적을 조기 달성하기 위한 확실한 단계를 제안해야 한다.

이 제안에는 첫째, 인정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한국인 스스로가 임시 정부를 수립하며, 둘째, 유엔의 선거감시와 임시 정부 수립에 관련된 기타 사항들을 제안하고, 셋째, 임시 정부와 4대국 사이의 협의에 따라 지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야 한다.

3. 소련이 미국안을 거부한다면 미국 정부는 전체 한국문제를 차기 유엔 총회에 상정할 것을 모스크바 협정 관계국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와 동시에 총회 안건으로 만들기 위해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sup>26)</sup>

이 문서의 특징은 첫째, 미소공위가 실패하고 소련측에서 미국이 제안하는 다음 단계의 대안을 따르지 않을 때 한국문제의 최종적인 귀착지는 유엔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 작성됐다는 점, 둘째, 향후 한국정세에 대한 평가, 새로운 대한정책의 작성을 둘러싼 정책담당자들간의 견해차를 조율하고 미국의 정책방침과 향후 행동방향을 집약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이다.<sup>27)</sup>

---

714-731.

26) SWNCC 178/30, Report by the Ad Hoc Committee on Korea, 4 August, 1947, *FRUS*, 1947, VI, pp. 738-741.

27) 정용욱, 앞의 글, 236-237쪽.

이 정책은 모스크바 결정에 의한 한반도 문제 처리를 폐기하고 ‘한반도의 소비에트화’를 막기 위해 한국문제의 유엔이관을 공식화한 것이다.

제2차 미소공위가 교착상태에 빠져 미소 점령군 사령부간의 협상에 의해 한국문제를 해결될 수 없게 되었다. 미소공위의 결렬은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미소간의 이해관계가 상이하게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반도의 남과 북이 미국과 소련의 이해를 반영해 상이한 체제로 고착되어감을 뜻했다.<sup>28)</sup> 공위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미국무장관 대리 로베트(Robert A. Lovett)는 1947년 8월 26일 소련측에 미·영·중·소 4대국 회의를 제안했다. 로베트 제안의 핵심은 유엔의 지도 아래 남북한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하자는 것으로서 1947년 9월 8일 워싱턴에서 시작되는 이 문제에 관한 4대국 회담에 참가할 것을 희망했다. 로베트의 제안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미소가 한국의 각각의 지역에서 조기 선거를 실시한다. 투표는 보통선거에 입각한 비밀, 다당제 투표를 하며, 선거는 현행 한국의 미소 각 지역의 법체계에서 채택된 법률에 따라 실시한다.
2. 각 지역은 인구 비례에 따라 대표를 선출하며 이들이 전한국 차원의 임시입법기구를 구성한다. 임시 통일 한국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다.<sup>29)</sup>

이는 모스크바 협정을 대치하는 새로운 주장이었다.<sup>30)</sup> 미국의 제안을 영국과 중국은 수락했으나 소련 외상 몰로토프는 9월 4일 미국무장관 마샬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이들 제안이 남북한에 독립된 임시 입법기구의 수립을 예상하는 한 한국의 분단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sup>31)</sup> 그러나 소련의 거부는 예상됐었기 때문에 로베트의 제안은 한국독립 문제를 유엔총회에 상정시키기 위한 형식적인 사전절차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미국은 다음 수순으로 한국문제 해결을 유엔에 상정하게 됐다. 미국으로서는 유엔이 한국문제를 관장하게 되면 소련에 ‘세계 여론’의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한국의 신탁통치를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실현하거나 소련의 대응을 내외에 알림으로써 남한내 단정수립을 위한 명분을 축적할 수 있었다.<sup>32)</sup>

소련이 미국의 제안을 거부하자 미국은 9월 17일 한반도 문제를 유엔 2차 총회 회기

---

28) 신용중, 『미·소의 대한반도정책, 1943-1948』,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 논문, 1987, 159쪽.  
29) The Acting Secretary of State to the Embassy in the Soviet Union, August 26, 1947, *FRUS*, 1947, VI, pp. 771-774.  
30) 김득중, 『제헌국회의 구성과정과 성격』, 성균관대 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3, 9쪽.  
31) The Soviet Minister for Foreign Affairs(Molotov) to the Secretary of State, September 4, 1947, *FRUS*, 1947, VI, p. 779-781.  
32) 전상인, 『이승만과 5·10총선거』, 전상인, 『고개숙인 수정주의』(서울: 전통과 현대, 2001), 136쪽.

의 의제로 상정할 것을 제의했다. 미국의 일방적인 한반도 문제 처리를 위한 유엔 총회 상정은 미소공위 활동의 종결을 의미하며 한반도 문제를 미국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의미였다.<sup>33)</sup>

미국은 한반도에 친미적 정부를 수립한다는 기본목표를 포기할 수 없는데다 독자적으로 목표를 추진하는 것은 비난여론을 무릅써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절대적 지지를 확보하고 있는 유엔은 한반도의 단독조치에 대한 대내외적 비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은폐수단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sup>34)</sup>

유엔 총회는 9월 23일 열린 제90, 91차 회의에서 소련측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미국측 상정안을 찬성 41, 반대 6, 기권 7(결석 1)표로 통과시켰으며 제1위원회(이하 정치위원회)에 넘겨 이를 심의 보고토록 결정했다.<sup>35)</sup>

이렇게 되자 소련은 9월 26일 유엔 소련대표 비신스키가 미소 양점령군의 철수와 한국민 스스로 정부를 수립하게 하자는 방안을 제기했다.<sup>36)</sup> 이에 대해 10월 17일 유엔 미국대표 오스틴(Warren R. Austin)이 미국측 안을 제출했다. 미국측 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미소 양점령군은 1948년 3월 31일까지 각 지역에서 유엔의 감시하에 국회 창설과 조선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선거를 거행할 것, 둘째, 조선정부가 수립되는 대로 동정부는 국방군을 조직하고 미소 양군이 조선에서 철수할 것을 양점령당국과 협의할 것, 셋째, 유엔조선임시위원단을 창설할 것 등이었다. 또 선거수속에 대해서는 각 지역에서 선출되는 대표의 수는 그 지역의 인구에 비례하도록 했다.<sup>37)</sup>

위원회는 이런 문제에 대해 토의에 부친 결과 1947년 11월 5일 소련의 양군 동시 철수안을 찬성 20대 반대 6, 기권 7표로 부결시키고, 임시위원단의 권한이 수정된 미국측 안을 찬성 46대 반대 0, 기권 4표로 채택했다. 위원회가 제의한 결의안은 1947년 11월 14일 열린 총회에서 찬성 43대 반대 0, 기권 6표로 채택됐다.<sup>38)</sup>

이러한 유엔의 한반도 문제 결의안은 임시위원단에 한국민 대표 선출과 협의할 권한을 새로 부여한 것 이외에는 미국안이 그대로 채택된 것이었다. 그러나 소련은 한국 대표의 참가 없이는 UNTCOK 활동에 참가할 수 없다고 선언<sup>39)</sup>함으로써 결의안을 통한 한반도

---

33) 결렬 상태나 다름없었던 미소공위는 10월 18일 제62차 본회의에서 미국이 공위업무의 중단을 제의했고, 소련대표들이 10월 21일 서울에서 철수했다. 김득중, 앞의 글, 9쪽.

34) 이기명, 앞의 글, 24쪽.

35) 유엔조선위원단, 임명삼 옮김, 『UN조선위원단 보고서』(서울: 돌베개, 1984), 16쪽.

36) '유엔총회에서 소련대표 비신스키가 제시한 조선문제해결방안', 편집실 엮음, 『분단자료집』(서울: 한백사, 1989), 154-155쪽.

37) 유엔조선위원단, 앞의 글, 16-17쪽.

38)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1948년 3월 31일까지 비밀투표와 성인선거법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고, 선출된 대표들은 국회를 조직해 조선정부를 수립할 것 등을 제의한다. 남북 양지역에서 선출될 대표의 수는 인구에 비례할 것이며, 위원단의 감시하에 선거를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유엔조선위원단, 앞의 글, 21-25쪽.

문제의 해결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이 결의안 채택은 남한지역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과정<sup>40)</sup>이었으며, 전후 최초의 열전인 한국전쟁기에 앞서 단정 반대를 기치로 내건 남한내 게릴라 투쟁이 본격화되는 과정이기도 했다.

### 제3절 유엔조선임시위원단의 구성과 선거참관 결정

유엔결의안에 따라 구성된 유엔조선임시위원단(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이하 UNTCOK)은 참가국 대표단과 유엔 사무국에서 파견한 UNTCOK 사무국으로 구성됐다. 미국은 1947년 11월 5일에 있었던 정치위원회 제94차 회의에서 중국,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인도, 시리아, 프랑스,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엘살바도르 등 9개국을 추천했으나, 이는 해당국이나 정치위원회와 사전협의 없이 미국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었다.<sup>41)</sup>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유엔총회에서 “한국인 대표가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측 결의안이 제의한 UNTCOK에 참가할 수 없다”며 “대체적으로 미국 정책에 유리한 정부지령에 복종하는 대표들 보다는 오히려 중립적인 사람으로 UNTCOK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42)</sup>고 밝혀 UNTCOK에 참가하지 않았다.<sup>43)</sup>

미국이 제안한 명단은 처음에 캐나다도 거부했다. 캐나다 수상은 “한국문제에 직접적인 관심을 갖는 국가들만이 한국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UNTCOK 참가를 거부했다. 결국 캐나다는 UNTCOK에 참가하게 되지만 이는 UNTCOK의 구성과 임무가 소련 진영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 의해서도 완전한 찬성을 얻었던 것이 아님을 드러내 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sup>44)</sup>

유엔 사무총장은 1947년 11월 24일 참가국에 서한을 보내 참가대표 명부 제출을 요청했고, 이에 12월 5일, 10일, 15일에 대표들이 임명됐다.

UNTCOK는 1948년 1월 한달에 걸쳐 들어왔으며, 대부분의 대표들은 1월 8일에서 12일 사이에 도착했다. 1월 12일 서울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서 UNTCOK는 인도 대표 메논(K. P. S. Menon)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했다. 메논은 UNTCOK의 업무에 대한 방송을 통

39) 유엔조선위원단 보고서, 앞의 글, 20쪽.

40) 오재완, 앞의 글, 173쪽.

41) Leon Gordenker, *The United Nations and the Peaceful Unification of Korea*(Hague: Nartinus Nijhoff, 1959), p. 31, 김동국, 앞의 글, 25쪽에서 재인용.

42) 유엔조선위원단, 앞의 글, 22쪽.

43) 유엔조선위원단, 위의 글, 27쪽.

44) 김동국, 앞의 글, 26쪽.

해 남북한 전역을 통한 활동과 공정선거의 감시를 UNTCOK의 권한으로 확인했다.<sup>45)</sup>

UNTCOK 구성의 또다른 한 축은 사무국으로, 사무국장 피트러스 슈미트(Petrus J. Schmidt)와 부사무국장 후지쨌(胡世澤)의 통솔 아래 사무국 차장, 법률고문, 재정관, 한국인 통역관과 번역관, 기록관, 보도관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됐다.<sup>46)</sup>

UNTCOK에 부여된 폭넓은 역할과 권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할 실질적인 권한은 없었다. 예상가능한 남북총선거가 불가능해졌을 때 UNTCOK가 취해야 할 대응책은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 때문에 UNTCOK는 한국에서의 활동기간중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자체의 통일된 입장을 갖지 못함으로써 남북총선거 실시가 실패한 뒤 그리고 선거 이후 정부수립과정에서 내부의 갈등을 표출시켰다.<sup>47)</sup>

미국무장관은 UNTCOK가 남한에 들어오기 전인 1948년 1월 6일 미군정 정치고문관 대리에게 전문을 보내 “UNTCOK 대표들과의 대화를 통해 UNTCOK가 유엔 총회 결의안에 따라 선거를 개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고 남한의 선거 감시를 지체하지 말고 중요성과 시급성에 관해 대표들과 부사무국장 후의 관심을 모으는데 부단한 노력을 기울 것”을 지시했다.<sup>48)</sup>

그러나 UNTCOK는 미국에 유리하게 구성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입장<sup>49)</sup>에 즉각적인 동조를 보이지 않았다. 남한 단독선거 방안은 UNTCOK 내부에서 상당한 논란을 겪었다. 필리핀과 중국이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즉각 실시하자는 미국의 입장에 적극 지지<sup>50)</sup>한 반면 경찰제도의 선변경 등 조건부 지지를 표명한 오스트레일리아의 입장에 캐나다, 인도, 엘살바도르가 지지<sup>51)</sup>하고, 프랑스도 소극적 지지를 보였다.

---

45) UNTCOK 임시의장 메논이 1948년 1월 21일 서울중앙방송을 통한 UNTCOK의 업무에 관한 발표 내용, 『서울신문』 1948년 1월 22일, 『동아일보』 1948년 1월 23일.

46) 유엔조선위원단, 앞의 글, 27쪽.

47) 김동국, 앞의 글, 34-35쪽.

48)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Acting Political Advisor in Korea(Langdon), January 6, 1948, *FRUS*, 1948, VI, p. 1083.

49) 국내 언론들은 미국 현지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다음과 같이 미국의 입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뉴욕에 있는 국제연합 소총회는 유엔조선위원단에 대하여 미군 점령하에 있는 남조선에 단독정부를 수립치 않고 가급적 조속히 선거를 실시할 권한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그와 같은 소총회의 결정을 쾌락(快諾)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인이 조선인 정부하에 통일될 때까지 유엔 내지 미국이 최고권한을 가지고 남조선에 머물러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육군당국이 국회로부터 약 7500만달러의 조선부흥기금을 획득하라는 계획을 추진시키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보아 미국이 당분간 단독 내지 국제연합과 함께 남조선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다”, 『경향신문』 1948년 2월 8일, 『동아일보』 1948년 2월 8일; 유엔본부의 미국 관계자는 “미국은 정세에 대변화가 없는 한 중전의 태도를 견지할 것”이라며 “이 태도는 남조선지대에서 선거를 진행시키고 추후로 미국 점령군을 철퇴시키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 1948년 2월 11일, 『조선일보』 1948년 2월 11일.

50) 『서울신문』 1948년 2월 5일, 『경향신문』 1948년 2월 5일.

51) 오스트레일리아 대표 잭슨은 조선의 여론이 일종의 선거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남조선 경찰

시리아는 유엔 총회의 결의에 따라 전한국 선거를 실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UNTCOK는 남한만의 선거를 실시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sup>52)</sup> 이처럼 남한만의 단독선거 실시와 관련해 UNTCOK 대표간에 상당한 논란<sup>53)</sup>을 벌인 끝에 2월 6일 제11차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문제의 유엔 소총회 상정을 결정했다.<sup>54)</sup>

미국에게 있어서 소총회는 두가지 의미가 있었다. 우선 소총회가 미국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미국으로서는 한반도에 대한 자신의 의도를 완전 포기하거나 한국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 확산을 방치하든지의 선택을 강요받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소총회에서의 미국의 승리는 남한 단독선거가 UNTCOK의 독자적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닌 총회급 회의의 결정이라는 명분을 제공해 줄 것이었다.<sup>55)</sup> 미국이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설득한 결과 2월 26일 유엔 소총회는 남한 정부 수립을 위한 중요한 결정을 했다. 소총회는 “조선문제에 관한 1947년 11월 14일부 유엔 총회 결의와 동일 이후의 사태진전에 비추어 소총회의 견해는 UNTCOK에게 가능한 조선지역 내에서 동 결의 제2호에 규정된 사항을 실시하는 것이 UNTCOK의 임무라고 간주함”<sup>56)</sup>으로써 남한 단독선거 결의안을 통과시켰다.<sup>57)</sup>

결의안 통과에 따라 UNTCOK는 이의 수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월 28일 인도와 캐나다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비공식회의를 열고 5월 9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할 것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sup>58)</sup> 이 결정은 3·1절 기념식 때 의장대리인 중국대표에 의해 발표됐고, 하지 중장은 같은 날 “유엔조선임시위원단이 접근 가능한 미군 점령지역에서 동위원단의 감시하에 1948년 5월 9일 선거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포고<sup>59)</sup>를 발표했다.

그러나 캐나다 대표는 UNTCOK가 선거에 대해 정식 결정을 한 바 없고, 2월 28일의 결정은 UNTCOK의 정식 결정으로 간주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미군정의 포고에

---

제도를 어느 정도 근본적으로 변경하고 또한 우선 레이크썸세스로부터 이에 관한 권한 확보를 조건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조선일보』 1948년 2월 7일.

52) 시리아 대표 제크 자비는 “현재로서는 선거를 위한 자유로운 분위기를 운위하기가 곤란하며 남조선 지역에 있어서의 선거를 즉시 실시할 것이냐에 대하여는 상당히 광범한 반대가 있다”며 모든 문제를 소총회에 회부할 것을 주장했다. 『서울신문』 1948년 2월 6일, 『조선일보』 1948년 2월 6일.

53) 『조선일보』 1948년 2월 7일, 『서울신문』 1948년 2월 7일

54) 『경향신문』 1948년 2월 8일.

55) 김동국, 앞의 글, 42쪽.

56) 유엔조선위원단, 앞의 글, 81쪽.

57) 유엔 소총회는 소련이 그의 점령지대를 참가시키기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조선에 전국선거를 추진시키기를 요구하는 미국 제안을 31대 2(기권 11)로 가결시켰다. 반대 2표는 오스트레일리아와 캐나다로서 이들 나라는 전국선거라는 것이 남부지대에만 국한되는 것은 유엔 총회의 조선 전국선거 실시 결의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동아일보』 1948년 2월 28일.

58) 유엔조선위원단, 앞의 글, 82쪽.

59) ‘조선인민대표의 선거에 관한 포고’, 1948년 3월 1일, 『미군정청 관보』 4, p. 7.

관해서도 이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sup>60)</sup>

UNTCOK는 이 문제에 대해 3월 12일 토의를 거쳐 “캐나다 대표의 발의로 UNTCOK는 선거일이 5월 9일로 결정됐다고 성명서를 발표한 하지 장군의 포고에 유의하게 됐는데, 전기 포고는 UNTCOK의 선거감시를 확정된 사실로 인정했다”고 밝혔다.<sup>61)</sup> 이 성명은 완곡하게 쓰여졌으나 2월 28일의 결정이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하게 밝히고, 이를 이용한 하지 증장을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결국 하지 증장이 선거일을 확정해 발표한 것은 UNTCOK의 정식 결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미군정의 자의적 결정이었다.<sup>62)</sup>

그러나 UNTCOK는 남한 단독선거 실시를 인정했다. 이후 UNTCOK는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감시 준비와 활동에 들어갔다. 유엔과 UNTCOK는 미국이 추진한 남한 단독선거를 국제적으로 인정해주는 역할을 떠맡게 되었다.

---

60) 캐나다 대표 패터슨은 “현재의 조선 정세는 소총회 조회 당시보다 변화하였으므로 소총회의 결의안은 현재로서는 무의한 것이다. 조선 정계의 다수의 부분이, 즉 김구 김규식 양씨를 위시한 다수정당이 선거를 보이코트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이상 조위는 ‘조선관계정세의 진전에 비추어’ 새로운 안을 구상하여야 할 것이므로 소총회안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 1948년 3월 13일.

61) 유엔조선위원단, 앞의 글, 83-84쪽.

62) 김득중, 앞의 글, 16쪽: 이에 대해 미국무장관 마샬은 3월 11일 조선문제와 관련한 성명을 내고 “하지 증장은 (중국 대표) 류(劉)박사가 UNTCOK가 행한 결의를 성명한 후에 그와 협의하고 선거일자를 1948년 5월 9일로 결정발표할 것에 합의를 보았던 것이라고 보고했다”고 말해 미군당국의 자의적 결정이 아닌 UNTCOK와의 협의임을 애써 강조했다. 『조선일보』 1948년 3월 12일.

## 제 4 장 5·10선거와 제주도

### 제1절 미군정의 선거준비 과정

미군정은 5·10선거 기간을 미군 점령기간의 가장 중요한 시기로 간주했다. 주한미군사령관 하지 중장은 1948년 4월 2일 산하 지휘관들에게 보낸 전문을 보내 공산주의자들과 기타 선거반대세력에 의한 선거 방해 시도에 대한 위협을 경고했다. 그는 “한국인들이 공정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이번 노력이 성공하는 것은 미사절단의 성과에 핵심적인 것”이라고 밝히고 “군정장관은 미국의 선거감시 집행에 책임이 있다”고 규정했다.<sup>1)</sup>

이런 인식하에 미군정은 보다 많은 유권자를 투표에 참가시켜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성공적인 선거를 치러내야 했다.<sup>2)</sup> 이를 위해 미군정은 선거법 제정, 선거위원회 설치, 형사소송법 개정 등 선거 실시를 위한 법률적, 행정적 조치를 진행시켰다.

이와 함께 경찰력을 선거체제로 전환해 좌익을 중심으로 한 선거반대세력의 물리적인 선거저지 투쟁에 대응했다.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선거가 열린 적이 없어 선거집행의 전과정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sup>3)</sup>한 미군정은 남조선과도정부 서무처(고문관 중령 멜콰이어(A.W. Melchior))를 선거관리 책임부서로 정하고(3월 11일)<sup>4)</sup>, 선거업무 관련 군정장관의 대리인으로 존 웨커링(John Weckerling) 준장을 임명했다.<sup>5)</sup>

하지 중장은 3월 3일 한국인들에게 선거의 의의를 강조해 투표는 성년에 달한 국민으로서의 의무이며 투표를 포기하는 자는 불참한 선거에 의해 수립될 정부의 행동 및 정책에 대해 이것을 비판할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sup>6)</sup>

1) Inclosure No. 1, Despatch No. 85, Telegram, Subj: Orders Issued by USAFIK and USAMGIK regarding South Korean elections, Hodge, CG, USAFIK to CG, 6th Division, 7th Division, Military Government, Korea Base Command, 2 April 1948, Joseph E. Jacobs to the Secretary of State, 9 April 1948.

2) 양동안, 『혼란속의 국가형성』, 양동안, 윤근식(외저), 『한국현대정치사』(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102쪽.

3) “Report of the Military Governor of holding of elections in South Korea on 10 May 1948, leading to the establishment of a Korean National Assembly and Government under the observation of the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UNTCOK)” p. 1 (이하 MG Report), W. F. Dean to Hodge, Subj: Report of the Holding of Elections in South Korea, 10 July 1948.

4) 『조선일보』 1948년 3월 14일.

5) MG Report, 앞의 글, p. 3.



남조선과도정부 수석고문관실도 3월 8일 선거업무의 실시를 위한 필요한 예비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요구하는 군정장관의 내부 비망록에 따라 선거국면에 참여했다. 이와 함께 국회선거위원회 설치(3월 3일)<sup>7)</sup>, 국회의원 선거법 제정(3월 17일)<sup>8)</sup>, 형사소송법의 개정(3월 20일)<sup>9)</sup>, 정치범 사면(3월 30일)<sup>10)</sup> 등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하지의 정치고문관 제이콥스(Jacobs)는 UNTCOK 일부 대표들의 요구로 정치범들을 석방함으로써 공산주의 테러가 남한 전역에서 되살아나고 있고, 선거위원들과 후보자들을 위협하거나 살해하고 있으며, 제주도에서는 내전으로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재산이 파괴되고 있다며 UNTCOK의 건의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sup>11)</sup>

4월 1일에는 군정장관 딘(William F. Dean) 소장이 전국의 민정장관에게 ‘미국인 요원에 의한 선거과정 감시’ 공문을 보내 선거감시 활동과 관련한 사항을 시달렸다.<sup>12)</sup> 하지 중장은 4월 5일 ‘조선인민의 권리에 관한 포고’를 공포했다. 미군정은 단정 단선 반대세력의 물리적인 선거반대투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자 성공적인 선거의 실시를 위해 경찰력을

6) 유엔조선위원단, 앞의 글, 63-64쪽.

7) 국회선거위원회 위원은 장면, 이승복, 김법린, 백인제, 박승호, 현상윤, 이갑성, 노진설, 윤기섭, 최규동, 김지환, 최두선, 김동성, 전규홍, 오상현 등 12명이다. 1947년 9월 3일자 법률 제5호(입법의원 의원선거법) 규정에 의해 이미 행한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의 임명은 국회선거위원회 위원의 임명으로 인준했다. 국회선거위원회는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이 1948년 3월 1일에 발표한 조선인민대표의 선거에 관한 포고에 의해 1948년 5월 9일에 거행된 선거에 있어서 위의 법률 규정에 의한 권한과 의무를 수행한다. 행정명령 제14호, 1948년 3월 3일; 이후 국회선거위원회 위원 가운데 장면, 김법린, 윤기섭, 이승복이 사임하고 3월 23일부터 변성욱, 박현숙, 이종선, 강기덕(3월 26일부터)으로 교체됐다. 행정명령 제18호, 1948년 3월 30일, 앞의 관보 4, 508, 519쪽.

8) 법령 제175호, 1948년 3월 17일, 위의 관보 4, 206쪽.

9) 법령 제176호, 1948년 3월 20일, 위의 관보, 258쪽.

10) Inclosure No.22, 군정장관의 은사(恩赦), 31 Mar 48, MG Report, 앞의 글.

11) Telegram, Jacobs to the Secretary of State, 27 April 1948.

12) 딘 소장은 이 공문에서 “각 도의 민정장관들은 관할내에서 선거절차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데 직접 책임이 있다”면서 2단계로 나눠 선거과정을 감시토록 했다. 1단계인 선거이전 감시는 첫째, 일반인들에 대한 선거정보 홍보, 둘째, 선거반대 계획, 정강, 선거민 위협을 포함한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단체, 청년조직 등의 활동, 셋째, 둘째와 같지만 선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과 같음, 넷째, 투표구선거위원회, 면선거위원회, 군선거위원회, 도선거위원회의 운영, 다섯째, 네째에 나와있는 모든 단계를 포함한 전술한 시기의 선거등록 절차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여섯째, 선거인 등록이 끝난 뒤 선거법 제15조와 제16조의 이행에 대한 조사를 활용가능한 장교와 동급의 군무원을 동원해 실시하도록 했다. 또 2단계는 선거일과 투표명부 감시로서 첫째, 각 민정장관들은 장교, 동급의 군무원뿐 아니라 군정장관이 배치할 추가인원도 활용해 ① 전선거구의 투표구 현장조사를 위해 선거구별로 2명의 감시원을 두며, ② 도선거위원회에는 1명의 감시원을 배치한다. 둘째, 첫째 ①과 같은 감시요원들은 선거종료와 함께 선거구 선거위원회에 보고하고 투표함 개함과 투표명부 등을 감시하도록 했다. Inclosure No. 36, Subj: Election Procedure Observation by American Personnel, 1 April 1948, Letr, Maj. Gen. William F. Dean, Military Governor to all CCAO's, MG Report, 앞의 글.

강화시켰다. 하지 중장은 현재 남한의 실제 상황에서 강력한 중앙집권적 요소로서 경찰력을 강화시키는 이외의 다른 대안은 없다고 간주했다.<sup>13)</sup> 선거가 다가오자 자유가 허락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발언들이 미군정과 경무부에서 속속 나왔다.

딘 소장은 3월 25일 “선거를 반대하는 이들은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이거나 간에 북로당의 모략에 걸린 것”이라고 비난함으로써 선거반대 자체를 북한과 연계시켜 선거반대세력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sup>14)</sup>

경무부장 조병옥도 3월 27일 서울중앙방송을 통해 “좌익이건 우익이건간에 선거를 반대하는 모든 파괴활동은 불법이며 그와 같은 방해자들은 강력히 처벌받아야 하고 모든 국민이 신중하고 자유로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선거를 반대하는 모든 대규모 테러나 폭력행위를 조사할 것”<sup>15)</sup>이라고 밝히는 등 계속해서 선거반대세력에 대한 공개경고 성명을 발표했다.

수도경찰청장 장택상도 일반 통행인이 길가에 서있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4월 20일)<sup>16)</sup>과 통행금지시간 연장(4월 28일)<sup>17)</sup>, 경찰서별 경찰특별돌격대 조직(4월 28일) 등 선거일을 전후한 소요에 대비했다.<sup>18)</sup> 이러한 공개적이면서도 무차별인 선거반대세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는 ‘선거 참가’만을 강요해 ‘자유분위기’ 속에서의 선거실시를 의심케 했다.

경찰력의 강화와 함께 딘 소장의 명령으로 ‘향보단’이 설치됐다. 정치고문관 제이콥스도 “공산주의자들의 계획에 대처하고 선거준비를 보호하기 위해 새롭고 비상한 조치가 취해졌다”<sup>19)</sup>고 할 정도로 향보단은 선거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

치안유지 지원을 명분으로 딘 소장이 승인한 향보단의 조직 구성<sup>20)</sup>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높아가자 그는 특별성명(4월 20일)을 발표하고 향보단의 목적에 대해 선거실시 방해와 무질서를 막기 위해 경찰을 지원하는 것<sup>21)</sup>이라고 해명했는가 하면 수도경찰청장 장택상도 “향보단은 순수하고 테러를 방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된다”(4월 22일)고 해명

---

13) MG Report, 앞의 글, p. 19

14) 『동아일보』 1948년 3월 26일.

15) Inclosure No. 17, Address delivered through Seoul Central Broadcasting Station, Subj: The duties of the National Police during the general election, by Dr. P. O. Chough, Director, Dept. of Police, 27 March 1948, MG Report, 앞의 글.

16) 『동아일보』 1948년 4월 23일.

17) 『동아일보』 1948년 4월 29일.

18) 『조선일보』 1948년 4월 30일.

19) Airgram, Subj: Political Summary for period April 1st through April 30th, 1948, Jacobs to Department of State, May 11, 1948.

20) 민정장관 안재홍이 건의하고 군정장관 딘 소장이 인준해 4월 20일 전국의 도지사 및 고문관들에게 보낸 향보단의 주요 기능과 정의는 ‘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협박 폭동 살인 방화나 또는 기타 태업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 치안을 유지함에 이어서 경찰을 원조하는 것이었다. 제목: 법과 질서유지에 관한 건, 남조선과도정부, 1948년 4월 20일, RG 338, NARA.

21) 『서울신문』 1948년 4월 21일, 『동아일보』 1948년 4월 21일.

했다.<sup>22)</sup>

향보단의 구타, 위협, 강탈 등 각종 불법행위가 UNTCOK에 보고<sup>23)</sup>되는 등 이들의 활동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가자<sup>24)</sup> 1948년 5월 22일 군정장관의 승인에 따라 남조선과도정부 민정장관 안재홍이 해산했다.<sup>25)</sup>

그러나 미군정은 향보단원들의 과잉행위가 보고되기도 했다고 시인하면서도 선거실시 과정에서 가장 조용하게 영향을 미쳤고 좋은 목적을 가지고 봉사했다고 평가했다.<sup>26)</sup> 이처럼 하지 중장이 선거의 성공적인 실시를 위해서는 경찰력 강화 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밝힐 정도로 미군정은 강력한 경찰체제와 향보단을 구성해 단선반대세력의 투쟁에 대응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 제2절 유엔조선임시위원단의 선거감시 활동

1947년 11월 14일의 유엔 총회 결의에 따라 1948년 남한에 온 UNTCOK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했다.<sup>27)</sup>

UNTCOK는 활동목적에 따라 제1분과위원회(1월 17일)<sup>28)</sup>, 제2분과위원회 (1월 17일)<sup>29)</sup>, 제3분과위원회(1월 19일)<sup>30)</sup>를 구성한 데 이어 선거시기의 감시방안을 강구하기

---

22) 『경향신문』 1948년 4월 23일.

23) 그레고리 핸더슨, 앞의 책, 243-244쪽; 5월 17일 대검찰청장 이인은 향보단의 탈선과 임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했다. “총선거를 전후하여 향보단의 역할은 큰 바 있었는데 일부에는 체포 구타 등으로 인하여 탈선을 하는 일이 없지 않다” 『경향신문』, 1948년 5월 18일; 또 다음날에는 경무부장 조병옥도 “불행히도 몇몇 사람들의 무지각한 행위로서 인권을 유린하여 사회에 누를 끼치고 향보단 자신의 명예를 손상케 함은 천만 유감된 일이다. 원래 향보단은 경찰의 협조기관이다. 경찰권을 독립적으로 직접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밝혀 향보단원들의 폐해를 인정했다. 『경향신문』 1948년 5월 19일, 『동아일보』 1948년 5월 19일.

24) 이기명, 앞의 글, 39쪽.

25) 이와 함께 곤봉과 완장 등 향보단원들이 갖고 있던 무기를 해당 지방 경찰당국에 즉시 반환할 것을 지시했다. 『서울신문』 1948년 5월 26일, 『경향신문』 1948년 5월 26일.

26) MG Report, 앞의 글, pp. 46-47.

27) 유엔조선위원회, 앞의 글, 31-34쪽.

28) 제1분과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자유분위기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을 “언론의 자유, 출판 통신의 자유, 집합결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임의적 검거 또는 구속에 대한 보장과 폭력 또는 폭력의 위협에 대한 보장”으로 규정했다. 유엔조선위원회, 앞의 글, 91-94쪽.

29) 제2분과위원회는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2월 19일 존 웨커링 준장, 2월 24일 군정장관 딘 소장, 2월 25일 군정장관 특별고문 찰스 퍼글러와 사법부 고문 어네스트 프란켈 박사, 3월 3일 주한 미군사령관 하지 중장, 3월 5일 군정장관 딘 소장으로부터 차례로 남한내 자유분위기 조성각종 법률 등 의 상황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유엔조선임시위원단, 앞의 글, 59-60쪽.

30) 제3분과위원회는 선거법과 그 규정에 대한 보고, 기술적 문제 등을 검토했다.

위한 특별분과위원회를 설치(3월 16일)하고, 3개 분과위원회의 직능을 인계해 선거감시에 필요한 계획실행과 사무를 담당할 '주위원회'(3월 20일)를 설치했다.<sup>31)</sup> 이 회의에서는 또 각 도의 선거경과를 감시할 감시반 설치를 결의했다.<sup>32)</sup>

미군정은 3월 17일 남한내 총선거 일자를 5월 9일로 공포했으나 4월 5일 행정명령 제 20호를 통해 5월 10일로 변경했다. 이처럼 선거일을 변경한 이유는 첫째, UNTCOK의 선거법 승인 지체에 따른 미군정과 관련 미국기관의 준비 차질<sup>33)</sup>, 둘째, 국회선거위원회의 선거준비 기간의 절대부족을 이유로 한 선거일 연기 요청<sup>34)</sup>, 셋째, 주한미군사령관 하지 장군의 선거법 승인 지연에 따른 선거의 기술적 준비 지체<sup>35)</sup>, 넷째, 5월 9일이 한국인들이 싫어하는 개기일식인 점<sup>36)</sup>을 들어 하지 중장이 4월 2일 선거일을 5월 10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고, UNTCOK가 다음날 제31차 회의를 열고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이뤄진 것이었다.

UNTCOK의 선거준비와 감시활동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된 것은 선거를 위한 '자유분위기' 조성과 이에 대한 UNTCOK의 결정이었다.<sup>37)</sup> 유엔 소총회 결의도 남한 단선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거의 자유분위기를 강조했다.<sup>38)</sup>

31) 주위원회의 기능은 ① 서울에 있는 중앙선거위원회와의 항구적 연락의 지속 ② 선거위원회 업무의 일반적 감시 ③ 선거시행에 관한 불평 및 일반적 보고의 접수와 검토 ④ 위원감시단의 보고 분석 ⑤ 조선인의 선거참가태도에 대한 보고의 접수 및 분석 ⑥ 선거실시에 있어서의 자유분위기 상황에 관한 위원단에 대한 보고의 검토 ⑦ 위원단의 일반적 지시에 의거한 현지 감시단 활동의 계획 및 조정 등이다.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사 자료집 I : U.N.한국임시위원단 관계문서』 I(서울: 동회, 1989), 27쪽.

32) 감시반의 기능은 ① 선정된 지방과 지방선거위원회의 현지 감시 ② 감시된 지구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선거법과 규정이 적용되었는가의 검토 ③ 감시된 지구에서 접수한 혹은 주위원회가 지시한 불평등의 검토 및 의견청취 ④ 선정된 구역에 있어서 특히 경찰 및 청년단체의 활동에 유의해 선거에 대한 자유분위기인간의 유무를 결정하는 관점에서 선거운동의 정치면에 대한 감시 ⑤ 가능하면 위원단의 감시원을 미국 감시단에 수행시켜 미국측 당국이 설정한 감시단 혹은 그 대행기관의 업무 감시 등이었다.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사 자료집 I : U.N.한국임시위원단 관계문서』 II(서울: 동회, 1989), 185-188쪽.

33) Inclosure No. 23, Memorandum by the U.S. Liaison Officer of the Principal Factors Motivating a Change in the Election Date, MG Report, 앞의 글.

34) Inclosure No. 24, Letr, National Election Committee, to Chairman, UNTCOK, UNTCOK Document A/AC.19/58, 25 March 1948, MG Report, 앞의 글.

35) Inclosure No. 25, Letr, CG, USAFIK, to Chairman, UNTCOK, UNTCOK Document A/AC.19/58/ADD.2, Subj: Change of Election Date, 29 March 1948, MG Report, 앞의 글.

36) Inclosure No. 26, Letr, CG, USAFIK, to Chairman, UNTCOK, UNTCOK Document A/AC.19/58/Add.4, Subj: Postponement of Election Date, 5 April 1948, MG Report, 앞의 글; 이에 대해 모스크바 시사평론가 유 제니 스코트는 선거일을 5월 9일에서 5월 10일로 연기하는 것은 일요일인 9일을 선택하느니 보다는 근무일인 10일을 택하려는 심산에서 나온 것이라고 논평했다. 『조선일보』 1948년 4월 14일.

37) 김동국, 앞의 글, 56쪽.

38) 유엔 소총회 의장 루이스 파디라 너보는 3월 1일 UNTCOK 의장 메논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를 위해 UNTCOK는 의장 메논(K. P. S. Menon) 명의로 3월 17일 남한의 선거 실시  
에 따른 '자유분위기' 조성을 위해 첫째, 법률문제, 둘째, 법집행 문제, 셋째, 정보의 자유  
문제, 넷째, 정치적 압력 문제 등 UNTCOK의 건의사항이 담긴 서한을 하지 중장에게 보  
냈다.<sup>39)</sup>

건의사항의 내용과 답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률문제에 대해 UNTCOK는 하지 중장  
에게 '형사소송법의 개정'이라는 제목의 포고를 상기시키고 이 포고가 '시민의 자유를 보  
호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인식했다. 이에 대해 하지 중장은 UNTCOK에 "포고는 이미  
군정장관이 서명했다"<sup>40)</sup>고 통보하고 "현재 계속중인 조직화된 압력이나 테러가 용인돼  
수행된다면, 어떠한 또는 모든 선거 반대의 자유가 효과적이고 자유로운 선거 실시 노력  
을 무효화시킬 수도 있는 확실한 가능성이 개연성이 예견된다"고 밝혔다.<sup>41)</sup> 이는 '반대  
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시사했다.

둘째, 법집행 문제에 대해 UNTCOK는 선거기간 경찰과 청년단체의 역할이 자유분위기  
속에서 선거가 실시됐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관련해서 자유분위기를 위한 경찰의 재교육을 건의하고, 청년단체도 'UNTCOK의 감시  
아래' 있어야 하며 불법활동은 용인될 수 없다고 경고할 것을 건의했다.<sup>42)</sup> 그러나 하지  
중장은 딘 소장에게 보낸 훈령에서 "공산주의자들의 강력한 파괴공격과 폭력행위가 계속  
되는 입장에서 보건대 본관은 경찰의 조직과 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없을 것임을 확신한  
다"<sup>43)</sup>고 밝혀 UNTCOK의 건의를 사실상 거부했다.

셋째, 정보의 자유 문제에 대해 UNTCOK는 미국 기관들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선  
거에 관한 공정한 선전활동을 수행할 것을 건의했고, 이에 대해 공보원이 마련한 광범위  
한 홍보계획이 UNTCOK 사무국장에게 제출됐다.<sup>44)</sup>

넷째, 정치적 압력의 문제에 대해 UNTCOK는 범죄행위나 범죄 선동을 수반하지 않는  
한 불법집회 참가나 유인물을 살포하는 행위는 정치적 행위로 간주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폭력행위나 사기 등이 없이 투옥된 정치범들은 무조건 석방돼야 한다고 건의했다.<sup>45)</sup>

---

"UNTCOK가 감시할 선거는 언론, 출판, 집회 등의 민주주의적 자유가 인정, 존중되는 자유분  
위기 하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이 점에 관하여 소총회는 재조선 미국당국이 동 사항의 성취를  
위하여 열성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는 미국대표의 보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엔조선위원단, 앞  
의 글, 81쪽.

39) MG Report, 앞의 글, pp. 16-17.

40) 법령 제180호, '법령 제176호(형사소송법의 개정)의 보충규정', 1948년 3월 31일, 앞의 관보, 275쪽.

41) MG Report, 앞의 글, p. 18.

42) 위의 글, pp. 18-19.

43) Inclosure No. 13 Letr, Lt. Gen Hodge, CG, USAFIK, to Maj Gen W.F. Dean, Military Governor,  
Subj: Concerning Freedom of Elections in South Korea, 24 Mar 48, MG Report, 앞의 글.

44) Inclosure No. 32 UNTCOK Document A/AC.19/w45, Subj: Program and Activities of U.S. Officials  
Concerning the Elections, 3 Apr 48, MG Report, 앞의 글.

이와 관련해 군정장관은 1948년 3월 31일 3140명을 사면해 투표에 참가할 수 있게 했다.<sup>46)</sup>

3월 20일 제27차 전체회의에서 각 도의 선거경과를 감시할 감시반 설치 결의에 따라 실시된 제1차 감시로서 UNTCOK 감시반은 제주도에서 강원도까지 전국의 주요 도시를 시찰하며 바쁜 일정을 보냈다. 미군정은 대표들에게 수준 높은 숙식과 교통편을 제공<sup>47)</sup>하는 대신 대표단의 활동을 보호·감시함으로써 단선 실시에 비판적인 한국인들과의 교류를 사실상 차단했다. UNTCOK는 전적으로 미군정의 정보에 의존해야 했기 때문에 정보 수집 능력 부족은 애초부터 예견된 것이었으며, 위협과 폭력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할 수 없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선거반대세력의 활동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거나 무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사례는 UNTCOK의 제주도 감시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4월 9일 제주도 시찰에 나선 프랑스 대표 마네(Manet)의 보고서는 경찰통제와 주민들에게 선거인 등록을 하도록 하는 물리적 폭력행사를 파악했으면서도 이런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고, 대다수의 의견은 (선거과정) 일들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보고해 UNTCOK의 임무를 스스로 저버렸다.<sup>48)</sup>

UNTCOK는 선거의 '자유분위기'를 확인하기 위해 전국을 시찰하면서 이와 같은 상황을 무시함으로써 미군정의 의도대로 움직인 셈이 됐다.

남한의 정세와 UNTCOK의 감시결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UNTCOK는 이런 활동을 토대로 4월 28일 열린 제33차 회의에서 "자유분위기에 만족했다"며 5·10선거를 감시키로 결의했다.<sup>49)</sup> 이에 따라 5월 7일부터 11일까지 제3차 감시활동이 이뤄졌다.<sup>50)</sup>

그러나 애초부터 UNTCOK 대표와 사무국의 제한된 인원만으로 남한 총선거를 감시하는 것은 인원의 절대 부족으로 활동 자체가 지극히 부분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 또 선거반대를 둘러싼 좌우익의 공방전이 UNTCOK의 활동을 위축시켰으며, 폭력상황으로부터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미군과 자신의 주요 감시 대상으로 지적했던 경찰의 보호를 받지 않을 수 없어 정보가 제한됐다. 실패한 제주도의 선거에 대해 투표율이 낮지만 선거가 훌륭하게 치러졌기 때문에 이런 결점들에 대해 보고할 의사가 없다<sup>51)</sup>고 밝힌 UNTCOK

45) MG Report, 앞의 글, pp. 21-22.

46) Inclosure No. 22, Pardon by Military Governor, 31 Mar 48, MG Report, 앞의 글.

47) Inclosure No. 50, UNTCOK Document A/AC.19/W.42, Subj: Time-Table and Facilities for Observation Groups, 27 March 1948, MG Report, 앞의 글.

48) Spec. Report 118, Memorandum for General Hodge, Subj: Group 1 on Cheju Do 9-10 April (Source: Manet 11 April), John Weckerling to Hodge, 12 April 1948, RG 338, NARA.

49) 유엔조선위원단, 앞의 글, 109-110쪽.

50) 유엔조선위원단, 앞의 글, 113쪽.

51) Memorandum for General Hodge, Subj: UNTCOK's Daily Activities, Tuesday, 11 May, John Weckerling to Hodge, 12 May 1949, RG 338, NARA.

는 6월 25일 선거 결과에 대해 “선거인의 유효한 자유의사의 표현이며 그들의 자유의사를 정확히 표현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sup>52)</sup> 국회가 수립되고 정부수립 절차가 진행되는 때에 나온 UNTCOK의 이와 같은 결론은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의 국제적 정당성을 획득하려는 미국의 의도에 기여한 것이었다.<sup>53)</sup>

### 제3절 제주도의 5·10선거 실시 양상과 결과

좌익의 선거반대와 대부분의 우익 및 중도파가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5·10선거는 미군정과 이승만 계열에 의해 주도적으로 준비되고 실행됐다. 이들은 선거의 ‘자유분위기’보다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경찰과 우익청년단체를 효과적으로 이용했다.<sup>54)</sup>

선거등록을 한 유권자의 95.2%인 703만6750명이 투표에 참가했고, 이는 유권자 총수의 75%였다. 투표율을 놓고 보면 대단한 성공이었다. 그러나 이는 선거의 중요성과 선거절차에 대한 깊은 이해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니었다.<sup>55)</sup> 국회선거위원회는 4월 9일 마감된 선거등록 결과 등록률은 모두 805만5798명이 등록하여 91.7%에 이른다고 4월 14일 발표하였다.<sup>56)</sup> 주한미군사령부 G-2는 선거인 최종 등록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52) 유엔조선위원단, 앞의 글, 134-135쪽.

53) 김득중, 앞의 글, 69쪽.

54) 이승만은 진정한 자유선거가 실시되면 패배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한 나머지 선거의 승리를 조작하기 위해 경찰과 우익청년단에 의존했다. 제임스 매트레이, 앞의 책, 166쪽.

55) 핸더슨은 이처럼 선거가 ‘대성공’을 거둔 이유로 농민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시키기 위해 투표한 것이 아니었고, 정부와 그 경찰이 투표를 종용했으며, 또한 야심있는 현지 지도자들에게 중앙정계에 진출할 기회를 주는 것이 대견했기 때문에 투표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레고리 핸더슨, 앞의 책, 245쪽.

56) 『조선일보』 1948년 4월 14일, 『경향신문』 1948년 4월 15일; 그러나 전국의 유권자수와 등록률은 자료마다 차이가 난다.

		총인구	유권자수	등록자수	등록률	투표율
①	국회선거위			8,055,798	91.7	
②	G-2 보고서	19,369,270	8,771,751	8,055,295	91.7	
③	미군정 서무처	19,947,000	9,834,000	7,837,504	79.7	95.2

출처: ① 『조선일보』 1948년 4월 14일, 『경향신문』 1948년 4월 15일

②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809, 15 April 1948.

③ Inclosure No. 55, Registration and Voting Data on National Election in South Korea, Census Division, Office of Administration, SKIG, 앞의 글. 인구는 1948년 4월 1일의 인구 추계이며 전체 인구의 49.3%를 유권자로 잡았다. 제주도의 경우는 선거가 실시된 남제주군의 자료뿐이다.

〈표 4-1〉 5·10선거 선거인 최종 등록 결과

시도	투표인수	등록자수	등록률(%)
서울	617,769	568,291	92
경기	1,178,458	1,131,319	95.9
충북	468,317	461,084	98
충남	876,416	791,663	90.3
전북	915,444	791,499	86.4
전남	1,381,153	1,229,200	88.9
경북	1,335,120	1,210,264	90.6
경남	1,379,109	1,314,440	95.3
강원	491,589	474,723	96.5
제주	127,751	82,812	64.9
총계	8,771,126	8,055,295	91.7

출처: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809, April 15, 1948.

이러한 선거등록 결과에 대해 하지 증장은 4월 13일 성명을 내고 “전유권자의 90% 이상이 등록을 완료하였으므로 5월 10일 시행될 총선거에 투표할 자격을 가졌다. 이것은 조선정부를 형성함에 있어서 조선국민을 진정으로 대표할 수 있는 자기들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민주주의적 총선거에 투표하고자 하는 전조선국민의 압도적 표시라고 본다...압도적인 투표등록성과는 어떠한 강요에 의해서는 도저히 불가능하였을 것이라는 것도 자타가 모두 다 공인하는 바”라고 발표했다.<sup>57)</sup> 그러나 한국여론조사협회의 여론조사 결과는 90%가 넘는 응답자가 강제등록을 했다고 밝혀 이런 주장을 무색케 했다.<sup>58)</sup>

김구 역시 “인민들은 경찰과 향보단에 의한 강압적 분위기 하에서 선거에 등록, 투표할 것을 강요당했다”고 말하고 “인민들이 자유로웠다면 단독선거에 반대했을 것”이라며 5·10선거의 강제성을 주장했다.<sup>59)</sup>

하지 증장이 전체 유권자의 90% 이상이 등록을 완료했다고 칭찬하고 있음에도 <표

57) 『동아일보』 1948년 4월 14일, 『경향신문』 1948년 4월 14일.

58) 한국여론협회가 4월 12일 서울에서 통행인 1262명을 대상으로 한 5·10선거 실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선거인 등록을 한 응답자는 934명, 등록을 하지 않은 응답자는 328명이며, 등록했다고 응답한 사람 가운데 91%인 850명이 등록을 강요당했다고 대답했으며, 9%인 84명이 자발적으로 등록했다고 대답한데서도 강요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조선일보』 1948년 4월 15일; 이에 대해 공보부 공보국장은 담화를 발표하고 “지난 12일 한국여론협회에서는 어떠한 공중 아래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여론의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 그 공중성을 인정치 않는 동시에 공보부로서는 공안상 이를 방임할 수 없음을 물론 대중을 상대로 하면서 공중성 없는 행동은 언론자유의 한계 이외에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충격적인 여론조사에 대한 남조선과도정부의 반응이다. 『조선일보』 1948년 4월 16일.

59) USAMGIK, *South Korean Interim Government Activities*, No. 32, May 1948, p. 143.



4-1)에 나타난 제주지역의 등록률은 전국 시·도 가운데 최저치인 64.9%에 지나지 않고 있다.

5월 1일의 메이데이에서 5·10선거에 이르기까지 남한의 긴장상태가 고조돼가자 미육군성은 남한 주둔 미군 가족의 한국 여행을 중지<sup>60)</sup>토록한 데 이어 하지 중장은 4월 30일 오후부터 5월 3일 오전까지 좌익의 소요에 대비해 남한 주둔 미군에 특별경계령을 내렸다.<sup>61)</sup> 그는 이 경계령을 통해 모든 군용차는 무장경위를 대동하고 각 중요시설의 보초도 강화하는 한편 미국인은 30일 오후 11시부터 1일 새벽까지 길에 나오는 것을 금지했다.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한미군사령부는 5월 8일 또다시 5·10선거에 대비해 남한 주둔 미군에 특별경계령을 내렸다.<sup>62)</sup> 이 경계령은 “미군은 남한의 선거에 대한 공산주의의 공격을 저지하도록 원조하기 위해 경계령을 내리고 경찰의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대부분의 미국인은 무기를 휴대하여야 하며 순찰대는 총기로 무장하도록 했고, 기타 군대는 비상사태에 대비케 하도록 했다. 선거 당일에는 미 태평양 함대 소속 순양함과 구축함 등 2척이 남한의 해역에 들어왔다.<sup>63)</sup>

경찰도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들어가 4월 30일 경무부장 조병옥이 총선거에 대비한 남한의 치안확보에 관한 담화를 발표하고, 선거당일에는 향보단과 경찰인원을 총동원해 투표소를 왕래하는 도로의 중요지점과 같이 기타 중요장소를 경계하도록 지시했다.<sup>64)</sup> 같은 날 수도경찰청장 장택상도 암살소동과 기타 폭동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수도청에 정비상경계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sup>65)</sup> 이와 같은 경찰의 경계태세는 단독정부와 단독선거에 반대하는 민중의 저항과 좌익의 투쟁강도가 심각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어 5월 3일 선거반대세력의 선거방해를 막기 위해 경무부내에 비상경비총사령부를 두고 각 관구에도 경비사령부를 설치했다.<sup>66)</sup> 또 5월 7일에는 조병옥이 선거당일의 치안대책을 발표했다.<sup>67)</sup> 대책안은 첫째, 동리(洞里)는 향보단의 자위력으로 방위할 것, 둘째, 동리와 투표장소간 왕래거리의 위험지점에 경찰과 향보단원이 합류해 경호할 것, 셋째, 투표소 부근에는 경찰과 향보단원의 혼성인원으로 방위할 것, 넷째, 경찰청의 기동경찰대들은 소관 경찰본서를 지키고 각 경찰서의 신편 기동부대는 소할 지서를 유통시찰해 경비할 것 등이었다. 수도경찰청

60) 『조선일보』 1948년 4월 30일.

61) 『조선일보』 1948년 4월 30일, 『동아일보』 1948년 4월 30일.

62) 『서울신문』 1948년 5월 9일, 『조선일보』 1948년 5월 9일.

63) 순양함은 서울의 항구 인천에, 구축함은 부산에 정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동아일보』 1948년 4월 30일, 『경향신문』 1948년 4월 30일.

64) 『동아일보』 1948년 5월 1일, 『경향신문』 1948년 5월 1일.

65) 『조선일보』 1948년 5월 1일, 『동아일보』 1948년 5월 1일.

66) 『조선일보』 1948년 5월 4일.

67) 『동아일보』 1948년 5월 8일, 『조선일보』 1948년 5월 8일.

에는 5·10비상경비총사령부를 설치했다. 그리고 선거 당일 정복 경관이 투표소 2-3곳에 일반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20명씩 무장배치하고, 사복형사는 투표소 요소마다 1-2명씩 무장배치했다. 기마대도 도로 곳곳에 3개 분대를 배치됐다. 또 특별행동대, 자진거부대가 편성 배치됐다.<sup>68)</sup> 이처럼 무장경찰, 향보단원, 미군의 경비태세 등 삼엄한 경계하에 첫 보 통선거가 남한에서 실시됐다. 이런 선거 모습에 대한 한 외신은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조선은 희랍사태의 완전한 재연이다. 양국에서의 공산당 전술은 동일한 것이며 희랍에서 발생한 전투는 조선에서도 발생할지 모른다. 양국은 지리적으로도 근사하다. 양국은 다 산악이 많은 반도이다...그러나 서방 연합국은 정치적 이유로 동지(同地)에 민주주의 거점을 두려고 하여 금전, 선전과 무기 기증으로 투쟁하였다. 민주주의를 시행하기 위하여 서방 연합국은 조선과 희랍에서 자유선거를 지지하였다. 희랍투표는 영미위원국 감시하에 투표를 행할 것이다. 양국에서 공산주의자들은 '보이코트'행동으로 투표를 회피하려고 기도하였다. 이는 미소 양국지대로 분열된 조선에 있어서 특히 현저하다. 소련은 그들 지대에 투표 허가를 거절하고 조선 미국지대내 공산주의자에게 투표 거부를 명령하였다...미국당국은 경찰이 특히 소란한 제주도에서 수인(囚人)을 구타함을 억제하려고 노력하였다. 경찰은 관인(寬仁)을 약속하고 있으나 그들이 복종함은 곤란시된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은 경찰에 대한 증오감을 선동시키기가 용이하다. 이는 희랍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희랍에는 거야(拒野)하고 난폭한 경찰부대가 있었다. 아테네에서는 1944년 12월 3일에 경찰이 좌익 시위군중에 발포하였다...조선 미국점령군사령관 하지 중장은 희랍과 조선간의 사태 상사(相似)에 놀래고 있는데 아직 좌익과 점령부대간 사격전은 없다...<sup>69)</sup>

중국의 『대공보』도 5·10선거가 자유분위기가 없는 상태에서 치러졌으며, 마치 국장일(國葬日)로 보였다고 묘사했다.<sup>70)</sup>

68) 『동아일보』 1948년 5월 8일.

69) UP 서울특파원 제임스 로퍼의 5·10선거 논평 기사. 『조선일보』 1948년 5월 11일; 『서울신문』 1948년 5월 11일.

70) 중국 『대공보』기사. 주한미군사령부 정보참모부는 이 기사가 6월 27일자 『조선중앙일보』와 6월 30일자 영자지 『Seoul Times』에 실린 기사로, 『Seoul Times』는 불온내용을 삭제해 발행했고, 여기 인용된 기사는 『조선중앙일보』에 실린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의 5·10선거는 부당한 것이었다. 조선의 전인민이 단독선거를 격렬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전조선지도자 연석회의가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국회의원 200명을 선출하는 5·10선거는 우익 후보자 908명만 입후보해서 사실상 비경쟁 선거나 다름없었다...선거기간 조선에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없었다. 800만여명이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들처럼 투표소로 떼를 지어갔다...어른들은 거의 낙담했고 5·10선거는 국장일로 보였다...조선인민들은 조국이 분단되는 것을

반면, 정치고문관 제이콥스는 5월 12일 국무성에 보고한 선거당일의 모습에 대해 자신의 참모의 시찰을 인용해 “훌륭한 투표시설과 주민들의 반응, 자유롭고 평화스런 선거분위기가 있었다”며 “선거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만족스럽다”고 밝혔다.<sup>71)</sup> 부영사 데이비드 마크(David E. Mark)는 선거비망록을 통해 “과거 미국의 정책이 한국사회에서 우익 정치집단의 장악을 불러오고, 이승만에 대한 반대세력으로서 공산주의자뿐 아니라 반이승만 진영의 기를 꺾는데 많은 일을 했다”는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다.<sup>72)</sup>

미국무장관 마샬도 5월 12일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법한 공산당 소수파의 방해 내지 사보타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일 남조선에서 거행된 선거 투표율은 호성적이었으며 그 결과는 민주주의의 행정을 지향하는 조선인의 결의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격찬했다.<sup>73)</sup>

선거결과 정당·단체별 당선자는 무소속이 417명의 후보자 가운데 전체 200명(선거 당시는 제주도에 할당된 2명을 제외한 198명이었다)의 42.5%에 해당하는 85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독촉국민회가 234명 가운데 54명, 한민당이 91명 가운데 29명이 당선됐다. 이 밖에 조선민족청년단 6명, 독촉농민총동맹 2명이며, 대한노동총동맹, 조선민주당, 한독당, 교육협회, 단민당, 대성회, 유도회, 민족통일본부, 조선공화당, 부산일오구락부는 각 1명씩이 당선됐다.<sup>74)</sup>

그러나 무소속 당선자 가운데 한민당 관련 경험이 있는 당선자는 12명이며, 청년단체 활동 경험자로는 대동청년단 13명, 민족청년단 8명, 대한독립청년단 2명, 서북청년단 1명 등으로 이 가운데 중복되거나 이승만·한민당 계열로 보기 힘든 인물을 빼면 무소속 당선자 가운데 26명이 이승만·한민당과 성격을 같이 하는 인물들이다. 이에 따라 이들 세력에 대비되는 순수한 무소속 당선자는 50여명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sup>75)</sup>

그러나 이처럼 미군정과 UNTCOK의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졌으며, 자유분위기가 존재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5·10선거 당일에만 45명이 희생됐고, 6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선거사무소 40곳이 습격받을 정도로 ‘유혈의 분위기’가 있었다.<sup>76)</sup>

---

원치 않았지만 하지 장군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헌병들을 동원했으며 기관총을 설치했다. 경찰은 밤낮으로 순찰했다. 선거위원들은 몽둥이를 들고 다녔다...후보자들이 살해됐으며, 투표소가 폭파됐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투옥됐다. 제주도에서는 선거가 무효화됐다...우리는 단지 미국이 이번 선거를 통해 조선의 영구 분단을 조장하고 친미정부를 수립하려 한다는 사실만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선거는 계속 비극적인 사태를 유발할 것이다. 이는 조선인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극동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 146, 2 July 1948.

71) Despatch No. 124, Enclosure, Memorandum on Elections(Vice Consul David E. Mark), Jacobs to the Secretary of State, Subj: Observation of Elections in South Korea, May 12, 1948.

72) 위의 글.

73) 『동아일보』 1948년 5월 14일.

7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선거사』(서울: 동회, 1968), 863-865쪽; USAMGIK, *South Korean Interim Government Activities*, No. 32, May 1948, p. 142.

75) 김득중, 앞의 글, 83쪽.

〈표 4-2〉 5월 7일-5월 11일 오후 2시의 선거관련 소요현황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서울	충북	충남	강원	경기	제주
경찰	사망	1	3		2					1	1
	부상	2		1						4	21
	행불										
후보	사망					1					
	부상							1			
	행불										
선거위원	사망	1	1		2						
	부상		1								
	행불		2								
우익인사	사망	8	1		2	2			2		14
	부상	18	1	2		1		1	2	2	5
	행불										
공산주의자	사망	20				3			2	2	21
	부상	4			1	2				3	
	행불										
	체포	177	56			110		4	29	17	
	지서 습격	5	4			6			1	7	
	기관차 파괴	17		2	2			2		1	
	철로 절단	2			1						
	교량 파괴								1		
	전화선 절단	3	6	3	5			1	5		
	투표함 파괴	1	2		5				1		
	공투표용지분실(100매 단위)	7			60						
	투표용지 분실(100매 단위)										
	파업	11	2			2					
	전력 차단	3			3						
	투표소 습격	13	4			9			2	7	1
방화	주택	2						2	1		22
	관공서					1		2		4	
	주택습격	1						1	8		

출처: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831, 11 May 1948.

전국 대부분의 도시에서 선거사무소 습격, 인명피해, 방화사건, 선거반대 시위 등이 일

76) 이에 대해 정치고문관 제이콥스는 선거 당일 35명(경찰관 5명, 공산주의자 16명, 우익 14명)이 숨진 것으로 보고했으나 이 정도의 폭력행위는 인구 2천만명을 고려할 때 중요하지 않다며 평가절하했다. Despatch No. 124, Subj: Observation on Elections in South Korea, Jacobs to the Secretary of State, May 12, 1948.

어났다. 단정단선에 반대하는 4·3이 발발한 제주의 5·10선거는 다른 지방의 선거와는 달랐다. 선거기간 동안 폭력행위가 가장 심했던 지역은 제주도와 경상북도였다.<sup>77)</sup> 딘 소장은 하지중장에게 보낸 보고서를 통해 “공산주의자들은 제주도에선 선거를 저지하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인 것이 분명했다”<sup>78)</sup>고 밝힐 정도로 제주도 소요를 예의주시했다.

5·10선거를 반대하는 좌익세력의 공세가 거세질수록 미군정과 경찰의 공세 또한 치열했다. 선거일을 전후로 한 5월 7일부터 5월 11일 오후 2시까지 제주도의 선거관련 우익인사와 선거반대세력의 인명피해는 전국에서 가장 심했음을 <표 4-2>에서 알 수 있다.<sup>79)</sup>

선거일인 5월 10일에는 제주도내 12개 읍·면 가운데 7개 읍·면에서 각종 선거반대 활동이 벌어졌다.

<표 4-3> 5월 10일의 제주지역 선거반대 활동

선거구	지역		분류	상황
북제주군갑	제주읍		비행장 활주로 부근	오전 11시40분. 250명, 50명으로 구성된 집단이 사격가함. 사상자 없음
			읍사무소 근처 폭발	다이나마이트 폭발. 사상자 없음
	조천면	송당리		오전 11시. 주민 2명 피살, 1명 부상, 주택방화 7채
		조천리		경비대 조사받다 탈출기도한 남자 1명 사살
		투표소 습격	투표소 14곳 마비상태	
	북촌리	투표소 습격	오후 4시. 투표소 방화, 투표용지 전체 훼손	
북제주군을	애월면	신엄리		오후 6시. 미군정장교 경비대원 5명 만남. 경비대원들 근무지 이탈 확인
	한림면			밤 11시30분. 대규모 폭도들이 공격했으나 경찰, 경비대 합동작전으로 창과 칼로 무장한 폭도 25명 체포
남제주군	중문면		투표소 습격	투표용지 전체 훼손
	성산면		투표소 방화	60명의 무리에게 불에 탐
			투표소 습격	4명 피살
	표선면	가시리	투표소 습격	마을 이장 및 교장 피살, 교장부인 부상, 투표용지 전체 훼손

출처: Hq. 6th Inf Div, G-2 Periodic Report No. 934, May 10, 1948, 위의 글, No. 935, May 11, 1948,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834, May 14, 1948.

77)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 138, 7 May 1948; No. 139, 14 May 1948.

78) MG Report, 앞의 글, p. 43.

79)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831, 12 May 1948.

다른 자료에는 선거일인 5월 10일 선거사무소 습격 2건, 경찰가족 부상 3명, 폭도 사망 2명, 선거사무소 방화 1건, 도로 및 교량 파괴 1건, 선거서류 도난 2건, 선거반대 시위 3건 등이 발생<sup>80)</sup>했다고 나와있다. 이처럼 보고서마다 약간씩 다른 이유는 정보수집에 있어 시간상의 차이나 서울에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10선거가 다가오자 주민들은 선거를 피해 강제적으로, 혹은 단독선거를 거부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따라 자발적으로 중산간 지역으로 피신했다.

선거 며칠을 앞두고 동네청년들이 선거를 거부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독려했습니다. 선거 이틀 전 아침 7시께 나팔소리가 났습니다. 새벽에 나팔불면 피신하도록 연락이 있었습니다. 오라 1·2·3구 주민 80% 이상이 그날 집을 떠났습니다. 어린애들은 물론이고 가축을 끌고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죽히 2,000명은 넘었던 것 같습니다...주민들은 빠르면 선거 다음날, 혹은 늦은 사람들은 열흘 후 쯤 귀가했습니다.<sup>81)</sup>

제주시 봉개동의 한 증언자는 무장대가 선거를 반대하도록 몰아갔다고 말하면서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단독선거를 통한 분단을 원치 않았다고 말했다.

5·10선거 때 우리 전부 산으로 피난갔어요...4월 말쯤에 다 피난갔어. 동네에서는 그때는 선거를 반대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간거지. 반대하는 이유는 하여튼 단선반대로, 반대를 하도록 산에서 완전히 몰아간거지. 주민들은 타의에 의해서 간거지. (그러나) 주민들도 분단이 되는 걸 원치는 않았지...5, 6일 정도 살았을 거라. 선거 가까워서 올라가서 선거 끝나니까 바로 내려가라 해서 내려왔지.<sup>82)</sup>

이 마을의 또다른 증언자는 5·10선거는 마을에서 반대했지만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시 마을 전체가 선거반대 분위기였다고 말했다.<sup>83)</sup>

미군정은 미국인 관리들에게 투표소에 출입하지 않도록 하라는 명령<sup>84)</sup>과는 달리 제주

80) 경무부 수사국의 1948년 5월 10일의 선거반대 활동, Despatch No. 139, Jacobs to the Secretary of State, 21 May 1948.

81) 허두구(당시 오현중 교사)의 증언, 제민일보사, 앞의 책 2, 218쪽에서 재인용.

82) 고윤섭의 증언, '그래도 질긴 목숨 살아야 할 세상: 봉개마을', 제주4·3연구소, 『4·3과 역사』 제28호, 1997년 7월, 34쪽에서 재인용.

83) 고윤보의 증언, 제주4·3연구소, 앞의 책, 34쪽에서 재인용.

84) Inclosure No. 1, Telegram, Subj: Orders Issued by USAFIK and USAMGIK regarding South Korean elections, 9 April 1948, Hodge, CG, USAFIK to CG, 6th Division, 7th Division, Military Government, Korea Base Command, Despatch No. 85, Joseph E. Jacobs to the Secretary of State.

도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미군이 직접 선거에 개입했다. 미군들은 제주도에선 선거현장 감시는 물론 선거 실시를 위한 투표함 수송 및 점검 등에도 참여했는가 하면 직접 투표장에서 투표광경을 감시하기도 했다.

선거반대세력의 물리적인 반대활동으로 선거위원과 유권자들이 두려워하는<sup>85)</sup> 가운데 북제주군 지역에서는 일부 투표소가 완전히 파괴되기도 하였다.<sup>86)</sup> 신경이 날카로워진 미군들은 대흘, 와흘, 와산 등 관내 중산간 마을로 투표함을 운반하지 못해 고민을 하던 면장을 위협하기도 했다.

면사무소를 나온 지프는 동쪽으로 향했는데 꼭 김녕 모래밭으로 데려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겁도 나고 해서 통역관에게 ‘내가 무슨 죄를 지어 이러는 거냐’, ‘만약에 내가 죽게 된다면 문제가 생길테니 통역을 똑바로 하라’고 항의했습니다. 통역관의 말이 먹혔는지 함덕 ‘서우봉’까지 갔던 지프가 다시 방향을 돌리더니 면사무소까지 되돌아와 나를 내려놓고 그대로 가버렸습니다.<sup>87)</sup>

선거감시요원을 지방에 파견한 미군정은 선거감시업무에 들어갔다. 미군정은 3개반으로 나눠 제주지역에 대한 선거감시활동을 벌였다. 그리고 이들은 총괄보고서와 함께 3개 반이 작성한 선거감시보고서를 군정청에 제출했다. 서울에서 파견된 군정장교인 스피어(T.J. Speer) 대위, 테일러(Herbert W. Taylor) 대위, 번하이젤(Charles K. Bernheisel) 중위 등 3명은 5월 5일 제주도에 들어와 제59군정중대 장교들과 합류해 선거 감시 활동을 벌인 뒤 5월 15일 서울로 돌아갔다.

이들의 선거감시활동은 통역자를 대동한 채 선거관련 사무소와 일부 유권자들만을 만나는 활동을 벌였기 때문에 당시의 자세한 선거상황을 파악하기에는 무리지만 제주도의 투표준비 및 투표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제주도 민정장관 맨스필드(John S. Mansfield) 중령은 이들이 도착한 다음날인 5월 6일 감시활동을 벌일 지역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번하이젤 중위는 구좌면에 배치됐고, 제59군정중대 켈리(David C. Kelly Jr.)대위는 조천면에 배치됐다.<sup>88)</sup> 5월 7일 이들 장교 2명은 자신들이 담당할 지역에서 하루종일 투표소를 방문하고 각 면사무소로 투표용지를 전달했으나 2개면에 대한 감시결과는 상반됐다. 켈리 대위는 조천면에 대해 “파괴분자들에 의해 완전히 장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천면이 규정된 선거절차에 대해 희망이 없는

85)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831, 11 May 1948.

86) USAMGIK, South Korean Interim Government Activities No. 32, May 1948, p. 43.

87) 김민규(당시 조천면장)의 증언, 제민일보사, 앞의 책 2, 211쪽에서 재인용.

88) Inclosure No. 46, Report of General Observation of MG Election Observation Teams, Cheju Island, MG Report, 앞의 글.

혼란상태에 빠졌다”고 평가했다. 선거 전날 밤 선거반대 유인물이 면의 곳곳에 뿌려졌고, 도로장애물 설치와 함께 여러곳의 전화선이 절단됐다.<sup>89)</sup> 반면 구좌면에서는 훌륭하게 선거준비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구좌면의 선거전 단계가 ‘국회의원 선거 시행규칙’에 지시된 제반 절차를 따르고 있다고 보았다.<sup>90)</sup>

북제주군 애월면과 한림면, 추자면은 스피어 대위가 맡았다. 5월 7일 애월면과 한림면을 방문한 스피어 대위는 각종 도로 장애물과 게릴라가 뿌린 뼈라를 발견했고, 2개 마을 주민들이 산으로 올라간 사실을 확인했다. 선거가 끝난 뒤인 5월 12일에는 애월면 주민들이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실도 확인했다. 그의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sup>91)</sup>

1. 5월 7일 애월면과 한림면을 방문해 다음을 감시했다.

제주에서 서쪽으로 5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 도로 장애물을 마주쳤고, 차량 통행을 위해 치웠다. 그곳에서 약 1.5마일 정도 더 가자 첫 번째 마주쳤던 장애물보다 작은 도로 장애물이 나타났다. 파괴적인 내용을 담은 많은 유인물들이 이 지역에서 돌틈과 여러곳에서 산발적으로 발견됐다. 유인물 가운데 일부를 수거해 제주도 민정장관에게 제출했다. 도로장애물을 치운 뒤 시찰이 재개됐다. 도로 장애물 다음에 나타난 2개 마을 주민들이 산으로 도피한 사실이 밝혀졌다. 다음 마을에서 소수의 경찰 파견대는 저격수들이 사격을 가해왔다고 보고했다. 이 마을 주민들은 집에 남아 있었다. 더 이상 도로 장애물은 없었으나 유인물은 도로를 따라 여러곳에서 발견됐다. 애월마을(리)은 경찰과 경비대가 면내에 있어 거의 정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투표구 선거위원회는 모든 투표함을 받았으며 일요일인 1948년 5월 9일 배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2. 5월 8일, 다음날 갖고 올 투표용지 보호를 위해 현지 경찰과 경비대가 배치됐다. 한림면 방문에서는 파괴활동이 없었다고 보고했다. 투표용지와 연필, 벽보, 기타 서류 등이 묶음으로 투표구 선거위원회에 전달됐다. 도로 장애물과 유인물이 다시 발견됐으며 경찰은 소총과 기관총 사격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어려움은 없었고 투표용지는 애월과 한림면 선거위원회에 전달됐다. 그러나 추자면의 투표용지는 직접 제주에서 해안경비대 순시선으로 전달됐으며, 개표를 위해 한림면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

89) 위의 글.

90) 미군정 요원들은 구좌면 지역의 선거이행절차에 대해 ① 선거정보가 광범위하게 홍보되고 ② 투표용지와 투표함이 선거일 전 충분한 시간에 전달됐으며 ③ 자체 경비가 잘 조직돼 있는 한편 ④ 벽보가 눈에 띄게 잘 전시돼 있고, 후보들의 사진이 각 투표소에 게재돼 있다고 평가했다. 위의 글.

91) Inclosure No. 46A, Report of Election Observation-Cheju Do(Capt Speer), MG Report, 앞의 글.



3. 5월 9일. 투표함과 투표용지 배분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애월면과 한림면을 방문했다. 애월 바로 동쪽의 보호받지 못한 마을의 모든 투표용지와 투표함이 투표구 선거위원회로 되돌아왔다. 이유는 주민들이 파괴분자들에 의해 산으로 내몰렸기 때문이다. 경찰 파견대와 경비대가 있는 애월 바로 인근 지역과 마을에서는 투표함과 투표용지 배분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4. 5월 10일. 투표가 계획대로 시작됐으나 등록 유권자의 32%만이 애월면에서 투표에 참가했다. 한림면은 이 보다 높은 전체 등록 유권자의 70% 정도의 투표율을 보였다. 애월 인근의 2곳과 한림의 1곳 등 모두 3곳의 투표소를 방문했다. 투표는 정상적이고, 투표절차는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이뤄지고 있었다. 능장을 부리거나 선거운동을 하거나 또는 괴롭히는 유권자들은 관찰되지 않았다. 투표소는 정해진 시간에 폐쇄됐고 개표를 위해 한림의 선거위원회로 급송됐다. 한림의 투표함들이 도착하자 개표가 시작됐고 밤새 계속됐다. 추자면의 투표함은 해안경비대 순시선을 이용해 한림항에 보내져 1948년 5월 11일 오전 10시께 도착했다. 이들 투표함은 즉시 추자선거위원들이 동승한 지프를 이용해 한림 선거위원회로 급송됐다. 모든 투표함의 개표는 1948년 5월 11일 오후 8시 완료됐고, 보고서는 제주의 중앙선거위원회로 보내졌다.

5. 5월 12일. 제주도의 도선거위원회로 모든 투표함을 옮기기 위해 한림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도 또 도로 장애물이 발견됐으나 애월 동쪽 마을주민들이 마을로 돌아온 사실이 주목됐다. 어디에 있었냐고 묻자 산에 있었다고 대답했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6. 제주의 투표구에 대한 추가방문은 없었다.

남제주군 선거구의 선거는 당시 제주지역 3개 선거구 가운데 '유일하게' 선거가 성공한 만큼 잘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남제주군 안덕면에서는 미군이 직접 중산간 마을에 투표함을 싣고 들어가 선거를 치르기도 했다.<sup>92)</sup> 미군 선거감시반원들은 2개조로 편성해 제주도를 동·서로 나눠 시찰하고 별다른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투표 참관 결과 투표가 잘 이뤄졌다고 보고했다.<sup>93)</sup>

---

92) "...광평에 보낸 투표함이 두차레나 탈취당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선거일이 다가오자 부대에서 나왔다는 미군 여자 1명이 직접 스리쿼터를 몰고와 광평마을까지 투표함을 수송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선거 전에도 무장한 미군들이 면사무소에 자주 들렀습니다. 그들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그 여군은 우리말을 잘했습니다. 내가 위험하다고 했더니 걱정할 것이 없다면서 적극적으로 나서더군요. 할 수 없이 투표함을 스리쿼터에 싣고 나하고 들어서 광평까지 갔습니다. 리사무소에 투표함을 설치하고 그 미군 여자와 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5·10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김봉석(당시 안덕면 부면장)의 증언, 제민일보사, 앞의 책 2, 211-212쪽에서 재인용.

번하이젤 중위의 북제주군 구좌면 선거감시 활동에 대한 보고서는 몇십분 단위로 자세하게 투표율을 기록한 것이 특징이다. 이 지역은 바로 인근의 조천면에 비해 선거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일부 소요만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치러졌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번하이젤 중위의 보고서 주요내용이다.

전체 투표소 18곳 가운데 14곳을 방문했다. 전체 유권자의 96%인 8734명이 등록한 것으로 보고됐다. 투표는 오전 7시 시작돼 오후 4시 완료됐다.

- (1) 오전 9시 30분께 구좌면 도착. 오전 9시45분에 제2투표소 방문. 150명이 우리가 방문한 시간에 투표했다. 전체 유권자의 98%(687명) 등록. 정상.
- (2) 오전 10시 제4투표소 방문. 전체 유권자의 98%(369명) 등록. 순조롭게 진행됨.
- (3) 오전 10시 10분 제3투표소 방문. 100%(350명) 등록. 특이사항 없음.
- (4) 오전 10시 30분 세화에 있는 제10투표소 방문(면사무소). 90%(561명) 등록. 방문 당시 270명이 투표. 순조로운 상태.
- (5) 오전 10시 50분 제12투표소 방문. 96%(577명) 등록. 방문 당시 400명 투표. 정상.
- (6) 오전 11시. 98%(273명) 등록. 방문 당시 200명 투표. 정상.
- (7) 오전 11시 10분. 제14투표소 방문. 98%(534명) 등록. 방문 당시 270명 투표. 정상.
- (8) 오전 11시 40분. 제16투표소 방문. 634명(90%) 등록. 방문 당시 250명 투표. 정상.
- (9) 오래지 않아 나머지 5곳의 투표소를 방문했다. 방문할 때에는 특이사항이 없

- 
- 93) 서울에서 파견된 미군정 요원 테일러 대위는 조지 위벨(George Wibel) 소위와 윌리엄 사보티(William Sabotay) 소위와 함께 운전사 2명, 통역사 3명을 대동하고 감시활동을 벌였다. 제1반은 사보티 소위와 통역사, 운전사로 구성돼 서쪽 도로를 따라 시찰했고, 제2반은 테일러 대위와 위벨 소위, 통역사, 운전사로 구성돼 동쪽 도로를 따라 가며 남제주군의 여러 선거사무소에 투표용지를 배분했다. 제2반은 서귀포에 본부를 설치했고, 선거 전과 선거 기간에 제1반은 모슬포에 본부를 설치한 뒤 투표함이 오면 선거 당일 저녁 서귀포에서 제2반과 합류하기로 했다. 5월 8일 오전 8시 30분 출발한 이들 가운데 제2반은 오후 1시 30분에 서귀포에 도착했고, 그곳 호텔에 숙소를 정했다. 투표용지가 배분됐으며, 선거위원들은 미군정 요원들에게 선거기간에 어떠한 충돌도 없으며, 예상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모든 투표용지와 연필, 서류 등이 계획대로 배분됐다. 5월 9일. 위벨 소위는 인근 지역의 여러 선거사무소를 방문했다. 테일러 대위는 본부에 남았으며 이날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5월 10일. 차량부족으로 차량 1대만이 운행할 수 있어서 위벨 소위는 서귀포 인근 교외의 투표구를 방문하기 위해 오전 6시 30분 출발했다. 이 시간에 테일러 대위는 서귀포의 2개 투표구를 감시하기 위해 떠났다. 제1투표구는 오전 6시 50분에 감시했다. 투표함은 선거위원들이 검사했고, 규정에 따라 비어있었다. 투표는 오전 7시 시작돼 규정에 따라 진행됐다. 후보자들 가운데 1명의 후보만이 그 시간에 나타났다. 오전 7시 30분에 테일러 대위는 서귀포의 제2투표소를 방문했는데 규정에 따라 선거가 이뤄졌다. 이날의 나머지 시간에도 테일러 대위는 걸어서 2개 투표구를 방문했으며, 선거 당일 동안 이들 투표구는 잘 진행됐다. 제2투표구에 후보자들의 대표 2명이 밤 10시 30분에 나타난 것으로 보고됐다. Inclosure No. 46B, Report of Election Observation-Cheju Do(Capt. Taylor), MG Report, 앞의 글.

었다. 제17, 18투표소는 제주 외곽의 작은 섬에 위치해 있어 방문하지 않았다. 제8투표소에서의 사건은 정오 조금 전에 받았다. 감시자는 도움을 얻기 위해 면 감시를 중단하고 제주로 돌아가 보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전날 밤 문제가 발생한 지역에 파견됐다.

- (10) 10일 오후에 투표가 끝나면서 지방 선거위원들이 상당한 불안감을 표출했다. 외부의 위협 때문에 선거위원들이 투표함의 안전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했다. 투표가 끝나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 투표함을 수거하기 위해 제주도 관리들이 경비대와 함께 모든 사전 준비를 끝냈다. 감시자는 투표함들을 수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11일 오전 투표함을 수송하기 위해 군정중대 본부의 트럭을 타고 왔으나 구좌면으로 들어가다가 제주읍 선거위원회로 투표함을 모두 싣고 가는 경비대 트럭을 만났다.
- (11) 5월 11일 오후와 5월 12일 감시자는 3개 투표구의 개표 감시를 지원했다. 이들 3개 투표구는 제주읍, 조천면, 구좌면이다. 시간이 상당히 지연된 뒤 선거위원들은 진행방법에 대한 확신을 갖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개표하기 시작했다. 후보 대표자들과 일부의 구두 방해를 제외하고는 선거절차의 이 단계는 정상적으로 끝났다.<sup>94)</sup>

그러나 미군정 요원들의 선거감시활동은 단지 선거가 치러진 투표소와 주변 등에 대해서만 감시활동을 벌이고, 이를 설명하고 있을 뿐 주민들이 선거를 반대하거나 무장대에 의한 선거반대 투쟁 등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다.

자발적이거나 강요에 의해 주민들이 '선거반대'에 나서 중산간지대로 오르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무더기 대리투표도 나타났다. 남제주군 안덕면 상천리에서는 5월 10일 이장 등 3명이 100명이나 되는 마을 주민들의 투표용지를 한 특정후보에게 몰아주기도 했다.

5·10선거가 되니 경비대에서 10명 가량 나와 마을의 경비를 썼습니다. 투표소는 향사가 없어서 따로 마련 못하고 이장 집에서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장과 리서기인 나, 그리고 마을유지 한 분 등 세사람이 마을 유권자들의 투표용지에 모두 투표를 했습니다. 한후보에게 몰표가 간 것은 사실입니다.<sup>95)</sup>

UNTCOK 대표로 1948년 4월 9-10일 제주도를 방문한 마네의 보고서는 주민들에게 강

94) Inclosure No. 46C, Log of Election Activities, Kuja Myun(Mr. Bernheisel), MG Report, 앞의 글.

95) 고대성(당시 상천리 리서기)의 증언, 제민일보사, 앞의 책 2, 236쪽에서 재인용.

제로 선거인 등록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많은 증거들을 입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는 또 하지 중장에게 몽둥이로 무장한 경찰관이나 청년단체 회원이 다가와 '당신은 등록해야 해'하고 말할 때 이들 주민들은 그들의 말이 '당신은 반드시 등록해야 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한국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sup>96)</sup> 서북청년회 등 우익단체 청년들이 제주도민들에게 강압적인 방법으로 선거등록을 강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UNTCOK 보고서는 미군정에 우호적이었다.<sup>97)</sup>

선거 반대 분위기가 압도적이었던 제주도 3개 선거구에 출마한 13명의 신상과 득표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4-5〉 5·10선거 후보자의 소속정당 및 득표수, 선거구별 투표율

선거구	후보자	나이	소속정당	득표수	등록 유권자수	투표자수(투표율)
북제주군 갑 ①	김충희	59	독촉	2,147	27,650	11,912(43%)
	문대유	41	독촉	1,693		
	양귀진	41	독촉	3,647		
	김시학	70	무소속	3,479		
북제주군 을 ②	박창희	53	독촉	3,190	20,917	9,724(46.5%)
	김덕준	34	대청	691		
	임창현	64	독촉			
	양병직	40	대청	3,774		
	현주선	44	독촉			
	김인선	27	대청			
남제주군 ③	오용국	44	무소속	12,888	37,040	32,062(86.6%)
	양기하	34	무소속			
	강성건	34	대청			

출처: ①, ②는 Despatch No. 118, Subj: List of Korean Election Candidates, Jacobs to the Secretary of State, May 8 1948; Inclosure No. 54, Letr, Subj: Invalidation of the Elections made in some Electoral Districts of Che Choo Do, Ro Chin Sul, Chairman, National Election Committee, to Maj Gen W.F. Dean, Military Governor, 19 May 1948, MG Report, 앞의 글.

③ Despatch No. 159, Subj: Final Registration and Voting figures for Korean Election, Jacobs to the Secretary of State, June 8, 1948.

96) Spec. Report 118, Meomrandum for General Hodge, Subj: Group 1 on Cheju Do 9-10 April (Source: Manet 11 April), John Weckerling to Hodge, 12 April 1948, RG 338, NARA.

97) 미연락장교 존 웨커링 준장은 제주도에서 감시활동을 벌인 UNTCOK의 성과 빌라바는 제주도 상황에 대해 좋은 면만을 찾기를 원했고, 밀너 또한 제주도 시찰과 관련한 어떠한 불평도 제기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위의 글.

〈표 4-5〉에서 보듯이 이 선거에서 남제주군에서는 오용국이 당선됐으나 북제주군 갑 선거구는 43%의 투표율을, 을 선거구는 46.5%의 투표율을 보임으로써 과반수에 미달했다. 미군정이 투표함 직접 호송, 투표소 직접 감시 등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넘지 못한 것이다.

국회선거위원회 위원장 노진설은 선거법 제44조<sup>98)</sup>에 따라 5월 19일 딘 소장에게 제주도 북제주군 갑과 을 선거구의 선거무효를 건의했다.<sup>99)</sup> 미군정은 제주도의 선거 실패가 남한의 전체 구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할 것<sup>100)</sup>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제주도의 선거무효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이는 유엔에서의 남한 정부 승인과정에서 있을지도 모르는 제주도의 선거실패가 거론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UNTCOK 조차 “선거가 훌륭하게 치러졌다”<sup>101)</sup>고 한 제주도의 선거에 대해 딘 소장은 “이들 선거구는 파괴분자들의 활동과 폭력행위 때문에 인민의 진정한 의사표현으로 볼 수 없다”며 선거무효를 선언했다.<sup>102)</sup>

이어 5월 26일에는 포고문을 발표하고 6월 23일에 재선거를 치를 것을 명령했다.<sup>103)</sup> 이 과정에서 북제주군 갑과 을 선거구에서 각각 1위를 한 양귀진과 양병직은 선거재심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같은해 7월 30일 무효처리됐다.<sup>104)</sup>

98) 1948년 3월 17일 공포된 남조선과도정부 법령 제175호 ‘국회의원 선거법’의 제44조는 “군정장관은 좌의 1에 해당한 경우에는 국회선거위원회와 협의해 선거일 후 2주일 이내에 그 선거구의 선거의 무효를 선포할 수 있음.

1. 천재지변 또는 폭동으로 인하여 선거구와 전투표구의 선거가 실시되지 못한 때

1. 어느 투표구의 투표함이 위법으로 개함되었거나 분실되었을 때

1. 선거가 선거위원회 위원 또는 직원의 위협, 허위 또는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선거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끼친 증거가 명확한 때

선거인의 집단은 전항 각호의 1에 해당한 사유에 의하여 선거의 무효를 결정할 때나 또는 어느 선거구의 선거가 무효로 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명하여 함”이라고 돼 있다.

99) Inclosure No. 54, Subj: Re the Invalidation of the Elections made in some Electoral District of Che Choo Do, Ro Chin Sul, Chairman, National Election Committee to Maj. Gen. W. F. Dean, Military Governor, MG Report, 앞의 글.

100) Despatch No. 387, Jacobs to the Secretary of State, 25 May 25 1948.

101) Memorandum for General Hodge, Subj: UNTCOK's Daily Activities, Tuesday, 11 May, John Weckerling to Hodge, 12 May 1949, RG 338, NARA; 당시 국내 일간지도 “제주도와 같이 계엄상태하에서 선거위원의 반수 이상이 피신납치되어 수라장을 이루면서도 도민의 선거열의는 미동도 하지 않고 70%의 투표를 완료하였다 한다”고 보도해 실상과는 다른 보도를 했다. 『조선일보』 1948년 5월 12일.

102) Inclosure No. 54A, Letr, Maj Gen W.F. Dean, Military Governor, USAMGIK, to Chairman, National Election Committee, 24 May 1948, MG Report, 앞의 글.

103) Despatch No. 389, Jacobs to the Secretary of State, May 26 1948;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845, 27 May 1948.

104) Subj: Report of U.S. Liaison Officer with the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UNTCOK), Section V-Implementaion of Paragraph 4, Part II of U.N. Resolution of 14 November 1947, 6. Litigation and Complaints of Election Irregularities, pp. 386-387.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5·10선거에서 전국 대부분의 도시에서 소요가 일어나고 유혈사태가 빚어진 가운데 유독 제주도에서만 선거가 실패한 것이다.

5·10선거는 단독선거에 대한 국내정파들간의 정치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극심한 분열과 대립 위에서 치러진 선거였다.<sup>105)</sup>

미군정이 5·10선거의 성공을 강조하는 그 이면에서는 선거가 실패한 뒤 공산세력의 척결을 구실로, 제주도민들을 탄압하는 정책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는 뒤이어 미군정과 이승만 집권세력에 의한 혹독하고 무차별적인 대량학살로 나타났다.

---

Weckerling to Hodge.

105) 전상인, 앞의 책, 144쪽.

## 제 5 장 미군정의 국면별 대응전략

### 제1절 미군정의 초기 실책과 5·10선거: 1947.3-1948.5

이 시기 제주도 역사의 전환점이 된 사건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1947년 3월 1일의 제28주년 3·1절 기념식 당시 6명의 주민이 경찰의 발포로 사망한 3·1사건이다. 뒤이은 3·10 민관총파업에 대한 미군정의 대응은 사건 원인을 찾기보다는 ‘좌익 척결’이라는 시각에서 대응하고 있다. 둘째, 극우파 인물인 유해진의 제주도지사 부임과 그의 극단적 우익강화정책, 그리고 그를 옹호한 군정장관 딘(William F. Dean) 소장의 정책 집행상의 오류이다. 셋째, 5·10선거 저지를 명분으로 4·3을 일으킨 무장봉기세력에 맞선 미군정의 강경정책이다. 4·3의 평화적 해결이나, 유혈사태나의 길목으로 알려진 ‘4·28평화회담’이 미군정의 치밀한 의도하에 이뤄졌음을 살펴본다.

#### 1) 3·1사건, 총파업과 미군정의 대응

미군정과 제주도민의 본격적인 충돌은 1947년 3월 1일의 제28주년 3·1절 제주도 기념대회 때 시작되었다. 제주읍과 애월면, 조천면 주민 등 3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주북 초등학교에서 기념대회가 열려 평화시위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의 발포<sup>1)</sup>로 초등학생에서부터 주부에 이르기까지 6명의 주민이 희생됐다.<sup>2)</sup>

미군정의 시위대 해산 지원<sup>3)</sup>과 경찰의 증원으로 3·1절 기념대회 소요는 가라앉았으나

- 1) 제민일보사, 앞의 책 2, 266-285쪽: 3·1 사건이 나기 전인 2월 21일 충남과 충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각 50명씩이 제주도의 경비 강화를 위해 파견됐는데, 경찰의 발포에 대해 G-2 보고서는 “이들이 1946년 ‘10월 인민항쟁’ 때 대전에서 훈련을 받았으며 공산주의자들의 잠재된 야만성을 경험했기 때문에 군중을 향해 발포해 해산시켰다”고 보고했다. 『제주신보』 1947년 2월 10일,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 79, 16 March 1947.
- 2) 희생자는 다음과 같다. 허두용(15세·제주북교 5년·제주읍 오라1리), 박재옥(21세·여·제주읍 도두리), 오문수(34세·제주읍 아라리), 김태진(38세·제주읍 도남리), 양무봉(49세·제주읍 오라3리), 송덕수(49세·제주읍 도남리) 등 6명이다. 제민일보사, 앞의 책 1, 276쪽.
- 3) “미군들이 말을 탄 채 한국어로 시위대에 돌아갈 것을 종용하자, 시위대는 오히려 미군더러 돌아가라고 했다”, 제주4·3연구소, 『이제사말씀이다』 2(서울: 한울, 1989), 72-73쪽: “3·1운동을 누가 선동을 했는지는 몰라도 가서 사람 죽는 것까지 구경했다. 나도 북교까지 들어가서 보고, 파트릿지인가 하는 그 양반이 지금 북교 동녘편에서 지프 위에다가 공포를 쏘라고 했다”, 강상문, 「누가 보상을 하라는 사람이 이수과」, 제주4·3연구소, 『무덤에서 살아나온 4·3 수형자들』 (서울: 역사비평, 2002), 122-123쪽; Hq. 6th Inf Div, G-2 Periodic Report No. 509, 11 March 1947,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470, 3 March 1947.

제주도 사회는 긴장감이 팽배했다.<sup>4)</sup> 더욱이 경찰이 사태의 진상을 밝히기는커녕 시위참가자들을 무차별 연행<sup>5)</sup>하자 제주도청 직원들은 '제주도청 3·1대책위원회'를 구성(3월 10일)해 제주도 민정장관 써먼 스타우트(Thurman A. Stout) 소령과 주한미군사령관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보내는 6개항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파업에 들어갔다.<sup>6)</sup> 3·1절 발포사건에 대한 군정당국과 경찰의 납득할만한 조치가 없자 분노한 제주도민들이 남한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민관총파업에 들어간 것이다. 군정청 한국인 관리의 60-75%가 파업에 들어갔고, 금융과 교통, 제조업, 교육, 식량배급 등의 업무가 마비되었다.<sup>7)</sup> 156개 기관단체가 참여<sup>8)</sup>한 총파업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됐다.<sup>9)</sup>

3·1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해 3월 8일 미군정청 특별감찰실장 제임스 카스틸(James A. Casteel) 대령을 반장으로 한 조사반이 제주도에서 현장조사와 기념대회 집행부에 대해 조사<sup>10)</sup>를 벌였으나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뒤이어 파업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3월 14일 제주도를 방문한 경무부장 조병옥의 제주도 방문에 맞춰 파업주도자들에 대한 검거에 들어가 5일만에 200여명을 검거했다.<sup>11)</sup> 조병옥이 제주도를 방문한 다음날 전남북 응원경찰이 파견됐으며, 18일에는 경기도 응원경찰 등 전체 421명의 응원경찰이 제주도에 들어와 삼엄한 경계망을 폈다.<sup>12)</sup>

경찰의 발포로 제주도민 6명이 사망한데 대해 사과표명없이 미군정과 경찰은 물리력의 증원을 통해 진압에 나선 것이다.

사상 초유의 민관총파업을 불러일으킨 3·1사건 진상에 대한 미군정의 시각은 3월 20일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드러났다.<sup>13)</sup> 담화문의 요지는 제1구 경찰서(제주경찰서)에서 발표한 행위는 치안유지의 대국에 입각한 정당방위로 인정한다는 것이었다.<sup>14)</sup> 이 담화문은

4)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469, 3 March 1947.

5) 『제주신보』 1947년 3월 8일, 3월 14일.

6) 요구조건은 ① 무장과 고문의 즉각 폐지 ② 발포 책임자 및 발포 경관의 처벌 ③ 경찰 수뇌부의 인책 사임 ④ 희생자 유가족 및 부상자에 대한 생활 보장 ⑤ 3·1사건 관련 애국인사의 검거 중지 ⑥ 일본 경관의 유업적 계승활동 지양 등 6개항이다. 『제주신보』 1947년 3월 12일.

7)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 79, 16 March 1947,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512, 14 March 1947.

8) 『독립신보』 1947년 4월 5일.

9) Hq. 6th Inf Div, G-2 Periodic Report No. 516, 18 March 1947.

10) 『제주신보』 1947년 3월 12일.

11) 『제주신보』 1947년 3월 20일.

12) 『독립신보』 1947년 4월 5일.

13) 앞의 글.

14) 담화문은 다음과 같다. “조선미군정청 경무부장, 동 제주도지사, 동 제주도 군정장관 3자의 임명에 의한 제주도 제주읍 3·1절 발포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그 사건 관계자 및 증인에 대하여 모든 관계사실을 조사 심리한 결과 전원 일치 좌기의 점에 합의를 보았다.

△사건 발단 전말

(1) 제주감찰청관내 제1구 경찰서에서 발포한 행위는 당시에 존재한 제 사정으로 보아 치안유



경무부장과 제주도지사, 제주도 민정장관 등 3자가 임명한 '제주도 제주읍 3·1절 발포사건조사위원회'가 3월 18일 합의한 내용으로, 조사위원회는 제주지방검찰청장 박종훈, 제주읍내 박명효, 제주고녀 교장 홍순녕, 경무부 공안국 부국장 장영복, 그리고 경무부 수사국 고문관 쇼터 대위로 구성됐다.<sup>15)</sup> 카스틸 대령의 3·1사건 조사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3·1절 발포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합의문 작성에 고문관 자격으로 미군 대위가 포함된 것은 3·1사건에 대한 미군정의 시각을 대변한다. 담화문 발표와 함께 조병옥은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제주도 사건은 북조선 세력과 통모하고 미군정을 전복하여 사회적 혼란을 유치하려는 책동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지었다.<sup>16)</sup>

미군 방첩대(Counter Intelligence Corps: 이하 CIC)는 제주도의 총파업을 남한 전역의 파업으로 변질 가능성이 있는 시급적일지도 모른다고 평가했다.<sup>17)</sup> 미군 정보보고서는 제주도의 총파업을 "좌익의 남한에 대한 조직적인 전술입이 드러났다"는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다.<sup>18)</sup> 미군정은 제주도 인구의 70%가 좌익단체 동조자이거나 관련이 있는 좌익 거점으로 알려졌다는 보고,<sup>19)</sup> 제주도민 가운데 좌익분자가 60-80%에 이르고 있다는 보고,<sup>20)</sup> 심지어 주민의 90%가 좌익이라는 언급<sup>21)</sup> 등을 통해 제주도를 좌익 근거지로 간주했다. 이런 보고가 계속된 이면에는 주한미군사령관 하지 중장이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반감이 있다는 시각이 G-2와 CIC를 통해 작용했다.<sup>22)</sup> 제주도의 총파업은 3월 하순에 이르러 표면상 진정국면을 맞았으나 파업에 참가했던 도민들이 직장에 복귀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었다. 총파업에 관련된 검거인원은 4월 10일까지 500여명에 이르렀다.<sup>23)</sup>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찰의 발포에 의한 제주도민 6명의 사망에 대해 미군정은 정당방위라고 강변하는 한편 제주도를 좌익 거점으로 간주하고 총파업을 '조직적인 전술'

지의 대국에 입각한 정당방위로 인정함.

(2) 제주도립병원 전(前)에서 발포한 행위는 당시에 존재한 모든 사정으로 보아 경찰관의 발포는 무사려의 행동으로 인정함. 그러므로 동 발포책임자인 순경 이문규는 행정처분에 처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함(본 합의의 이유는 본 위원회의 조사서에 게재됨)."

15) 『대동신문』 1947년 3월 21일.

16) 『독립신보』 1947년 3월 21일.

17) CIC-Korea, Subj: CIC Semi Monthly Report No. 7, 16 March 1947 to 31 March 1947, pp. 3-4.

18) FEC, Intelligence Summary No. 1767, 3 April 1947.

19) 위의 글.

20)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489, 26 March 1947.

21) 중도 우익 한성일보는 제주도 주민의 90%가 좌익이라고 언급했다, FEC Civil Intelligence Section, Periodic Summary No. 15, June 15, 1947.

22) 하지의 경제고문관 아더 번스(Arthur C. Bunce)는 하지가 기본적으로 모든 자유주의자는 공산주의자라는 '편견'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이 때문에 하지는 G-2와 CIC를 통해 많은 '주관적 편견'을 '정보'로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Arthur C. Bunce, to Edwin M. Martin, Chief, Division of Japanese & Korean Economic Affairs, Department of State, 24 Feb 1947.

23) 『제주신보』 1947년 4월 12일.

‘남한 파업의 시금석’ 등으로 평가함으로써 탄압해야 할 대상으로서 ‘좌익’으로 규정한 것이다. 사건의 본질을 꿰뚫지 못한 채 미군정의 3·1사건에 대한 미숙하고 무모한 대응은 ‘4·3봉기’의 도화선이 되었다.

## 2) 극우파 인물 유해진 제주도지사와 미군정의 실정(失政)

3·1사건과 총파업, 그리고 이어진 대량 검거사태로 제주사회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가운데 미군정은 4월 2일 제주도 민정장관에 러셀 베로스(Russel D. Barros) 중령을 임명<sup>24)</sup>했으며 4월 7일에는 제주 출신 박경훈 제주도지사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한독당 농림부장 출신의 유해진을 임명했다.<sup>25)</sup> CIC가 극우파 인물로 분류<sup>26)</sup>한 유해진 지사는 부임하기 직전 “극좌와 극우를 배제해 행정을 추진하겠다”<sup>27)</sup>고 언급한 것과는 달리 제주도에서 극단적인 우익강화 및 좌익탄압정책을 폈다.

그의 우익강화 정책으로 제주지역의 정치, 사회, 경제적 긴장감이 높아가자 미군정은 유 지사에 대해 특별감찰을 실시했다.

남조선과도정부 수석고문관 에드가 존슨(Edgar J. Johnson)이 지시하고 특별감찰실 소속 감찰관 로렌스 넬슨(Lawrence A. Nelson) 중령이 시행한 이 조사는 1947년 11월 12일부터 1948년 2월 28일까지 진행됐다.<sup>28)</sup>

조사결과를 보면 제주도 군정중대와 미군정청은 미소공위에 진정서를 보낸 제주도 민전 의장 박경훈 전제주도지사의 사법처리를 놓고 민정장관 베로스 중령이 석방을 명령하는 등 우호적인 입장<sup>29)</sup>을 취한 데 대해 미군정청 사법부는 제주도 군정중대 장교들이 특정단체들이 중도라는 주장에 오도(誤導)돼 위협에 처해있다고 분석했다.<sup>30)</sup> 베로스 중령은 오히려 유 지사가 우익단체의 집회를 제외하고는 집회를 금지했고, 우익의 테러행위를 방조했다고 비판했다.<sup>31)</sup>

24) 『제주신보』 1947년 4월 6일.

25) 『제주신보』 1947년 4월 14일.

26)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601, 7 August 1947.

27) 『제주신보』 1947년 4월 22일.

28) Report of Special Investigation-Governor RYU, Hai Chin of Cheju-do Island, Lawrence A. Nelson to CG, USAMGIK, 11 March 1947, Lawrence A. Nelson, Special Investigator, Hq. USAMGIK, Report of Special Investigation: Cheju-do Political Situation(이하 Nelson Report), 12 Nov. 1947-28 Feb. 1948.

29) 민전 박경훈 의장이 미소공위에 “국호를 인민공화국, 행정기관은 인민위원회를 실시하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보낸데 대해 경찰이 9월 25일 기소하자, 민정장관 베로스 중령이 정치적 탄압이라며 석방을 명령했다. Report of Lee Ho, Prosecutor of the Seoul Court of Review, As to the case of Pak Kyung Hoon(Chejudo), Nelson Report, 앞의 글.

30) 위의 글.

이런 견해는 베로스 중령의 참모인 법무관 사무엘 스티븐슨(Samuel J. Stevenson) 대위도 마찬가지다. 스티븐슨 대위는 “유 지사가 한민당이나 독축의 의견과 다른 인사를 좌익 분자로 분류하는 극우의 슬로건을 채택하고 있다”며 극우단체의 테러와 경찰의 좌익탄압이 제주도민들을 좌익으로 기울도록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sup>32)</sup>

스티븐슨 대위는 또 “본토 출신 경찰들이 좌익을 동정하고 좌익감정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는데 상당부분 책임이 있으며, 심사숙고하지 않은 채 정치적인 인사들을 체포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표면적으로는 현 정치상황이 비교적 조용하지만 중도 및 온건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이 이들 단체를 극좌로 빠지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해 파괴활동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예견했다.<sup>33)</sup> 이 주목할만한 보고서의 결론은 유해진의 극단적인 우익강화 정책이 4개월여 뒤에 일어난 4·3봉기에 제주도민들을 내몰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시사하고 있다.

CIC도 유 지사를 매우 독단적이고, 자신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좌익인사로 규정한다고 평가했다.<sup>34)</sup>

CIC가 1947년 12월 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는 경찰이 빠른 시일 안에 ‘정의’를 회복하지 못하면 모든 단체들이 제주경찰감찰청을 공격할 것<sup>35)</sup>라고 예견하는 등 제주사회는 ‘혼돈’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주한미군사령부 G-2 보고서는 “우익단체들은 ‘빨갱이 공포’를 강조하며 청년단체와 공직사회에서 좌익인사를 척결하려고 애쓰고 있다”면서 “제주도의 좌익인사들이 반미인사들이 아니라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고 평가했다.<sup>36)</sup>

이처럼 제주도 현지 미군정은 이 시기까지도 민전에 대해 우호적이었으며, 제주도 민정장관 베로스 중령은 민전 의장 박경훈 전제주도지사를 가장 훌륭한 제주도민 가운데 한 명이라고 격찬했다.<sup>37)</sup>

---

31) Memorandum, Russel D. Barros, 위의 글, Nelson Report, 앞의 글.

32) Subj: Opinion of Political Situation in Chejudo as of 15 November 1947, Samuel J. Stevenson, Captain, Adjutant, 59th M.G Hq & Hq Company, to Lawrence A. Nelson, OSI, USAMGIK, 21 November 1947, Nelson Report, 앞의 글.

33) 위의 글.

34) Subj: Governor RYU, Hai Chin, Activities of. Henry C. Merritt. CIC, to Lt. Col. Nelson, OSI, USAMGIK, 21 Novemeber 1947, Nelson Report, 앞의 글: CIC의 평가는 4·3봉기 이후 제주도 소요의 원인을 보도한 언론의 평가와도 일치한다. “도정 총책임자가 민독당 출신으로 (종래는 한독당) 민족사상이 박약하고 자파에 속하는 사람만을 등용하는 한편 특권도 자파에 속하는 사람에만 주기 때문에 명예욕과 재욕의 본능을 가진 사람인지라 자연히 그에 아부하고 그에 충성을 맹세하게 되는 가히 그 행정부면의 혼란을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동아일보』 1948년 5월 8일.

35) Hq. USAFIK, G-2 Periodic Reprot No. 708, 13 Dec 1947.

36)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 123, 23 Jan 1948.

37) Memorandum, Russel D. Barros, CCAO, Chejudo to Lawrence A. Nelson, OSI, USAMGIK, 21

그러나 유 지사는 스스로 일반인을 극좌단체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 극우단체의 힘을 빌려 조직과 선전 활동을 성공적으로 했다고 평가할 정도<sup>38)</sup>로 우익강화정책을 폈다. 1948년 2월 19일 현재 제주경찰서내 유치장에는 365명이 수감돼 있었는데, 유 지사는 이들 대부분이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밝혔다.<sup>39)</sup>

넬슨 중령은 “유 지사가 무모하고 독재적인 방법으로 정치이념을 통제하려는 쓸데없는 시도를 해왔고, 좌파를 지하로 몰고 갔으며, 결국 그들의 활동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한편 경찰은 수없이 테러행위를 자행했다”는 결론을 내렸다.<sup>40)</sup>

유 지사는 식량배급 과정도 교묘하게 통제했다.<sup>41)</sup> 심지어 도립병원의 의사들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해임하는 등 물의를 빚었는가 하면<sup>42)</sup> 차량 유지의 실패, 주택용 대나무를 실은 LST 반송, 건물관리의 실패 등 곳곳에서 행정업무 수행에 있어 실정을 거듭했다.

넬슨 중령은 이를 바탕으로 1948년 3월 11일 군정장관 딘 소장에게 4개의 건의사항을 포함한 특별감찰보고서를 제출했다. 건의내용은 첫째, 유해진 지사의 경질, 둘째, 제주도 경찰에 대한 경무부의 조사, 셋째, 미 경찰고문관의 제59군정 사령부 및 사령부 중대 임무의 동시 수행, 넷째, 과밀 유치장에 대한 사법부의 조사 등이었다.

군정장관 딘 소장은 3월 23일 모든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인력의 배치나 현지 조사를 명령했으나 유 지사의 경질 건의만은 받아들이지 않았다.<sup>43)</sup> 이에 앞서 유 지사의 행정 오류가 알려져 감찰조사를 받던 도중 남조선과도정부 수석고문관 존슨(E. J. Johnson)의 면직건의에 대해서도 군정장관은 1947년 12월 3일 “도지사에게 대한 면직은 간단하지 않고, 내각과 민정장관 안재홍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며 사실상 거부했다.<sup>44)</sup>

---

Nov 1947; Department of Justice, USAMGIK, Inter-Office Memorandum, Subj: Prosecution of Communists in Chejudo, Richard D. Gilliam, Jr., Assistant Advisor to Connelly, Major, Advisor, 15 Oct 1947, Nelson Report, 앞의 글.

38) Testimony of: Governor RYU, Hai Chin, taken by Lt. Col. Lawrence A. Nelson, Special Investigator, Date: 18-19 Feb 1948, Nelson Report, 앞의 글.

39) 유치장 감방의 크기는 대략 3.04x3.65m로 한 감방에 35명이 과밀수감됐다고 보고했다. 넬슨 중령이 유해진과 함께 유치장을 둘러보는 시간에도 죄수를 가득실은 트럭 2대가 추가로 들어왔으며, 넬슨 중령은 이를 좌익인사를 전향시키려는 유 지사의 계획을 보여준다고 보고했다. Subj: Report of Special Investigation-Governor RYU, Hai Chin of Cheju-do Island, Lawrence A. Nelson, Lt. Col. Special Investigator, to CG, USAMGIK, 11 March 1948, Nelson Report, 앞의 글.

40) 위의 글.

41) 이는 식량배급표를 주민들이 소유하게 한 것이 아니라 면사무소 등에 보관하고 있다가 식량배급시기에만 나눠줌으로써 정치적으로 주민들을 통제한 것이다. Subj: Report of Inspection Hq. and Hq. Company, 59th MG Company, Chejudo Island., Lawrence A. Nelson, Special Investigator, to CG, USAMGIK, 16 Jan 1948, Nelson Report, 앞의 글.

42) Inter-Office Memorandum, Subj: Reports on visit to Chejudo, Samuel J. Price, Lt. Col. Deputy Advisor, DPH & W, to OCA, USAMGIK, 23 March 1948, Nelson Report, 앞의 글.

43) MGO CG 333.5, Hq. USAMGIK, William F. Dean, Maj. Gen, 23 March 1948.

하지 중장이 지사·청장회의에서 정치적 이유로 억압정책을 사용하지 않도록 지시한<sup>45)</sup> 가운데 딘 소장은 극단적 우익강화정책으로 현지 미군정과 제주도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던 유 지사를 유임시킨 것이다.

넬슨 중령이 딘 소장에게 특별감찰보고서를 제출한 시점은 이미 5·10선거 실시가 결정된 뒤로 총력적인 선거준비 작업에 들어간 상태였다. 따라서 미군정은 5·10선거의 성공을 위해 반대세력의 정리작업에 들어간 것이었다.

이는 선거반대세력에 대한 탄압을 의미하며, 우익강화정책을 의미했다. 이런 점에서 선거의 성공적인 실시에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던 군정 수뇌부로서는 제주도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는 정치적 긴장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유 지사의 우익강화정책이 오히려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군정으로는 좌익의 근거지로 간주한 제주도에서 좌익세력을 탄압하고 극우파 유 지사의 정책이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에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 3) 4·3붕기와 5·10선거 실시를 위한 미군정의 강경 진압정책

유 지사의 극단적 우익강화정책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에 의해 1948년 3월 6일 조천중학원 2학년생 김용철, 14일에 대정면 영락리 출신 양은하가 고문치사 당하고, 3월 말에 한림면 금릉리 출신 박행구가 총살당하는 등 3건의 고문치사 및 총살사건이 잇따랐다. 앞의 두사건은 딘 소장에게도 보고됐다. 이 가운데 김용철의 고문치사 사건은 미군정의 주목을 받아 CIC가 직접 부검을 참관했는가 하면, 중앙 미군정청 사법부 소속 민간인 변호사 토마스 매기(Thomas Magee)가 진상조사를 위해 3월 22일 파견되었다.<sup>46)</sup>

딘 소장은 4월 15일 UNTCOK 대표와의 면담에서 프랑스 대표 마네(Manet)의 제주도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고 김용철의 사건을 조사해 조만간 군정재판에 회부할 것이며, 두 번째 사건도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sup>47)</sup>

44) Inter-Staff Routing Slip, Memo No. 1, Deputy Military Governor to OCA, 3 Dec 1947: 이에 앞서 딘 소장은 1947년 11월 말 제주도를 방문해 유 지사를 만났다. 감찰조사를 받던 유 지사는 이 자리에서 군정과의 협력을 확신함으로써 딘 소장의 신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698, 2 Dec 1947.

45) 『서울신문』 1948년 3월 14일, 『경향신문』 1948년 3월 14일.

46) John W. Connelly, Jr., Major, USAMGIK to CO, 2nd Platoon, Company F, 20th Regiment, Pass to: CCAO, Chejudo, Undated, RG 338, NARA.

47) U.N. Document, A/AC.19/SC./SR.4, 17 April 1948, RG 338, NARA: 이들에 대한 군정재판(재판장 매로 소령)이 5월 6일 열려 가해 경찰관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조선일보』 1948년 5월 9일: 그러나 제주도의 고문치사사건은 당시 5·10선거를 집행할 유엔조선임시위원단에게 즉각 보고되지 않았다. UNTCOK가 이 사건을 단편적으로나마 알게 된 것은 4월 9-10일 제주도의 선거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한 위원단 대표들은 미 고문관의 답변을 통

이 면담에 대해 미연락장교 웨커링 준장은 제주도 민정장관이 위원단에게 경찰의 구타 행위를 증언한 것은 미국인들이 남한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계기로 삼았다고 하지 중장에게 보고했다.<sup>48)</sup> 이는 미군정의 일부 실정을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UNTCOK 대표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려는 의도로 보인다.

남한 단독선거 실시에 따른 미군정과 좌우파간의 대립으로 다른 지방에서는 좌익세력에 의한 시위, 지서 습격 등이 2, 3월에 빈발했으나, 제주에서는 3월 2일의 함덕지서 습격 시도를 제외하고는 '2·7사건' 이후 '4·3'의 발발 전야에 이르기까지 조용했다.<sup>49)</sup>

경찰과 서청의 행패, 유 지사의 우익강화정책으로 제주도민들의 민심이 극도로 악화된 가운데 4월 3일, 무장대는 단정·단선 반대와 통일국가 수립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sup>50)</sup> 하고 11개 지서 및 우익단체 간부의 집과 사무실을 공격하면서 '4·3'봉기를 단행했다.

하지 중장이 4월 2일 산하 지휘관들에게 성공적인 선거 실시가 미사절단의 핵심 성과라고 강조하고 군정장관이 선거 감시 및 집행에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전문<sup>51)</sup>을 보낸 다음날 무장봉기가 감행된 것이었다.

이에 경무부는 즉각 대응에 나서 4월 5일 전남경찰 100명을 파견해 제주비상경비사령부(사령관 김정호 경무부公安국장)를 설치하고 수습에 나서는 한편 경무부장 조병옥은 이튿날 공산주의자들이 선거 등록 사무를 정돈(停頓)상태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sup>52)</sup>

미군정은 제주도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경찰과 경비대 병력을 준비했다. UNTCOK 사무국 차장 밀너(I. Milner)가 4월 7일 제주도의 치안상황에 대해 민감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4월 9일로 예정된 UNTCOK의 제주도 방문을 우려하자 미연락장교 웨커링(John Weckerling) 준장은 4월 8일 그를 만나 "경찰 증원뿐 아니라 제주도의 경비대도 여전히 예비부대로 주둔하고 있다"면서 "상황이 잘 통제되고 있다"고 밝혀<sup>53)</sup> 예정대로 감시활동

---

해 이 사건의 내용을 인지하였다. 프랑스 대표 마네는 딘 소장에게 한국 경찰이 때때로 일본 식의 방법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주의를 촉구했고, 제주도에서와 같은 행위가 남한의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 앞의 글.

48) Memorandum for General Hodge, Subj: Report of Daily UNTCOK Activities for Thursday, 15 April, John Weckerling, 16 April 1948, RG 338, NARA.

49) 양봉철, 『제주경찰의 성격과 활동 연구-제주4·3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역사교육 석사학위논문, 2002, 33쪽.

50) 김봉현, 김민주(공편), 앞의 책, 85쪽.

51) Inclosure No. 1, Telegram, Hodge to CG, 6th Division, 7th Division, Military Government, Korea Base Command. Apr 2, 1948, Despatch No. 85, Subj: Orders Issued by USAFIK and USAMGIK Regarding South Korean Elections, Jacobs to the Secretary of State, April 9, 1948, MG Report, 앞의 글.

52) 『서울신문』 1948년 4월 7일, 『경향신문』 1948년 4월 7일.

53) Memorandum for General Hodge, Subj: Daily Report of UNTCOK Activities, Thursday, 8 April, John Weckerling to Hodge, 9 April 1948, RG 338, NARA.

에 나서게 했다. 이 보고서는 하지 중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제주도 사태는 주한미군사령부를 포함한 미군정 당국 및 UNTCOK의 제주도 사태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

웍커링 준장이 밀너에게 말한 지 이틀 뒤인 4월 10일 국립경찰전문학교 간부후보생 100명이 2차 응원대로 파견됐다.<sup>54)</sup> 하지 중장은 투표율이 좋지 못하면 남한 정부는 압도적인 국제적 승인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sup>55)</sup> 이에 따라 미군정은 선거감시활동을 벌이는 UNTCOK를 안심시키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제주도에서의 성공적인 선거 실시를 위한 강경 진압책에 착수하고 있었다. 그리고 경비대 제9연대의 특별부대가 제주읍과 서귀포에 출동해 경찰과 함께 '경비치안'에 들어갔다.<sup>56)</sup>

경무부 공안국장인 제주비상경비사령부 사령관 김정호의 포고문(4월 8일)<sup>57)</sup>와 조병옥의 선무문(4월 14일)<sup>58)</sup>, 공보실장 김대봉의 담화문(4월 17일)<sup>59)</sup>, 사령관 김정호의 경고문(4월 18일)<sup>60)</sup>과 시국수습을 위한 메시지(4월 19일)<sup>61)</sup>가 잇따라 발표됐다. 이들 발표문은 제주도 사태와 관련해 남한을 소련에 예측시키는 공산주의자들의 음모, 계략과 연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으로 김정호는 '폭거'가 계속되면 소탕전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sup>62)</sup>

그러나 제주도에 파견된 경무부 수사국 고문관 레스터 코페닝(Lester Chorpening)은 "경찰과 남한과도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제주도민들에게 정부 수립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리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제주도의 경찰 상황을 비판하고 있다.<sup>63)</sup> 경무부장에게 보낸 이 보고서에는 4월 19일 현재 제1구서(제주경찰서) 유치장에 남자 죄수 226명과 여자죄수 2명이 수감돼 있다며 제1구서의 혁신을 건의하며 과밀수용문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치장 과밀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제주도민들에 대한 경찰의 검거가 여전히 강력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4월 초·중순 무장대의 공세에 이어 4월 말에 이르러 경찰과 미군정의 강력한 토벌전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

54) 『동광신문』 1948년 4월 13일.

55) 제임스 I. 매트레이, 앞의 책, 180쪽.

56) 『제주신보』 1948년 4월 16일, 『조선중앙일보』 1948년 4월 23일; 모슬포 주둔 경비대는 180명이 제주읍 제1구(제주경찰서 구역)로 이동했고, 50명은 서귀포의 제2구(서귀포경찰서 구역)로 이동했다. Subj: Police Situation on Chejudo Island, Lester Chorpeing to Director of Police, 19 April 1948.

57) 『제주신보』 1948년 4월 10일.

58) 『제주신보』 1948년 4월 18일.

59) 『제주신보』 1948년 4월 18일.

60) 『제주신보』 1948년 4월 20일.

61) 『제주신보』 1948년 4월 20일.

62) 『제주신보』 1948년 4월 20일.

63) Lester Chorpening, 앞의 글.

〈표 5-1〉 1948년 4월 인명피해 상황 비교

구분	시기	4.3-4.7	4.3-4.9	4.9-4.23	4.11-4.17	4.3-4.19	4.2-4.26	4.3-4.25	4.3-4.30
		①	②	③	⑤	⑥	⑦	⑧	⑨
경찰관	사망	4	4	3	3	7	8	7	8
	부상	7			2	9		11	
	행불	2							
일반(우익, 경찰가족, 양민, 관공리)	사망	12	12	12	9	25	28	32	28
	부상	43			12	45		57	
	행불	20			11	23			
폭도	사망	6	3	7	2	29	15	47	27
	부상				9	2		71	
신원미확인	사망								
	부상								

출처: ① 『제주신보』 1948년 4월 12일, 『조선중앙일보』 1948년 4월 14일, ②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 134, 9 April 1948, ③ 위의 글, No. 135, 16 April 1948, No. 136, 23 April 1948, ⑤ 『현대일보』 1948년 4월 22일, ⑥ 『조선중앙일보』 1948년 4월 23일, ⑦ 『동아일보』 1948년 4월 29일, ⑧ 『서울신문』 1948년 5월 3일, ⑨ Hq. USAFIK, 위의 글, No. 137, 30 April 1948, No. 138, 7 May 1948.

〈표 5-1〉은 경찰과 미군의 통계가 제각각이어서 정확한 수치를 내기는 어렵지만 4·3봉기 이후 초기 경찰관과 일반(우익, 경찰가족, 양민, 관공리)의 사망자에 비해 무장대의 사망자 숫자가 4월 하순에 이르면서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장대에 대한 진압작전도 경찰에서 경비대로 중심이 넘어갔다. 4월 15일 UNTCOK 회의에 참석해 제주도 사태에 대한 대표들의 발언<sup>64)</sup>을 들은 뒤 소장은 다음날 해안경비대와 국방경비대에 제주도 합동작전을 명령했다.<sup>65)</sup> 이처럼 신속하게 미군정의 합동작전 명령이 내려진 것은 UNTCOK가 선거의 ‘자유분위기’와 관련해 제주도 사태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미군정은 UNTCOK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제주도에서의 무장봉기세력을 제거해 5·10선거를 성공시키기 위한 합동작전을 명령한 것이었다. 합동작전은 해안경비대의 지원을 받아 경비대 1개 대대를 4월 20일까지 제주도에 파견해 전투를 준비하도록 한다는 내용이었다.<sup>66)</sup> 또 부산 주둔 제3여단 고

64) Memorandum for General Hodge, Subj: Report of Daily UNTCOK Activities for Thursday, 15 April, John Weckerling, 16 April 1948, RG 338, NARA.

65) MGDIS 92 170917Z, MESSAGE, prepared by Terrill E. Price, Advisor to Director, Department of Internal Security, USAMGIK, to CG. 11th Medium Port, Pass to: Captain Clarence D. DeReus, Advisor, 3rd Brigade, Korean Constabulary, Info: CG. 6th Div, 17 April 1948, RG 338, NARA.

66) 위의 글.



문관 클라렌스 드로이스(Clarence D. DeReus) 대위가 고문관으로 작전에 참가하도록 명령을 받았고,<sup>67)</sup> 제주도로 파견된 경비대 대대에는 기관총과 카빈, 탄약을 보급했다.<sup>68)</sup>

이어 딘 소장은 4월 18일 연락용 비행기 L-5 2대를 보내 제주도 민정장관 맨스필드 중령의 작전통제하에 두었으며,<sup>69)</sup> 4월 20일 '제주도의 파괴분자를 섬멸하고, 법과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제주도의 한국 보안군(토벌대)도 맨스필드 중령의 작전지휘를 받도록 했다.<sup>70)</sup> 이와 함께 대규모 공격을 단행하기 전에 무장대 주도자들과 접촉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항복할 기회를 주도록 했다.<sup>71)</sup> 이는 제9연대장 김익렬과 무장대 지도자 김달삼간의 '4·28평화협상'으로 나타난다.

이와 동시에 하지 중장은 제6사단장에게 전문을 보내 이 작전에 모든 가능한 지원을 맨스필드 중령에게 하도록 하는 반면 공격을 받지 않는 한 미군부대는 개입하지 말도록 했다.<sup>72)</sup>

이 전문은 미군정과 경비대와의 관계, 그리고 제주도 소요 진압에 대한 미군정의 역할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제주도에 대한 대대적인 무력진압작전을 벌일 준비를 마친 끝에 경비대는 4월 23일 경찰과 함께 작전<sup>73)</sup>을 벌인데 이어 미군정의 작전계획에 따라 4월 27일부터 본격적인 작전에 들어갔다.<sup>74)</sup> 이날은 바로 딘 소장이 선거방해자에 대한 신속한 수색과 재판 등 처벌지침을 경무부장과 사법부장에게 통보한 날이었다.<sup>75)</sup> 무장대측에서 회담제외에 대한 답변이 오자 김익렬 중령은 맨스필드 중령과 드로이스 대위로부터 협상지침을 받고<sup>76)</sup> 무장대 지도자 김달삼과 '4·28평화협상'을 맺었다.<sup>77)</sup> 이 시기 미군정 수뇌부는 본

---

67) 위의 글.

68) 위의 글.

69) Subj: Cheju-Do Operations, William F. Dean, Major General, Military Governor to Chief Civil Affairs Officer, 59th Military Government Company, 18 April 1948, RG 338, NARA.

70) 위의 글.

71) 위의 글.

72) CG, XXIV Corps to CG, 6th Inf. Div, CO, 59th MG(Chejudo), Undated, RG 338, NARA.

73) 경찰은 4월 23일 밤 11시30분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경비대가 (제주)읍의 특정지역을 차단한 사이 좌익인사들이 있는 주택을 급습해 60명을 검거했다. Hq. 6th Inf Div, G-2 Periodic Report No. 918, 24 April 1948,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819, 27 April 1948; 경무부 공보실장 김대봉도 4월 23일부터 경찰은 도내의 치안만을 담당하고, 반동분자의 소탕은 국방경비대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1948년 5월 6일.

74) 『독립신보』 1948년 4월 30일, 『조선일보』 1948년 5월 3일.

75) 딘 소장은 지령을 통해 "선거역원 또는 입후보자를 공격하거나 기타 여하한 방법으로든지 자유롭고 질서있는 선거를 방해하는 자를 속히 처벌하기 위해 각 검찰관과 심판관은 수색과 재판을 제일우선순위로 하며 현행법규에 의해 여사한 사건의 처리를 촉진하기 위해 경무부 각 기관과 밀접하게 협조하라"고 했다. 『서울신문』 1948년 4월 29일.

76) 지침 내용은 ① 제9연대장 김익렬이 평화회담에 필요한 일체의 권한행사에서 미군정장관 딘 장군을 대리한다. 폭도들의 살인, 방화 등 범법자에 대한 재판에서 극형을 면할 수 있는 사면

국으로부터 '폭도'를 진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sup>78)</sup>

제24군단 작전참모부 슈(M. W. Schewe) 중령이 직속상관인 작전참모 타이첸(A.C. Tychen) 대령에게 제출한 보고서<sup>79)</sup>는 평화회담의 실체와 제주도 사태에 대한 미군정의 입장을 보여준다.

슈 중령은 평화협상이 열리기 전날인 4월 27일 타이첸 대령의 지시에 따라 제주도를 방문해 무장대 활동 진압과 주민통제에 대한 맨스필드 중령의 계획을 확인했다.<sup>80)</sup> 슈 중령이 방문할 당시 제주도에는 미보병 제6사단 제20연대 연대장 브라운 대령과 제주도 주둔 제20연대 파견대장 가이스트(Geist) 소령, 제주도를 관할구역으로 갖고 있는 경비대 제5연대 고문관 드로이스 대위가 있었다. 이날 하지 중장은 한국인들은 공산주의자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5·10선거에 매진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sup>81)</sup>하는 등 선거실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에 제주도의 소요는 미군정으로서 하루속히 진압해야 할 대상이었다.

하지 중장은 이날 브라운 대령을 통해 맨스필드 중령에게 첫째, 국방경비대가 즉시 역할을 할 것, 둘째, 모든 시민소요를 중지시킬 것, 셋째, 무장대 활동을 신속하게 진압하기 위해 경비대와 경찰 사이에 명확한 관계설정을 할 것, 넷째, 미군은 개입하지 말 것 등 4개항의 지침을 시달렸다.<sup>82)</sup>

4월 27일에도 미군정은 연락기(조종사: 제6사단 포인덱스터(Poindexter) 중위, 제주도 군정중대 로버트 번즈(Robert Burns) 대위)를 이용해 경비대 제5연대의 마을 소탕작전을

---

의 약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며 기타 범죄에 대해서는 불문에 부친다는 약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서면으로 조인된 모든 약속의 이행은 미군정장관 딘 장군이 책임진다. ② 요구조건은 즉시 전투중지, 무장해제, 범법자의 자수와 범법행위의 장소, 일자, 범행자 명단의 작성 제출이었다. 김익렬, 유고, 제민일보사, 앞의 책 2, 317쪽.

77) 김익렬은 유고에서 ① 전투행위 즉각 중지 ② 무장해제 ③ 범법자 명단 제출 등 3개항을 요구했고, 김달삼은 ① 민족반역자, 악질경찰, 서북청년단의 추방 ② 제주도민의 경찰이 편성될 때까지 군대가 치안을 맡고 현재의 경찰 해체 ③ 의거 참여자를 전원 불문에 부치고 안전과 자유의 보장 등 3개 항을 요구했다. 이들의 회담에서 김익렬의 요구사항 ①, ②항과 김달삼의 요구사항 ①, ②항에 대해 합의했고, 범법자 문제에 대해서도 김익렬이 도외 및 해외 탈출을 배려하겠다는 선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익렬, 위의 글, 제민일보사, 앞의 책 2, 326-329쪽.

78) 김익렬은 유고에서 소련이 4월 유엔에서 “미군정의 폭정에 대항해 주민들이 각지에서 폭동과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예가 제주도의 폭동사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미국 정부는 군정장관 딘 소장에게 조속한 시일 안에 폭도를 진압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소련 공산주의 선전을 봉쇄하기 위하여 제주도 폭동사건을 ‘공산주의자들의 선동에 의한 반란’으로 규정지어야 된다고 했다. 김익렬, 위의 글, 제민일보사, 앞의 책 2, 307-308쪽.

79) Subj: Report of Activities at Chejudo Island, Lt. Col. Schewe, G-3 to Col. A. C. Tychen, A/C of G-3(이하 Schewe Report), 29 April, 1948, RG 338, NARA.

80) 위의 글.

81) 『동아일보』 1948년 4월 28일, 『서울신문』 1948년 4월 28일.

82) Schewe Report, 앞의 글.

관찰했다.<sup>83)</sup> 이 작전에서는 제5연대 고문관 드로이스 대위가 직접 마을에 진입했으나 하지 중장의 지침처럼 작전기간에 너무 많은 미군이 마을에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맨스필드 중령의 발언에 따라 슈 중령은 동행하지 않았다. 미군은 하지 중장의 지침에 따라 현장에 나서지 않은 채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하면서 모든 작전계획을 세우고, 경비대를 통해 시행한 것이다.

하지 중장은 제주도 작전의 성공을 염원했고, 제주도에서의 한국 진압군의 성패에 남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판단했다.<sup>84)</sup> 이런 하지 중장의 생각은 슈 중령에 의해 경비대 김 중령에게 전해졌다.<sup>85)</sup>

슈 중령은 평화회담이 열린 4월 28일에도 작전명령 제2호로 경비대 제5연대가 마을 소탕작전을 전개하는 모습을 L-5에 탑승해 관찰했다.<sup>86)</sup> 미군정의 작전계획은 5월 1일까지 5단계로 계속하는 것이었다.<sup>87)</sup>

슈(Schewe) 중령은 제주도 상황에 대해 1948년 4월 28일 이전의 작전은 상황을 정당화할 만큼 공격적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sup>88)</sup> 이와 같은 평가는 지금이라도 강경 진압정책을 펴야만 선거의 성공적인 실시와 남한내에서 공산주의 세력을 척결하는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4·28평화협상'은 협상을 통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5·10선거의 성공을 위한 미군정에 의해 잘 계획된 '공산주의 세력의 척결'이라는 미군정의 의도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89)</sup> 다음날에는 딘 소장이 직접 제주도를 방문했다. 이날 제주도에

83) 위의 글.

84) 위의 글.

85) 위의 글.

86) 위의 글.

87) 작전명령은 다음과 같다. ① 작전명령 제3호(4월 29일) = 경비대 제5연대, 제9연대가 제주읍과 모슬포에서 시작해 노로악쪽으로 소탕작전 ② 작전명령 제4호(4월 30일) = 경비대 제5연대의 제4지역내 마을 소탕작전 ③ 작전명령 제5호(5월 1일) = 경비대 제5연대, 제9연대의 교래리 방면 오름 소탕작전 ④ 향후 작전은 이들 작전의 결과에 달려있다. 미군정의 작전계획을 보면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닷새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4·28평화회담의 회담 결과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오직 공산주의 척결을 명분으로 제주도내 무장대의 섬멸에만 목적을 두었다. 위의 글.

88) 이밖에 슈(Schewe) 중령의 제주도 상황에 대한 평가는 첫째, 제59군정중대 사령관이 강력하게 추진하면 상황을 대처하기에 충분하다. 둘째, 오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공산주의 조직가들과 게릴라들이 내려오도록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셋째, 경찰과 대동청년단이 민간인들로 하여금 반경찰적으로 되게 하고, 현재 두려움속에서만 협조하게 할 뿐 협조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활동한다. 넷째, 무장대는 1000-2000여명에 이르며, 소규모 단위로 잘 분산배치되었다. 다섯째, 제주도내 부대 사이의 보다 좋은 통신시설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위의 글.

89) '4·28평화협상'의 개최와 의도에 대한 글은 제주도 인민유격대 사령관 김달삼과의 대화 당사자인 김익렬 제9연대장의 유고가 유일하다. 그러나 그의 유고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북한에서 나온 제주4·3 관련 소설에 나온 평화협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들의 목적이 '5·10단선'을 무난히 치르는데 있었다면 봉기자들측에서는 이 망국과 분렬고착의 '단선'을 저지 파탄시키는데 궁극적인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 이 목적을 위해

체류하던 미국인 부양가족들이 철수했다.<sup>90)</sup> 미군정은 제주도 사태를 ‘전면적인 유격전’으로 보고 진압을 강화해 나갔다.<sup>91)</sup> 이 시기 이후 딘 소장 등 현지 지휘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경비대는 전면적인 공격작전을 전개했다.<sup>92)</sup>

미군정 최고 수뇌부를 이끌고 5월 5일 다시 제주도에 내려온 딘 소장은 ‘평화협상’에 나섰던 김익렬 중령을 해임하고, 박진경 중령을 임명함으로써 강력한 토벌정책을 채택했다.<sup>93)</sup>

남한 정부 수립을 위한 5·10선거를 눈앞에 두고 딘 소장이 4월 29일과 5월 5일 2차례나 제주도를 방문한 것은 제주도 사건이 안고 있는 폭발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딘 소장은 같은 날 서울에서 선거의 자유분위기 보장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공산주의자들이 5·10선거를 방해하려 하고 있다. 그들은 외국의 지령을 받아 선거사무 관리의 사무수행을 방해하기 위해 폭행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살인까지도 감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sup>94)</sup>

딘 소장은 제주도 사태를 ‘5·10선거에 반대하는 북조선 공산군 간자(間者)에 의한 사

서는 어떤 투쟁형태가 가장 효과적이겠는가. 선거날을 전후로 해서 각 선거구들에 무장대를 파견하는 식의 반 선거투쟁이 적합하겠는가. 아니면 화평담판을 계기로 제주도의 핵심력량들이 도민들 속에 들어가 반선거정치공세를 벌려 더 많은 대중을 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 것이 합리적이겠는가. 이 두길에서 ‘정화담판’을 무장투쟁으로 달성한 유리한 국면으로 삼고 택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이 심각한 론쟁 끝에 도달한 결과였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물론 이 ‘정화담판’ 제의를 끝까지 믿고 여기에만 모든 것을 의탁하는 어리석은 생각은 않았을 것이다. 김익렬이 도 군정장관 맨스필드에게 건의하고, 서울 미군정청의 승인까지 받은 법적 담보가 확고한 제의라고 했지만 강규찬, 김달삼은 적들의 모략극이라는 웅당한 경계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 기회에 비전투인원들, 놈들의 무참한 살육을 피해 산에 오른 늙은이들과 녀인들, 어린이들과 로약자들을 합법적으로 하산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들 속에 강력한 반선거 공작 성원들을 넣어 무장투쟁에 합법적인 투쟁까지 배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은 놈들의 제안이 모략극인 경우 취해야 할 제2의 안이었다. 양의선, 『한나의 메아리』 <제1부>(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2000), 322-323쪽.

90) Hq. XXIV Corps, G-3 Operations Report No. 23, 1 May 1948, RG 338, NARA.

91) 서울의 한 외신기자는 5월 2일 다음과 같이 제주도의 상황을 보고 했다. “잘 조직된 게릴라가 미국이 점령하고 있는 제주도의 한 마을을 공격해 3시간 동안 장악한 뒤 토벌대에 쫓겨났다. 미육군의 초계기가 섬 상공을 비행한 뒤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3개 마을이 게릴라로부터 위협을 받았다. 이러한 공격은 최근의 폭동을 일으키고 지서 공격을 중단한 공산분자들이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 지난주 제주에 급파된 응원경찰은 오늘의 공격을 전면적인 유격전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그들은 폭도들이 여자 4명을 포함해 적어도 7명을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Hq. 7th Inf Div, G-2 Periodic Report No. 105, 5 May 1948.

92) 『한성일보』 1948년 8월 14일.

93) 김익렬은 유고에서 “박 연대장은 연대장 취임식 자리에서 ‘우리나라 독립을 방해하는 제주도 폭동사건을 제주도민 30만명을 희생시키더라도 무방하다. 독립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역설했다”고 적고 있다. 김익렬, 앞의 글, 제민일보사, 앞의 책 2, 245쪽; 제9연대 출신의 한 병사도 “박 연대장은 취임식에서 ‘제주도는 동서 길이 200리의 작은 섬이다. 동에서 서로 이잡듯 소탕전을 벌이면 불과 일주일이나 보름이면 폭도진압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한 톤으로 연설하던 것이 기억난다”고 증언했다. 김대집의 증언, 제민일보사, 앞의 책 3, 109쪽.

94) 『동아일보』 1946년 5월 6일, 『경향신문』 1948년 5월 8일.

주로 일어난 것으로 인식했다.<sup>95)</sup>

〈표 5-2〉 제주도 소요 현황(1948.5.1-5.10)

일자	지역	상 황	주체	출전
5.1	제주읍	제주읍-하귀리 사이 전화선 절단	무장대	①
	제주읍	도평리 선거위원장 피살	무장대	①
	제주읍	오라리에서 민간인 6명(남자 2명, 여자 4명)피살	무장대	①,⑨
5.3	조천면	선거위원 전원 사퇴		②
	애월면	애월리, 100여명의 무리가 마을 공격, 경비대·경찰과교전	무장대	②
	제주읍	용담리, 폭도 60명이 마을공격	무장대	⑩
5.4	대정면	모슬포, 지서에 다이ना마이트 투척, 피해없음	무장대	③
	조천면	함덕리, 50여명의 무리가 마을 공격해 대청단원 2명 납치	무장대	③
	제주읍	도두리, 전화선 수리하던 경찰 총격받아 교전. 무장대 1명 체포	무장대	③,⑪
5.5	제주읍	화북리 새벽 1시 습격. 선거위원장 등 주민 3명 피살, 1명 부상	무장대	⑪
	제주읍	삼양리, 새벽 2시 습격. 대청단원 2명 피살	무장대	⑪
5.6	대정면	무릉리, 폭도들이 지서 공격, 폭도 1명 사살	무장대	④
5.7	애월면	장전리, 경찰과 무장대 교전. 경찰 1명 피살, 5명 부상	쌍방	⑤
5.8	제주읍	제주읍-신엄리 사이 교량 파괴	무장대	⑥
5.10	중문면	투표소 습격, 투표용지 전체 훼손	무장대	⑦
	성산면	투표소 방화	무장대	⑦
	제주읍	읍사무소 근처 다이ना마이트 폭발	무장대	⑦
	제주읍	비행장 활주로, 250명과 50명 그룹이 사격, 사상자 없음.		⑦
	표선면	가시리, 투표소 습격, 2명 피살, 1명 부상, 투표용지 훼손	무장대	⑦,⑧
	조천면	송당리, 주민 2명 피살, 1명 부상, 주택 7채 방화		⑦
	성산면	투표소 습격, 4명 피살	무장대	⑧
	조천면	조천리, 경비대 조사받다 탈출 기도 남자 1명 사살	경찰	⑧
	애월면	신엄리, 미군장교가 경비대원 조우. 경비대원 근무지 이탈		⑧
5.7-5.11		경찰: 사망 1명, 부상 21명, 실종 4명, 우익인사: 사망 14명, 부상 5명, 좌익인사: 21명, 주택 방화 22채, 투표소 습격 1곳		⑫

출처: ① Hq. 6th Inf. Div, G-2 Periodic Report No. 925, 1 May 1948 ② 앞의 글, No. 927, 3 May 1948 ③ 앞의 글, No. 928, 4 May 1948 ④ 앞의 글, No. 930, 6 May 1948 ⑤ 앞의 글, No. 931, 7 May 1948 ⑥ 앞의 글, No. 933, 9 May 1948 ⑦ 앞의 글, No. 934, 10 May 1948 ⑧ 앞의 글, No. 935, 11 May 1948 ⑨ Hq. USAFIK, 위의 글, No. 824, 3 May 1948 ⑩ 앞의 글, No. 826, 5 May 1948 ⑪ 앞의 글, No. 827, 6 May 1948 ⑫ 앞의 글, No. 831, No. 11 May 1948.

〈표 5-2〉는 5·10선거를 앞두고 제주도내 12개 읍·면 가운데 7개 읍·면에서 무장대의 활동이 활발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보듯이 5월 7-5월 11일의 소요상황을 제외하더

95) 『우리신문』 1948년 5월 8일.

라도 G-2 보고서에 나타난 것만 23건의 소요가 발생했으며, 지역별로는 제주읍 관내가 10건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조천면 관내 4건, 애월면 관내 3건, 대정면 및 성산면 관내가 각 2건이며, 중문면과 표선면에서도 각 1건씩으로 7개 읍·면에서 소요가 발생했고 5월 7일부터 11일까지 감안하면 제주도내 거의 모든 읍·면에서 소요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에서 발간되는 『워싱턴 뉴스』(*Washington News*)는 5월 5일자에서 “스탈린은 유엔 감독하의 선거를 사보타주하기 위한 노력에 유격전을 더하고 있다”며 제주도 사태를 예로 들 정도로 4·3봉기는 미국의 언론에도 등장했다.<sup>96)</sup>

미군정은 단독선거 반대를 슬로건으로 내건 ‘4·3봉기’가 일어난 제주도의 5·10선거를 관철시키기 위해 경비대의 증강과 작전, 미군정 작전참모의 현지 시찰, 딘 소장의 2차례에 걸친 방문 등을 통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전국에서 유일하게 실패함으로써 미군정과 미국의 ‘위신’은 상처를 입었다.

## 제2절 5·10선거의 실패와 미군정의 공세, 그리고 정부수립:

1948.5-1948.10

미군정의 남한 점령기간 중 최대의 노력을 기울인 5·10선거가 제주도에서 실패하자 미군정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제주도 소요는 가라앉지 않았고, 선거는 무기한 연기됐다. 이 장에서는 첫째, 제주도 5·10선거의 실패 뒤 즉각적인 미구축함의 파견, 경비대와 경찰의 증원을 통한 미군정의 대응을 살펴본다. 둘째, 미군정이 미군대령을 최고 지휘관으로 파견해 강력한 진압작전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제11연대장 박진경 대령이 암살되고 재선거가 무기한 연기되는 과정을 통해 미군정의 ‘4·3봉기’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조명한다. 셋째, 정부 수립을 전후한 시기 미군정은 주한미군의 철수와 남한 단독정부 승인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소요 진압을 위해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했다. 정부 수립 전후의 미군정의 제주도정책을 살펴본다.

### 1) 제주도 5·10선거의 파탄과 미군정의 강경대응

주한미군사령관 하지 중장은 5월 12일 5·10선거 결과에 대해 공산주의자들의 파괴적 선동과 살인, 선거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선언했다.<sup>97)</sup> UNTCOK 또한

96) Outgoing Telegram, Department of State, Article of Washington News, 5 May 1948.

97) 『경향신문』 1948년 5월 30일, 『조선일보』 1948년 5월 30일.

남한 단독선거가 남한 국민들의 자유의사를 표현했으며 원활하고 조직적, 능률적으로 수행됐다고 평가했다.<sup>98)</sup>

이처럼 미군정과 UNTCOK가 5·10선거를 성공작이라고 평가했으나 제주도만은 예외였다. 미군정은 제주도 소요에 대해 강력한 진압작전에 들어갔다. 극동사령부는 12일 제주도의 소요진압을 위해 구축함 크레이그(Craig)호를 제주도에 급파하고<sup>99)</sup> 일주일 이상 제주읍에서 3마일 떨어진 연안에서 정찰활동을 벌였다.<sup>100)</sup> 미극동사령부 해군사령관은 또 크레이그호 함장에게 필요시 제주도 군정중대를 지원할 준비를 하도록 명령했다.<sup>101)</sup> 극동사령부는 이어 전투기를 사용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될 경우 제주도 작전에 전투기 사용까지도 고려했다.<sup>102)</sup> 이는 4월 하반기의 경비대 증강 정도의 차원은 물론 UNTCOK의 선거분석 결과와는 달리 미군정이 제주도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구축함 크레이그호가 제주 부근 해역에 모습을 드러낸 5월 12일 통위부 고문관 프라이스(Price) 대령은 제9연대 고문관 리치(Leach)대위에게 무전통신문을 보내 스탠리(Stanley) 중령이 첫 비행기편으로 제주도에 급파되는 사실을 통보했다.<sup>103)</sup>

5·10선거의 실패로 미군정이 전면적인 대응을 시작한 것이다. 경비대는 5월 14일부터 21일까지 조천면 송당리와 교래리에서 동굴수색과 게릴라 진압작전을 벌여 200여명을 체포하고 7명을 사살했으나 경비대 사상자는 없었다.<sup>104)</sup> 박 연대장은 매일 한 사람이 한명의 폭도를 체포해야 한다<sup>105)</sup>고 말할 정도로 강경 토벌작전을 전개했다.

그러나 강경진압에 반발한 제9연대 소속 하사관 11명을 포함한 사병 41명이 5월 20일 모슬포에서 부대를 탈영해 무장대에 가담했다.<sup>106)</sup> 이 사건의 발생은 강경 토벌작전을 벌이던 경비대와 미군정에 충격을 줬다. 미군정은 제9연대의 존재문제를 검토한 끝에 이 연대를 해체하고 잔여병력을 제11연대에 흡수시키는<sup>107)</sup> 한편 박 연대장을 제9연대장에서

98) UNTCOK 공보 제59호 발표(1948년 5월 12일), 『경향신문』 1948년 5월 12일: “1948년 5월 10일의 선거투표의 결과는 조선총인구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의 선거인의 유효한 자유의사의 표현이며 그들의 자유의사를 정확히 표시한 것이다”, ‘1948년 5월 10일 선거에 관한 결론’, 유엔조선임시위원단, 앞의 책, 135쪽.

99) GHQ. FEC,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General Staff, No. 2105, 13 May 1948.

100) GHq. FEC, 위의 글, No. 2111, May 20, 1948.

101) 미극동군사령부 해군사령관이 구축함 크레이그호 함장에게, 작전명령, 1948년 5월 12일, 제주 4·3위원회, 앞의 책 10, 143-144쪽.

102) 위의 글.

103) Radiogram, Col. Terrill E. Price, Department of Internal Security to American Advisor, 9th Regiment, Korean Constabulary, 12 May 1948.

104) Hq. XXIV Corps, G-3 Operations Report No. 26, 22 May 1948.

105) 박진경 연대장을 암살한 손선호 하사의 진술, 『서울신문』 1948년 8월 15일.

106) 제민일보사, 앞의 책 3, 106쪽.

107) 애초 주한미군사령부 G-2는 “얼핏 생각하면 연대를 없애는게 바람직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연대내 공산분자들이 탈영함으로써 병사들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돼 잔류 병사들을 신뢰할 수 있게 됐다”고 논평했다.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 141, 28

제11연대장으로 이동발령했다.<sup>108)</sup>

경찰은 4·3봉기가 일어난 때부터 원인은 무시한 채 줄곧 ‘소련의 사주나 북로당의 사주에 의한 폭동’으로 규정해 무력진압만을 강조했다. 경무부장 조병옥은 5월 16일 “남로당은 전조선적 파괴폭동의 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제주도 소요를 야기했다”고 격렬한 어조로 제주도 사태를 비난했으며<sup>109)</sup> 공보실장 김대봉도 “제주폭동은 모스크바의 눈으로 보면 크게 의미가 있고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다.<sup>110)</sup>

이어 국회선거위원회가 던 소장에게 제주도 선거의 무효를 건의한 5월 19일에는 철도관구 경찰관 350명과 제6, 8관구 경찰관 100명 등 모두 450명이 전투응원대로 제주도 소요진압을 위해 파견됐다.<sup>111)</sup>

이와 동시에 미보병 제6사단 소속 제20연대장 로스웰 브라운(Rothwell H. Brown) 대령이 5월 중순 제주도 사태의 진압을 위해 제주도 최고 지휘관으로 부임했다.<sup>112)</sup>

브라운 대령의 제주도 부임은 정부 수립 이전 미군의 제주도 사태에 대한 직접 개입을 의미하는 것이다.

제6사단장 올랜도 워드(Orlando Ward) 소장은 브라운 대령에게 제주도 문제가 경찰의 중요성에 의해 발생했다고 인식한다면 제 제주도 소요를 진압하고, 주민들이 불신하는 제 주도의 인물들을 교체하도록 지시했다.<sup>113)</sup>

5·10선거 실패 이후 경찰의 증강에도 불구하고 무장대의 공세가 수그러들지 않자 미군정은 야전군 출신의 브라운 대령을 제주도 최고 지휘관으로 임명해 제주도 작전을 지휘하도록 한 것이다.<sup>114)</sup>

미군정은 5·10선거가 실패하자 “공산주의자들이 제주도에서 강력한 (선거방해)시도를 했으며, 분명히 다른 지방과 북한으로부터 많은 수의 훈련된 선동가와 다량의 무기, 탄약을 들여왔다”며 “이런 시도는 계속되고 있고, 공산주의 라디오 방송에서는 제주도를 ‘동양의 그리스’로 취급할 것”이라고 보았다.<sup>115)</sup> 5·10선거 당일 외신기자가 ‘조선을 그리스

---

May 1948.

108) 제민일보사, 앞의 책 3, 106-107쪽.

109) 『서울신문』 1948년 5월 18일, 『동아일보』 1948년 5월 18일.

110) 『동아일보』 1948년 5월 18일.

111) 『서울신문』 1948년 5월 21일.

112) 미 보병 제6사단장 올랜도 워드(Orlando Ward) 소장이 제20연대장 로스웰 브라운(Rothwell H. Brown) 대령에게, 서한, 1949년 5월 19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8, 56-57쪽.

113) 위의 글.

114) 브라운 대령은 1943년 8월 인도에서 제1임시탱크단의 전술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합동 중·미 사령부 및 사령부 중대를 조직하도록 명령받고, 1943년 8월부터 1944년 6월까지 제1임시탱크단의 지휘관으로 복무한 경력을 가진 야전통이었다.

<http://www.army.mil/CMH-pg/topics/apam/Ch-TkGp.htm>, 2002년 12월 1일.

115) Subj: Report of U.S. Liaison Officer with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UNTCOK), John Weckerling to CG. USAFIK, 7 June 1948.



사태의 재현'이라고 한 보도는 미군정이 제주도의 상황을 그리스와 견주기에 이르렀다.

5·10선거 실패 뒤 미군정의 강력한 진압정책에도 불구하고 5월 11일부터 30일까지 성산면만을 제외한 제주도내 모든 읍·면에서 소요가 일어났다. 이 시기 소요건수는 제주읍이 18건으로 가장 많고, 애월면 10건, 대정면 8건, 한림면 7건, 한경면 5건, 조천면 4건, 안덕면 4건, 구좌면 3건, 중문면 3건, 표선면 2건, 남원면 2건, 서귀면 1건 등 모두 68건이 일어났다.<sup>116)</sup> 이 기간 무장대의 공격은 33차례이며, 경찰은 21차례, 경비대는 7차례 공격했다.<sup>117)</sup>

그러나 무장대의 많은 공격횟수에도 불구하고 브라운 대령이 제주도 최고 지휘관으로 부임한 이후 제주도민들에 대한 대량 검거가 이루어졌다.

제주4·3봉기를 촉발시킨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유 지사가 해임되고<sup>118)</sup> 제주 출신으로 제주도청 3·1사건 파업대책위원장이었던 임관호가 5월 28일 제주도지사로 임명됐다. 이어 6월 17일에는 제주경찰감찰청장이 최천에서 제주 출신 김봉호로 교체됐다. 미군정이 진압작전의 전면에 나선 것은 미국의 제주도 소요 개입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 2) 제주도 6·23재선거의 무기연기와 미군의 진압정책

하지 중장은 5·10선거 결과에 대해 공산주의에 대한 민주주의 승리라고 규정했다.<sup>119)</sup> 그는 “공산주의자들이 다수의 선동자들을 제주도에 잠입시킬 수 있었으며 선거관리들이 임무를 수행하기 두려워할 정도로 주민들에 대한 테러를 가하기 위해 약간의 실제 불만

---

116) Hq. 6th Inf Div. G-2 Periodic Report No. 936, 12 May 1948, 위의 글, No. 938, 14 May 1948, 위의 글, No. 944, 20 May 1948, 위의 글, No.948, 24 May 1948, 위의 글, No. 951, 27 May 1948, 위의 글, No. 954, 30 May 1948, Hq. USAFIK, 위의 글 No.834, 14 May 1948, 위의 글 No. 835, 15 May 1948, 위의 글, No. 18 May 1948, 위의 글, No. 838, No. 19 May 1948, 위의 글, No. 840, 21 May 1948, 위의 글, No. 841, 22 May 1948, 위의 글, No. 842, 24 May 1948, 위의 글, No. 843, 25 May 1948, 위의 글, No. 844, 26 May 1948, 위의 글, No. 845, 27 May 1948, 위의 글, No. 846, 28 May 1948, 위의 글, No. 847, 29 May 1948, 제민일보사, 앞의 책 3, 421-425쪽.

117) 위의 글; 나머지 7차례는 경비대의 탈영이나 뼈라살포, 지역불명 등이다.

118) 미군정 특별감찰실의 해임 건의와 무장대의 암살계획에도 자리를 지켰던 유해진은 로스웰 브라운(Rothwell H. Brown) 대령이 제주도에 부임한 뒤 미군정에 의해 해임됐다. 이와 관련해 공보원은 1948년 6월 3일 '호외'를 발행해 1948년 6월 19일 5천여부를 비행기로 살포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주도에 있는 지도적 시민의 추천에 의해 재조선 미군정장관 윌리엄 F. 딘 소장은 임관호를 제주도지사로 임명했습니다. 제주도사람들은 새도지사를 지지할 것이며 속속(速速)히 이 섬을 평화롭게 또 번창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4·3연구소, 『제주4·3자료집Ⅱ-미국무성 제주도관계문서』(제주: 각, 2002), 482쪽.

119) 제목: 정치상황요약, 주한미군사령관이 합창의장에게, 1948년 5월 23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7, 241쪽.

과 많은 가상(假想)의 불만을 이용해 폭도집단을 규합했다”고 덧붙였다.<sup>120)</sup>

5·10선거가 끝나면서 38선 이남 지역에서의 정치적 폭력사태는 급속하게 줄었다. 1948년 여름을 지나면서 그러한 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났다.<sup>121)</sup> 그러나 제주도는 5·10선거를 전후해 무장대의 공격이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전개됐으며 이에 맞서 미군정이 이들에 대한 진압을 강화해 나간 더욱 뜨거운 지역이 되고 있었다.

브라운 대령은 제주도의 모든 고문관들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제주도 주둔 경비대나 경찰 등 제주도의 모든 작전을 지휘·통솔하는 최고 지휘권을 맡았다.<sup>122)</sup> 이와 함께 주한 미군사령관 하지 중장은 제주도 주둔 제59군정중대와 제주도 지구 CIC에도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브라운 대령을 지원하도록 명령했다.<sup>123)</sup>

브라운 대령의 제주도 부임은 5·10선거의 좌절로 ‘위신’에 타격을 입은 제주도 사태를 무력진압하고, 재선거의 성공적인 실시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미군정의 의사표시였다.

제주도 사태를 내전상태로 규정한 미군정은 단독선거를 반대한 공산주의자들의 선동으로 소요가 발생했으나 한편으로는 독재적인 경찰과 부패관리들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원한 때문에 사태가 악화된 것으로 분석했다.<sup>124)</sup> 딘 소장이 선거법에 따라 5월 24일 제주도의 북제주군 갑과 을 선거구에 대한 무효선언을 할 즈음 브라운 대령은 제주도에 ‘평정작전’(Pacification Plan)을 진행했다.<sup>125)</sup> 이는 제주도를 빗길하듯 싹쓸이하는 전략이었다.

브라운 대령은 이를 위한 세부실천 전략으로 5월 22일 첫째, 경찰은 해안마을을 보호하며, 무기를 소지한 폭도를 체포하는 한편 무고한 주민을 살해하거나 공포 분위기를 조성 행위를 중단할 것, 둘째, 경비대는 제주도내에 조직된 인민해방군을 진압할 것, 셋째, 경찰이나 경비대에 체포된 포로조사를 위한 심문소를 세울 것, 넷째, 민간 행정관리들은 경찰과 경비대의 보호를 받고, 행정기관의 기능은 최대한 빠른 속도로 회복할 것 등의 계획을 세웠다.<sup>126)</sup>

브라운 대령은 부임 초기 무장대가 절단한 전신주 복구와 도로 이용을 위해 정리작업을 하는 동시에 정찰활동을 펼쳐 무장대가 장악하고 있는 고립지역을 찾아내는데 주력

---

120) 위의 글.

121) 존 메릴, 『침략인가 해방전쟁인가』, 161쪽.

122) 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 피터스버그 거주 찰스 웨솔로스키(Charles L. Wesolowsky · 당시 제주도 주둔 제11연대 대대 및 9연대 고문관) 증언. 2001년 10월 22-23일.

123) CG. USAFIK to 59th MG Group, Chejudo, Undated, RG 338, NARA.

124) 남조선과도정부 중앙경제위원회 통계국장 아더 피터슨(Arthur G. Peterson)은 ‘제주도는 사실상 내전이 진행되고 있는 정말 뜨거운 지역’이라면서 이렇게 분석했다. USAMGIK, *South Korean Interim Government Activities* No. 32, May 1948, p. 1.

125) 웨솔로스키 증언.

126) Inclosure. Subj: Report of Activities on Cheju-Do Island from 22 May 1948, to 30 June 1948, Col. Rothwell H. Brown to CG. USAMGIK, 1 July 1948, W. F. Dean, Maj. Gen. to Edgar A. Noel, Major, CCAO, 59th MG Company, 17 July 1948.

했다.<sup>127)</sup>

이와 함께 주민들에 대한 선무작전의 하나로 제주비상경비사령관 최천과의 회담을 통해 1948년도 하곡수집 철폐 계획도 발표했다.<sup>128)</sup> 이런 사실은 군정장관 딘 소장을 대리한 브라운 대령 명의로 6월 2일 제주도 전지역에 공중살포됐다.<sup>129)</sup> 브라운 대령은 이날 “내가 오기 전에는 경찰과 육·해군 사이에 서로 협력을 안한다는 말을 듣고 있었는데 그런 일이 없어졌다”며 “지난 5·10선거 때는 성적이 좋지 못하였는데 백성들을 보호함으로써 6월 23일 재선거시에는 진정돼 자유롭게 대표를 선출하도록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sup>130)</sup>

이는 브라운 대령이 제주도 최고 지휘관으로 부임한 이유를 밝혀주는 것으로 5·10선거 실패의 쓰라린 상처를 6·23 재선거에서 씻어보려는 미군정의 의도였다.

브라운 대령이 이날 밝힌 ‘중산간지역 고립작전’은 첫째, 경찰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주변 도로로부터 4km까지 사이에서 치안을 확보하는 것, 둘째, 국방경비대는 제주도의 서쪽으로부터 동쪽 땅까지 휩쓸어 버리는 작전을 진행시키는 것이었다.<sup>131)</sup> 경찰과 경비대의 작전지역을 이처럼 구분지은 것은 이들 사이에 마찰이 자주 발생했기 때문이었다.<sup>132)</sup>

중산간 마을을 고립시키고 주민들을 심사하는 작전<sup>133)</sup>을 택한 브라운 대령의 작전은 중산간 마을의 제주도민들을 모두 무장대로 간주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미군과 경비대의 정보요원들은 5월 23일 현재 구금돼 있는 432명의 혐의자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sup>134)</sup> 브라운 대령의 고립작전 아래 박진경 연대장의 제11연대는 강력한 검거작전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중산간 지역으로 피신했던 민간인들까지도 ‘공산주의자’나 ‘폭도’로 오인돼 붙잡혔다.<sup>135)</sup> 제주도 전역에 걸쳐 토벌작전이 전개되면서 현지에서 체포한 혐의자를 호송하지 않고 즉결처분하는 사례도 나타났다.<sup>136)</sup> 이런 모든 작전의 최고 지휘권은 브라운 대령이 쥐고 있었다.

127) 웨슬로스키 증언.

128) 『경향신문』 1948년 6월 3일.

129) “군정장관 딘 소장은 제주도 사람들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알아서 이번에는 제주도에 서 보리 수집을 하지 않을 것을 선언했습니다”, 제주4·3연구소, 『제주4·3자료집Ⅱ-미국무성 제주도관계문서』(제주: 각, 2001), 481쪽.

130) 『현대일보』 1948년 6월 3일.

131) 위의 신문.

132) 웨슬로스키는 경찰과 경비대의 마찰을 실제 본 적은 없으나 이들이 제주도민들에게 확신을 갖고 너무 정력적으로 심문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과 경비대는 서로 자신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등 냉담한 상태였다. 이 때문에 고문관들이 마침내 경찰은 주로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고, 경비대는 현장으로 나가 적의 훈련장소와 위치를 찾아내 그들과 교전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웨슬로스키 증언.

133) USAMGIK, *South Korean Interim Government Activities* No. 32, 31 May 1948.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41, 28 May 1948.

134)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41, 28 May 1948.

135) 제민일보사, 앞의 책 3, 142쪽.

136) 양성팔(당시 제9연대 4기생)의 증언, 제민일보사, 앞의 책 3, 146쪽.

박진경 연대장이 이끄는 제11연대의 소탕작전이 계속되면서 6월 2일에는 구금자가 596명으로 늘어났다.<sup>137)</sup> 6·23재선거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임무를 부여받은 브라운 대령은 제주도 중산간 곳곳을 누비며 경비대의 현황보고를 받고 작전을 독려했다.<sup>138)</sup> 5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검거된 주민만 5천여명에 이르렀다.<sup>139)</sup> 제주도를 '좌익거점'으로 간주한 미군정은 대다수 제주도민들을 공산주의자로 분류해 무차별 검거한 것이다. 경비대와 경찰을 본 제주도민들은 공포에 몸을 떨었을뿐<sup>140)</sup> 미군정의 작전은 실패를 자초하였다.<sup>141)</sup>

5·10단선 이후 남한의 질서를 회복하려 한 미군정은 국방경비대와 경찰의 마찰을 알고 있었다. 경비대와 경찰은 팽팽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특히 제주도에선 첨예하게 대립하였다.<sup>142)</sup>

이에 따라 브라운 대령은 작전 기간에 정찰활동과 함께 경찰과 경비대간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했으나 이들 사이에는 계속해서 심한 마찰을 빚었다.<sup>143)</sup> 심지어 작전문제만이 아닌 사적인 자리에서도 불협화음을 빚자 경비대와 경찰 사이에 사건해결을 위한 조사위원회가 구성되기도 했다.<sup>144)</sup>

재선거 실시를 위해 미군정의 강경진압이 실시되는 시기에 제주도를 2주일 동안 방문한 서울지방심리원 양원일 판사는 6월 중순 “제주도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인측에서 제주도의 실정을 잘 파악하고 경찰의 압박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군경간의 마찰을 제거하고 경비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야 할 것”이라며 제주도 사태에 대한 해결책<sup>145)</sup>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브라운 대령 휘하 참모로는 선임장교인 포티어스(Portius) 소령을 비롯해 제임스 리치(James Leach) 대위, 몽고메리(Montgomery) 중위와 2-3명의 장교들이 있었다.<sup>146)</sup> 이 가

137) Hq. USAFIK, 위의 글, No 142, 4 June 1948.

138) 제민일보사, 앞의 책 3, 154-157쪽.

139) Subj: Report of Activities on Chejudo Island from 22 May 1948, to 30 June 1948, Rothwell H. Brown, Col. to CG, USAMGIK, 1 July 1948(이하 Brown Report)

140) 『조선중앙일보』 1948년 6월 10일.

141) 박명림은 박진경 연대장의 토벌작전의 실패 이유에 대해 첫째, 민중의 인식전환, 둘째, 경비대 내부의 동요, 셋째, 무장대의 전술전환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결국 박 연대장을 죽음으로까지 몰아가 항쟁을 장기화, 유혈화 시켰다고 분석했다. 박명림, 앞의 글, 123쪽.

142) 존 메릴, 앞의 책, 162쪽.

143) 웨슬로스키는 “브라운 대령이 경찰과 경비대의 잦은 충돌을 막기 위해 노력한 결과 이들을 효율적인 부대로 재편했다”고 언급했다. 웨슬로스키 증언.

144) 1948년 7월 31일 경비대원과 경찰관 사이에 통행금지 시간 이후의 식당 영업시간 문제를 놓고 싸움이 벌어졌다. 이 사건에 대해 경찰 고문관과 경비대 고문관이 공동조사를 했고, 경찰청장과 제9연대장간의 회의가 열려 경찰과 경비대 사이의 마찰을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경찰과 경비대 구성원 동수로 조사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찰스 웨슬로스키 중위, 9th Regiment Daily Report, 1948년 8월 1일.

145) 『조선일보』 1948년 6월 17일.

146) Letr, Charles Wesolowsky to Dr. Allan R. Millett, 16 Sept. 1996.

운데 포티어스 소령과 리치 대위는 경비대에서 고문관으로 근무했고, 작전 참모이기도 한 리치 대위는 대부분의 작전지역에 진입했다.<sup>147)</sup>

브라운 대령은 제주경찰청장과의 회의에서 민간인들 가운데 일부 공산주의자들이 섞여 있더라도 공산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민간인들을 죽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sup>148)</sup>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을 찾아내기 위해 민간인들을 죽일 수 없다는 브라운 대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브라운 대령은 제주도민들의 80%가 공산주의자들과 관련돼 있거나 두려움 때문에 이들과 연계돼 있다고 인식했다.<sup>149)</sup> 제주도 최고 지휘관인 브라운 대령의 이와 같은 제주도민들에 대한 인식은 제주도에 강렬한 진압작전을 전개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5·10선거의 실패로 추락한 ‘위신’을 되찾고 6·23재선거의 실시를 위한 사전정지작업을 벌여야 하는 미군정의 ‘중산간 지역의 고립 및 검거작전’은 제주도민들의 대량 구금사태를 불러왔다. 그러나 원인을 치유하지 않는 무력진압은 사태의 해결을 어렵게 할 뿐이었다.

육지에서 며느리를 데려오기는 하나 딸자식을 섬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도민들은 누구나 다 일가이며 친척이다...봉건세력이 발달되지 못한 이곳에는 착취층이 없다...그러나 33만 전도민이 총칼 앞에 제가슴을 내어밀었다는 데에서 문제는 커진 것이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진정시키고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함에는 당국자의 현명한 시책이 필요하다. 무력으로 제압하지 못하는 이 광란을 통하여서 제주도의 참다운 인식을 하여야 되며 민심을 유리한 사정이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뼈아프게 느껴야 할 것이다.<sup>150)</sup>

미군정의 토벌작전이 강화되자 무장대는 간헐적으로 지서 습격 등 경찰과의 전투는 벌이면서도 경비대원이 나타나면 대응하지 않고 도주하는 전술을 사용했다.<sup>151)</sup>

---

147) 웨슬로스키 증언.

148) Letr, Charles Wesolowsky to Dr. Allan R. Millett, 16 Sept. 1996: 브라운 대령은 부임 초기 제주경찰청장과의 회의에서 단호한 어조로 경찰이 제주도민을 다루는데 신중하게 처신하고 무고한 민간인들을 희생시키지 않도록 강조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서울로 돌려보내겠다고 말했다. 웨슬로스키는 이런 사실을 제주도에 도착했을 때 칸막이가 쳐진 옆방에서 브라운 대령과 경찰청장간의 대화를 들어 알게 됐다고 증언했다. 웨슬로스키 증언.

149) Despatch No. 199, Inclosure No. 1, Memorandum for CG, USAFIK, Subj: Visit on Cheju Do, Coulter to Hodge, 15 June, 1948, Subj: Disturbances on Cheju Island, Joseph E. Jacobs, U.S. Political Advisor to the Secretary of State, July 2, 1948.

150) 『조선중앙일보』 1948년 6월 13일.

151) “경찰이 토벌온다면 대항하지만 경비대 군인과 미군이 합쳐서 올라온다니까 대항해서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장부대의 각 기관들은 분산해서 토벌기간 동안만 안전하게 피했다 오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대항을 하면 토벌이 길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피하지는 결정이 난 것이지요. 또 그냥 대항하면 우리의 피해가 클 것은 뻔한 일이었지요”, 김아

상공에는 미군 경찰기가 날고, 제일선에는 전투를 지휘하는 미군의 지프가 질주하고 있으며, 해양에는 근해를 경계하는 미군함의 검은 연기가 끊임 없이 작전을 벌였다.<sup>152)</sup>

그러나 미군정은 6·23재선거를 치를 상황을 만들지 못하자 6월 10일 행정명령 제22호를 공포하고 ‘인민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평화롭고 혼란없는 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제주도의 재선거를 무기한 연기했다.<sup>153)</sup> 미군정은 제주도 소요가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6·23재선거가 치러진다면 제주도 사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sup>154)</sup>

제주도선거위원회도 하루전인 6월 9일 재선거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국회선거위원회에 재선거 연기를 요청했다.<sup>155)</sup>

미군이 남한을 점령한 이후 제주도에서처럼 격렬한 저항에 부딪쳐본 적도 없고, 두 번씩이나 ‘점령기간내 핵심적인 성과’라던 선거의 실패가 적도 없었다.

제주도 5·10선거의 실패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추구해왔던 대한정책의 실패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다.<sup>156)</sup>

6·23 재선거가 무기한 연기되자 미군정은 소탕작전을 더욱 강화해 경비대 1개 대대당 2중대 규모로 편성된 4개 대대를 제주도의 동서남북에 주둔시켜 모든 대대가 공동목표로 산간 고지대를 향해 내륙으로 전개하는 작전을 벌였다.<sup>157)</sup>

이 작전<sup>158)</sup>으로 3000여명이 체포됐으며, 575명(여자 2명 포함)이 수용소에서 경비대와

---

무개(당시 대정면당 무장대 중대장)의 증인, 제민일보사, 앞의 책 3, 154-155쪽.

152) 조덕송 특파원 답사기, 『조선중앙일보』 1948년 6월 6일.

153) “1948년 3월 17일자 국회의원 선거법 제44조에 의해 본관에게 부여된 권한에 의해 국회선거위원회의 추천으로서 본관은 1948년 5월 10일 시행된 북제주군의 갑과 을구 선거의 투표가 파괴분자의 행동과 폭력으로 인해 해당 양선거구의 50%에 미달한 투표구에 한해 행해졌기 때문에 1948년 6월 23일 재선거를 시행하도록 명했다. 제주도에서 파괴분자는 공중치안과 질서의 교란에 대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므로 북제주군의 갑구와 을구의 선거인에 대해 해당 양구 인민의 의사를 진실히 대표할 수 있는 평화롭고 혼란없는 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본관은 해당 양지구의 재선거를 무기연기할 것을 명한다”, 행정명령 제22호, 1948년 6월 10일.

154) GHQ. FEC, G-2 Intelligence Summary No. 2134, 17 June 1948.

155) 제주도선거위원회의 재선거 연기 요청 이유는 ① 제주도내 1206명의 선거위원 가운데 15명이 살해당하고 5명이 중상을 입었으므로 남제주 선거위원들은 피신중에 있는 사람도 많으나 대부분은 후환이 두려워서 나오기를 싫어하고 있다 ② 북제주군내 133개소의 투표소에 있던 선거인 명부는 거의 그 절반이상이 탈취 혹은 방화 등으로 말미암아 없어지고 말았기 때문에 새로 작성하지 못할 현상에 있다 ③ 5·10선거에 입후보하였던 북제주군 갑구의 4명과 을구의 4명은 한사람도 양보하는 사람이 없으니 무투표 선거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조선중앙일보』 1948년 6월 10일.

156) 박명림, 앞의 글, 118쪽.

157) Despatch No. 199, Inclosure, Memorandum for CG, Subj: Visit on Cheju Do, Coulter to Hodge (이하 Coulter Report), 15 June, 1948, Subj: Disturbances on Cheju Island, Joseph E. Jacobs, U.S. Political Advisor to the Secretary of State, July 2, 1948.

158) 이 기간의 작전은 작전명령 제4호까지 끝난 것으로 보인다. Hq. USAFIK, G-2 Weekly Summary

미군으로 구성된 4개 심문팀의 심사를 받았다.<sup>159)</sup>

재선거가 무기한 연기되고 한층 강력한 진압작전이 전개되는 가운데 군정장관 대리 존 콜터(John B. Coulter) 소장<sup>160)</sup>이 6월 15일 소요사태를 파악하기 위해 제주도를 방문했다.

콜터 소장은 “경찰의 가혹행위와 제주도의 경제상황이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에 엄청난 기여해 장기적으로 철저한 처방이 요구되며, 참을 수 없을 만큼 나쁜 경제상황에 대한 확실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상황 진전이 이뤄질 수 없다”고 분석하고 “이런 상황이 지체없이 개선되지 않는 한 정치·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예상된다”고 판단했다.<sup>161)</sup>

콜터 소장은 브라운 대령과의 면담과 개인적인 시찰을 통해 군정청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sup>162)</sup>

제주도에서 이처럼 미군정 수뇌부의 관심 속에 강력한 토벌전이 전개되어 형제와 가족들이 죽어가자 재경 제주도민친목단체인 제주회는 6월 21일 하지 중장과 UNTCOK에 청원서를 내고 무차별적인 토벌작전의 중지와 군정당국의 실책을 지적했고,<sup>163)</sup> 광주제우회도 6월 19일 제주도경찰청장에게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호소했다.<sup>164)</sup>

재선거의 무기연기로 또다시 제주도에 강경진압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6월 18일 제9연대장 박진경 대령의 암살사건이 일어났다.<sup>165)</sup> 브라운 대령이 제주도 최고 지휘관으로

---

No. 144, 18 June 1948.

159) Coulter Report, 앞의 글.

160) 존 콜터(John B. Coulter) 소장은 5월 26일 주한미군사령부와 제24군단 부사령관으로 임명됐다.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48, 16 July 1948.

161) Coulter Report, 앞의 글.

162) 콜터의 건의사항은 ① 제주도민들에 대한 광범위한 재교육이 지체없이 공보원(주로 한국인들)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② 효율적이고 신뢰할만한 경찰이 필요하다 ③ 경찰이 치안을 맡을 때까지 기동성 있고 효율적인 경비대가 주둔해야 한다 ④ 고구마 재배와 주정공장의 가동과 관련해 현재의 참을 수 없는 상황을 치유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위의 글.

163) 제우회는 “작년 3·1절 기념행사 때의 경찰측의 발포 살상사건을 기화로 하여 폭발된 소위 관공리 총파업사건을 군정당국이 공정하고 건설적인 방법으로서 해결하였던들 오늘의 사태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군정당국은 이 지방의 특수성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관민 전체가 위험한 파괴분자인 것 같이 대처하여 도외에서 이 지방주민과 하등 관련이 없는 인사와 청년단을 대량으로 유입하여 각 마을에 배치하고 그들로 하여금 평화로운 도민생활에 간섭과 폭행을 자행케 하였던 것이다”고 주장함으로써 군정당국에 책임을 돌렸다. 『조선일보』 1948년 6월 22일.

164) 광주제우회는 ① 무력적 처리 방침을 버리고 평화적 방법을 취하여 극도로 무기 소지를 제한할 것 ② 도민의 생계를 보장할 것 ③ 테러하는 사설단체를 즉시 해체할 것 ④ 해상교통 특히 제주-목포간의 증명제도를 철폐할 것 ⑤ 고문치사, 폭행하는 자는 엄벌에 처할 것 등을 건의했다. 『조선일보』 1948년 7월 2일.

165) 박진경 연대장의 대령 진급에 대해 장창국의 『육사졸업생』(서울: 중앙일보사, 1984), 124쪽에는 1948년 6월 1일 딘 장군이 직접 제주도에 가서 박 중령을 대령으로 진급시키고 계급장을 달아주었다고 언급돼 있으나, 당시 제주도에 있던 웨슬로스키는 대령 진급식날 암살사건이 일어났다고 증언했다. 웨슬로스키 증언.

내려와 경비대와 경찰의 작전을 진두지휘하는 과정에서 박 연대장의 암살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한국의 부대장 및 야전지휘관 가운데 가장 우수한 인물의 한명으로 평가’<sup>166)</sup>받던 박 연대장의 암살사건은 미군정의 비상한 관심을 모아 군정장관 딘 소장뿐 아니라 로버츠 준장과 그의 참모(고문관)들이 대거 제주도에 내려왔다.<sup>167)</sup> 이들은 전날 열린 진급식에 참석한 뒤 상경했다가 암살사건 소식을 듣자마자 다시 내려온 것이다.

곧바로 CIC와 범죄수사대(CID), 경찰이 강도 높은 수사에 들어갔다.<sup>168)</sup> 부하 병사에 의한 박 연대장의 암살은 로버츠 장군으로 하여금 강경책을 취하게 했다. 이에 따라 경비대원들을 무장해제했으며<sup>169)</sup> 군부내 숙군작업까지도 실시하게 됐다. 박 대령의 암살 이후 실시된 숙군작업은 한국군내 최초의 숙군작업이었다.<sup>170)</sup>

수사결과 제9연대 제3중대장 문상길 중위를 비롯해 강승규 일등중사, 황주복 하사, 김정도 하사, 손선호 하사, 배경용 하사, 양희천 이등상사, 신상우 일등중사 등 8명을 체포한 경비대는 정부 수립 하루 전인 8월 14일 열린 고등군법회의 선고공판에서 문상길 중위와 신상우 일등상사, 손선호 하사, 배경용 하사 등 4명에게 총살형을 선고하고<sup>171)</sup>, 9월 23일 집행했다.

박 연대장을 암살한 손선호는 8월 14일 열린 고등군법재판에서 박 연대장을 암살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박 대령의 30만 도민에 대한 무자비한 작전 공격은 전 연대장 김 중령의 선무작전에 비하여 볼 때 그의 작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한 그릇된 결과로 다음과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 우리가 화북이란 부락에 갔을 때 15세

166)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863, 18 June 1948.

167) 웨슬로스키 증언.

168) Hq. 6th Inf Div. G-2 Periodic Report No. 967, 20 June 1948.

169) 웨슬로스키 증언.

17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1』(서울: 동회, 1967), 441쪽.

171) 민간변호사인 김양 변호사는 판결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감을 밝혔다.

“금번 암살사건 관계자의 범행동기가 추호의 사심사리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민족정기에 살고죽고 하는 국방경비대 자체의 신조에서 우러나오는 애족적 신념의 소치라는 것은 명백하다. 왜 박 대령을 살해하지 않으면 안되었는가 하는 것은 박 대령의 참모관으로서 증인 출두한 임부택 장교의 진술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박 대령 부임전 평화복구를 목적으로 도민을 선무하고 그들과 다정하여진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박 대령에 복종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북조선을 위하여서는 30만 도민을 전부 희생시켜도 좋다. 그리고 ‘산사람’ 토벌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보다 각 부락을 수색하여서 부락민을 전부 검거하여라. 이때에 피하는 자가 세 번 정지명령에 불응하면 총살하여라. 이상과 같은 박 대령의 명령에 불복하는 피고들은 민족을 위한 거사로 살해를 결정하였던 것이다. 정지명령에 불응한다고 총살당한 부락민이 전기 임 장교의 기억에 남은 것만으로도 20, 30명이 넘는다고 한다” 『조선일보』 1948년 8월 15일.



가량 되는 아이가 그의 아버지의 시체를 꺼안고 있는 것을 보고 무조건 살해하였다. 또 5월 1일 오라리란 부락에 출동하였을 때 수많은 남녀노소의 시체를 보았을 뿐인데 이들은 자세한 조사의 결과 경찰의 비행임을 알게 되었다. 사격연습을 한다고 하고 부락의 소, 기타 가축을 도살하였으며 폭도가 있는 곳을 안내했다가 폭도가 없으면 총살하고 말았다. 또 매일 한 사람이 한명의 폭도를 체포해야 한다는 등 부하에 대한 애정도 전혀 없었다.<sup>172)</sup>

그러나 주한미군사령부 정치고문관은 박 연대장의 암살과 관련해 무차별적인 강경 토벌작전에 대한 불만보다는 남로당의 사보타주로 간주하는 미군정의 인식을 드러냈다.<sup>173)</sup>

언론이 소요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원인제거가 급선무라고 보도<sup>174)</sup>하고 검찰총장 이인이 6월 15일 관공리의 부패를 소요의 원인이라며 “수습책으로 100명의 경찰관을 보내는 것보다 한사람이라도 유능한 자를 보내어 민심수습을 하는 것이 낫다”<sup>175)</sup>는 견해를 발표했다.

이에 경무부장 조병옥은 제주도 소요의 근본원인을 “조선의 소련 연방화 내지 위성국화를 기도하는 공산당의 남조선 파괴공작이 강행될 그 일단으로 총선거 방해 공작에 불과한 것”이라고 일축하고 “치안 수습책은 법을 무시하고 살인 방화 등 파괴 만행에 전념하여 정부를 전복하고 독립을 방해하는 자는 엄중 처단하고 무지몽매로 인하여 부화뇌동한 자는 선무, 선도하는 방침 외에는 없다”<sup>176)</sup>고 주장해 시각차이를 뚜렷이 나타냈다.

김익렬 중령은 “제주도의 모든 군사행동은 당시 최고작전회의 참모인 드로이스(DeReus) 대위의 지휘였다”고 말해 경비대의 작전이 전적으로 미군의 지휘를 받았음을 밝혔다.<sup>177)</sup> 김익렬 중령의 이런 발언은 웨슬로스키 중위가 제주도의 최고 지휘관인 로스웰 브라운 대령이 경비대와 경찰 등 제주도의 모든 것을 책임졌다고 증언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다.

---

172) 『서울신문』 1948년 8월 15일, 『조선일보』 1948년 8월 15일, 『경향신문』 1948년 8월 15일.

173) 이 보고서에는 “유엔과 미국의 감시 아래 신생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현재 남로당의 유일한 목적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사보타주하는 파괴다. 남로당에 원인을 돌릴 수 있는 소요가 선거 이후 다소 줄어들고 있는 반면 그들의 노력은 성격면에서 악의가 있는 매우 명확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제주도의 소요는 확실히 모든 다른 도움요소들(공산주의자들의 노력을 최대한으로 해서 추진되는)을 활용하고 있다. 제주도 주둔 경비대 사령관이면, 경비대 최고의 장교로 생각되는 박진경이 취임도중 경비대 복장을 하고 사령부로 들어온 남로당 쾰나폴에게 살해됐다”고 보고했다. Eugene S. Roland, Asst Adj Gen, Political Advisor to State Department, 26 June 1948.

174) 『조선중앙일보』 1948년 6월 11일, 6월 13일.

175) 『자유신문』 1948년 6월 16일.

176) 『현대일보』 1948년 6월 24일.

177) 제13연대장 김익렬 중령은 박진경 대령 암살사건과 관련한 3일째 공판이 열린 8월 13일 이렇게 증언했다. 『국제신문』 1948년 8월 14일.

### 3) 정부 수립 전후 미군정의 제주도 진압정책

제주도 5·10선거와 6·23재선거가 실패하고, 박진경 연대장이 암살된 뒤 제11연대장에 최경록 중령, 부연대장에 송요찬<sup>178)</sup> 소령을 임명한 미군정은 정부수립을 위한 정지작업에 들어갔다. 미군정의 무차별적인 체포와 계속된 경찰작전 등으로 제주도 소요는 어느정도 가라앉은 듯이 보였다.

미군정은 신생 한국정부에 권력을 이양하거나 군대를 철수하는 별다른 사건없이 1948년 여름을 보낼 수 있기를 희망했다. 남한의 국제적인 지위는 여전히 불안한 상태에 있었고, 유엔 총회 회기 중에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을 받을지도 미지수였기 때문에 이승만조차도 은인자중하고 있을 정도였다.<sup>179)</sup>

이에 따라 미군정은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해 내부의 불안요소 제거를 명분으로 제주도에서 경비대와 경찰을 이용해 소탕작전을 계속했다.<sup>180)</sup> 박 연대장의 작전을 이어받은 최경록 연대장도 무차별적인 검거작전을 계속해 박 연대장 재임시절부터 합산하여 6주 동안 4천여명을 체포했다.<sup>181)</sup>

6월 26일에는 오후 6시부터 다음달 오후 6시까지 만 하루동안 전개된 작전에서 '폭도 혐의자' 176명을 체포했다.<sup>182)</sup> 이후 제주도 소요는 표면적으로는 8월 초순께까지 어느정도 가라앉았다.<sup>183)</sup>

로버츠<sup>184)</sup> 준장의 명령으로 제11연대 제3대대 고문관으로 부임한 웨슬로스키<sup>185)</sup> 중위는

---

178) 로버츠 준장은 1948년 10월 초토화작전의 한 가운데 서게 되는 송요찬을 최상의 장교라고 격찬했다. 로버츠 준장이 브라운 대령에게 보내는 비망록, 1948년 6월 21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8, 89쪽.

179) 존 메릴, 『침략인가 해방전쟁인가: 1948-1950 한국전쟁의 국내적 배경』(서울: 과학과 사상, 1988), 183쪽.

180) 존 메릴은 신생 대한민국 정부에 권력을 이양하거나 군대를 철수하는 과정에서 방해요인으로 작용할지 모르는 그 어떠한 최후의 장애에도 부딪히지 않고서 그해 여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랐으며, 따라서 일시적으로 잠잠해진 4·3봉기를 진압하는 군사작전을 수행해 나가는 일에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이 시기 무장대의 활동은 강력한 토벌작전으로 인해 숨어들었을 뿐 경비대와 경찰의 토벌작전은 계속됐다. 존 메릴, 앞의 책, 183쪽.

181)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 146, 2 July 1948; 웨슬로스키는 "정보 담당자들이 과도한 열정을 갖고 공산주의자들과 싸우는 것 같았다"고 증언했다. 웨슬로스키 증언.

182)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871, 28 June 1948.

183) 미보병 제6사단 야전명령 제7호, 1948년 8월 5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8, 57쪽.

184) 윌리엄 로버츠(William L. Roberts) 준장은 1948년 5월 20일 테릴 프라이어(Terrill Price) 대령 후임으로 통위부 고문관으로 부임했다. 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이 육군성장관 케네스 로얄(Kenneth C. Royall)에게 보내는 보고서. 제목: 국방경비대 역사, 1949년 2월 7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8, 103쪽.

185) 웨슬로스키는 미국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1948년 6월경부터 8월 18일까지 제주도에 근무했다. 그는 처음 최경록 연대장의 제11연대 부고문관겸 제1대대 고문관으로 부임했다가 뒤에 송요찬 연대장이 이끄는 제9연대 고문관으로 근무했다. 그는 1950년 본토로 귀국했다가 한국

작전고문관도 맡았다. 대대 고문관의 역할은 대대장들에게 부대가 행동을 개시하거나 충돌을 일으킬 때 대대장들에게 자문하는 것이었다.<sup>186)</sup> 웨슬로스키 중위는 제11연대와 함께 여러차례 소탕작전에 참가했으며, 한라산 뒷세오름까지도 작전을 벌이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했다. 지형이 험해 차량을 이용할 수 없어 소를 이용해 물자보급을 하면서 2-3주 동안 남쪽지역에서 한라산을 향해 소탕작전을 벌인 적도 있었으나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sup>187)</sup>

또 전체 부대원 150여명이 승선할 수 있는 해안경비대 소속 경비정 YMS(Yard Mines Sweeper) 2척을 이용해 제주도 전체에 대한 수색에 활용하면서 직접 마을에 진입해 대항을 갖추고 마을을 통과하는 등 정찰활동을 벌이고 귀환하기도 했다. 이 경비정들은 부대원들의 당일 작전에 이용되기도 했고, 섬의 오지까지 힘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됐다.<sup>188)</sup> 연락용 비행기 L-5도 미고문관의 지휘 아래 제주도 전역을 비행하면서 정찰과 물자수송을 했다.<sup>189)</sup>

이처럼 경비대의 대대적인 소탕작전이 전개되는 동안 무장대와의 전면적인 전투는 8월 2일 서광리에서의 교전<sup>190)</sup>을 제외하고는 8월 중순까지 거의 없어 외관상 미군정의 진압작전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 이는 경비대의 무차별적인 토벌작전을 피해 무장대가 지하로 숨어들어 갔기 때문이었다.

7월 12일 통위부 이형근 참모총장은 “대체로 제주도 사건은 일단락 되고 민심은 안정되었다. 앞으로 종래와 같은 폭동은 없을 것이다”고 천명했다.<sup>191)</sup> 이어 7월 15일 제11연대는 애초의 제9연대 병력의 배속을 해제해 제9연대로 재편했고, 연대장에 제11연대 부연대장 송요찬 소령을 임명했다. 이어 7월 21일 제3여단의 제5연대와 제6연대에서 각각 1개 대대씩 2개 대대를 차출해 제주에 증파하고 제11연대는 7월 24일 수원으로 철수했다.

브라운 대령은 선거반대 소요가 성공한 이유를 첫째, 제주도 민정장관의 정책 실패<sup>192)</sup>, 둘째, 응원경찰대가 저지른 지나친 만행과 공포감 조성, 셋째, 경비대내 공산주의 동조자들의 침투로 인해 제11연대장 2명이 공산주의 선동가들과 협상하는 바람에 초래된 지연

---

전쟁에 참전했고, 1960년대에 중령으로 예편해 현재 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즈버그에 살고 있다.

186) 웨슬로스키 중위는 자신이 제주도에 갔을 때는 진압됐을 때여서 희생자가 많지 않았으며, 무장대가 조직화되지 않았지만 상황이 가변적이었다고 증언했다. 웨슬로스키 증언.

187) 웨슬로스키는 경비대의 출현이 무장대에 노출됐다고 확신했다고 회고했다.

188) Letr, Wesolowsky to Dr. Allan R. Millet, March 6, 1996.

189) 웨슬로스키 증언.

190) 경찰은 서광리에서 8월 2일 무장대와 교전을 벌여 무장대 50여명과 교전을 벌여 무장대 2명이 사살되고, 경찰 1명이 부상당했다.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907, 10 Aug 1948.

191) 『동아일보』 1948년 7월 13일.

192) 브라운 대령이 지적한 제주도 민정장관의 정책 실패는 첫째, 활용 가능한 병력을 이용한 초기 진압의 실패, 둘째, 제주도 경찰에 대한 지휘 실패, 셋째, 제주도에 도착한 응원경찰에 대한 효과적인 동원 실패, 넷째, 경비대에 대한 명령 지시와 명령 이행에 대한 실패 등이다. Brwon Report, 앞의 글.

전술(제주도 민정장관이 강력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경비대는 즉각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넷째, 제주도민들에게 만연된 공포감과 행정조직 기능의 완전 붕괴, 다섯째 정부의 통제에 반감을 갖는 제주도민들의 특성과 법 없이도 살았던 제주도의 역사적 배경, 여섯째 제주도민간의 혈연관계로 분석했다.<sup>193)</sup>

브라운 대령은 즉각적인 진압을 통해 사태해결을 하지 못한 것이 선거반대 소요가 성공한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는 “원인에는 흥미가 없다. 나의 사명은 진압뿐이다”<sup>194)</sup>라는 그의 발언을 뒷받침해주는 것으로서 미군정의 제주도에 대한 정세 인식은 원인 치유책을 찾기 보다는 ‘진압’만을 강조하려했다.

브라운 대령의 후임자인 웨슬로스키 중위도 “나의 판단은 반란을 진압하고, 선동자를 섬멸하며 민간정부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섬멸에 관한 것이었다”라고 언급했다.<sup>195)</sup> 이와 같이 미군정 요원들은 제주도 소요를 ‘민주주의대 공산주의 대결의 장’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제주도 작전을 총지휘한 브라운 대령은 경찰의 잔악성과 비효율적인 정부기관도 원인이 있지만 제주도 공산주의자들의 계획에 비하면 지엽적인 원인들이라고 분석하고, 제주도가 공산주의자들의 거점으로 조직됐다고 결론을 내렸다.<sup>196)</sup>

자신의 지휘에도 불구하고 박진경 연대장이 암살되고 자신에게 부여된 재선거 실시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지 못한 브라운 대령은 딘 소장에게 첫째, 최소한 1년 동안 경비대 1개 연대를 주둔시킬 것, 둘째, 제주도 경찰을 효율적이고 훈련된 경찰로 재조직할 것, 셋째,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미국식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것,<sup>197)</sup> 넷째, 제주도 행정기관을 부패와 비효율성이 없는 기관으로 만들 것을 건의했다.<sup>198)</sup>

정부 수립을 앞두고 딘 소장은 브라운 대령의 보고서를 토대로 제주도 민정장관 에드가 노엘(Edgar A. Noel) 소령에게 브라운 대령의 건의사항을 완전 이행하도록 지시하고 이와 동시에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제주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sup>199)</sup> 또한 딘 소장은 남한의 모든 정부부처에 대해서도 ‘제주도 문제를 최우선 관심사’로 두도록 지시했다.<sup>200)</sup>

---

193) 위의 글.

194) 『조선중앙일보』 1948년 6월 8일.

195) 웨슬로스키 증언.

196) 로스웰 브라운 대령이 7월 초순 제주도를 떠나면서 제6사단장 올랜도 워드 소장에게 보낸 서한. 1948년 7월 2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9, 37쪽.

197) “이는 공산주의 해악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미국식이 제주도의 미래와 건전한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희망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공산주의자들의 선전선동에 효과적인 역선전을 하는 것이다. 미국의 정치적 위상을 강화시켜주고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압력을 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글.

198) 위의 글.

199) Brown Report, 앞의 글.

이와 같은 딘 소장의 지시는 스스로 제주도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다. 미군정청 특별감찰실이 1948년 3월 각종 비위사실을 들어 유해진 지사를 경질토록 했는데도 이를 거부했던 딘 소장이 7월에는 부패와 비효율성이 없는 행정기관을 만들도록 지시한 사실은 이를 입증한다.<sup>201)</sup>

미군정은 제주도에 미국식제도의 도입만이 제주도의 미래와 경제발전에 희망을 줄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물가는 폭등해 제주도의 쌀값은 6월 1말당 1081원(전국 평균 978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데 이어 7월에는 1879원(전국 평균 1166원)으로 74%나 뛰었다.<sup>202)</sup> 본토로부터 쌀을 들여와야 하는 제주도민들로서는 이중 삼중의 경제적 고통에 시달렸다.

딘 소장은 브라운 대령의 건의사항을 7월 30일 경무부장에게 보내는 비망록을 통해서도 비슷한 내용을 통보했다.<sup>203)</sup> 이와 함께 무장대의 도주나 조직편성, 훈련을 막기 위해 1개 연대를 제주도에 4-6주 정도 주둔시켜 산간지대에서 연대훈련을 하도록 했다.<sup>204)</sup>

브라운 대령이 경비대와 경찰간에 협력관계를 유지하게 만들었다고 했지만 갈등은 여전히 전하였으며, 제주도민들은 대체적으로 경비대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지만 경찰에 대한 적대감을 보였다.<sup>205)</sup> 송요찬 소령이 제9연대장으로 있던 7월 하순에서부터 8월 하순까지의 제9연대의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sup>206)</sup>

〈표 5-3〉 제9연대 활동내용(1948.7.21-8.22)

일자	주요 활동
7.21	CIC가 폭도 150여명이 어승생악 부근에서 훈련받고 있고, 무장 폭도들이 노로악에서 소규모 폭도들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보고함. 이에 따라 작전명령 제1호 발효, 작전 종료 기간에 부대는 지정된 위치로 이동 및 훈련실시 예정
7.23	11연대 부대 이동 완료, 작전 준비는 진행중
7.24	모슬포 비행장에 사격장 설치, 부대 이동과 작전 준비 진행중
7.25	부대 공격개시, 목표지점 도달, 작전중
7.26	제1대대 귀환, 노획물: 일제 탄약10발, 창 1개, 일제 소총 노리쇠 1개

200) 위의 글.

201) 브라운 대령의 건의 사항 가운데 경비대 1개 연대의 제주도 주둔은 이후에도 계속됐고, 미국 식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홍보는 이 무렵 공보원의 설치로 나타났다.

202)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 155, 3 Sept 1948.

203) Memorandum, W. F. Dean, Military Governnor to Director, National Police, Thru: Advisor, Naitonal Police, Subj: A Summary Report on the Jei-Ju Police, 30 July 1948.

204) 위의 글.

205) 미보병 제6사단 야전명령 제7호, 1948년 8월 5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8, 57-58쪽.

206) 이 보고서는 제9연대 일일보고서로, 제9연대 고문관인 헤롤드 피쉬그룬드(Harold S. Fischgrund) 예비역 대령이 소장하고 있던 것을 오하이오 주립대 알란 밀레트(Allan R. Millett) 교수에게 건네 준 것으로 필자가 입수해 표로 구성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연대 미군 고문관이 일일 활동상황을 요약해 보고한 것이어서 전투상보로 추정된다.

7.27	제3대대: 폭도 전령 1명 체포. 전령은 10만엔과 차단할 100여명의 우익인사 명단 소지. 이들 가운데는 폭도 활동과 관련해 경비대에 정확한 정보를 줬던 인사도 포함됨. 경찰고문관에게 명단을 쥐 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임. 전령 탈출. 제2대대: 포로 9명 체포. 심문받고 석방됨
7.28	송요찬 소령, 제5여단과 행정 및 보급문제 조율 위해 목표 선편으로 광주행
7.29	경비대 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모든 부대가 새로운 장소로 이동중
7.30	소규모 폭도그룹이 한림지역에서 보급품을 확보하기 위해 활동중이라는 CIC의 보고서를 경찰고문관과 논의. 경비대가 기초훈련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찰이 활동 예정
7.31	연대 사령부와 제1대대 지역 검열 실시. 특수 정보원들이 제주 주둔 경비대원들이 공산주의 선전활동을 유포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을 경찰 고문관으로부터 보고받음. 이들 정보원들에게 연루된 경비대원들의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청함
8.1	7월 31일 오후 11시께 통행금지시간 식당영업문제로 경비대 정보요원과 경찰 사찰과 형사간에 싸움. 경찰 고문관과 경비대 고문관이 조사하고, 경찰 책임자와 제9연대장 간에 회의 개최. 경비대원과 경찰관 마찰 방지 위한 조사위 구성예정.
8.2	시코어(Secore) 대위, 리드(Reed) 대위, 야고다(Jagoda) 대위 제주 도착. 천막 40개가 부족한 것이 발견됐는데 조사결과 제11연대 제2대대장이 천막을 20만원에 민간인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임. 이 사건은 제11연대가 본토로 이동한 뒤 발생
8.3	집합 완료. 사형 선고 받은 경비대원 3명 총살
8.4	경찰이 폭도 2명 사살. 이들 가운데 1명은 경비대 탈영병, 시코어 대위 제주발
8.5	정보과(S-2) 재편중. 제주도 출신 S-2 소속은 제1대대로 진출됨. 정보업무에 대한 경찰, 경비대와 CIC 사이 연락 개선
8.6	군기대, 서귀포에서 분대 천막 21개 회수
8.7	폭도활동이 지난주 증가했다고 경찰 보고. 폭도들은 마을에서 식량 확보중
8.9	연대장, 연대 참모, 대대장 회의. 보급절차와 참모기능 확정. 군정장관이 인민군 소속 300명이 기관총 12정을 가지고 본토에서 출발했다는 정보를 서북청년단으로부터 받았다며 정보 제공. 인민군 40명이 함덕리에 도착해 교래리로 향했다는 경찰 보고 받음. 이 정보를 제2대대에 넘겨줌. 민간용 트럭이 비상시기인 8월 13-17일 부대 이동을 위해 제주에 징발될 예정.
8.18	웨슬로스키 중위 서울 귀환. 라이언 신부가 폭도 40여명이 상호마을 주민 5명의 집을 습격해 이들을 찢었다고 보고. 주민들은 북한선거를 위한 선거인 투표용지 서명을 강요받음
8.19	경찰간부가 밤 11시 30분께 한림리에서 폭도들에게 피살
8.20	제1대대 사격 완료. 폭도 활동 없음
8.12	제주도 출신 부대원들이 S-3에서 진출되는 것이 이뤄짐. 폭도활동 보고되지 않음
8.13	송당리 제2대대 감찰 실시. 대대장은 아파 막사 잔류
8.14	대대장에 대해 조사차 송당리에 대한 항공감찰 실시
8.15	세화지서, 대천동 부근에 폭도 30여명 있다고 보고. 확인 위해 정찰대원 25명 파견. 항공감찰 결과 별다른 사항없음
8.16	정찰대원은 2대대와 3대대에서 파견. 결과없음
8.17	해안경비대 함정이 북한에서 온 러시아 선박 차단. 선박은 보급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백함. 경찰은 보급품이 있는지 조사중
8.22	제3대대 정찰대원 4명이 서귀면 서흥리 부근 폭도 15명을 체포하기 위해 파견됨

제9연대의 활동상황을 보여주는 <표 5-3>은 이 시기가 4·3 봉기 이후 비교적 경비대의 작전이 부분적으로 이뤄졌을 뿐 상대적으로 조용한 시기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 군정장관이 서북청년단으로부터 입수했다며 인민군 300여명이 제주도로 출발했다거나 40여명이 진주했다는 보고는 당시 상황으로 봐서 상당히 비중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 보고가 없고, G-2 보고서 등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점으로 보아 제9연대의 보고서가 조작됐거나 정부 수립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긴장감을 조성해 토벌작전의 당위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207)</sup>

남한내 군사고문관들의 책임을 맡고 있던 경비대 고문관 로버츠 준장은 제주도 소요를 어떻게 인식했는가. 이는 당시 제주도 주둔 제9연대 고문관인 웨솔로스키 중위와의 대화를 통해 남한내 미군정 수뇌부의 사고의 일단을 볼 수 있다. 제9연대와 교체한 제11연대가 7월 경기도 수원으로 이동하자 함께 동행한 웨솔로스키 중위는 로버츠 준장에게 신고하자 그의 명령으로 다시 제주도의 제9연대 고문관으로 부임했다. 당시 제9연대장은 제11연대의 부연대장을 맡았던 송요찬 소령이었다.

다음은 웨솔로스키가 제주도 임무를 끝내고 7월 제11연대와 수원으로 이동해 로버츠 준장에게 신고할 때 있었던 로버츠 준장과 웨솔로스키의 대화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로버츠: 귀관은 제주도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웨솔로스키: 당분간 진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제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지 모르는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나쁜 상황으로 재발할 수도 있습니다. 소요를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로버츠: 9연대가 모슬포에 주둔해 훈련하는 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웨솔로스키: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제주도 전지역에 중대 규모의 경찰기지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통제와 군수, 통신, 무기에 집중하면서 야외에서 훈련해야 합니다.

로버츠: 부대가 휴식을 취하기에 좋은 시기가 되리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경찰이 약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웨솔로스키: 우리는 문제를 제거하지 못했고, 다만 지하로 숨어들었습니다. 상황이 지하로 들어갔으나 제거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보여주는 것 뿐 아니라 우리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폭넓은 경찰활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3곳의 경찰거점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로버츠: 귀관이 제주도의 고문관들을 책임진다. 제주도로 돌아가라.<sup>208)</sup>

207) 이 시기 고문관으로 활동한 웨솔로스키는 무장대와 관련해 북한의 개입 증거를 보거나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웨솔로스키 증언.

208) 웨솔로스키 증언 및 Letr. Wesolowsky to Dr. Allan R. Millett, 16 Sept. 1996.

로버츠 준장의 명령에 따라 웨슬로스키 중위는 LST에 고문단이 지원한 차량을 싣고 제주도로 갔다.<sup>209)</sup> 이 대화내용을 보면 로버츠 준장은 제주도의 소요사태와 관련해 제9연대의 훈련장소 선정이나 훈련방안까지도 강구하는 등 제주도 사태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소탕작전에 임했음을 알 수 있다. 로버츠 준장은 제주도 현지 고문관을 통해 제주도 상황을 파악한 뒤 의견을 듣고 곧바로 조치를 취했다. 미군과 경비대의 출현뿐 아니라 무력시위를 통해 무장대의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전략이다.

10월 하순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초토화작전에 앞서 이미 8월 중순계부터 경찰은 특별경계령을 발효했다. 정부수립기간인 8월 13일부터 8월 19일까지 경찰특별 경계 2단계가 발효돼 모든 활용 가능한 경찰력 운용<sup>210)</sup>에 들어갔다. 8월 13일부터 제주와 목포간 정기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에 대한 여행증명제도가 부활<sup>211)</sup>됐고, 8월 20일부터는 경찰이 제주도 해안선 봉쇄와 여객출입의 사찰을 강화했다.<sup>212)</sup> 가운데 8월 30일계의 위기설<sup>213)</sup>에 앞서 8월 26일과 30일 두차례에 걸쳐 800여명의 응원경찰대가 제주도에 도착해 '무력소탕전' 준비에 들어갔다. 이런 무력소탕전은 제주도 현지 당국에는 전혀 사전연락이 없이 취해진 조치였다.<sup>214)</sup> 미 보병 제6사단도 야전명령 제7호를 발표하고 산하 제1연대로 하여금 8월 26일부터 제주도에 1개 소총소대를 지휘, 작전, 보급 책임을 지고, 이 소대를 활용해 군정중대나 미군을 지원하도록 명령했다.<sup>215)</sup>

이와 함께 제주도 제9연대를 관할하고 있는 제5여단 참모장 오덕준 중령도 8월 30일 사태해결을 위해 제주도를 방문<sup>216)</sup>했으며, 31일에는 제7관구 경찰청 소속 경찰관들도 제주도로 파견됐다.<sup>217)</sup>

이에 대해 제주경찰감찰청장 김봉호는 응원경찰대의 증원은 단기간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던 소장 등이 미리 계획했다고 밝힘으로써<sup>218)</sup> 정부 수립 후에도 미군 수뇌부는 공

209) 웨슬로스키가 LST에 차량들을 싣고 제주도에 도착하자 제9연대장 송요찬 소령은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했다고 기억했다. 위의 서한.

210) Subj: Police Special Caution, Director of National Police to Chiefs, Police, Aug 7, 1948.

211) 제주-목포간 정기여객선편 여행증명제도는 7월 5일자로 폐지됐다가 다시 부활된 것이다. 『동광신문』 1948년 8월 25일.

212) 『조선중앙일보』 1948년 9월 1일.

213) 제주도 파견대장 콜린 중위는 정치상황이 폭발하지 않았으나 '30일경의 위기설'이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 위기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제20연대 제주도 파견대장 에드워드 콜린(Edward J. Collin) 중위가 제20연대장에게, 제주도 파견대 일지, 1948년 8월 23일, 제주 4·3위원회, 앞의 책 2, 84쪽.

214) 『조선중앙일보』 1948년 9월 1일, 『동광신문』 1948년 9월 2일.

215) 미보병 제6사단장 올랜도 워드(Orlando Ward) 소장의 야전명령 제7호, 1948년 8월 5일, 제주 4·3위원회, 앞의 책 8, 57-59쪽.

216) 『동아일보』 1948년 9월 7일.

217) 『서울신문』 1948년 9월 7일.

218) 『서울신문』 1948년 9월 3일.



산주의 세력의 척결을 명분으로 제주도 소요의 진압에 개입했음이 드러났다.

정부 수립 후인 1948년 8월 24일 이승만 대통령과 주한미군사령관 하지 중장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주한미군사령관간에 체결된 과도기에 시행될 군사안전에 관한 행정협정'(이하 한미군사행정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이 철수할 때까지 주한미군사령관이 지휘권을 갖도록 했다.<sup>219)</sup> 이 협정에 따라 8월 26일 주한미군사고문단이 설치됐고, 단장에 윌리엄 로버츠(William L. Roberts) 준장이 임명됐다. 주한미군이 철수할 때인 1949년 6월 30일까지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주한미군사고문단은 한국의 육군과 해안경비대, 국립경찰 등 보안군의 조직과 행정, 장비, 훈련을 책임지도록 되어 있다.<sup>220)</sup>

미군정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도 이전과 별다른 차이없이 기능했다. 외형적으로는 정부기능과 책임을 이양했으나 모든 공식 서류와 군통신은 지정된 적절한 군정부대로 넘어갔다.<sup>221)</sup> 정부 수립 이후에도 미군은 여전히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갖고 있으면서 제주도 사태를 속속들이 파악했고, 진압작전을 지휘했다.

---

219) 협정체결에 앞서 주한미군사령관 하지는 남한 정부 수립 다음날인 8월 16일부터 이승만과 과도군사협정에 관해 논의했다. The Political Advisor in Korea(Jacobs) to the Secretary of State, *FRUS*, VI, 1948, pp. 1282-1283; 이 협정의 제1조는 '주한미군사령관은 본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또한 자기의 직권 내에서, 현존하는 대한민국 국방군을 계속하여 조직, 훈련, 무장할 것을 동의한다. 단 동사령관의 이에 대한 책임은 군대의 한국 철폐와 동시에 종료한다고 돼 있다. 강성철, 『주한미군』(서울: 일송정, 1988), 164-166쪽.

220) 주한미군사고문단의 목적은 한국의 보안군이 다음과 같은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다. ①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 유지, ② 공격에 대비한 38선(남한과 북한 사이의 경계선)의 방어, ③ 남한내 파괴분자들의 진압과 섬멸, ④ 남한으로의 게릴라 침투의 저지와 게릴라전의 격퇴 및 진압, ⑤ 사람, 상품과 물건의 한국 밀수출입, 해적 저지에 대비한 한국 해안의 보호 등이다. 주한미군사고문단 요원들은 '고문관' 용어가 지적하듯 상세한 지시를 하지 않고, 한국의 보안군에게 단지 광범하고, 일반적인 지도만을 한다고 되어 있다. 다시 말해 지휘하지 않고 자문한다고 돼 있으나 이들의 영향력은 결정적이었다. *Advisor's Handbook*, United States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 Despatch No. 679, Subj: Transmitting Copies of K MAG Advisor's Handbook, American Embassy to the Foreign Service of the USA, Oct 28, 1949.

221) 딘 소장은 8월 15일 이후 지방 민정장관과 미고문관들의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서한을 통해 "주한미군사령부가 한국인들의 눈에는 민정단으로 남게 되지만 군정단은 민정단 산하 민정 파견대가 된다"고 규정했다. 그는 또 "이들 변화는 눈에 보이는 것에만 적용될 뿐이지 모든 서류와 엄밀한 군통신은 적절한 군정으로 넘어갈 것이며, 이는 여전히 정부를 위해 책임을 떠맡고 있는 한 나라의 군정부대들이 있다는 사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하고 "민정장관의 지식과 경험, 자문이 전에 없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W. F. Dean, Military Governor to Edgar A. Noel, Major, CO, 59th MG Company, 8 Aug 1948.

### 제3절 초토화작전과 재선거를 위한 정치작업: 1948.10-1949.5

제주4·3붕기 이후 제주도민들에 대한 학살사건은 1948년 10월 하순부터 1949년 1월에 집중됐다. 초토화작전<sup>222)</sup>은 정부 수립 후 미군철수가 시작되고 여순사건이 발생한 직후 시작됐다. 여순사건의 진압으로 수개월 동안 소요가 계속되고 있는 제주도의 소요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미군 수뇌부와 정부는 자연스럽게 제주도 무장대 세력의 제거에 관심을 쏟게 되었다. 이 국면에서는 첫째, 미군 철수와 여순사건이 제주도의 초토화작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미군은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살펴본다. 둘째, 5·10선거의 실패와 6·23재선거의 무기연기 뒤 1949년 5·10재선거를 강제적으로 성공시키는 과정에서의 미국의 역할을 살펴본다.

#### 1) 주한미군 철수와 여순사건, 초토화작전의 관계

1948년 9월 15일부터 시작된 주한미군의 철수와 뒤이은 여순사건의 여파는 제주도에서의 초토화작전으로 나타났다. 주한미군의 철수문제는 1947년 초부터 제기돼 장기주둔을 주장하는 국무성과 조기 철수를 주장하는 군부간에 논쟁이 계속돼다가 1948년 4월 8일 트루만 대통령이 NSC-8을 승인함에 따라 같은 해 12월 말까지 주한미군을 철수키로 잠정 결정하고, 9월 15일께 비밀리에 철수를 시작했다.<sup>223)</sup> 미국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앞두고 신생 대한민국 정부내의 암적 요소로 간주되는 ‘공산주의세력의 척결’을 시도해 남한 정부의 기둥을 튼튼히 하고 아시아에서 미국의 위신을 세워야 했다.

미국은 미군이 철수하면 동해안을 따라 게릴라 작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견하고, 이를 이끄는 그룹은 제주도에서 작전을 벌이고 있는 그룹일 것이라고 보았다.<sup>224)</sup> 이에 따라 주

222) 초토화작전은 일본군이 만주에서 의병운동을 진압할 때부터 사용한 것으로, 의병의 근거지가 되는 산간 소마을을 불태워 평지의 일본군 지배하에 있는 마을로 집단 이주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1930년대의 만주에 있어서의 집단마을과 베트남전쟁에서 미군이 취한 전략촌의 원형이 되는 전술이었다. 등원창 지음, 엄수현 역, 『일본군사사』(서울: 시사일본어사, 1994), 138쪽.

223) 주한미군의 철수작전명은 Finespun이다. 1948년 4월 육군성과 극동사령부는 제24군단 작전참모부가 작성한 Finespun계획을 승인했다. 철수 개시일은 애초 1948년 8월 15일로 계획했으나 육군성에서 승인받은 뒤 1948년 9월 15일로 연기된 것이다. 최초의 철수 부대는 제865 방공포병 자동화기 대대와 제35 병기 과견대로 일본으로 주둔지를 옮기기 위해 제24군단을 떠났다. 이 부대는 1948년 9월 14일 2대의 LST에 승선해 인천을 출항했다. 잔여 병력은 9월 16일 USAT 제너럴 콜린스(General Collins)호에 승선해 인천항을 출항해 요코하마로 갔다. Historical Outline of G-3, USAFIK, RG 338, NARA; 이어 1949년 3월 23일 주한미군철수를 1949년 6월말까지 연기한 대한정책 지침서인 NSC-8/2를 승인해 6월 30일 주한미군은 군사고문단만을 남긴 채 철수를 끝냈다. 제민일보사, 앞의 책 4, 363-364쪽.

한미군은 우선 철수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제주도 소요를 진압해야 했다. 4월부터 계속된 제주도 소요는 5·10선거와 6·23재선거를 파탄내면서 이미 주한미군의 위신에 큰 타격을 주었기 때문에 제주도 소요를 진압해야만 미국은 명예로운 철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신생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미소양군의 철수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군사, 경제원조에 대한 새로운 약속과 유엔으로부터 국가승인을 받아 국가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안정시키는 것이 시급한 시기였다.

국방경비대의 작전지휘권은 '한미군사행정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사령관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경비대의 모든 작전명령은 이를 발표하기에 앞서 해당 미고문관을 거치도록 돼 있었다. 통위부 고문관 로버츠 준장이 이를 국무총리 이범석에게 상기시킬 정도였다.<sup>225)</sup>

제주도 주둔 고문관들도 미군의 철수 때까지 제주도에 남아서 현지 작전에 대한 조언과 한국군에 대한 훈련을 실시했다.<sup>226)</sup> 딘 소장은 공산주의자들의 활동 억제와 척결에 관심을 갖고 있어 주한미군사령부 G-2가 경비대에 게릴라 상황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요청하기도 했다.<sup>227)</sup>

해안선 봉쇄와 응원경찰대의 파견, 제5여단 참모장의 제주도 방문 등 토벌작전의 준비 단계를 거쳐 10월 5일 제주 출신 제주경찰감찰청장 김봉호가 평남 출신 경무부公安과장 홍순봉으로 교체되었고, 11일 제주도경비사령부가 창설돼 강경 진압작전이 구체화됐다. 제주도경비사령부의 창설 등 강경 진압작전은 군사고문단의 정책적 결정을 바탕으로 이뤄졌다.<sup>228)</sup>

224) WEEKA No. 34, 21 Aug 1948.

225) “국방경비대의 작전통제권은 여전히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있으며, 경비대의 작전에 관한 모든 명령은 발표되기 전에 해당 미고문관을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통위부 고문관 로버츠 준장이 국무총리 이범석에게 보내는 서한, 1948년 9월 29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8, 90-91쪽.

226) 미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이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미군사고문단 주간활동, 1948년 9월 13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8, 71쪽.

227) 제24군단 G-2는 “경비대 참모부에 1948년 3월과 6월에 경기, 충남북, 경남지역의 게릴라 상황에 대한 G-2 평가서를 딘 장군에게 제출했으나, 그 이후 아무런 정보도 받지 못했다”면서 “딘 장군의 관심을 고려해 게릴라 상황과 경찰작전의 결과를 명확히 하는 종합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미제24군단 정보참모부가 국방경비대 참모부에게, 제목: 공산계릴라 상황, 1948년 9월 20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7, 247-248쪽.

228) 로버츠 준장은 제5여단 고문관 트레드웰(James H. W. Treadwell) 대위에게 보낸 서한에서 “제주도 부대들에 대한 검열결과 신발, 의복, 지도, 소총, 실탄, 식량 등 모든 주요 범주의 주요 장비들이 현저하게 부족했다”며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즉각 취하고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로버츠 준장이 트레드웰 대위에게 보낸 서한, 제목: 제5여단 소속 미군 고문관의 지위 및 능력, 1948년 10월 9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8, 91-92쪽; 이와 함께 제9연대도 무장대와의 교전에서 병사 1명이 죽고, 4명이 부상당했다며 무전기과 총기류, 탄약 등을 즉각 보내주도록 고문단장에게 요청했다. 이후 제주도경비사령부가 창설됐다. 제59군정중대 노엘

제9연대장 송요찬 소령은 10월 17일 포고문을 발표하고 10월 20일 이후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외의 내륙지역에 대해 통행금지를 선포했다.<sup>229)</sup> 5km 이내의 내륙지역은 '적성지역'으로 간주해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총살에 처하겠다고 하였다.<sup>230)</sup> 이는 제주도 군경의 체제정비를 끝낸 뒤 본격적으로 초토화작전에 나서는 신호였다. 그러나 제9연대 고문관 해롤드 피쉬그룬드(Harold S. Fischgrund)는 내륙지역을 적성지역으로 간주한 사실은 기억하지만 고문관과 협의를 거치지 않는다고 밝혔다.<sup>231)</sup>

소령이 고문단장에게 보낸 전문, 1948년 10월 6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9, 85쪽.

- 229) “본도의 치안을 파괴하고 양민의 안주를 위협하여 국권침범을 기도하는 일부 불순분자들에게 대하여 군은 정부의 최고 지령을 봉지(奉持)하여 차등(此等) 매국적 행동에 단호 철수를 가하여 본도의 평화를 유지하며…군은 한라산 일대에 잠복하여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하는 매국 극렬분자를 소탕하기 위하여 10월 20일 이후 군 행동 종료기간중 전도 해안선부터 5km 이외 지점 및 산악지대의 무허가 통행금지를 포고함. 만일 차(此) 포고에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그 이유 여하를 불구하고 폭도배로 인정하여 총살에 처할 것임” 『조선일보』 1948년 10월 20일.
- 230) 당시 제주도 주둔 미고문관 피쉬그룬드(Fischgrund) 증위는 포고문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으나, 송 연대장이 자신과 협의를 거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경비대의 작전 명령 발표에 앞서 고문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 지침에 어긋나는 것이다. 해롤드 피쉬그룬드 증언.
- 231) 해롤드 피쉬그룬드는 제9연대의 초토화작전이 벌어진 시기에 연대 고문관으로 근무했으며, 이듬해인 1949년 11월 22일에도 군사고문단 작전참모부 부고문관으로 제주도를 시찰했다. 그는 1948년 8월 15일 한국에 도착해 임시군사고문단에 배속됐으며, 9월 제9연대 부고문관으로 제주도에 배치됐다. 이후 제9연대 고문관인 버제스 대위가 제주도를 떠나자 제9연대 고문관을 맡았으며, 1948년 12월말에 제9연대와 함께 철수했다. 1950년 6월 귀국했으며, 베트남전에 참전한 뒤 1960년대 대령으로 전역했다. 정일권 전국무총리와는 평생 친하게 지냈다고 밝혔다.

다음은 피쉬그룬드가 밝힌 제주도 근무 상황과 브루스 커밍스의 의견에 대한 반론이다.

“내가 제주도에 근무하는 동안 국방장관 이범석이 제주도를 방문한 적이 있다. CIC는 내가 도착한 뒤 조금 있다가 떠났다. 2명이 있었다. 그들 가운데 한명은 Gochenhower이다. 로버츠 장군과는 대화를 나눈 적이 없기 때문에 제주도 사태에 대한 그의 입장을 모르지만 참모장 라이트(William H. S. Wright) 대령과 대화를 나눴다. 내가 제주도에 있는 동안 라이트가 내려온 적이 있다. 이들을 체류했는데 사냥하러 왔었다.

원용덕 장군도 방문한 적이 있다. 니콜스(Nichols)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는 CIA 요원이거나 공군 정보팀이었다고 들었다. 제주도에 부임하기전 제주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는 몰랐다. 아무도 나에게 제주도 사건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았다.

나는 제주의 가난한 농민들과 어민들이 각 마을의 경찰 사이에서 함정에 걸렸다는 것을 알았다.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다는 사실은 몰랐지만 느꼈다. 하지만 나는 경찰을 통제할 아무런 권한도 없었다. 송요찬 연대장이 내륙지역을 '적성지역'으로 간주한 사실은 알지만, 나와 논의하거나 협의를 거친적은 없었다. 제주도의 수석 고문관이지만 그들이 나를 무시하기도 했다. 나는 딱 한번 연대가 정찰대형으로 마을을 지나가는 것을 봤을 뿐 제주도민들이 죽은 것을 본 적이 없다.

전투활동과 관련해 연대장에게 노획된 무기수와 사망자수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나는 즉답을 받은 적이 없고, 나의 질문 이후 사망자수와 무기수간의 보다 가까운 수치를 받

제9연대장 송요찬 소령의 포고문 발표에 이어 초도화작전을 앞두고 경비대의 증강을 위해 제주도로 증파될 예정이던 제14연대 제1대대가 10월 19일 제주도 출병을 거부한 여순사건이 일어났다. 제14연대 병사들은 21일까지 여수와 순천을 비롯한 주변 지역까지 장악했으나 27일까지 진압군에 의해 진압됐다.<sup>232)</sup> 미군 고문관들은 작전계획 수립에 참여<sup>233)</sup>했을 뿐 아니라 직접 진압작전에도 개입했다.<sup>234)</sup> 여순사건은 군사고문단이 채택한 시스템에 대한 '시험무대'가 되었고, 전투에서도 한국군 파트너에게 적절히 충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무대'<sup>235)</sup>라고 할 정도로 남한의 소요 진압에 미국은 깊숙이 개입했다.

여순사건이 일어나자 주한미군사령부 작전참모부(G-3) 소속 고문관 웨스트(West)는 10

영한 보고서를 받았다. 이것이 송요찬과 부딪혔던 까다로운 점이였다.

나는 송요찬이 무장한 반군들을 추적하라고 지휘관들에게 명령했다고 믿고 있다. 브루스 커밍스는 자신의 논문에서 제주도의 문제에 대해 미국인들을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나는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다. 내가 알고 있는 견지에서, 이는 위협과 협박 전술을 통해 제주 도민들을 선동한 공산주의자들과 북한인들이었다.

예를 들어 훈련받은 공산주의자들의 작전을 제주도에 가져왔고, 유엔 감시하의 선거, 합법성을 저지하려 했고, 마을의 경찰을 공격했으며, 한라산 오름에 봉화불을 넣어 두려움에 떨게 했다. 이범석 총리가 직접 사태를 보기 위해 왔다. 나의 전임자와 신부들이 설명한 제주도내에 있는 가난한 주민들의 위험한 상황을 무시하지 않았다.

남한 정부는 제주도민들과 함께 외부세력이 이끄는 반란을 진압하려 노력했다. 이들 제주도민들은 대부분 중도에 사로잡혀 현대 정치철학(공산주의대 민주주의)를 모른다.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군에게 강력하게 민주주의 원칙과 법규를 따르도록 자문했다.” 피쉬 그라운드 증언과 2001년 10월 22일과 11월 20일 필자와 교환한 이메일.

232) 1948년 8월 모슬포에 주둔 대대 고문관으로 근무했던 마이너 켈소(Minor L. Kelso) 예비역 중령(당시 중위)은 직접 여순사건을 최초로 목격한 인물이다. 그는 “순천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지역에 지프를 몰고 가기 위해 도로에 죽어있는 민간인들을 끌어내기도 했다”며 “처형에는 여성과 어린이들도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비대가 시내를 장악한 뒤 공산주의 협력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체포했으며, 순천에 살았던 나의 통역사의 삼촌도 체포됐었으나 통역사가 나에게 그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말해, 내가 그를 구해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마도 많은 경비대원들이 민간인들을 죽였을 것”이라며 “여수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한 군인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3명의 비무장 민간인들을 죽이는 것을 보았고, 내가 처형을 막기도 전에 3명 모두를 사살했다”고 목격담을 밝혔다. 마이너 켈소(미국 네바다주 리노시 거주)가 2001년 9월 10일 필자에게 보내온 서한이다.

233) Despatch No. 81, Subj: Review of and observations on the Yosu Rebellion, John J. Muccio, American Mission in Korea to the Secretary of State, Nov 4, 1948.

234) 이에 대해 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은 육군성 기획작전국장 찰스 볼테(Charles L. Bolte) 소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송호성 준장은 전술을 모르며 여수에서 실패했다. 우리가 비록 그에게 모든 찬사를 보내지만 풀러(Fuller) 대령이 실제 중요한 일을 했다”고 언급했다. Roberts to Major Gen. Charles L. Bolte, Director of Plans and Operations, Department of the Army, 19 Aug, 1949.

235) 한국군 고문관 제임스 하우스만(James H. Hausman) 대위 보고서, 국방경비대 역사, 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이 육군성장관 케네스 로얄(Kenneth C. Royall)에게 보내는 보고서, 1949년 2월 7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8, 100-104쪽.

월 22일 제주도 주둔 제9연대 고문관 버제스(F. V. Burgess) 대위에게 “정찰을 시작하고 본토로부터의 반란군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찾아낼 것”을 지시<sup>236)</sup>하고, 정보주임에게 전화로 메시지를 남겨 “여순사건과 관련한 심사가 이뤄질 때까지 제주도 상륙을 감시하고 체포토록” 지시<sup>237)</sup>하는 등 작전지시를 내렸다.

주한미군사령관 콜터 소장은 맥아더 사령관에게 전문을 보내고 “한국정부는 육군과 해안경비대, 국립경찰의 파괴분자들을 뿌리뽑아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신병을 모집해 훈련하고 교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sup>238)</sup> 이후 여순사건의 여파는 숙군작업으로 이어졌다. 미군정 당국은 제주도 주둔 제9연대 병사의 집단 탈영과 박진경 연대장의 암살 직후 국방경비대에 대한 제한적인 숙군작업에 착수했었으나 여순사건 이후 대대적이고 본격적인 숙군작업이 시작되었다. 반년 정도에 걸쳐 진행된 숙군과정 전체를 통해 약 5천명 정도의 장교와 사병들이 숙청됐다. 그 가운데는 실제로 죄가 없는 사람들이 많았다.<sup>239)</sup>

또한 여순사건은 주한미군의 철수와 맞물리면서 미국으로서는 부담을 안게 됐다. 미국은 여순사건 진압과정에서 드러난 경비대의 문제점에 대해 예정된 12월의 주한미군 철수에 앞서 개선이 이뤄질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다시 말해 미군이 철수한 뒤 남한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한국군의 능력에 대해 우려했다.<sup>240)</sup>

이에 따라 여순사건이 진압되자 자연히 제주도 소요사태의 진압문제가 그 다음의 관심사로 부상하게 되었고<sup>241)</sup> 제주도 토벌작전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되었다. 제주도 문제 또한 정부의 정통성을 입증하기 위한 긴박한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송 연대장의 포고문 발표와 여순사건이 일어나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제주도의 무장대는 10월 24일 선전포고와 함께 호소문을 발표<sup>242)</sup>하고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송 연대장이 이끄는 제9연대의 초토화작전은 사실상 10월 하순에 시작됐다.

10월 28일에는 송 연대장이 제1대대 병사 17명을 ‘공산주의자 세포’ 혐의로 체포해 이 가운데 6명을 29일 처형<sup>243)</sup>한 데 이어 29일 북제주군 애월면 고성리 부근에서 제2차 작전을 벌여 135명을 사살했다.<sup>244)</sup> 11월 2일에는 연락기 L-5를 동원해 항공관찰을 실시한 결과 도로 장애물이 제주도 남쪽 도로에 설치됐고, 전신주들이 절단된 모습을 관찰했

236) Radio 32, Message, West, Advisor, G-3 to Capt. Burgess, Chejudo, 1250 22 Oct 1948.

237) Radio 36, Message to Chejudo, 1400 22 Oct 1948.

238) Despatch No. 81, Subj: Review of and Observations on the Yosu Rebellion, John J. Muccio, American Mission in Korea to the Secretary of State, Nov 4, 1948, p. 6.

239) 존 메릴, 앞의 책, 225-226쪽.

240) Despatch No. 81, 앞의 글.

241) 존 메릴, 앞의 책, 343쪽.

242) 김봉현·김민주(공편), 앞의 책, 166쪽.

243) 버제스 대위가 로버츠 준장에게, 제주도 상황요약, 1948년 10월 30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8, 95-96쪽.

244) 971th CIC to G-2, Corps, Flash No. 289, 022210 Nov 1948.

다.<sup>245)</sup> 수개월 동안 계속된 제주도의 소요가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여순사건의 경험으로 신경을 곤두세웠던 무초(Muccio)는 11월 3일 국무성에 보낸 전문을 통해 “제주도 공산주의자들을 섬멸하는데 있어 정부의 눈에 보이는 무능력에 대한 긴장감이 여전하다”고 경계했다.<sup>246)</sup> 이는 남한 정부로 하여금 제주도 사태의 진압을 위해 더욱 강력한 진압작전을 전개하도록 촉구하는 것이었다. 더구나 이해 12월에는 유엔의 남한 정부 승인 절차가 남아있었다.

로버츠 준장은 송요찬 연대장이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군경의 협력이 원활하고, CIA의 활동도 우수하다고 평가했다.<sup>247)</sup> 정부는 언론에 재갈을 물려 군경에 의한 학살을 보도하지 못하게 했다. 공보부는 언론사에 지침을 내려 반란군의 행위를 묵과하는 논평이나 반역행위에 대한 동정어린 표현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남한에서의 ‘반란군’에 대한 진압행위가 ‘잔학한 민족 학살’임을 의미하는 표현은 그것이 반란군과 국군이 같다는 생각을 심어주는 경향이 있게 돼 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sup>248)</sup>

정보 수집의 한계 등으로 상당부분 희생자 집계가 누락된 것으로 추정되는 G-2 보고서만 보더라도 11월 1일부터 21일까지의 제주도 상황은 <표 5-4>에서 보듯이 경비대원 5명과 경찰관 1명 사망을 제외할 때 희생자가 358명으로 하루 평균 17명이 사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차별적인 진압작전이 전개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다.<sup>249)</sup>

미군의 L-5는 중산간 지대로 피신한 제주도민들을 체포하거나 학살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 송 연대장은 미 제24군단 사령관에게 보낸 추천서를 통해 “10월 10일부터 임무를 수행한 경찰 조종사 프레드 에릭슨(Fred M. Ericson) 중위가 반란군의 집결지, 사령부, 정부군과 반군간의 전투상황을 제9연대에 넘겨줘 진압할 수 있게 했다”고 감사를 표시했다.<sup>250)</sup>

11월 12일 2개 중대를 제주도에 추가 파견할 계획이던 한국군은 제주도에 주둔중인 3개 대대를 주로 서북청년단으로 충원하는 새로운 계획을 추진했다.<sup>251)</sup>

245) 위의 글.

246) Despatch No. 180, Muccio to Secretary of State, Nov 3, 1949.

247) 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이 제24군단 사령관에게, 군사고문단 주간활동, 1948년 11월 8일, 11월 15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8, 72-73쪽.

248) 주한미군사령관이 육군성 정보국에, 국가보안법/국군조직법, 1948년 12월 5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7, 263쪽.

249) 그러나 경비대의 작전에는 자신들의 전과를 과장보고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5-4>에 나온 11월 11일의 신엄리 사건의 경우 무장대의 습격으로 주택 80채가 불에 탔으며, 무장대 80명을 사살했다고 보고됐으나 당시 현장을 목격한 김여만은 주택 4채가 방화되고 3명이 희생됐다고 증언했다. 제민일보사, 앞의 책 4, 299-301쪽.

250) 송요찬 연대장이 제24군단 사령관에게, 군사고문단장 경유, 제목: 프레드 에릭슨(Fred M. Ericson) 중위에 대한 추천, 1948년 12월 6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10, 206쪽.

이에 따라 서북청년회원 620여명이 수도경찰청의 감독 아래 12일 동안의 훈련을 받아 12월 13일 소요가 발생한 여수, 제주도, 강원도 등지에 배치됐다.<sup>252)</sup> 이어 12월 20일에는 서북청년회 지도부와 제2연대장간의 '은밀한 계획'속에 서북청년단원 200여명이 경비대에 입대해 제주도에 배속됐다.<sup>253)</sup>

〈표 5-4〉 제주도 소요현황(1948.11.1-11.20)

일자	주요 내용	출처
11.1	폭동 음모 관련 75명 체포	①
11.3	제주읍. 민간인 7명 숨진 채 발견. 공산주의자들로 판명	②
11.4	제주읍 경비대에 수감중인 14명이 탈출했다가 6명 검거	③
11.5	제주읍. 사살된 경비대원 2명 발견	③
	중문리. 폭도 50명, 경비대 1명, 경찰관 2명 사망, 경찰관 9명 부상, 건물 40채 방화	④
11.7	서귀포. 폭도, 지서 1곳과 건물 7채 방화	④
11.9	서청, 제주도청 총무국장 김두현 폭행치사	⑤
11.10	월랑봉. 경비대와 폭도 교전. 폭도 21명 사살, 노획품: 수류탄 12발	⑥
	토평리. 폭도 25명 사살	⑥
11.11	신엄리. 폭도들이 주택 80채 방화, 폭도 80명 사살	⑦
	조천리. 폭도, 주택 30채 방화, 경찰관 1명 피살	⑦
11.13	행원리. 경비대, 폭도 115명 사살	⑧
	화전동. 경비대, 폭도 37명 사살	⑧
	오등리. 경비대, 폭도 4명 사살(1명은 탈영병)	⑧
11.16	노형리. 주택 100채 방화	⑨
11.18	북촌리. 경비대원 2명 피살, 2명 부상	⑨
11.19	대정. 폭도 70여명이 지서 습격, 폭도 3명 사살, 주택 3채 소실	⑨
	산천단. 미항공정찰대, 주택 4채 화재와 경비대원 10명 목격	⑩
11.21	월평리. 경비대, 폭도 15명 사살	⑩

출처: ①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979, 3 Nov 1948 ② 위의 글, No. 981, 5 Nov 1948 ③ 위의 글, No.982, 6 Nov 1948 ④ 위의 글, No. 983, 8 Nov 1948 ⑤ 위의 글, No. 987, 13 Nov 1948 ⑥ 위의 글, No. 988, 15 Nov 1948 ⑦ 위의 글, No. 986, 12 Nov 1948 ⑧ 위의 글, No. 989, 16 Nov 1948 ⑨ 위의 글, No. 995, 23 Nov 1948 ⑩ 위의 글, No. 994, 22 Nov 1948.

251) 로버츠 준장이 주한미군사령관에게, 군사고문단 주간활동, 1948년 11월 15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8, 72-73쪽.

252)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11, 12 Dec 1948.

253) Hq. USAFIK, 위의 글, No. 1021, 24 Dec 1948.



〈표 5-5.1〉과 〈표 5-5.2〉는 초토화작전시기 제9연대의 활동상황을 11월 하반기와 12월로 나눠 표로 구성한 것이다.<sup>254)</sup>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 동안 제9연대의 일일 작전내용을 담은 〈표 5-5.1〉은 대대 별로 가공스러울 정도의 제주도민 학살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표 5-4〉와 마찬가지로 일부 과장됐거나 일부 누락된 보고가 있을지라도, 이 표상으로도 열흘 동안 615명을 학살한 것으로 나타나, 하루 평균 61.5명의 제주도민을 학살한 것으로 나와있다. 그러나 이 시기 제9연대가 노획한 총은 12정과 칼 11자루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무저항 상태의 제주도민에 대한 집단학살이 자행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5-5.2〉는 12월 1일부터 20일 사이 제9연대의 작전내용을 보여주는 것으로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 동안과 12월 19일의 무장대측 사상자가 빠진 것이다. 이 표에 드러난 것만으로도 군인 11명 사망과 8명 부상을 제외한 사살자수는 677명으로 하루 평균 48.3명이 학살됐고, 162명이 체포됐다. 이 표를 보면 제9연대 제3대대는 12월 13일 경찰과 민간인 등 3천여명을 동원해 남제주군 대정면에서 남원면 신례리에 이르기까지 지역을 한라산쪽을 향해 초토화작전을 벌여 105명의 무장대를 사살했다고 보고했다. 중산간 지역(내륙지역)의 모든 민간인은 적으로 간주한다는 송 연대장의 10월 17일자 포고는 이처럼 ‘충실히’ 이행됐다. 제9연대는 ‘적극적인 공격’으로 ‘만족할만한 성공’을 거뒀으며, 그 이면에는 ‘민간인 대량학살계획’(Program of mass slaughter among civilians)<sup>255)</sup>을 채택했던 것이다.

이범석 국무총리가 1948년 12월 7일 제1회 국회 제124차 본회의에서 밝힌 제주도 사건의 원인은 너무나 실정과 동떨어진 것이었다.<sup>256)</sup> 이 총리는 제주도 사건의 원인을 첫째, 본토와 격리돼 해방 직후 소위 인민공화국의 선전모략이 존속함, 둘째, 재일 제주 출신 노동자 10만여명이 좌익사상을 포기치 않고 고집함, 셋째, 행정관청에 대한 악감(惡感), 특히 배타심 왕성한 제주지역에 타도 출신 경찰관이 복무한다는 사실, 넷째, 남로당과 북로당의 모략과 준동이라고 주장했다.<sup>257)</sup> 그러나 주한미사절단은 “제주도의 치안유지 책임자들간의 통제와 조정기능 결핍으로 제주도민들의 불만이 나왔고 소요를 억제하는데 실패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경찰의 극단적 폭력행위는 더욱 적대적이고 공포심을 초래했다”고 밝혔다.<sup>258)</sup>

254) 〈표 5-8.1〉과 〈표 5-8.2〉도 피쉬그라운드 예비역 대령이 보관해오다가 오하이오주립대 알란 밀레트 교수에게 넘겨준 것으로 필자가 입수해 표로 재구성한 것이다.

255)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97, April 1 1949.

256) Despatch No. 14, Inclosure No. 1, Report on the Internal Insurrections after April, 1948, Made by Minister of Defense, Lee Bum Suk, Subj: Report of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Lee Bum Suk, on Internal Insurrections after April, 1948, Everett F. Drumright, Counselor of Mission to the Secretary of State, Jan 10, 1949.

257) 위의 글.

258) 위의 글.

〈표 5-5.1〉 초토화작전시기 제9연대 일일활동 내용(1948.11.21-11.30)

일자	부대	주요 활동
11.21	2대대	조천리 부근에서 66명 사살, 2명 체포, 노획품: 일제 99식 소총 1정, 99식 탄약 50발, 카빈 탄약 7발, 등사기 1대
	3대대	한 적군으로부터 대정 부근 적 보급창고 위치 정보 입수
11.22	3대대	보급창고 공격. 88명 사살, 4명 체포, 노획품: 일본도 3자루, 군복 45벌, 담요 19장, 대형천막 1개, 소형천막 1개, 등사기 1대, 수류탄 1개, 다이ना마이트 2개, 99식 탄약 250발
11.23	2대대	선흘 부근 동굴에서 적 보급창고 발견. 15명 사살, 1명 체포, 노획품: 일본도 1자루, 공산주의자 모자 3개, 담요 8장, 일부 비밀 명령서 등
11.24	2대대 F중대	노형리 부근에서 적과 교전. 79명 사살, 노획품: 일제 99식 소총 4정, 일제 38식 소총 2정
	2대대	교래리 부근. 5명 사살, 노획품: 일제 99식 탄약 2발, 카빈 탄약 5발
		조천리 부근. 3명 사살, 16명 체포, 노획품: 칼 1자루, 담요 8장, 쌀포대 2개, 일부 비밀명령서
	3대대	서귀포 부근. 6명 사살
11.25	2대대	성산포 부근. 70명 사살, 노획품: 일제 99식 소총 2정, 99식 탄약 37발, 다이 나마이트 12개, 외투 50벌
		함덕리 부근. 50명 사살, 11명 체포
11.26	2대대	보평리(함덕 동남쪽) 4명 사살
		교래리 부근. 59명 사살, 129명 체포, 노획품: 미제 45구경 권총 1정, 창 77개, 일제 철모 2개
11.27	2대대	선흘리 부근. 43명 사살, 51명 체포, 노획품: 일제 총검 3자루, 창 12개, 쌍안경 1개, 쌀포대 15개
		어승생악. 12명 사살, 노획품: 쌀포대 200개, 숯상자 20개
		함덕리 부근. 17명 사살, 110명 체포, 노획품: 수류탄 6개, 뇌관 9m
	3대대	도평리 부근. 3명 사살, 5명 체포, 노획품: 침낭 9개, 쌀포대 6개, 의류
11.28	2대대	수장악(함덕리 남쪽) 64명 사살, 노획품: 일제 99식 소총 2정, M1 탄약 180발, 일제 44식 탄약 25발, 일제 철모 8개, 미제 철모 1개, 쌀포대 80개, 천막 7개, 휘발유 2드럼, 일부 의약품
11.29	1대대	월평리 부근. 5명 사살, 노획품: 쌀포대 11개
	2대대	상명리 부근. 9명 사살, 3명 체포, 노획품: 창 8개, 쌀, 의약품, 기타 물품 트럭 1대분
11.30	1대대	월평리 부근. 6명 사살, 노획품: 칼 1자루, 천막 1개, 우의 1개
	2대대	선흘리 부근. 6명 사살, 노획품: 창 5개, 배낭 4개, 미제 군복1개, 등사기 1대, 시계 1개, 쌀포대 4개, 선전 유인물
	2대대 F중대	애월리 부근. 5명 사살, 4명 체포, 노획품 :칼 2자루, 창 4개, 총검 1자루, 담요 17장, 의복배낭 2개, 쌀포대 40개, 나무막사 1개, 천막 3개 등

<표 5-5.2> 초토화작전시기 제9연대 일일활동 내용(1948.12.1-12.20)

12.1		보고 없음
12.2	2대대	침악 부근. 아군 1명 사망, 1명 부상, 적 28명 사살, 노획품: M1 2정, 카빈 1정, 일제 99식 소총 4정, 일제 44식 소총 1정, 총검 2자루, M1 탄약 56발, 99식 탄약 18발, 38구경 탄약 30발, 카빈 탄약 11발, 수류탄 4개, M1 탄약 노리쇠 4개, 일제 철모 10개, 털모자 1개, 쌀포대 2개
12.3	1대대	보고없음
	2대대	교래리 부근. 15명 사살, 노획품: 담요 15장
	3대대	서귀포 부근. 48명 사살, 노획품: 쌀포대 5개, 고구마 포대 20개, 일제 철모 6개, 마차 1개
12.4	1대대	오등리 부근. 5명 사살, 노획품: 일제 셔츠 4벌, 코트 3벌, 배낭 3개, 신발 2켤레, 담요 9장, 총검 1자루, 털모자 1개, 우의 3벌
	2대대	보고없음
	3대대	모슬포 부근. 5명 사살, 1명 체포, 노획품: 쌍안경 1개, 천막 1개, 쌀포대 40개, 덮개 13장, 의복 배낭 6개, 타이어 2개
12.5	1대대	보고없음
	2대대	침악 부근. 18명 사살, 7명 체포, 노획품: 담요 4장, 선전 유인물
	3대대	모슬포 주변 산악지역. 37명 사살, 5명 체포, 노획품: 철모 1개, 일본도 1자루, 기름 1드립, 기타 물품 트럭 2대분
12.6	1대대	월평리 부근. 5명 사살, 1명 체포, 노획품 일제 총검 1자루, 천막 1개
	2대대	교래리 부근. 34명 사살, 8명 체포, 노획품: 담요 1장
	3대대	서귀포 북쪽 부근. 51명 사살, 33명 체포, 노획품: 덮개 9장, 창 1개, 일제 털목도리 23개
12.12	1대대	보고없음
	2대대	송당리 부근. 14명 사살, 8명 체포, 노획품: 쌍안경 1개
		침악 부근. 31명 사살, 8명 체포
12.13	1대대	보고없음
	2대대	보고없음
	3대대	창으로 무장한 민간인 3천명을 동원해 대정에서 신예리까지 한라산을 향해 공격. 민간인 100명당 군 1개 분대 활용. 105명 사살, 노획품: 일제 99식 소총 10정, 칼 1자루
12.14	1대대	금악 부근. 적군 10명과 교전. 8명 사살, 노획품: 일제 99식 소총 3정, 일제 38식 소총 1정, 1대대 장교 1명 부상
	2대대	도송리(좌표 미상). 6명 사살, 8명 체포
	3대대	한라산. 48명 사살, 노획품: 배낭, 담요 각1장, 쌀포대 13개, 감자포대 20개
12.15	9연대	대전 이동 준비 완료. 현재 전체 연대는 경찰, 민간인들과 작전중. 한라산을 완전 포위했으며, 오후 8시 종료 예정. 결과는 보고되지 않음
	1대대	금악. 10분간 교전. 아군 1명 사망, 4명 부상, 적 16명 사살
	2대대	월평리 부근. 13명 사살, 3명 체포, 노획품: 철모 3개, 담요 1장, 우의 2벌, 창 1개, 군복 1벌, 쌀포대 2개
12.16		좌익 250여명이 함덕리 주둔 부대에 귀순. 좌익 500여명이 증문으로 귀순
		제2여단 제1대대가 오후 4시55분 도착. 3대대와 현재 교대중

12.17	3대대	두모리 부근. 12명 사살, 노획품: 총검 1자루, 칼 6자루, 낫 2개, 담요 5장, 쌀, 의류
12.18	2대대	교래리 부근. 경찰, 민간인과 합동작전. 130명 사살, 50명 체포, 노획품: 일제 99식 소총 1정, 99식 탄약 2발, 창 32개, 칼 40자루, 담요 16장, 덮개 31장, 쌀포대 247개, 취사용 그릇 10개, 사발 100개, 좌익서적
	3대대	의귀리 부근. 노획품: 쌀포대 20개, 숯포대 40개
12.19	2대대	침악 부근. 36명 사살, 30명 체포, 노획품: 일본도 2자루, 담요 12장, 취사용 그릇 6개 등
	9 연 대 7 중 대, 2 연 대 2 중 대	신엄리 부근. 적과 소규모 교전. 제7중대: 9명 전사(7중대장 포함), 1명 부상, M1 소총 3정, 박격포 1문, 경기관총 1정, 카빈 1정, 탄약 370발 분실, 3톤짜리 트럭 피해, 제2중대: 1명 사망, 1명 부상, 적군 사상자 알려지지 않음. G-2 부 고문관 카바노(Cavanaugh) 증위가 상세한 내용 줄 수 있음
12.20	2대대	고악 부근. 12명 사살, 노획품: 우의 1벌

초토화작전으로 수많은 제주도민이 ‘폭도’, ‘공산주의자’라는 딱지가 붙은 채 대량 학살 되는 가운데 제주도 지구 CIC는 “폭도들의 활동이 감소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제9연대의 공세작전 때문”이라며 공식 보고된 사상자수는 3549명이지만 민을만한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5천여명이 넘을 것이 확실하다고 분석했다.<sup>259)</sup>

주한미사절단은 이런 희생자들에 대해 “이들이 모두 진짜 게릴라인지 의심스럽다”<sup>260)</sup>고 논평했으나 송 연대장이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보고함으로써 무장대의 제거를 위한 제주도민들에 대한 학살을 묵시적으로 방조했다.

하지 중장의 전 정치고문이자 이승만의 개인 고문격인 프레스턴 굿펠로우(Preston M. Goodfellow) 대령은 1948년 말 이승만에게 “한국문제와 관련하여 국무장관 딘 애치슨(Dean Acheson)과의 많은 대화를 통해 게릴라들이 속히 제거돼야 하며,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공산주의자들의 위협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켜보고 있다”면서 “나약한 정책은 워싱턴의 지지를 상실하고, 위협에 잘 대처하는 것만이 많은 지지를 얻을 것”이라고 밝혔다.<sup>261)</sup> 굿펠로우 대령의 이런 조언은 이승만에게 적극적으로 내부의 적을 소탕하도록 한 것이었다.

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은 12월 20일 제주도민 집단학살을 불러온 송요찬 연대장의

259) Despatch No. 11, Inclosure No. 1, Subj: Political Survey, 971 CIC Cheju, 21 Nov. 1948, Subj: Transmitting Report of Developments on Cheju Island, Drumright to the Secretary of State, Jan 7, 1949.

260) COMGEN USAFIK to CINCFE, Tokyo, Japan, 21 Nov. 1948.

261) Goodfellow Papers, Box 1, draft of letter to Rhee, no date but late 1948, Bruce Cumings, *The Question of American Responsibility for the Suppression of the Chejudo Uprising*, Presented at the 50th Anniversary Conference of the April 3, 1948 Chejudo Rebellion, Tokyo, March 14, 1998, p. 11에서 재인용.

초토화작전을 격찬하고 이런 사실을 언론과 대통령을 통해 널리 알려야 한다고 추천<sup>262)</sup> 하자 다음날 곧바로 총참모장 채병덕 준장이 화답했다.<sup>263)</sup>

이와 같은 미군 수뇌부의 제주도 사태에 대한 인식은 경비대에 의한 집단학살을 합리화시켰을 뿐 아니라 더욱 조장하였다. 미국은 제주도에서 가공할만한 잔혹행위가 있었지만 이승만 정권의 토벌작전을 찬양한 것이다.<sup>264)</sup>

그러나 로버츠 준장은 1949년 2월 7일 육군성 장관 로얄에게 보내는 보고서에서 “제9연대의 기습공격은 산간마을의 주민들을 해안지역으로 소개시킴으로써 비효율적이었다”며 “수많은 무고한 민간인들이 죽어갔고, 그들의 대부분은 게릴라의 공격으로 피살됐으며, 일부는 확실히 한국군에 의해 피살됐다”고 밝히고 있다.<sup>265)</sup> 송 연대장을 격찬해 대통령에게 성명을 발표하도록 했던 로버츠 준장이 이번에는 어느 정도의 과실도 있다고 지적하는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로버츠 준장의 이중적 태도는 공산주의 세력의 척결을 통해 남한을 아시아의 반공보루로 삼으려는 미국의 정책을 완수하기 위해 한국군과 한국정부에 토벌을 독려하는 한편 무고한 민간인들이 죽어갔다고 할 경우 본국으로부터의 질책을 우려해 사전에 한국군의 작전 오류를 보고함으로써 군사고문단장으로서의 책임에서 벗어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 총회는 12월 12일 48대 6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하는 한편 미소 양군 철수 및 통일 달성 임무를 위해 향후 1년 동안 유엔한국위원단을 설치하기로 의결했다.<sup>266)</sup> 제주도의 5·10선거 실패로 남한 정부의 정통성을 우려했던 미군과 이승만 정부는 제주도 공산주의 세력의 제거에 아무런 구애를 받지 않게 되었다.

제주지역에서 초토화작전을 수행한 제9연대는 12월 18일부터 대전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으며, 제2연대 선발대가 12월 17일 제주도에 도착하는 등 12월 31일까지 이동을 끝냈다.<sup>267)</sup> 경비대는 제14연대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제2연대의 이동에 앞서 숙군 조치 등 예방조치를 취했다.<sup>268)</sup>

---

262) 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이 국무총리 이범석에게 보내는 서한. 이 서한은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국방부 총참모장, 참모총장, 한국군 미고문관이 참조하도록 했다. 1948년 12월 18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8, 97-99쪽.

263) 국방부 총참보장 채병덕 준장이 로버츠 준장에게, 서한, 1948년 12월 21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10, 206-207쪽.

264) Bruce Cumings, 앞의 글.

265) 로버츠 준장이 육군성장관 케네스 로얄에게, 보고서, 1949년 2월 7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8, 99-108쪽.

266) 『서울신문』 1948년 12월 14일.

267) Hq. USAFIK, G-3 Operations Report, 28 Dec 1948,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17, 20 Dec 1948; 『동광신문』 1949년 1월 7일.

268) WEEKKA No. 51, 20 Dec 1948.

주한미군사령부 G-2는 1948년 한해동안 1만4천-1만5천여명의 제주도민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이들 가운데 최소한 80%가 보안군에 의해 희생됐으며, 주택의 3분의 1이 파괴됐고, 전체 도민의 4분의 1이 마을이 소개돼 해안마을로 이주했다고 보고했다.<sup>269)</sup>

## 2) 상처뿐인 재선거

제9연대와 제2연대의 교체시기인 12월 19일 무장대는 신엄리 습격을 시작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sup>270)</sup> 제2연대도 제9연대의 초토화작전을 인계받아 12월 21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 동안 503명을 사살하고, 176명을 체포했다.<sup>271)</sup> 1949년 1월 1일에는 무장대 600여명이 제2연대를 급습했으나 무장대 30여명이 사살되고, 10명이 포로로 잡혔다.<sup>272)</sup> 이어 제주도청이 소실<sup>273)</sup> 되는 등 무장대의 공세가 계속되자 제2연대는 12월 31일 끝난 제주도의 계엄령을 지속시켜 줄 것을 사령부에 건의했다.<sup>274)</sup> 제2연대는 1월 4일 육해공군 합동작전으로 대응했다. 해군함정은 37mm포로 사격을 가했고, 공군은 L-4, L-5기로 수류탄과 폭탄을 투하했다.<sup>275)</sup> L-5를 이용한 이런 작전은 2월에도 계속됐다. 군사고문단 보급고문관 우스터스(P. C. Woosters) 중령도 로버츠 준장에게 2월 제2연대에 대한 시찰보고를 하면서 “연락기가 전단살포와 함께 수류탄과 박격포탄을 무차별 떨어뜨리고 있다”고 밝혔다.<sup>276)</sup> 육해공군의 합동작전결과 “해안에서 한라산으로 이르는 4km 이내의 부락은 대부분 군경의 토벌작전<sup>277)</sup>으로 초토화되어 주민들은 토벌을 피해” 입산해 버렸고 토벌대는 재판없이 주민들을 처형함으로써 제주도민들을 자극했다.<sup>278)</sup>

정부는 1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모슬포와 성산포에 각각 경찰서를 증설키로 하는 대통령령을 통과시켰다.<sup>279)</sup> 다음날인 1월 12일 제주도 소요를 시찰한 내무장관 신성모<sup>280)</sup>

269)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97, 1 April 1949.

270) Hq. USAFIK, 위의 글, No.1018, 21 Dec 1948.

271) 로버츠 준장이 주한미군사령관에게, 군사고문단 주간활동, 1949년 1월 4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8, 76쪽; 주한미군사령부 G-2는 이 기간 463명이 사살됐다고 보고했다. Hq. USAFIK, 위의 글, No. 1026, 31 Dec 1948.

272) 로버츠 준장이 주한미군사령관에게, 군사고문단 주간활동, 1949년 1월 4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8, 76쪽.

273) 제주도청은 1월 3일 오후 8시경 불에 뒀다. 『조선중앙일보』 1949년 1월 6일.

274) 극동군사령부 군사정보국 정보요약 제2321호, 1949년 1월 6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10, 93-94쪽.

27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445쪽.

276) 군사고문단 보급고문관 우스터스 중령이 군사고문단장에게, 보급고문관의 제주도 제2연대 시찰보고, 1949년 2월 10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8, 109-110쪽.

27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445쪽.

278) 우스터스 중령, 앞의 글.

279) 제6회 국무회의록, 1949년 1월 11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4, 15쪽.

는 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제주도 무장폭도는 150-400여명이고, 비무장 폭도는 500명 가량으로 군의 1개 연대 또는 경찰 1천여명이 증원되면 2개월 이내에 소탕될 것”이라고 보고했다.<sup>281)</sup> 대통령 이승만은 1월 21일 국무회의 자리에서 “미국이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동정을 표시하지만 제주도, 전남사건의 여파를 완전히 발본색원하여야 그들의 원조는 적극화할 것이며, 지방 토색 반도 및 절도 등 악당을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하여 법의 존엄을 표시할 것이 요청된다”고 지시했다.<sup>282)</sup> 미국의 원조를 얻기 위해서는 제주도와 전남사건의 여파를 ‘가혹한 방법’으로 뿌리뽑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어 한국군 총참모장 채병덕 준장은 유엔한국위원단 1진의 1월 30일 입국을 앞두고 유엔한국위원단의 활동과 국민정서를 안정시키기 위해 폭도와 반란군을 완전히 소탕하도록 육군과 해군에 명령했다.<sup>283)</sup>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해야만 미국의 원조를 얻는데 도움을 받을 것으로 확신한 이승만은 1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주도사태는 미 해군이 기항하여 호결과를 냈다하며 군 1개 대대, 경찰 1천명을 증파하게 되었으니 조속히 완정(完征)하여 줄 것”을 지시했다.<sup>284)</sup>

이에 따라 1월 31일 제6여단 유격대대가 제2연대와 함께 작전에 참여하기 위해 제주도로 이동<sup>285)</sup>했고, 국군 참모장은 제주도와 지리산의 소요로 유엔의 불신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시<sup>286)</sup>함으로써 무차별적인 소탕작전을 벌였다. L-5기 2대도 제2연대와 함께 작전에 활용하기 위해 제주도에 배치됐다. 제2차 재선거의 성공적인 실시를 위해 이승만 정부는 미군의 협조를 얻어 걸림돌 제거에 총력을 기울여 나갔다.

이승만은 2월 2일 굿펠로우 대령의 1948년 말 남한내 게릴라 제거에 대한 서한과 관련해 답신을 보내 “제주도에 대규모 경찰과 군 응원대를 파견해 공산 테러리스트들을 조만간 체포할 것”<sup>287)</sup>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사령부 G-2와 G-3의 보고서를 토대로 한 1949년 1월 5일부터 5·10 재선거가 끝난 5월 13일까지 ‘무장대’나 ‘폭도’로 분류된 사살자만 1262명이고, 포로로 붙잡힌 제주도민도 2523명에 이른다.<sup>288)</sup> 1월 16일에는 이른바 ‘북촌리 학살사건’<sup>289)</sup>이 일어났고, 2월

280) 『동아일보』 1949년 1월 16일.

281) 제10회 국무회의록, 1949년 1월 17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4, 16쪽.

282) 제12회 국무회의록, 1949년 1월 12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4, 17쪽.

283) 국방부 총참모장 채병덕 준장이 군사고문단장에게, 서한, 1949년 1월 26일.

284) 경찰의 제주도 파견은 1천명 가운데 500명이 파견됐다. 제36회 국무회의록, 1949년 3월 30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4, 26쪽.

285) Hq. USAFIK, G-3 Operations Report No. 5, 5 Feb 1949.

286) 로버츠 준장이 주한미군사령관에게, 군사고문단 주간활동, 1949년 1월 31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8, 77-78쪽.

287) Letr. Syngman Rhee, President to Col. Goodfellow, Feb 2, 1949.

288) 로버츠 단장이 육군성장관 로얄에게, 보고서, 1949년 2월 7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8, 105

20일에는 제주읍 도두리에서 민보단에 의해 '반도'라고 규정된 76명이 집단 학살되었다.<sup>290)</sup> 현장을 목격한 군사고문단은 이를 제지하거나 중단시킬 수 있었는데도 '민보단에 의해 자행된 대량학살에 대한 최초의 보고서'라는 논평만 했다.<sup>291)</sup>

미군은 "폭도라 하더라도 그들에 대한 반인륜적 잔인성과 적법절차의 부정은 한국 고위관리들의 우려를 강력히 불러일으켰으며, 그러한 폭력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의 개념과 모순된다"고 지적<sup>292)</sup>했으나 어떠한 제재조치가 취해졌다는 기록은 없다. 정부는 소탕작전을 위해 1949년 3월 2일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했다.<sup>293)</sup> 유엔한국위원단이 한국에 들어온 가운데 5월 10일 재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기 위해서는 제주도 소요의 진압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었다.

이승만은 3월 8일 국무회의에서 국방장관과 내무장관에게 제주도와 전남 등지를 철저히 소탕하라고 지시했다.<sup>294)</sup> 주한미사절단 에버렛 드럼라이트(Everett F. Drumright)는 3월 10일 로버츠 준장에게 제주도 상황과 관련해 서한을 보내 "제주도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으며,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밝혔다.<sup>295)</sup>

이에 다음날 로버츠 준장은 드럼라이트에게 회신을 보내 "한국의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제주도의 게릴라와 군사작전 등에 대해 강력한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sup>296)</sup>

이는 제주도 사태의 진압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문관에게 매우 험

-108쪽, Hq. USAFIK, G-3 Operations Report No. 7, 19 Feb 1949,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77, 3 March 1949, Hq. USAFIK, G-3 Operations Report No. 8, 26 Feb 1949, 위의 글, No. 9, 5 Mar 1949, 위의 글, No. 10, 12 Mar 1949, 위의 글, No. 11, 19 Mar 1949, 위의 글, No. 13, 2 April 1949, 위의 글, No. 14, 8 April 1949, 위의 글, No. 15, 15 April 1949, 위의 글, No. 16, 22 April 1949, 위의 글, No. 17, 29 April 1949, 위의 글, No. 18, 6 May 1949, 위의 글, No. 19, 13 May 1949.

289) 북촌리 학살사건은 1949년 1월 17일 제2연대의 일부 병력이 무장대의 기습으로 2명의 군인이 사망한 것을 계기로 군인들이 북촌리 마을을 덮쳐 이날 하루동안 300여명의 주민을 학살하고, 300여채의 주택을 방화한 사건이다. 당시 대대장 차량 운전원으로 차출돼 현장에서 참모회의를 목격한 김병석은 "한 장교가 '군인들 대반이 적을 사살한 경험이 없는 군인들이니 각 분대별로 주민들을 끌고가 처형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뒤 집단학살이 시작됐다"고 증언했다. 『제민일보』 1991년 2월 4일, 2002년 6월 1일.

290) 죽창으로 자행된 도두리 집단학살사건의 학살자 가운데는 여성과 중학생으로 보이는 소년들도 포함돼 있었다.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77, 3 March 1949.

291) 위의 글.

292) 극동군사령부 정보요약 제2375호, 1949년 3월 11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10, 102-103쪽.

29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446쪽.

294) 제26회 국무회의록, 1949년 3월 8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4, 23쪽.

295) 드럼라이트가 로버츠 장군에게, 제목: 제주도 상황, 1949년 3월 10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64쪽.

296) 주한미군사령관 로버츠 준장이 드럼라이트에게, 제목: 제주도 상황, 1949년 3월 11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11, 64-66쪽.



조적인<sup>297)</sup> 사령관 유재흥 대령은 월터 하버러(Walter J. Haberer) 중령의 자문을 받아들이면서 작전을 수행했다.<sup>298)</sup> 이는 미고문관의 지도를 받고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가 소탕작전에 임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내의 한 신문은 3월 초 제주도의 피해를 소실가옥 2만280동, 사망자 2만여명으로 보도했다.<sup>299)</sup> 드럼라이트는 제주도 상황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악화됐다”고 지적했다.<sup>300)</sup>

4월 1일 현재 군경 토벌대의 숫자는 국군 2622명, 경찰 1700명, 민보단 5만여명이 활동했다.<sup>301)</sup> 인구 30만여명의 땅에 6분의 1이 넘는 숫자가 직접적으로 토벌활동에 참여한 것이다.

이승만이 제주도 소탕작전을 강화한 가운데 무초는 4월 4일 이승만을 만나 “한국은 제주도와 전라남도에 만연하는 게릴라 도당을 제거하고 보안군을 훈련시킴으로써 남한에서의 입장을 굳건히 해야 한다”고 격려하며 제주도 진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sup>302)</sup>

미국은 남한 공산주의 세력을 제거함으로써 남한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 6월 30일로 예정된 주한미군의 철수가 끝난 뒤에도 남한에 공산주의 방벽을 세우겠다는 계획이었다. 4월 7일에는 사회장관 이윤영과 국방장관 신성모가 이승만의 특명으로 제주도를 방문했다.<sup>303)</sup> 이들의 잇단 방문은 5·10선거를 목전에 둔 이승만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기에 앞서 제주도의 민심을 수습하고 ‘잔존 폭도를 섬멸’하기 위해 소요를 진압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승만의 방문을 앞두고 소탕작전은 막바지 절정에 이르렀다. 주한미대사관은 “3월에 시작된 전면적인 소탕작전은 4월말 사실상 막을 내렸고 대부분의 반란군과 동조자들이 죽거나 체포됐고 사상을 전향했다”고 국무성에 보고했다.<sup>304)</sup> 이어 4월 9일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제주도를 방문한 이승만은 ‘게릴

297)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97, 1 April 1949.

298) 앞의 글.

299) 『연합신문』이 발표한 제주도의 피해현황은 다음과 같다. 제주읍(20개리) 소실가옥 3960동, 사망자 약 4500명, 애월면(13개리) 소실가옥 4560동, 사망자 약 5000명, 한림면(13개리) 소실가옥 4400동, 사망자 약 3000명, 조천면(10개리) 소실가옥 710동, 사망자 약 2000명, 구좌면(9개리) 소실가옥 1340동, 사망자 약 500명, 표선면(4개리) 소실가옥 200동, 사망자 약 300명, 남원면(5개리) 소실가옥 900동, 사망자 약 600명, 서귀면(4개리) 소실가옥 800동, 사망자 약 1000명, 중문면(5개리) 소실가옥 1200동, 사망자 약 1500명, 안덕면(5개리) 소실가옥 1010동, 사망자 약 400명, 대정면(5개리) 소실가옥 1100동, 사망자 약 200명 등으로 총계 1읍 11면(96개리) 소실가옥 2만280동, 사망자 약 2만여명이라 하며 96개리중 전소당한 리만 73개리나 한다. 『연합신문』 1949년 3월 4일.

300) Despatch No. 142, Subj: Political Summary for Feb. 1949, Everett F. Drumright, Counselor of Mission to the Secretary of State, March 14, 1949.

301)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97, 1 April 1949.

302) Despatch No. 200, Inclosure No. 1, Conversation Memorandum, April 4, 1949, Subj: Transmitting a Memorandum of Conversation on Military Aid to Korea and Withdrawl of United States Troops, American Mission in Korea to the State Department, April 5, 1949.

303) 『국도신문』 1949년 4월 8일, 『자유신문』 1949년 4월 10일.

라에 대한 정열적이고 성공적인 진압'을 한 유재홍 대령과 경찰, 민간기관을 격려했다.<sup>305)</sup>

무초는 같은날 국무장관에게 “제주도가 남한에 혼란을 퍼뜨리고 테러를 가하기 위한 소련의 주요한 노력의 장소로 선택됐다는 것은 통제를 받은 라디오 방송으로부터 뿔어져 나오는 선전의 본질로부터 분명해진다. 이것은 본토의 전남과 경남에서 지속적이고도 유사한 작전으로 지속됐다. 대한민국 후방지역의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소요와 불안정을 제거하기 위한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 소련 요원들이 큰 난관없이 제주도에 침투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보고했다.<sup>306)</sup>

소련이 남한 테러의 전초기지로서 제주도를 채택했고, 소련 요원들이 어려움없이 제주도에 침투하고 있다는 무초의 발언은 아시아에서 반공 보루를 세우려는 미국의 정책과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민간인들이 희생되더라도 토벌하지 않으면 안될 대상으로 인식한 것이다.

제주도 현지 미고문관들조차도 외부세력의 침입 증거를 본 적이 없다<sup>307)</sup>고 밝히는 상황에서 당시 한국에 체류한 특사 무초의 이런 발언은 이승만에게 더욱 제주도를 토벌해야 하는 당위성을 부여했을 뿐 아니라 제주도를 공산주의 방벽을 구축하기 위한 일종의 시험무대로 삼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미고문관들도 “조만간 조직적인 게릴라 전쟁이 종식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sup>308)</sup>하는 가운데 이승만은 무초에게 제주도 방문 결과와 관련하여 군의 작전으로 공산주의자들이 완전히 섬멸되었음을 확신시켜 주었다.<sup>309)</sup>

그러나 이승만과 무초의 대화 어디에도 제주도민 학살에 대한 가책은 나타나지 않았고, 이들의 주요 관심사는 공산주의자 척결에만 집중돼 있었다.

4월 16일에는 국방장관 신성모와 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이 회의를 갖고 일부 한국군 병력의 제주도 철수에 합의했다.<sup>310)</sup> 또 서청과 제주도민 사이의 적대감으로 전·현 서

304) Airgram-60, Everett F. Drumright, American Embassy to the Secretary of State, May 2, 1949.

305) Despatch No. 211, Inclosure No. 1, Memorandum of Conversation, Subj: President Rhee's visit to Cheju and military aid for Korea, Participants: President Rhee, Mr. Muccio, April 11, 1949, 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 9 April, 1949.

306) 특사 무초가 국무장관에게, 1949년 4월 9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11, 79쪽.

307) 1948년 하반기 제주도에 주둔했던 찰스 웨슬로스키 중위와 해롤드 피쉬그룬드는 북한이 개입했다는 증거를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초토화작전 시기 제9연대 고문관이었던 피쉬그룬드는 제주 출신인 김달삼을 소련계 한인으로 알고 있었다. Letr, Fischgrunt to Dr. Allan R. Millett, 2 June 1997.

308) 군사고문단장이 주한미군사령관에게, 군사고문단 주간활동, 1949년 4월 12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8, 83-84쪽.

309) Memorandum of Conversation, Subj: President Rhee's Chejudo Visit and Military Aid, Participants: President Rhee, Muccio, 11 April 1949.

310) 군사고문단장이 주한미군사령관에게, 군사고문단 주간활동, 1949년 4월 19일, 제주4·3위원회,

청회원들도 철수시키는 방안이 계획됐는데, 이 방안에는 군·경에 배치된 서청회원들도 포함하고 있다. 본토로 복귀하게 되는 대대는 제2연대의 서북대대이며, 서청 출신 경찰도 본토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로버츠 장군은 주장했다.<sup>311)</sup> 군사고문단은 여전히 권한을 갖고 있었고, 한국군의 철수에도 고문단의 의도가 작용했다. 남한 단정 단선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군과 이승만 정부는 재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더욱 치열한 소탕작전을 벌였다. 주한미군사령부 G-2는 한국측 정부자료를 인용해 1949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반도' 사살 1075명, 체포 3509명, 투항 2063명, 보안군 사망 32명, 부상 17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다고 보고했다.<sup>312)</sup>

그러나 이 보고서는 이처럼 '반도'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이유에 대해 보안군이 제주도 중산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모두를 통상적으로 반도로 분류해 놓았기 때문이라고 논평했다. 양민 학살이 자행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공산주의 세력의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한 미국과 이승만 정권은 이를 문제삼지 않았던 것이다. 5·10재선거를 6일 앞둔 5월 4일에는 주한미대사관 참사관 드럼라이트와 대사관 해군 무관 폴 가블러(Paul Garbler) 중위가 사흘 일정으로 제주도 소요 상황을 직접 보고 제주도의 장래 이용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제주도를 방문해 고문단, 제주도 주둔 한국군 지휘관, 제주도민들과 대화를 나눴다.<sup>313)</sup> 5·10선거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국회 의석수 200석을 모두 채우고, 남한 내부의 소요를 종식시킴으로써 체제의 안정을 대내외에 선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승만 정부 뿐 아니라 미국으로서도 중요한 것이었다.

4월 9일 후보자 등록 및 유권자 등록을 마감한 제주도 북제주군 5·10재선거에는 갑선거구가 전체 유권자 3만8230명 가운데 3만6387명이 등록해 95%의 등록률을, 을 선거구는 유권자 2만6649명 가운데 2만5847명이 등록해 96.5%의 등록률<sup>314)</sup>을 보였다. 5월 10일의 선거결과 갑구는 독축 소속의 홍순녕, 을구는 대한청년단 소속의 양병직이 당선됐다.<sup>315)</sup>

제주도 5·10재선거의 성공적 실시로 제주도지구 전투사령부의 임무도 끝나 5월 13일 목포에 상륙했다.<sup>316)</sup> 해상작전을 벌인 해군 제3특무정대(사령관 남상휘)도 5월 10일 목포

---

앞의 책 8, 84쪽.

311) 로버츠 장군이 신성모 장관에게, 4월 16일 회담 의사록, 1949년 4월 16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8, 112쪽.

312)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113, 9 May 1949.

313) 드럼라이트, 제목: 제주도 방문, 1949년 5월 18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11, 111쪽.

314) 『경향신문』 1949년 4월 28일.

315) 북제주군 갑구 개표 결과: 홍순녕 9664표, 함상훈 8700표, 김인선 7840표, 김시학 3752표, 양귀진 2208표, 문대유 2048표, 『동광신문』 1949년 5월 14일; 북제주군 을구 개표 결과: 양병직 5766표, 양제박 4764표 『국도신문』 1949년 5월 14일; Despatch No. 346, Subj: Political Summary for May, 1949, American Embassy to the Secretary of State, June 13, 1949.

316) 『동광신문』 1949년 5월 15일.

향으로 귀환했다.<sup>317)</sup>

미국과 이승만 정부는 제주도 5·10재선거의 성공적인 실시를 통해 남한 정부의 안정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남한내 공산주의세력의 제거를 통한 아시아의 반공 보루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하려고 시도했다. 아시아에서 공산주의에 대항한 저항의 횃불로 상징되기를 기대한 미국이 제주도의 재선거를 바라보는 시각이었다.

5·10 단선이 실시된지 만 1년만에 완전한 대한민국 국회가 구성될 수 있었으나 그 이면에는 공산주의자로 몰린 수많은 제주도민들의 학살이 수반되었다.

#### 제4절 마지막 토벌과 미국의 인식: 1949.5-1954.9

5·10단선을 반대로 내건 4·3봉기, 더 나아가 1947년 3·1절 시위에서부터 시작된 제주도 소요는 1949년 5·10재선거로 정점을 맞았다. 5월 5일 제주도지구 전투사령부의 해체<sup>318)</sup>와 군경철수는 토벌이 종식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5월 8일부터 13일까지 제주도 재선거를 시찰한 유엔한국위원단은 1948년 5·10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감시활동을 벌였다.<sup>319)</sup> 이들의 제주도에 대한 시찰활동은 내무장관과 제주도에 최소한의 경찰호송만 하고 공식영접행사를 생략토록 요청했으나 관리들의 열성과 환대를 받았기<sup>320)</sup> 때문인지 포로수용소에 구금된 무장대원을 면담했으면서도 진지한 대화를 하지 않았다.<sup>321)</sup> 또한 철저한 보안대책 때문에 유엔한국위원단 시찰단은 완전한 행동의 자유와 융통성 있는 활동을 하기가 어려웠다.<sup>322)</sup> 드림라이트도 국무성에 유엔한국위원단의 단기간 시찰로는 제주도 사태를 설명하기에 역부족이라고 보고했다.<sup>323)</sup>

유엔한국대표 조병옥은 5월 16일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은 극동의 민주주의 보루로서 투쟁하고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제주도 사건을 예로 들면서 공산주의 세력에 대항하는 미국의 원조를 요청했다.<sup>324)</sup>

317) 『동광신문』 1949년 5월 17일.

31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448쪽.

319)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Korea, Press Release No. 16, 17 May 1949.

320) 위의 글.

321) 한 무장대원은 6월 19일 내신기자들과의 면담에서 “유엔위원단과 얘기도 해보았으나 아무 흥미가 없었다. 도대체 유엔은 본래의 사명과 너무나 동떨어진 방향으로 걸어나가는 것 같다”며 유엔한국위원단 시찰단의 시찰에 불만을 드러냈다. 『경향신문』 1949년 6월 25일.

322) Despatch No. 358, Inclosure No. 1, U.N. Document, A/AC.26/SC.2/15, (Extract) UNCOK, Sub-Committee II, Subj: Report on Trips to the Provinces Affected by Recent Disturbances, 9 June 1949, Subj: Transmitting Excerpt from UNCOK Report on Visit to Cheju Island, 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 June 17, 1949.

323) 위의 글.

무초는 5월 26일 국방장관과 교통장관에게 한국군이 제주도와 지리산 작전에서 거둔 '성과'를 언급하며 한국 진압군은 그러한 행위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추켜세웠다.<sup>325)</sup>

재선거가 성공했으나 제주도의 무장대 세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이승만은 5월 22일 맥아더 사령관에게 서한을 보내 "제주도 등지를 소탕하기 위해 무기가 필요하다"며 미국의 무기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sup>326)</sup>

이와 함께 제주도에 주둔중인 토벌대의 행패도 심해 김용하 제주도지사는 6월 16일 미 대사관 관계자들을 만나 제주도에 주둔중인 제2연대가 도민들을 매우 고압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서북청년회가 독단적이고 잔인한 태도로 도민들을 대하고, 경찰국장마저 이 단체 출신이라는 점이 더욱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sup>327)</sup>

공산주의 세력의 섬멸을 명분으로 한 학살은 5·10재선거 뒤에도 계속됐다. 체포되거나 귀순한 제주도민들은 재판과정에서 형식적이거나 혹은 재판절차도 없이 가혹한 선고를 받았으며, 술한 고문을 견뎌내야 했다.<sup>328)</sup> 6월 3일부터 7월 12일까지 민간인 1652명과 군인 47명을 기소해 345명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238명에게는 무기징역, 311명에게는 15년형, 705명에게는 7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54명에게 무죄를, 46명은 석방했다.<sup>329)</sup>

이승만은 정부 수립 1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을 때 제주도는 대부분 잔인한 공산테러분자들의 손아귀에 있었다...그러나 지난 봄까지 공산세력은 궤멸됐고, 선거는 평화적으로 치러졌다. 정부가 우리 수중에 들어오기 전에 군대에 침투하기 위해 민주주의 절차의 이름으로 허용됐었던 공산주의자들은 대부분 근절됐다"고 대내외에 천명했다.<sup>330)</sup> 이승만은 제주도 5·10재선거의 상처뿐인 성공에 자신감을 가졌다. 10월 2일에는 이승만의 승인에 따라 제주도에서 군법회의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249명이 집단처형됐다.<sup>331)</sup>

로버츠 준장은 1949년 8월 육군성 기획작전국장 찰스 볼테(Charles L. Bolte) 소장에게 미국을 대신해 한국인의 희생이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한국인들을 모른다는 내용의 의

---

324) 『연합신문』 1949년 5월 18일.

325) Despatch No. 607, Muccio to Department of State, 26 May, 1949.

326) Letr, Syngman Rhee to General MacArthur, May 22, 1949.

327) Despatch No. 354, Inclosure No. 1, Memorandum of Conversation No. 63, June 14, 1949, Subj: Views of Governor's affairs in Chejudo, American Embassy to the Secretary of State, 16 June 1949.

328) 재판과정의 불법성과 고문에 대해서는 제주4·3연구소, 『무덤에서 살아나온 4·3 '수형자'들』 (서울: 역사비평, 2002) 참조.

329) JOINT WEEKA No. 9, 12 Aug 1949.

330) Telegram No. 1023, 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 14 Aug 1949.

331) 앞의 글, No. 17, 7 Oct 1949. '게릴라'로 분류돼 사형선고를 받은 249명에 대한 집단처형은 유례가 없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미심장한 서한을 보냈다.<sup>332)</sup> 이 서한은 미군사고문단이 자국의 이익 아래 활동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국방부장관 신성모는 10월 하순 이승만에게 “한국군은 미군의 한 날개로서 공산주의에 맞서 방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미국 정부의 정책을 수행하는데 지원을 다할 것”이라며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동양의 작전 및 전초기지인 한국의 전략적, 전술적 중요성을 고려해 미국으로부터 무기와 장비를 얻을 수 있도록 원조를 요청해 줄 것”을 건의했다.<sup>333)</sup>

무초는 10월 국무성에 제주도 작전이 너무 파괴적일 정도로 성공해 ‘반도’들이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섬’에서 어떠한 종류의 회복도 할 수 없음을 보고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보고했다.<sup>334)</sup> 무초의 이 보고는 제주도에서 민간인 대량학살이 자행됐는데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자를 척결해야 하는 제주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보여준다. 전투사령부 해체 뒤에는 8월 13일부터 독립 제1대대가 소탕작전을 벌였다. 10월 24일에는 봄철 소탕작전이 끝난 뒤 처음으로 무장대가 활동에 나서 3명이 사살됐다.<sup>335)</sup>

11월 초순 김용하 지사가 미대사관 관리들에게 서청회원들이 계속해서 말썽을 일으키고 있고, 군 장교들이 소나 말들을 육지로 수출하는 등 사업을 벌이고 있는가 하면 군인들이 어획량의 3분의 1을 군용으로 징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가<sup>336)</sup> 11월 15일 비리혐의로 경질돼 김충희로 교체됐다.<sup>337)</sup> 정부 고위관계자들은 공산주의자에 대한 경찰의 고문행위를 옹호했다. 내무장관 김효석은 12월 11일 대구에서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을 파괴할 목적으로 살인과 방화 등을 자행하다 체포된 공산주의자들을 심문하면서 고문을 사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고, 내무차관 장경근도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는 때때로 고문을 사용해야 한다며 오히려 고문을 권장했다.<sup>338)</sup>

해병대사령부는 1950년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동안 한라산 지구의 토벌작전을 2개대로 나눠 전개했다. 2개 중대에 중대당 제주서와 모슬포서, 서귀포서와 성산포서가 편입돼 군

---

332) Roberts to Maj. Gen. Charles L. Bolte, Director of Plans and Operations, Department of the Army, 19 Aug 1949.

333) Memorandum for President Syngman Rhee, Subj: Status of Korean Forces, Shin Sung Mo,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ROK to Syngman Rhee, 22 Oct. 1949.

334) The Ambassador in Korea(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 Oct 13, 1949, *FRUS*, 1949, VII, pp. 1086-1087.

335) Despatch No. 704, Subj: Summary of Political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October, 1949, 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 Nov 7, 1949.

336) Despatch No. 749, Inclosure. Subj: Tour of CHEJU DO - by Capt. Fischgrund, 22 Nov 1949, Capt. Harold Fischgrund, Asst. Adv. G-3 to Chief, KMAG, Subj: Transmitting report by Captain FISCHGRUND(KMAG) on trip to Cheju Island, American Embassy to Department of State, Nov 28, 1949.

337) A-376, 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 Nov 18, 1949.

338) A-438, 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 Dec 20, 1949.

경합동토벌대가 조직돼 토벌작전에 나섰다.<sup>339)</sup> 주한미대사관은 1950년 8월 13일 제주도에 서 활동하는 신부가 제주도에서 공산주의자들이 활동하기 시작했다고 보고<sup>340)</sup>하자 제주도 상황을 직접 시찰하기 위해 해군무관 존 세이퍼트(John P. Seifert), 3등 서기관 도널드 맥도날드(Donald S. Macdonald), 부영사 필립 로우(Philip C. Rowe) 등으로 팀을 구성해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국장, 해병대 지휘관, 경찰 간부들을 만나 제주도 상황을 파악해 대사관에 보고서를 제출했다.<sup>341)</sup> 미대사관은 향후 제주도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이려 한다면서 한국 당국도 그렇게 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sup>342)</sup> 이들은 경찰과 관련해 대게릴라 전투 경험이 있는 1명의 미고문관이 있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고문관은 소수의 무장 게릴라와 오름에 있는 지지자들을 소탕하고 향후 게릴라 활동의 재발방지를 위한 일환으로 내륙에 경찰 초소를 세워 공격적인 토벌작전을 즉시 시작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토벌작전과 경찰활동을 위해 전투경찰대대가 창설돼야 하고 보병 및 게릴라 전술훈련을 받아야 하고 해병대를 보다 위급한 본토로 철수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sup>343)</sup>

이와 같은 건의가 있는지 며칠 뒤 제주도비상경비사령부는 8월 24일 한라산 무장대를 소탕하기 위한 전투신선대를 만들어 작전에 나섰다.<sup>344)</sup> 이들이 제주도 방문을 통해 집계한 무장대수는 15-30명의 무장 게릴라를 포함해 100여명으로 추산됐다.<sup>345)</sup> 경찰관 300여명이 대게릴라 경찰에 투입되고 검문초소를 날마다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경찰은 한국전쟁 발발 이후 8월 중순까지 보도연맹원 700여명을 검거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또 잠재적인 파괴분자들로 보도연맹원 2만7천여명과 4·3 당시 '공산주의자'로 분류돼 죽은 친척 5만여명이 존재한다고 주한미대사관 관리들에게 밝혔다.<sup>346)</sup> 미대사관은 간헐적인 습격을 하던 무장대에 의해 11월 6일 제주시 부근에서 경찰관 6명과 경비병 2명이 피살되고, 9일에는 경찰관 9명이 피살되는 한편 소총 16정과 탄약 1500발을 도난당했다<sup>347)</sup>는 보고를 받

339) 양봉철, 앞의 글, 70쪽.

340) Everett F. Drumright to John M. Allison, Department of State, Aug 29, 1950.

341) Memorandum for the record, Subj: Conditions on Cheju Island, John P. Seifert, Naval Attache, Donald S. Macdonald, Third Secretary of Embassy, Philip C. Rowe, Vice Consul, Aug 17, 1950; 이 보고서는 한국 당국에 가치가 클 것으로 생각해 국무총리 서리와 내무부장관에게 보냈고, 워커(Walker) 장군에게도 보냈다. Everett F. Drumright to John M. Allison, Department of State, Aug 29, 1950

342) Everett F. Drumright to John M. Allison, Department of State, Aug 29, 1950.

343) John P. Seifert, 앞의 글.

344) 『제주신보』 1950년 8월 26일.

345) 앞의 글.

346) 위의 글.

347) Air Pouch, Inclosure No. 1, Memorandum for the record, Subj: Conversation with Lee Sung-Choo, Chief of Police, Cheju-do, Philip C. Rowe, Vice Consul, Nov 14, 1950, Everett F. Drumright, Charge d'Affaires a.i. to the Department of State, Nov 15, 1950.

자마자 국무총리 서리와 이 내용에 대해 구두와 서면으로 의견을 나누고, 경찰청장과 내무장관에게도 그 내용을 전했다.<sup>348)</sup> 한국전쟁 초기 전선이 밀려 상황이 급박해졌다고 느낀 미대사관은 제주도에서의 게릴라 활동에 다시 민감한 반응을 하며 한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과 게릴라 소탕을 위한 논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이에 미대사관은 직접 2등 서기관 존 맥도날드(John E. Macdonald)와 항공연락장교 브라운(Brown) 대위를 11월 20일 제주도에 파견해 게릴라 활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계획<sup>349)</sup>을 조사했다.<sup>350)</sup> 이와 함께 그러나 유엔군이 전선에서 밀리자 제주도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져갔다. 미국은 유엔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할 경우 한국정부의 소재지로서 제주도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하는 시점이었다.<sup>351)</sup> 이 때문에 미국은 제주도의 게릴라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미대사관은 1951년 1월 국무성에 보낸 보고서를 통해 “유엔군이 지난 2개월 동안 고전하자 제주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힌 뒤 제주도시사와 해군사령관의 말을 인용해 “50-60명의 무장한 공산도당들이 한라산에 있는데 이들은 대단히 성가신 존재”라고 보고했다.<sup>352)</sup>

미대사관측이 해병대의 본토 철수를 건의한 뒤 해병대 사령부가 1950년 8월 31일 이도하고<sup>353)</sup> 1951년 1월 14일 1개 중대 규모의 해병부대가 제주로 파견돼 경찰 1개 소대를 지원받아 4개 소대로 혼합편성해 토벌작전에 임했다. 해병대의 작전으로 제주도 소요가 거의 소탕됐다고 판단했으나 1952년 초부터 무장대가 활동을 재개하자 11월 1일 제주도비상경비사령부(사령관 이경진 제주도경찰국장)는 전방전투사령부(일명 100사령부)를 설치해<sup>354)</sup> 소탕작전을 벌였고, 1953년 1월 29일 유격전 특수부대인 무지개부대를 투입해 막바

348) 위의 글.

349) 정부의 계획은 첫째, 고지대에 50마일 반경으로 12개 지점에 500-600명의 경찰관 배치, 둘째, 약 250명의 친척 억류, 셋째, 게릴라 1인당 10만원의 보상금 지급, 넷째, 작전 성공 때 특진 보장, 다섯째, 작전 실패 때 대대적인 경찰 해고 등이었다. 위의 글.

350) Inclosure No. 1, Subj: Conditions on Cheju Island, John E. MacDonald, Third Secretary, Subj: Transmitting Report on Conditions on Cheju Island, Everett F. Drumright, Counselor of Embassy to the Department of State, Nov 21, 1950

351)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유엔의 세계전략 차원에서 공산주의자들에게 제주도를 내주지 않는 것은 군사적으로 바람직할 것인가 ②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군사전략적 관점에서 생기는 긍정적인 이점은 무엇인가 ③ 다시한번,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유엔군의 과도한 승인없이(현 세계상황은 유엔군이 다른 지역에서도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가능한 것인가 ④ 제주도를 공산주의자들에게 내주지 않는다면 제주도를 대한민국 정부의 소재지로 이용하는게 바람직할 것인가 ⑤ 정부를 제주도에 유지시키기 위한 그와 같은 이용은 유엔 자원, 2차적으로 미국의 자원을 상당히 지속적으로 유출시키는 것을 의미하는가 등이다 Subj: Use of Cheju Island as a Seat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Case of General Military Evacuation of the Korean Mainland, Unknown, Dec 29, 1950.

352) Subj: Chejudo, Everett F. Drumright, Counselor of Embassy to the Department of State, Jan 18, 1951.

353) 『제주신보』 1950년 9월 6일.



지 토벌작전을 벌였다.

제주도경찰국이 한라산 금족령(禁足令)을 해제한 것은 1954년 9월 21일이었다. 4·3붕기에서 한라산 금족령이 해제될 때까지 적어도 3만여명<sup>355)</sup>의 제주도민들이 희생되었다.

---

354) 제주도경찰국, 『제주도경찰사』(제주: 동국, 1990), 318쪽.

355) 제주4·3 당시 얼마나 많은 인명이 희생됐는지 정확한 통계를 잡기는 어렵다. 지금까지 언급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상황은 다음과 같다.

① 1946년 9월 주한미육군사령부 군정청 보건후생국이 남한인구를 조사할 당시 제주도 인구는 남자 129,679명, 여자 146,469명 등 모두 276,148명으로 기록돼 있으며, 1949년 5월 1일 대한민국 최초의 인구조사에서 나타난 제주도 인구는 남자 116,000명, 여자 137,000명 등 모두 25만3000명으로 돼 있다. 이를 통해 추정해보면 남자 13,679명, 여자 9469명 등 23,148명이 줄었다. 또 1949년 5월 이후에도 상당한 인명이 살상된 기록으로 보아 인명피해는 적어도 3만여명 이상이라는 설이 설득력을 갖는다. The Economic potential of an independent Korea, Despatch No. 6, 26 June 1947, Airgram A-204, American Embassy to Department of State, 17 June 1949.

## 제 6 장 결 론

본 연구는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5·10선거'를 중심으로 제주4·3의 전개과정에서 자행된 제주도민에 대한 대량 학살과 관련해 미군정으로 대표되는 미국정부의 개입 수준을 밝히려고 시도하였다.

필자는 본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했다. 첫째, 미국은 냉전 상황 속에서 4·3을 어떻게 인식했고 대응했는가. 둘째, 미군정은 제주5·10선거의 성공적 실시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가. 셋째, 5·10선거가 실패한 뒤 미군정의 대응강도는 어떠한가 하는 것이었다.

이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군정은 4·3의 발발원인을 외부 공산 세력의 사주에 의한 것으로 규정했다. 미국의 언론 또한 제주도 사태를 소련이 남한 선거를 반대하기 위한 계략라전으로 비난했다.

미국의 대아시아정책에서 한국의 위치를 보여주는 것은 트루먼 대통령의 1949년 6월 의회에 보낸 교서를 통해 알 수 있다. 트루먼은 “한국은 민주주의의 실험대이며, 민주주의 성공을 증명해 보임으로써 한국은 아시아인들에게 공산주의에 대항한 저항의 횃불로 상징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한국을 반공의 보루로 인식했다.

미군정은 무고하게 주민 6명이 희생된 1947년 3·1사건으로 인해 남한 최초의 민관 총파업이 벌어졌는데도, 3·1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서 그것이 정당방위였다는 경찰의 주장과 공동보조를 맞추면서 제주도민들의 분노와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였다. 오히려 총파업이 벌어지자 미군정은 이것이 남한 총파업의 전초전으로 간주하며, 제주도민 대다수를 좌익 또는 심정적인 좌익의 동조자로 평가하는가 하면 제주도를 좌익거점으로 분류했다.

한국을 아시아에서의 이념대결의 장, 공산주의에 대한 보루로 규정한 미국정부와 미군정은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미국의 노력을 좌절시킨 제주도를 한반도 최일선의 '이데올로기적 전장터'로 간주한 것이다.

둘째, 미국과 미군정은 5·10선거의 성공을 위해 제주도에 강화된 물리력을 동원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딘 소장의 2차례에 걸친 방문과 작전지시 그리고 작전참모들의 4·3봉기 진압과정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난다. 주한미군사령관 하지 중장이 선거를 앞두고 남한의 현 상황에서 경찰력을 강화시키는 이외의 대안은 없다고 밝힐 정도로 미군정은 5·10선거에 총력을 기울였다.

딘 소장은 선거를 반대하는 이들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북로당의 모략에 걸린 것이라고 비난함으로써 선거반대는 미군정과 미국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대이고, 공산주의에 대한 동조로 간주했다.

이 때문에 단독선거 반대를 직접적인 명분으로 내세운 4·3봉기가 일어나자 딘 소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해 국방경비대와 해안경비대의 제주도 합동작전을 결정하고, 경비대의 제주도 파견과 전투준비를 명령했다. 그는 뒤이어 정보수집과 경찰활동을 위한 연락기 L-5까지 파견하면서 제주도 민정장관에게 제주도 사태를 진압토록 명령해 5·10선거의 성공적 관철을 위한 미군정의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경비대의 작전권한도 제주도 주둔 최고 미군 지휘관인 제주도 민정장관이 장악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서 미군정 수뇌부의 제주도 사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제24군단 작전참모부 슈 중령이 4·28평화협상을 하루 앞두고 제주도를 방문한 것은 미군정의 의도를 보다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하지 중장이 제주도 민정장관 맨스필드 중령에 지시한 4개항의 지침은 첫째, 경비대가 즉시 역할을 취할 것, 둘째, 모든 시민소요를 중지시킬 것, 셋째, 무장대 활동을 신속하게 진압하기 위해 경비대와 경찰 사이에 명확한 관계설정을 할 것, 넷째, 미군은 개입하지 말 것이었다. 제9연대장 김익렬 중령과 무장대 지도자 김달삼간의 평화협상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세력의 척결'과 5·10선거의 성공을 위해 가급적 미군은 개입하지 않으면서 경비대의 즉각적인 출동을 지시한데서 미군정의 의도를 알 수 있다.

하지 중장의 이러한 지침은 가장 심한 소요사태가 벌어진 제주도에서 5·10선거의 방해세력을 제거해 선거를 성공리에 실시함으로써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국제적으로 승인 받고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셋째, 5·10선거가 실패하자 미군정은 곧바로 구축함을 제주도 연안으로 급파했고, 로스웰 브라운 대령을 제주도 최고 지휘관으로 파견해 제주도에 대한 무차별 검거작전에 나선 경비대와 경찰을 총지휘하도록 했다. 3·1사건 이후 경찰의 무차별적인 도민 검거와 서청의 행패, 유 지사의 극단적 우익강화정책으로 정치적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정 단선 반대를 기치로 내건 무장대의 4·3봉기가 발발함으로써 제주도의 5·10선거는 실패했다.

브라운 대령의 부임은 5·10선거의 좌절로 '미국의 위신'에 타격을 입힌 제주도 사태를 무력진압하고, 반드시 재선거를 성공시키겠다는 미군정의 의사표시였다. 따라서 남한에서 유일하게 선거가 실패한 제주도의 6·23재선거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전정지작업이 필요했다.

중산간 지역을 고립시키면서 제주도를 빗질하듯 평정작전을 벌인 브라운 대령은 6·23 재선거까지는 제주도 사태가 진정될 것이라고 호언했으나 '원인에는 흥미가 없다. 나의 사명은 진압뿐이다'라고 천명한 그의 무차별적인 진압작전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1948년 5월 하순부터 6월말까지 제주도민 5천여명을 체포함으로써 브라운 대령의 작전은 공산주의자 척결을 명분으로 제주도민들에게 공포심만을 심어주었다.

미군정의 제주도 사태 진압에 대한 관심은 딴 소장이 제주도 문제를 모든 정부부처의

최우선 관심사로 간주한데서도 알 수 있다. 로버츠 준장은 제주도 현지 근무를 마치고 복귀한 부하 고문관으로부터 제주도 소요의 실상을 확인한 뒤 그를 다시 내려보낼 정도로 제주도 문제는 미군정 수뇌부의 심각한 현안이었다.

5·10 단선 반대를 직접적인 이유로 촉발된 제주4·3은 1947년 3·1사건에서 한라산 금족령이 해제된 1954년 9월까지 제주도민 3만여명이 희생된 채 표면적으로는 막을 내렸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4·3의 전개과정에서 자행된 제주도민 학살에 대한 미국정부의 개입 수준을 파악하고자 했다. 또 미국이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통해 아시아에서 소련의 팽창을 저지하고 소련으로부터 자주 및 지시를 받았다는 제주도의 '반란'을 진압하고자 했던 사실을 입증하려 시도했다.

본 논문을 통해 미국은 '민주주의 시험대'로서 한국을 동아시아의 반공 보루로 세우려고 시도한 사실을 파악했다. 또 당시 미고문관이 제주도의 내륙지역을 '적성지역'으로 간주한 송요찬 연대장의 포고내용을 인지하고 있었고, 미군정이 제9연대가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 시기에 연락기를 지원해 정보를 제공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런 사실을 통해 미군정과 미국이 직·간접적으로 제주도 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명한 흔적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주한미군사령부 정보참모부가 제9연대가 민간인 대량 학살계획을 채택했고, 1948년의 사상자는 대부분 이 연대가 주둔한 시기에 일어났다고 비판하는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군사고문단장인 로버츠 준장은 작전 주역인 송요찬 연대장을 높이 평가함으로써 미국이 제주도민 학살에 대해 최소한 방조하거나 조장한 사실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본 논문은 초토화작전과 관련한 미국의 역할 규명에 있어서 부분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사태의 본질을 추론했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앞으로 초토화작전과 민간인 대량학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기록을 발굴해 제주4·3 진압과정에 대한 미국정부의 개입수준을 보다 상세히 규명하고 새로운 사실을 밝혀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 E. Grant Mead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New York : King's Crown Press, 1951
- 강성철. 『주한미군』. 서울 : 일송정, 1988.
- 강철 편저. 『在日朝鮮人史年表』. 東京 : 熊山閣, 1983.
- 고문승. 『박헌영과 4·3사건』. 서울 : 신아문화사, 1991.
- 高俊石 監修, 文國珠 編著. 『朝鮮人社會運動史辭典』. 東京 : 社會評論社, 1981.
- 그레고리 핸더슨, 박행웅·이종삼 역. 『소용돌이의 한국정치』. 서울 : 한울, 2000.
- 김봉현·김민주. 『제주도 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자료집』. 大阪 : 文友社, 1963.
- 김익렬. 유고, 제민일보사. 『4·3은 말한다』 2. 서울 : 전예원, 1994.
- 김점곤. 『한국전쟁과 남로당 전략』. 서울 : 박영사, 1973.
- 김준엽·김창순 공저. 『한국공산주의운동사』 2. 청계연구소, 1986.
- 김찬흡 편저. 『20세기 제주인명사전』. 제주 : 제주문화원, 2000.
- 김철범. 『한국전쟁과 미국』. 서울 : 평민사, 1990.
- 노암 촘스키, 김보경 역.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서울 : 한울, 1996.
- 臺灣 行政院 小組. 『二二八事件 研究報告』. 臺北 : 時報文化出版企業, 1994.
- 동아시아 평화인권 한국위원회. 『동아시아와 근대의 폭력1』. 서울 : 삼인, 2001.
- 등원창 지음, 엄수현 역. 『일본군사사』. 서울 : 시사일본어사, 19994.
- 리처드 E. 라우터백, 국제신문사 출판부 역. 『한국미군정사』. 서울 : 돌베개, 1984.
- 민주주의 민족전선 편집. 『조선해방1년사』. 서울 : 문우인서관, 1946.
- 브루스 커밍스, 김주환 역. 『한국전쟁의 기원』 上·下. 서울 : 청사, 1986.
- 송남현. 『해방3년사』 II. 까치, 1985.
- 아라리연구원. 『제주민중항쟁』 전3권. 서울 : 소나무, 1988.
- 아라사키 모리테루, 김경자 역. 『또 하나의 일본 오끼나와 이야기』. 서울 : 역사비평, 1998.
- 양동안·윤근식 (공저). 『한국현대정치사』. 서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 양의선. 『한나의 메아리』(제1부).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2000.
- 역사비평사. 『역사비평』 통권 42호. 서울 : 역사비평사, 1998.
- 유엔조선위원단, 임명삼 역. 『UN조선위원단 보고서』. 서울 : 돌베개, 1984.
- 임종국. 『일본군의 조선침략사』 II. 서울 : 일월서각, 1989.
- 장창국. 『육사졸업생』. 서울 : 중앙일보사, 1984.
- 전상인. 『고개속인 수정주의』. 서울 : 전통과 현대, 2001.

- 제민일보사. 『4·3은 말한다』 전5권. 서울 : 전예원.
- 제임스 I. 매트레이, 구대열 역. 『한반도의 분단과 미국-미국의 대한정책, 1941-1950』. 서울 : 을유문화사, 1989.
- 제주4·3 제50주년 기념사업추진 범국민위원회. 『제주4·3연구』. 서울 : 역사비평, 1999.
- 제주4·3연구소. 『4·3장정』 1. 제주 : 동소, 1990.
- \_\_\_\_\_. 『제주4·3자료집-미군정보고서』. 제주 : 제주도의회, 2000.
- \_\_\_\_\_. 『4·3과 역사』 제28호. 제주 : 온누리, 1997
- \_\_\_\_\_. 『4·3장정』 5. 제주 : 나라출판, 1992
- \_\_\_\_\_.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 서울 : 역사비평, 1999.
- \_\_\_\_\_. 『무덤에서 살아나온 4·3수형자들』. 서울 : 역사비평, 2002.
- \_\_\_\_\_. 『이제사말함수다』 2. 서울 : 한울, 1989.
- \_\_\_\_\_. 『제주4·3자료집Ⅱ-미국무성 제주도관계문서』. 각, 2001.
- 조남수. 『4·3진상』. 제주 : 관광제주, 1988.
- 존 메릴, 신성환 역. 『침략인가 해방전쟁인가: 한국전쟁의 국내적 배경 1948-1950』. 서울 : 과학과 사상, 1988.
- 존 메릴. 『제주도반란』, 아라리연구원, 『제주민중항쟁』 I, 소나무, 1988
- 한백사 편집실 엮음. 『분단자료집』. 서울 : 한백사, 1989.

## 2. 논문

- 강성현. 『제주4·3학살사건의 사회학적 연구』. 서울대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
- 김동국.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처리에 관한 연구-1947.9-1948.12』. 연세대 정외과 석사학위 논문, 1989.
- 김득중. 『제헌국회의 구성과정과 성격』. 성균관대 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3.
- 김희재. 『미군정기 민중의 꿈과 좌절-인민위원회 운동을 중심으로』. 부산대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1997.
- 문순보. 『제주민중항쟁의 원인과 성격-미군정의 대제주도 정책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정외과 석사학위논문, 2001.
- 박명립. 『제주도4·3민중항쟁에 관한 연구』. 고려대 정외과 석사학위논문, 1988.
- 신용중. 『미·소의 대한반도정책. 1943-1948』. 한양대 정외과 박사학위논문, 1987.
- 안 진. 『미군정기 국가기구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1990.
- 양봉철. 『제주경찰의 성격과 활동연구-‘제주4·3’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역사교육 석사학위 논문, 2002.
- 양정심. 『제주4·3항쟁에 관한 연구-남로당 제주도 위원회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사학과

- 석사학위논문, 1995.
- 양한권. 『제주도4·3폭동의 배경에 관한 연구』. 서울대 정치학과 석사학위논문, 1988.
- 영유목. 『제2차 세계대전후 동아냉전체제의 형성이 전쟁 책임 청산에 대해 끼친 영향-중국의 예-』. 제6회 동아시아 평화·인권 국제학술회의 여수대회, 2002년 10월 17-20일.
- 오재완. 『미국의 대한정책과 미군정의 국내 정치적 역할: 1945-1948』. 고려대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1991.
- 이기명. 『5.10선거의 전개과정과 국내 정치세력의 대응』. 연세대 정치학과 석사학위논문, 1990.
- 정용욱. 『1942-1947년 미국의 대한정책과 과도정부 형태 구상』.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6.
- Bruce Cumings. *The Question of American Responsibility for the Suppression of the Chejudo Uprising*. Presented at the 50th Anniversary Conference of the April 3, 1948 Chejudo Rebellion, Tokyo, March 14, 1988.
- John R. Merrill. *The American Occupation of Korea*. 『한국현대사와 미군정』.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91.

### 3. 기타

#### 1) 국외 자료집

- Hq. 6th Inf. Div. G-2 Periodic Report
- Hq. 7th Inf. Div. G-2 Periodic Report
- Hq. USAFIK. G-2 Periodic Report(『주한미군 정보일지』.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영인, 1988)
- Hq. USAFIK. G-2 Weekly Summary (『주한미군 주간정보요약』.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영인, 1988)
- Hq. USAFIK. G-3 Operations Report
- Hq. USAFIK. *JOINT WEEKA*(『JOINT WEEKA』. 정용욱 편, 영주문화사 영인, 1997)
- USAMGIK. *South Korean Interim Government Activities* 전6권(『미군정활동보고서』. 이길상편, 영주문화사 영인, 1990)
- USAFIK.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HUSAFIK)*, Compiled under the supervision of Harold Larson, chief historian, Tokyo and Seoul, 1947, 1948. Manuscript in the Office of the Chief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Washington, D.C.(『주한미군사』. 돌베개 영인, 1988)

United States Army Government in Korea. *Official Gazette*(『미군정청 관보』 전4권. 원주 문화사 영인, 1993)

United States, State Department. *Records Relating to the Internal Affairs of Korea 1945-1949*. Scholarly Resources Inc.(『미국무성 한국관계문서』 전23권. 아름출판사 영인, 1995)

Korean Army, 9th Regiment Daily Report.

United States, State Department. *FRUS*. 1945, VI.

\_\_\_\_\_. *FRUS*. 1946, VIII.

\_\_\_\_\_. *FRUS*. 1947, VI.

\_\_\_\_\_. *FRUS*. 1948, VI.

기타 각종 미군정 및 미군사고문단, 국무성의 보고 및 서한은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NARA · 미국 매릴랜드주)의 자료이다.

## 2) 국내 간행물 · 자료집

국무회의록 제6회-26회, 1949

국방부 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1-해방과 진군』, 1967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사자료집: UN한국임시위원단 관계문서』 I, II, 1987

\_\_\_\_\_, 『대한민국사자료집』 제18-44권(제18-27권: 정치고문관문서, 제28-37권: 이승만 관계 서한 자료집, 제38-44권: 유엔한국위원단 활동 문서), 1994-1999.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제주4·3사건자료집』 전10권, 2002

제주도, 『제주도지』 1권, 1993

제주도경찰국, 『제주도경찰사』, 1990

濟州島廳, 『濟州島勢要覽』, 朝鮮印刷株式會社, 1939

조선은행, 『조선경제연보』, 194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선거사』, 동회, 1968

## 3) 신문

「경향신문」 「국도신문」 「국제신문」 「동광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연합신문」 「우리신문」 「자유신문」 「제민일보」 「제주신문」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평화일보」 「한성일보」 「호남신문」 「독립신보」 「매일신보」 「제주신보」

국사편찬위원회, 『자료 대한민국사』 제1-7권, 탐구당, 1968-1974, 제8-9권, 유일상사, 1998



#### 4) 인터뷰 및 방송자료

Charles L. Wesolowsky 예비역 중령(당시 중위, 제11연대 및 제9연대 고문관) 2001년 10월 인터뷰

Harold S. Fischgrund 예비역 대령(당시 중위, 제9연대 고문관) 2001년 10월 인터뷰

고경흠 당시 한림면 청년동맹위원장 2003년 5월 3일 인터뷰

'일본으로 간 4·3 영혼'. 제주문화방송, 2001년 5월 10일 방송

#### 5) 서한 및 이메일

Letter. Charles L Wesolowsky to Dr. Allan R. Millett, 16 Sept. 1996.

Letter. Fischgrund to Dr. Allan R. Millett, 2 June 1997.

Minor L. Kelso가 2001년 9월 10일 필자에게 보내온 서한.

노암 촘스키가 필자에게 보내온 이메일 2003년 6월 10일.

#### 6) 인터넷 웹사이트

[http://www.arcent.army.mil/history/com\\_\\_bios/cg\\_\\_jrhodge.html](http://www.arcent.army.mil/history/com__bios/cg__jrhodge.html), 2002년 12월 1일

<http://www.trumanlibrary.org/trumanpapers/frameset/index.htm>, 2002년 12월 1일

<http://www.trumanlibrary.org/oralhist/cliford.htm>, 2002년 12월 1일

<http://www.army.mil/CMH-pg/topics/apam/Ch-TkGp.htm>, 2002년 12월 1일

## 연 표

### 1945년

- 9월 17일 제59군정중대, 미국 캘리포니아 몬트레이요새에서 편성.<sup>1)</sup>
- 9월 10일 제주도 건국준비위원회 결성.
- 9월 22일 제주도 인민위원회 결성.<sup>2)</sup>
- 9월 23일 외국기자로는 처음으로 UP특파원 크렘카터, 제주도 시찰하고 31일 귀경.<sup>3)</sup>
- 9월 28일 제7사단 무장해제팀과 제24군단 항복접수팀 제주 도착. 일본군 제58군 도야마 중장으로부터 항복받음.<sup>4)</sup>
- 10월 5일 제주도 무장해제팀이 제주읍에서 임무완료 뒤 모슬포로 이동.<sup>5)</sup>
- 10월 초순 미군정청 법무국장 소령 에머리 우달(Emery J. Woodall)이 법무국 특사 김영희와 함께 제주도 시찰, “제주도는 평화경” 소감 피력.<sup>6)</sup>
- 10월 10일 군정장관 아놀드(Archibald V. Arnold) 소장, 남한의 유일 정부는 미군정이라고 언급.<sup>7)</sup>
- 11월 9일 미보병 제6사단 제20연대 L중대, 미군정청 제59군정중대 사령부 및 사령부중대(지휘관 소령 썬먼 스타우트(Thurman A. Stout)) 제주도 상륙. 100여명은 모슬포 파견.<sup>8)</sup>

### 1946년

- 3월 20일 제1차 미소공위 개최.
- 4월 21일 주한미군사령관 존 하지(John R. Hodge) 중장이 비서 이묘록 박사와 함께 제주도 첫 시찰.<sup>9)</sup>
- 5월 8일 제1차 미소공위 무기 휴회.
- 6월 2일 군정장관 리치 장군, “제주도는 지금이나 장래에나 중요한 곳인 것을 절실히 느꼈다”는 제주도 시찰 소감 피력.<sup>10)</sup>

---

1) Subj: Unit History, Thurman A. Stout, Senior Military Government Officer of 59th Military Government Company to the Adjutant General, Washington, 23 January 1946.

2) 김봉현·김민주(공편), 『제주도 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 자료집』(大阪: 文友社, 1963), 16쪽.

3) 『매일신보』 1945년 9월 28일.

4) Hq. XXIV Corps, G-3 Operations Report No. 25, 28 Sep 1945.

5) Hq. XXIV Corps G-3 Operations Report No 32, 5 Oct 1945.

6) 『조선인민보』 1945년 10월 10일.

7) 『매일신보』 1945년 10월 11일.

8) Hq. XXIV Corps, G-3 Operations Report No. 68, 10 Nov. 1945.

9) 『동아일보』 1946년 4월 22일.

- 6월 22일 트루먼 개인특사 에드윈 폴리(Edwin W. Pauley)가 트루먼에게 “한국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성공 전체가 달려 있을지도 모르는 이데올로기의 전장터”라는 내용 보고.<sup>11)</sup>
- 8월 1일 군정청 법령 제94호에 따라 제주도(島)가 제주도(道)로 승격. 미국인 초대 지사 썬더 스타우트 소령, 조선인 지사 박경훈, 현재 미군 150명 상주.<sup>12)</sup>
- 8월 3일 군정장관 챔페니(Arthur S. Champeny) 준장, 재무부장 고든(Charles J. Gordon) 대령, 상무부장 존스 해군 대령, 신한공사 총재 정항범, 조선은행 이사 최순주 제주도 시찰.<sup>13)</sup>
- 8월 30일 미보병 제20연대 G중대 1개 소대 제주도 파견.<sup>14)</sup>  
미 제7함대 소속 구축함 제주도 부근 연안에서 일본으로 밀항하던 한국인 175명 승선한 선박 검거.<sup>15)</sup>
- 8월 제주도 민정장관 대리 손훤 대위 부임.<sup>16)</sup>
- 11월 29일 미보병 제20연대 A중대 1개 소대가 G중대와 교대하기 위해 제주도 도착.<sup>17)</sup>
- 12월 7일 미보병 제6사단 제63연대 F중대 1개 소대가 A중대 1개 소대와 교체.<sup>18)</sup>
- 12월 9일 미군정청 공보부 여론조사국 Arthur N. Feraru 제주도 시찰.<sup>19)</sup>

#### 1947년

- 1월 4일 미보병 제1연대 G중대 1개 소대가 제63연대 F중대 소대와 교체.<sup>20)</sup>  
제주도 군정중대는 스타우트 소령의 지휘 아래 장교 11명, 사병 63명으로 구성.<sup>21)</sup>
- 1월 13일 하지 중장, 박경훈 지사에게 공석중인 제주도 입법의원 선출 지시.<sup>22)</sup>

10) 『독립신보』 1946년 6월 5일.

11) Ambassador Edwin W. Pauley to President Truman, June 22, 1946, *FRUS*, 1946, VIII, pp. 706-709.

12) 『서울신문』 1946년 7월 13일.

13) 『대동신문』 1946년 8월 4일.

14) Hq. XXIV Corps, G-3 Operations Report No. 81, 30 Aug 1946.

15)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319, 3 September 1946.

16) 『제주신보』 1947년 2월 16일.

17) Hq. XXIV Corps, 앞의 글, No. 98, 29 Nov 1946.

18) Hq. XXIV Corps, 앞의 글, No. 102, 21 Dec 1946.

19) Arthur N. Feraru, Assistant Chief, Opinion Sampling Section,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USAMGIK, Subj: Report of trip to the Province of Cheju during the period 4-6 December 1946, 9 Dec. 1946.

20) Hq. XXIV Corps, 앞의 글, No. 3, 10 Jan 1947.

21) 제주파견대 보고서, 엘든 코터(Eldon P. Koetter) 소위, 1947년 1월 14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9, 72쪽에서 재인용.

22)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429, 13 Jan 1948.

- 1월 22일 맥아더, 본국에 한반도 문제의 유엔 이관 문제 제기.<sup>23)</sup>  
 G중대 1개 소대 행군중 적과의 교전요령 훈련. C47과 C45기 제주도 도착.  
 C47은 정기운항편이며, 공군장교와 제20연대장 스탠턴 대령, 작전참모 레디  
 한 대령은 C45를 타고 제주도 방문해 비행장 검열과 제주지역 상황 검열 실  
 시.<sup>24)</sup>
- 2월 10일 제농, 오중, 제주, 교양 등 제주도내 중등학교연맹 천수백명, 양과자 수입 절  
 대 반대 시위.<sup>25)</sup>  
 학생 350여명 제주도 주둔 군정중대에 항의 시위.<sup>26)</sup>  
 제주도 민정장관 대리 손훤 대위 귀국.<sup>27)</sup>
- 2월 24일 하지 중장은 자유주의자를 공산주의자로 간주함. 경제고문관 아더 번스는 하  
 지 중장 휘하의 G-2와 CIC는 주관적 편견을 정보로 생산하며, 공산주의자들  
 에 대한 그의 반감에 조언 역할을 한다고 평가.<sup>28)</sup>
- 2월 27일 『제주신보』, 제주도의 식량부족 상황 보도. “불과 45일 만에 일약 배가의 폭  
 등을 본 쌀값은 그렇지 않아도 생활면에 있어서 생지옥의 도탄에 신음하는  
 일반 소비층 대중에 심각한 타격을 주어 기아를 앞에 한 인민의 비참한 아  
 우성 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음을 보는 요즘 거리의 표정은 시시각각으로 도  
 를 가하고 있음은 누구나 수긍하는 사실이거니와 이러한 사회상은 거리의  
 식당에서도 그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 3월 1일 3·1사건 발생. 미군, 3·1절 기념식 시위행렬에 대한 해산 지원.<sup>29)</sup>
- 3월 10일 미군정청 제임스 카스틸(James A. Casteel) 대령, 3·1사건 조차사 제주도  
 방문해 조사활동.<sup>30)</sup>  
 제주도청 직원들, ‘제주도청 3·1대책위원회’구성해 파업 돌입.<sup>31)</sup>
- 3월 12일 트루먼 독트린 발표.
- 3월 13일 이승만, 트루먼에게 트루먼 독트린지지 서한 발송.<sup>32)</sup>

23) Memorandum by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Far Eastern Affairs(Vincent) to the Secretary of State, January 27, 1947, *FRUS*, 1947, VI, pp. 601-603.

24) 엘든 코터 소위, 위의 글, 1947년 1월 22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9, 75쪽.

25) 『제주신보』 1947년 2월 10일.

26) 극동사령부 군사정보국 정보요약 제1753호, 1947년 3월 18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10, 25-26쪽.

27) 『제주신보』 1947년 2월 16일.

28) Arthur C. Bunce, to Edwin M. Martin, Chief, Division of Japanese & Korean Economic Affairs, Department of State, 24 Feb 1947.

29) Hq. 6th Inf Div, G-2 Periodic Report No. 509, 11 March 1947,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470, 3 March 1947.

30) 『제주신보』 1947년 3월 12일.

31) 『제주신보』 1947년 3월 12일.

- 극동사령부 G-2, 중도 우익 한성일보가 제주도 주민의 90%가 좌익이라고 언급한 내용 보고.<sup>32)</sup>
- 3월 14일 경무부 고문관 쇼터 대위, 경무부장 조병옥 등과 함께 제주도 총파업 관련 제주도 방문.<sup>34)</sup>
- 3월 16일 주한미군사령부 G-2, 제주도 주민 70%가 좌익 관련자 또는 동조자라고 보고.<sup>35)</sup>
- 3월 20일 경무부 수사국 고문관 쇼터 대위 등 '제주도 제주읍 3·1절 발포사건 조사위원회', 3·1사건 발포행위는 정당방위라는 내용의 담화 발표.<sup>36)</sup>
- 3월 22일 미보병 제20연대 I중대 1개 소대가 제51야포병대대 포대와 교체됨.<sup>37)</sup>
- 4월 2일 제주도 민정장관 러셀 베로스(Russel D. Barros) 중령 부임하고, 전 민정장관 스타우트 소령은 차석으로 유임.<sup>38)</sup>
- 4월 3일 극동사령부 G-2, 제주도 민관총파업은 좌익의 남한에 대한 조직적인 전술임을 보여준다고 보고.<sup>39)</sup>
- 4월 10일 극동사령부 G-2, 제주도의 최근 소요는 좌익이 자신들의 전술을 펼치기에 좋은 상황이 전개되면 남한 본토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 좌익의 전술은 첫째, 지역의 불만세력을 지렛대로 이용한 대중선동, 둘째, 법 집행기관을 손상시켜 혼란 조장, 셋째, 폭력과 테러를 결합한 광범위한 파업을 통한 경제 마비 겨냥(제주도에서 사용한 방법), 넷째, 중앙의 언론매체를 이용해 이러한 활동에서 좌익의 성공을 대중에게 알려 대중들로 하여금 봉기해 반동의 억압 굴레에서 벗어날 것을 강력하게 권장, 넷째의 전술은 제주도 소요에서 사용됐다고 보고.<sup>40)</sup>
- 극우파 인물인 한독당 농림부장 출신의 유해진, 제주도지사 부임.<sup>41)</sup>
- 4월 17일 미보병 제63연대 B중대 파견대가 I중대 1개 소대와 교체됨.<sup>42)</sup>
- 5월 1일 미보병 제20연대 G중대 제3소대 제주도 도착.<sup>43)</sup>

32) 이승만이 트루먼에게, 서한, 1948년 3월 13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11, 193쪽.

33) FEC Civil Intelligence Section, Periodic Summary No. 15, June 15, 1947.

34) 『독립신문』 1947년 3월 13일, 『한성일보』 1947년 3월 15일.

35)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 79, 16 March 1947.

36) 『대동신문』 1947년 3월 21일.

37) Hq. XXIV Corps, G-3 Operations Report No. 15, 22 March 1947.

38) 『제주신보』 1947년 4월 6일.

39) FEC, Intelligence Summary No. 1767, 3 April 1947.

40) 극동사령부 군사정보국 정보요약 제1772호, 1947년 4월 10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10, 27-29쪽.

41) 『제주신보』 1947년 4월 14일.

42) Hq. XXIV Corps, Operations Report No. 20, 19 April 1947.

43) Hq. XXIV Corps, 위의 글, No. 23, 3 May 1947.

- 5월 5일 미보병 제63연대 B중대 파견대 제주를 출발해 광주도착.<sup>44)</sup>
- 5월 9일 전 제주도 민정장관 써먼 스타우트 소령 제24군단으로 귀임.<sup>45)</sup>
- 5월 15일 극동사령부, 제주도 파업은 남한 총파업의 서막이라고 보고.<sup>46)</sup>
- 5월 22일 제2차 미소공위 재개.
- 6월 13일 래테루<sup>47)</sup>가 제주경찰감찰청 고문관으로 부임. 3·1사건 조사차 제주도 방문 하기도 했음.<sup>48)</sup>
- 7월 18일 제주도 민전, 박경훈 전지사를 의장으로 추대.<sup>49)</sup>
- 8월 14일 CIC, 경찰의 민전 간부 검거에 협조.<sup>50)</sup>
- 8월 20일 미보병 제20연대 C중대 1개 소대 제주도 도착.<sup>51)</sup>
- 8월 27일 미보병 제20연대 F중대 1개 소대 제주도 출발.<sup>52)</sup>
- 9월 18일 제주도 재산관리관 데이비드 켈리(David C. Kelly Jr.) 대위, 유해진 지사에 게 9월 15일 제주농업학교 학생 500여명이 오현중학원 건물 1채를 파괴한 데 대해 사건 실상 설명과 함께 적산 보호에 신중을 기할 것과 파괴자 조사 요구함.<sup>53)</sup>
- 10월 9일 정치고문관 제이콥스(Jacobs), 8월 중순 이후 남한내 폭동이 가라앉은 이유는 이승만의 우익단체, 특히 그의 청년단체의 강력한 무장수단 때문이라고 국무성에 보고.<sup>54)</sup>
- 10월 13일 미군정청 사법부 부고문관 리처드 길리엄(Richard D. Gilliam Jr.), 제주지방 법원장과 제주도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기소 논의. 법원장은 부고문관에 제주도 민정장관이 박경훈 전지사의 단체인 민전을 옹호하려는 경향이 있고, 중도라는 그의 주장을 신뢰하는 것 같다고 언급함.<sup>55)</sup>
- 10월 18일 제2차 미소공위 공식 결렬.
- 11월 1일 미보병 제20연대 B중대 1개 소대 제주도 도착.<sup>56)</sup>

44) Hq. XXIV Corps, 위의 글, No. 24, 10 May 1947.

45) 『제주신보』 1947년 5월 12일.

46) 극동사령부 민정정보국 정보요약 제16호, 1947년 5월 15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10, 17-18쪽.

47) Lester Chorpening으로 추정된다.

48) 『제주신보』 1947년 6월 18일.

49) 『제주신보』 1947년 7월 18일.

50) 『제주신보』 1947년 8월 20일.

51) Hq. XXIV Corps, 앞의 글, No. 42, 23 Aug 1947.

52) Hq. XXIV Corps, 위의 글, No. 45, 30 Aug 1947.

53) Subj: Improper Administration of Governor Ryu Hai Chin on 18 September 1947, Capt. David C. Kelly Jr., Provincial Property Custodian to CG. USAMGIK, 16 December 1947.

54) Seoul Mission No. 416, 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 9 Oct 1947.

55) Inter-Office Memorandum, Subj: Prosecution of Communists in Cheju Do, Richard D. Gilliam Jr., Assistant Advisor to Major Connelly, 15 Oct 1947.

- 11월 8일 미군정청 특별감찰실이 사법부 부고문관 길리엄에게 제주도의 3·1절 소요 사건을 조사했다고 공문 보냄.<sup>57)</sup>
- 11월 12일 미군정청 특별감찰실 감찰관 로렌스 넬슨(Lawrence A. Nelson) 중령이 남조선과도정부 수석고문관 에드가 존슨(Edgar Johnson)박사의 지시에 따라 유해진 지사에 대한 특별감찰에 들어감.<sup>58)</sup>
- 11월 14일 유엔 총회에서 43대 0, 기권 6으로 인구비례하의 한국 정부 수립 결의.
- 11월 15일 제주도 군정중대 법무관 사무엘 스티븐슨(Samuel J. Stevenson) 대위, 제주도 민의 3분의 2가 온건 좌익으로 추정되며, 경찰이 온건 좌파와 일부 중도파를 더욱 좌파로 몰아갈 전망이다. 중도 및 온건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이 극좌로 빠지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보고.<sup>59)</sup>
- 11월 21일 제주도 지구 CIC 헨리 메리트(Henry C. Merritt), 유 지사는 매우 독단적이며, 자신과 의견이 같지 않으면 좌익으로 분류한다고 언급.<sup>60)</sup>
- 11월 26일 군정장관 윌리엄 딘(William F. Dean) 소장, 참페니(Champeny) 대령, 김길준 고문관 제주도 시찰하고 28일 귀경, 딘 소장이 제주도 방문하는 동안 학교는 휴교하고 회사는 폐쇄됨.<sup>61)</sup>
- 12월 3일 제주도 민정장관 리셀 베로스 중령 이임, 후임에 존 맨스필드(John S. Mansfield) 중령 부임.<sup>62)</sup>
- 12월 23일 제주도 경찰 고문관 존 파트릿지(John S. Partridge) 대위 이임.<sup>63)</sup>

#### 1948년

- 1월 3일 남조선과도정부 행정보좌관 피터 캐롤(Peter J. Carroll), 중앙식량행정처장 고문관에게 “제주도 할당량 운영은 ‘혼란’상태이며, 배급표는 관리들의 정치

56) Hq. XXIV Corps, 앞의 글, No. 56, 8 Nov 1947.

57) Inter-Staff Routine Slip, Subj: Cheju Do Political Situation, Ralph J. Mitchell, Col, Director OSI to Gilliam, 8 Nov 1947.

58) Report of Special Investigation-Governor RYU, Hai Chin of Cheju-do Island, Lawrence A. Nelson to CG, USAMGIK, 11 March 1947, Lawrence A. Nelson, Special Investigator, Hq. USAMGIK, Report of Special Investigation: Cheju-do Political Situation(이하 Nelson Report), 12 Nov. 1947-28 Feb. 1948.

59) Subj: Opinion of Political Situation in Chejudo as of 15 November 1947, Samuel J. Stevenson, Captain, Adjutant, 59th M.G Hq & Hq Company, to Lawrence A. Nelson, OSI, USAMGIK, 21 November 1947, Nelson Report.

60) Subj: Governor RYU, Hai Chin, Activities of. Henry C. Merritt. CIC, to Lt. Col. Nelson, OSI, USAMGIK, 21 Novemeber 1947. Nelson Report, 앞의 글.

61)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698, 2 Dec 1947, 『동광신문』 1947년 11월 28일.

62) 『제주신보』 1947년 12월 4일, 12월 6일.

63) 『제주신보』 1947년 12월 24일.

- 적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고 언급.<sup>64)</sup>
- 1월 8일 미군정청 특별감찰실 넬슨 중령, 유 지사와 2시간 동안 면담해 그의 도정업무 수행에 대한 해명 청취함. 유 지사의 태도는 전형적인 일본식 태도라고 언급.<sup>65)</sup>
- 1월 23일 주한미군사령부 G-2, 제주도 좌익은 반미가 아니라고 보고.<sup>66)</sup>
- 1월 27일 군정장관 딘 소장과 민정장관 안재홍, 집회와 언론, 출판의 자유와 관련해 사실상 폭동이나 내란을 부추기지만 않으면 모든 집회 보장을 포함한 권리가 보호돼야 한다고 언급.<sup>67)</sup>
- 2월 18일 미군정청 특별감찰실 넬슨 중령, 19일까지 유해진 지사 조사.<sup>68)</sup>
- 2월 24일 유엔조선임시위원단 대표 아란즈 상원의원, 『마닐라 크로니클』지(*Manila Chronicle*)에 “러시아가 만든 도로 장애물을 폭파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러시아에 핵무기를 사용해야 하며, 러시아는 극동을 지배하고 나머지 세계를 위협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전략적 요충지인 제주도를 강점하기 위해 남쪽 지역으로 슬그머니 들어오고 있다”고 주장.<sup>69)</sup>
- 2월 26일 UNTCOK 필리핀 대표 아란즈 상원의원, 마닐라 라디오 방송국에서 “UNTCOK 구성 결의안에 대한 러시아의 반대는 영원히 북한에 남기를 원하고, 가능한 나중에 남한으로 남하 하려고 하며, 미국의 군사전략가들이 서태평양의 지브롤터와 같은 잠재성있는 지역으로 간주하는 제주도를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sup>70)</sup>
- 2월 29일 조선농회 교육훈련 고문관 윌리엄스, 조선농회 직원들이 농회 회장을 도지사 와 군수에서 새인물로 교체하기 위해 제주도를 방문했으나 유 지사는 회장 교체시기가 아니라고 밝힘. 매우 비협조적인 인물이라고 언급.<sup>71)</sup>

64) Peter J. Carroll, Administrative Assistant to Chee, Yong Eun, Director of National Food Administrator & Carroll V. Hill, Advisor, Subj: Operation of Rationing Program in Cheju Do, 3 January 1948. Nelson Report.

65) Subj: Report of Inspection Hq and Hq. Company of 59th MG Company, Chejudo Island, Lawrence A. Nelson, Lt. Col, Special Investigator to CG. USAMGIK, Jan 16, 1948.

66)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23, 23 Jan 1948.

67) Extract, Press Release,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SKIG, 31 Jan 1948.

68) Testimony of: Governor RYU, Hai Chin, 18-19 Feb 1948, Lawrence A. Nelson.

69) Despatch No. 192, Subj: Philippine Press Comment upon the Work of the Korean Commission, American Embassy, Manila, Philippines to the Secretary of State, Feb 24, 1948.

70) Despatch No. 242, Subj: Transmitting Copies of Two Speeches of Senator Melecio Arranz, the Philippine Delegate to the Korean Commission, American Embassy, Manila, Philippines to the Secretary of State, March 4, 1948.

71) Subj: Notes on trip to Cheju Do pertaining to the interests of the Korean Agricultural Association, F.E.C. Williams, Advisor in Education and Training, K.A.A. to Lt. Col. Nelson,



UNTCOK는 주한미군사령부와 5월 10일 이전에 선거 실시 합의 발표.

- 3월 7일 CIC, 조천지서에서 폭행치사된 김용철 부검 참관.<sup>72)</sup>
- 3월 11일 미군정청 특별감찰실 넬슨 중령, 유해진 지사에 대한 특별감찰보고서를 군정장관에게 제출.<sup>73)</sup>
- 3월 12일 이승만, 트루먼에게 “미국의 점령지역에 과도독립정부의 즉각적인 수립은 공산주의 진출에 대한 보루를 세우는 일이며, 남북의 통일을 가져오는 일”이라는 내용의 서한 발송.<sup>74)</sup>
- 3월 17일 미군정, 남한내 총선거일을 5월 9일로 공포.
- 3월 22일 김용철 폭행치사 사건 조사하기 위해 군정청 사법부 민간인 변호사 토마스 매기(Thomas Magee)가 제주도 방문.<sup>75)</sup>
- 3월 23일 딘 소장, 넬슨 중령의 보고서 가운데 유해진 지사의 경질 건의를 제외하고 승인.<sup>76)</sup>
- 3월 23일 미군정청 보건후생부 부고문관 사무엘 프라이어(Samuel J. Price) 중령, 수석 고문관실과 군정청 사령부에 제주도에서의 모든 활동은 정치적으로 해석되며 이는 편견을 보여주는 확실한 이유라고 보고.<sup>77)</sup>
- 3월 25일 미군정청 특별감찰실 실장 제임스 카스틸 대령, 인사참모부에 제주도 주둔 제59군정중대에 미국인 경찰 고문관 배치 요구 공문 보냄.<sup>78)</sup>
- 딘 소장, 선거를 반대할 자유도 있다는 UNTCOK의 견해에 대해 “선거를 반대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폭력으로 타인에게 선거를 반대하려고 선동 혹은 강요하는 것은 위법인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것은 용인되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sup>79)</sup>
- 3월 26일 딘 소장, 군정청 사법부장 고문관에게 과밀유치장 조사 지시하고 경무부장 고문관에게도 제주도 경찰행정에 대한 조사 지시.<sup>80)</sup>

---

29 Feb 1948.

72) 『제주신보』 1948년 3월 12일.

73) Subj: Report of Special Investigation-Governor RYU, Hai Chin of Cheju-do Island, Lawrence A. Nelson, Lt. Col. Special Investigator, to CG, USAMGIK, 11 March 1948, Nelson Report.

74) 이승만이 트루먼에게, 서한, 1948년 3월 13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11, 193쪽.

75) John W. Connelly, Jr., Major, USAMGIK to CO, 2nd Platoon, Company F, 20th Regiment, Pass to: CCAO, Chejudo, Undated, RG 338, NARA.

76) MGOCCG 333.5, Hq. USAMGIK, William F. Dean, Maj. Gen, 23 March 1948.

77) Inter-Office Memorandum, Subj: Reports on visit to Chejudo, Samuel J. Price, Lt. Col, Deputy Advisor, DPH & W, to OCA, USAMGIK, 23 March 1948, Nelson Report, 앞의 글.

78) Subj: Assignemnt of Personnel, James A. Cateel Col, Inspector General & Director OSI to G-1, USAMGIK, 25 March 1948.

79) 『동아일보』 1948년 3월 26일.

80) Subj: Report of Special Investigation-Chejud Do Political situation, W.F. Dean to Advisor to

- 3월 27일 미군정청 인사참모부 일 로데스 중령, 특별감찰실에 제주도에 유자격 장교를 배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공고하도록 공문.<sup>81)</sup>
- 3월 28일 미육군성 차관 드레이퍼(Draper), 이승만과 회담. 이승만은 “미국이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설치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면서 “정부가 수립되면 한국인들은 매우 기꺼이 미국이 제주도에 영구적인 기지를 설립하도록 하는데 자신있다”고 발언.<sup>82)</sup>
- 3월 29일 미군정청 특별감찰실 실장 제임스 카스틸이 미군정청 인사참모부에 공고한다고 공문.<sup>83)</sup>
- 4월 2일 하지 중장, 산하 지휘관들에게 “5·10 선거의 성공은 미사절단의 핵심 성과이며, 선거시기는 점령기간에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sup>84)</sup>
- 4월 3일 제주 4·3 발발.
- 4월 5일 국회의원 선거일을 5월 9일에서 5월 10일로 변경.
- 4월 7일 유엔조선임시위원단 사무국 차장 밀너(I. Milner), 미연락장교 존 웨커링(John Weckerling) 준장에게 제주도 상황에 대해 관심 표명.<sup>85)</sup>
- 4월 8일 국회선거위원회, 미연락장교 존 웨커링 준장에게 선거인 등록상황 제출. 제주도는 4월 4일 현재 등록률 34%로 최하위로 나타남.  
웨커링 준장은 밀너에게 제주도의 피해통계보고서와 함께 경찰 증원과 경비대가 준비돼 있다고 말하며 상황이 잘 통제되고 있다고 확신시킴.<sup>86)</sup>
- 4월 9-10일 유엔 감시 1반, 제주도 시찰, 제주도 민정장관으로부터 2건의 고문치사사건 보고받음.<sup>87)</sup>
- 4월 12일 유엔조선임시위원단 감시 1반 프랑스 대표 마네, “폭동과 압력전술의 증거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좋은 인식이며, 폭동상황은 하지 장군으로 하여금 선거를 중지시킬 수 있는 계엄령을 선포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심각했다”고 보고.<sup>88)</sup>

---

the Director, Department of Police, USAMGIK, 26 March 1948.

81) Earl L. Rhodes, Lt. Col, Adjutant General, G-1 to OSI, 27 March 1948.

82) 드레이퍼와 이승만간의 회담, 비망록, 1948년 3월 28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10, 187-188쪽.

83) Subj: Assignment of Personnel, G-1 to OSI, 20 March 1948.

84) Inclosure No. 1, Telegram, Hodge to CG, 6th Division, 7th Division, Military Government, Korea Base Command, April 2, 1948, Despatch No. 85, Subj: Orders Issued by USAFIK and USAMGIK Regarding South Korean Elections, Jacobs to the Secretary of State, April 9, 1948.

85) Memorandum for General Hodge, Subj: Daily Report of UNTCOK Activities, Thursday, 8 April, John Weckerling to Hodge, 9 April 1948, RG 338, NARA.

86) 위의 글.

87) Spec. Report 118, Memorandum for General Hodge, Subj: Group 1 on Chejudo 9-10 April (Source: Manet 11 April), John Weckerling to Hodge, 12 April 1948.

88) 위의 글.

웍커링 준장은 하지 중장에게 감시 1반은 제주도에서 유권자들의 선거인 등록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는데 동의했으며, '선거인 등록 강요'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지 않았다고 보고함.<sup>89)</sup>

한국여론협회가 서울시민 1262명 대상으로 한 5·10선거 여론조사 결과 91%가 선거인등록 강요당했다고 응답.<sup>90)</sup>

4월 13일 하지 중장, "전유권자의 90% 이상이 등록을 완료하였으므로, 그들은 5월 10일 시행될 총선거에 투표할 자격을 가졌다.···국제연합 조선임시위원단과 조선국민에게 조선국민은 총선거를 원하지 않고 국민의 대다수가 이것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공산당과 그들의 많은 세포분자들의 소란한 선전이 허언이었다는 것이 증명된다"고 공언.<sup>91)</sup>

4월 15일 선거인 최종 등록 결과 제주도 등록률 64.9% 기록.<sup>92)</sup>  
유엔조선임시위원단 프랑크 대표 마네는 딘 소장이 참석한 UNTCOK 회의에서 제주도 민정장관이 경찰의 구타행위에 대한 증언이 그렇게 비우호적이지는 않다고 언급. 웍커링 준장은 하지 중장에게 이는 미군정이 선거와 관련해 한국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진실을 감추지 않는다는 정서를 확신시켜 주는 것이라고 언급.<sup>93)</sup>

4월 16일 딘 소장, 국방경비대와 해안경비대에 제주도 작전을 명령하는 한편 제주도민정장관 맨스필드 중령이 모든 작전활동을 관장하도록 명령.<sup>94)</sup>

4월 17일 딘 소장은 유엔조선임시위원단 주무위원회에서 3월 6일 발생한 제주도 고문치사사건 가운데 1건은 법원에 기소될 것이고, 두 번째 사망사건은 조사중이라고 밝히고 그런 사건을 막는 것이 미당국의 관심사라고 언급.<sup>95)</sup>  
딘 소장, 5·10선거 관련 지방 준비태세 점검차 시찰에 나섬.<sup>96)</sup>

4월 18일 딘 소장, 제주도 민정장관에게 "연락기 L-5기 2대를 귀관의 통솔하에 두고, 제주도의 파괴분자를 섬멸하고 법과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귀관 임의대로

---

89) Spec. Report 121, Memorandum for General Hodge, Subj: UN Observation of Registration, John Weckerling to Hodge, 12 April 1948.

90) 『조선일보』 1948년 4월 15일.

91) 『동아일보』 1948년 4월 14일.

92)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809, April 15, 1948.

93) Memorandum for General Hodge, Subj: Report of Daily UNTCOK Activities for Thursday, 15 April, John Weckerling, 16 April 1948, RG 338, NARA.

94) MGDIS 92 170917Z, MESSAGE, prepared by Terrill E. Price, Advisor to Director, Department of Internal Security, USAMGIK, to CG. 11th Medium Port, Pass to: Captain Clarence D. DeReus, Advisor, 3rd Brigade, Korean Constabulary, Info: CG. 6th Div, 17 April 1948, RG 338, NARA.

95) U.N. Document, A/AC.19/SC.4/SR.4, 17 April 1948. RG. 338, NARA.

96) 『동아일보』 1948년 4월 22일.

- 진압군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전문.<sup>97)</sup>
- 4월 20일 민정장관 안재홍이 건의하고 딘 소장이 인준한 항보단 결성.
- 4월 24일 민애청 중앙위원회, 하지 중장에게 제주도 인민봉기 탄압 중지를 요구하는 항의문 전달.<sup>98)</sup>
- 4월 26일 미군정청 사법부 부고문관 커트 폴크가 딘 소장에게 “제주도의 유치장을 조사하기 위해 한국인 감찰관을 파견했다”고 공문 보냄.<sup>99)</sup>  
정치고문관 제이콥스가 국무장관에게 “제주도에서는 내전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재산이 파괴되고 있다”고 보고.<sup>100)</sup>
- 4월 27일 딘 소장과 미국인 비서, 민전의 제주도 조사단 파견 거부.<sup>101)</sup>  
제24군단 작전참모부 슈(M. W. Schewe) 중령 제주도 민정장관 맨스필드 중령의 작전계획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 당시 제주도에는 제20연대 제주도 파견대장 가이스트(Geist) 소령, 제9연대를 관할하는 경비대 제5연대 고문관 드로이스(DeReus) 대위가 있었다.<sup>102)</sup>
- 4월 28일 UNTCOK, 남한 각 지역 시찰 결과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가 인정된다며 5월 10일 선거 실시키로 결의.<sup>103)</sup>
- 4월 29일 슈 중령이 작전참모 타이첸(A. C. Tychen)대령에게 제주도 작전 보고서 제출.<sup>104)</sup>  
제주도의 모든 미국인 부양가족들 철수.<sup>105)</sup>
- 4월 30일 딘 소장, 제주도 소요상황 파악하기 위해 방문. 주로 이북출신들로 구성된 서청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원한이 많다는 사실을 파악함.<sup>106)</sup>  
주한미군사령부, 남한 주둔 미군에 특별경계령.<sup>107)</sup>  
경무부장 조병옥, 총선거 대비 선거당일 항보단과 경찰력을 총동원해 투표소를 왕래하는 주요지점 등에 대한 엄중경계 지시.<sup>108)</sup>
- 5월 2일 UP통신 서울특파원 제임스 E. 로퍼, 미육군 초계기가 제주도 상공을 비행하

97) Subj: Cheju-Do Operations, William F. Dean, Major General, Military Governor to Chief Civil Affairs Officer, 59th Military Government Company, 18 April 1948, RG 338, NARA.

98) 『독립신보』 1948년 4월 27일.

99) Kurt M. Falk, Assistant Adviosr, Department of Justice to CG. USAMGIK, 26 April 1948.

100) Seoul Mission No. 270, Jacobs to the Secretary of State, April 26, 1948.

101) 『조선중앙일보』 1948년 5월 5일.

102) Subj: Report of Activities at Chejudo Island, Lt. Col. Schewe, G-3 to Col. A. C. Tychen, A/C of G-3(이하 Schewe Report), 29 April, 1948, RG 338, NARA.

103) 유엔조선위원단, 앞의 글, 109-110쪽.

104) Schewe Report, 앞의 글.

105) Hq. XXIV Corps, G-3 Operations Report No. 23, 1 May 1948, RG 338, NARA.

106) A-58, Jacobs to Department of State, 4 May 1948.

107) 『조선일보』 1948년 4월 30일.

108) 『동아일보』 1948년 5월 1일.

- 고, 응원경찰은 전면적인 유격전의 시작으로 간주한다고 보도.<sup>109)</sup>
- 5월 3일 경무부내에 선거반대세력의 선거방해를 막기 위해 비상경비총사령부 설치.<sup>110)</sup>
- 5월 4일 UP통신 서울특파원 제임스 E. 로퍼, “미주둔군 당국은 소요에 잠긴 제주도로부터 8명의 미국인 부녀자를 철퇴시켰는데 동지에서의 공산당 신공세는 미·소 긴장상태를 전조선을 통해 발생케 하고 있다. 남조선 미군정장관 윌리엄 딘 소장은 제주도의 미군 및 조선측 관헌들과 협의하기 위해 특별히 공로(空路)로 동지를 여행하였다”고 보도.<sup>111)</sup>
- 5월 5일 딘 소장, 민정장관 안재홍, 경비대 총사령관 송호성 일행 제주도 소요사건 실정 조사차 내도, 당일 귀경.<sup>112)</sup>  
스피어(T. J. Speer) 대위, 테일러(Herbert W. Tylor) 대위, 번하이젤(Charles K. Bernheisel) 중위 5·10선거 감시활동차 제주도 방문.  
미국신문 『워싱턴뉴스』(*Washington News*), “스탈린은 살인과 테러로 민주선거를 파탄내려 하고 있다”며 제주도 공산주의자들의 테러 비난.<sup>113)</sup>
- 5월 7일 경무부장 조병옥, 선거 당일 치안대책 발표.<sup>114)</sup>  
번하이젤 중위, 구좌면 투표소 방문.  
제59군정중대 데이비드 켈리(David C. Kelly Jr.) 대위, 조천면 투표소 방문.<sup>115)</sup>
- 5월 8일 딘 소장 회견, “북조선 공산군 간자(間者)가 5·10선거에 반대하는 테러전에 종사하는 게릴라를 지휘하기 위해 제주도에 상륙하였다”고 주장.<sup>116)</sup>  
주한미군사령부, 5·10선거 대비 미군에 특별경계령.<sup>117)</sup>  
주한미군사령부 군수참모부가 제59군정중대 사령관에게 “5월 7일자 무전과 관련해 카빈총 탄환 1만6천발, 탄약 30통을 5월 10일 월요일 쿠리어 항공편으로 보내겠다”고 무전.<sup>118)</sup>
- 5월 10일 남한 5·10선거 실시.  
미구축함과 순양함 등 2척 남한 해역에 정박.<sup>119)</sup>
- 5월 11일 극동사령부, 미군정이 구축함 2척과 전투기 파견을 요청해 구축함을 제주도

109) 『조선일보』 1948년 5월 3일.

110) 『조선일보』 1948년 5월 4일.

111) 『서울신문』 1948년 5월 4일.

112) 『조선일보』 1948년 5월 6일.

113) Outgoing Telegram, article of Washington News, 5 May 1948.

114) 『동아일보』 1948년 5월 8일.

115) Report of General Observation of MG Election Observation Teams, Cheju Island, MG Report.

116) 『우리신문』 1948년 5월 8일.

117) 『서울신문』 1948년 5월 9일.

118) John L. Ryan Jr., Maj., G-4 Section USAMGIK to CO, 59th Mil. Govt. Co., 8 May 1948.

119) 『동아일보』 1948년 4월 30일.

연안에 파견했다고 보고.<sup>120)</sup>

유엔조선임시위원단 감시8반 프랑스 대표 코스티에(Henry Costilhes)는 “제주도의 긴장상태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청년단체들은 과도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제주도 소요는 좌우익간의 충돌이 아니라 제주도에서 계층간 수세기 동안 이어져온 켄터키식 반목 때문”이라며 “전체적으로 훌륭하게 선거가 실시됐다”고 보고.<sup>121)</sup>

5월 12일 미구축함 크레이그호 제주도 파견.<sup>122)</sup>

극동사령부 해군사령관이 크레이그호 함장에게 제주도에 도착하는 즉시 맨스필드 중령에게 신고하고, 필요시 도움을 제공할 준비를 하도록 지시.<sup>123)</sup>

통위부 고문관 테릴 프라이스 대령이 제9연대 미고문관에게 스탠리(Stanley) 중령이 첫 비행기로 제주도에 갈 것이라고 무전.<sup>124)</sup>

하지 중장, “조선에서 거행된 최초의 민주주의적 총선거가 성공리에 끝났다고 발표.<sup>125)</sup>

미국무장관 마샬, “공산당 소수파의 방해와 사보타주에도 불구하고 남한 선거는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조선인의 결의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격찬.<sup>126)</sup>

5월 13일 크레이그호 함장이 극동군사령부 해군사령관에게 “제주도에 70명의 미국인이 있으나 아무런 위협이 없다”고 보고.<sup>127)</sup>

5월 14일 미보병 제6사단 제20연대 1개 혼성소대 제주도 도착.<sup>128)</sup>

5월 15일 하지 중장, 5·10선거 결과는 공산주의에 대한 민주주의 승리라고 선언.<sup>129)</sup>  
제20연대 1개 혼성소대 제주도 도착.<sup>130)</sup>

5월 중순 미보병 제6사단 제20연대장 로스웰 브라운 대령, 제주도 최고 지휘관으로 부임. 참모로는 포티어스(Portius) 소령, 제임스 리치(James Leach) 대위, 몽고

---

120) GHQ. FEC.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General Staff, No. 2105, 13 May 1948.

121) Memorandum for General Hodge, Subj: Daily Report of UNTCOK Activities for Tuesday, 11 May, John Weckerling to Hodge, 12 May 1948.

122) GHQ. FEC.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General Staff, No. 2105, 13 May 1948.

123) 미극동군사령부 해군사령관이 구축함 크레이그호 함장에게, 작전명령, 1948년 5월 12일, 제주 4·3위원회, 앞의 책 10, 143-144쪽.

124) Radiogram, Col. Terrill E. Price, Department of Internal Security to American Advisor, 9th Regiment, Korean Constabulary, 12 May 1948.

125) 『경향신문』 1948년 5월 13일.

126) 『동아일보』 1948년 5월 14일.

127) 크레이그호 함장이 극동사령부 해군사령관에게, 작전명령, 1948년 5월 13일, 제주 4·3위원회, 앞의 책 10, 144쪽.

128) Hq. XXIV Corps, 앞의 글, No. 26, 22 May 1948.

129) 극동사령부 군사정보국 정보요약 제2107호, 1948년 5월 15일, 제주 4·3위원회, 앞의 책 10, 38쪽.

130) CG. XXIV Corps, Operations Summary No. 21, 21 May 1948.

- 메리(Montgomery) 중위와 기타 2-3명의 미군 장교들이 있었다.<sup>131)</sup>
- 5월 19일 국회선거위원회, 딘 소장에게 제주도 선거 무효 건의.<sup>132)</sup>  
 미보병 제6사단장이 로스웰 브라운 대령에게 “제주도의 주요 문제가 경찰의 증오심에 의해 발생했다고 인식하며 이런 소요는 시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인사들을 교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자극 요인들을 제거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고 서한.<sup>133)</sup>
- 5월 22일 향보단 해산.<sup>134)</sup>
- 5월 23일 하지 중장이 합창의장에게 “제주도는 유일하게 투표율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유일한 곳이다. 인구 30만여명의 제주도는 본토에 저항한 오랜 반란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다수의 선동자들을 제주도에 잠입시킬 수 있었으며, 선거위원들이 많은 선거구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두려워할 정도로 주민들에 대한 테러를 가하기 위해 폭도집단을 규합했다”고 보고.<sup>135)</sup>
- 5월 24일 딘 소장, 제주도 선거 무효 선언 및 6월 23일 재선거 실시 발표.<sup>136)</sup>
- 5월 27일 제주비상경비사령관 최천, 미군사령관 로스웰 브라운 대령과 회담 뒤 올해 하곡수집 계획 철회 등 발표.<sup>137)</sup>
- 5월 28일 제주도 산업국장 임관호, 제주도지사에 임명.<sup>138)</sup>
- 5월 29일 주한미군사령관이 육군성 정보국에 “일부 군사고문관들은 제9연대 병사들이 반군에 동정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제9연대를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sup>139)</sup>
- 5월 31일 남조선과도정부 중앙경제위원회 통계국장 아더 피터슨(Arthur G. Peterson)

131) 찰스 웨슬로스키 증언.

132) Inclosure No. 54, Subj: Re the Invalidation of the Elections made in some Electoral District of Che Choo Do, Ro Chin Sul, Chairman, National Election Committee to Maj. Gen. W. F. Dean, Military Governor, MG Report, 앞의 글.

133) 미 보병 제6사단장 올랜도 워드(Orlando Ward) 소장이 제20연대장 로스웰 브라운(Rothwell H. Brown) 대령에게, 서한, 1949년 5월 19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8, 56-57쪽.

134) 『서울신문』 1948년 5월 26일.

135) 제목: 정치상황요약, 주한미군사령관이 합창의장에게, 1948년 5월 23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7, 241쪽.

136) Inclosure No. 54, Subj: Re the Invalidation of the Elections made in some Electoral District of Che Choo Do, Ro Chin Sul, Chairman, National Election Committee to Maj. Gen. W. F. Dean, Military Governor, MG Report, 앞의 글, 『조선일보』 1948년 5월 27일.

137) 『경향신문』 1948년 6월 3일.

138) 『동아일보』 1948년 7월 14일.

139) 주한미군사령관이 미육군성 정보국에 보내는 서한. 제목: 제9연대 41명 탈주, 1948년 5월 29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7, p. 245.

은 “제주도는 사실상 내전이 진행되고 있는 정말 뜨거운 지역으로서 소요는 부분적으로 남한의 선거를 반대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선동으로 발발했고, 한편으로는 독재 경찰과 부패 관리들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마음 속에 오래 쌓여있는 원한 때문에 발발했다”고 논평.<sup>140)</sup>

6월 2일 로스웰 브라운 대령은 제주도 정세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5·10 선거 때에는 성적이 좋지 못하였는데 백성들을 보호함으로써 6월 23일 재선거시에는 자유롭게 자기네의 대표를 선출하도록 될 것이다. 여하간 사태는 6월 23일까지에는 진정될 것이다”고 천명.<sup>141)</sup>

로스웰 브라운 대령의 명의로 올해분 제주도 하곡수집 계획 철회와 귀순을 촉구하는 유인물을 한라산 지역에 공중살포.<sup>142)</sup>

6월 3일 미군정청 공보원, 제주도지사에게 임관호가 임명됐다는 호의를 공중살포.<sup>143)</sup>

6월 10일 딘 소장, 제주도 재선거를 무기연기하는 행정명령 제22호 발표.<sup>144)</sup>

6월 11일 제주경찰감찰청장 최천, 부하 감독이 불충분했다는 이유로 정직.<sup>145)</sup>

6월 15일 군정장관 대리 존 쿨터(John B. Coulter) 소장, 제주도 상황 파악하기 위해 방문. 쿨터는 경찰의 가혹행위와 난폭한 관리들의 부패가 불만요소로 파악. 브라운 대령으로부터 제주도민의 80%가 공산주의자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고 보고받음.<sup>146)</sup>

6월 17일 제9연대장 박진경의 대령 진급식에 딘 소장, 윌리엄 로버츠 준장 등 군정 수뇌부 대거 참석.<sup>147)</sup>

6월 18일 제9연대장 박진경의 암살사건과 관련해 딘 소장, 윌리엄 로버츠 준장 등 다시 제주도 방문.<sup>148)</sup>

6월 중순 찰스 웨솔로스키(Charles L. Wesolowsky) 중위가 제11연대 부고문관으로 부임한 뒤 제9연대 고문관으로 근무.

140) USAMGIK, South Korean Interim Government Activities No. 32, 31 May 1948.

141) 『현대일보』 1948년 6월 3일.

142) 로스웰 브라운 대령 명의로의 유인물, 1948년 6월 2일.

143) 제주4·3연구소, 『제주4·3자료집Ⅱ-미국무성 제주도관계 문서』(제주: 각, 2002), p. 482.

144) Despatch No. 237, Subj: South Korean Interim Government Executive Order No. 22, By-Election on Island of Cheju Do Idefinitely Postponed, Joseph E. Jacobs, United States Political Advisor to the Secretary of State, July 28, 1948, 『서울신문』 1948년 6월 13일.

145) 『한성일보』 1948년 6월 18일.

146) Despatch No. 199, Memorandum for the CG. Subj: Visit on Cheju Do, 15 June, 1948, Subj: Disturbances on Cheju Island, Joseph E. Jacobs, United States Political Advisor to the Secretary of State, July 2, 1948.

147) 찰스 웨솔로스키 증언.

148) 위의 증언.



- 6월 21일 재경 제주도친목회 제우회, 하지 중장과 UNTCOK에 현재의 토벌작전을 반대하고 평화적 진압을 원하는 내용의 청원서 제출.<sup>149)</sup>
- 6월 21일 로버츠 준장이 브라운 대령에게 보낸 비망록. 브라운의 요청에 따라 파견하는 장교들에 대해 언급. 오늘자로 최경록을 11연대장으로 송요찬을 부연대장으로 파견함. “나는 최경록을 좋아하며, 송 소령은 강인하고 용감한 사람이다. 송 소령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최상의 장교이며, 그를 감찰관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sup>150)</sup>
- 6월 25일 “경무부장 조병옥은 제주도 소요 책임은 현지 판사, 행정관료, 경찰들의 위법행위에 있다는 것이 사회 제분야 여론이지만 이런 위법행위는 직접적이지는 않고, 간접적이라고 마지못해 인정했다. 평양방송은 미군 사령관이 제주도의 모든 주민을 죽여야 한다고 보도했다”<sup>151)</sup>
- UNTCOK, “5·10선거 결과는 한국 총인구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에서 선거인의 유효한 자유의사의 표현이며, 그들의 자유의사를 정확히 표현한 것”이라고 발표.<sup>152)</sup>
- 6월 30일 “경찰이나 경비대 양쪽 모두 미군 고위 장교의 지휘 아래 있다. 미군사령관은 반란의 원인은 모르며, 자신의 임무는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sup>153)</sup>
- 7월 1일 브라운 대령은 딘 소장에게 보낸 ‘1948년 5월 22일부터 1948년 6월 30일까지 제주도에서의 활동보고서’ 제출.<sup>154)</sup>
- 7월 3일 로스웰 브라운 대령이 제6사단장 올랜도 워드(Orlando Ward) 소장에게 “제주도가 공산주의자들의 거점으로 조직됐다는 사실은 명백하다”며 “제주도 소요는 경찰의 잔악성과 비효율적인 행정기관도 원인이었지만 제주도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계획에 비하면 지엽적인 원인들”이라고 밝힘.<sup>155)</sup>
- 부산 제우회, 하지 중장과 딘 소장, 유엔조선임시위원단에 제주도 사태의 평화적 해결 진정.<sup>156)</sup>
- 7월 9일 UNTCOK 프랑스 대표 폴 봉쿨, 유엔에 제출할 보고서와 관련해 한국의 일부

149) 『조선일보』 1948년 6월 22일.

150) 로버츠 준장이 브라운 대령에게 보내는 비망록, 1948년 6월 21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8, 89쪽.

151) USAMGIK, South Korean Interim Government Activities No. 33, 25 June 1948.

152) 유엔조선위원단, 앞의 글, 134-135쪽.

153) USAMGIK, *South Korean Interim Government Activities* No. 33, June 1948, p. 160.

154) Subj: Report of Activities on Chejudo Island from 22 May 1948, to 30 June 194, Rothwell H. Brown, Col. to CG. USAMGIK, 1 July 1948.(이하 Brown Report)

155) 로스웰 브라운 대령이 제6사단장 올랜도 워드 소장에게 보내는 서한, 1948년 7월 2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9, 37쪽.

156) 『한성일보』 1948년 7월 9일.

- 지역 상황은 심각하며, 제주도는 내전상황에 직면했다고 언급.<sup>157)</sup>
- 7월 15일 재경 제주출신 학생 친목단체 백록학우회, 하지 중장과 딘 소장, UNTCOK에 제주도 사태의 평화적 해결 진정.<sup>158)</sup>
- 7월 17일 딘 소장이 제주도 군정중대 사령관 에드가 노엘(Edgar A. Noel) 소령에게 브라운 대령의 활동보고서를 동봉한 서한을 보내고 “브라운 대령의 건의가 완전 이행되기를 바란다”며 “서울에 있는 모든 정부부처에도 제주도를 최우선 관심지역으로 두도록 지시했으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제주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sup>159)</sup>
- 7월 20일 제20연대 제주도 파견대장 에드워드 콜린(Edward J. Collin) 중위가 21일 미해군 구축함과 순양함 도착 계획에 대해 제59군정중대 사령관 노엘 소령과 전화통화했다고 보고, CIC 소속 스톱스(Stoops)와 홍등가 급습했으나 미군 병사들의 의류만 발견.<sup>160)</sup>
- 7월 21일 제주도 파견대장 에드워드 콜린 중위, 의무장교 리(Lee) 중위와 제주도의 매독 감염률이 높다는 데 대해 논의함. 지난 2개월 동안 병사 7명이 매독 감염.<sup>161)</sup>
- 7월 23일 경무부장 조병욱, “제주도 사태는 조선로동당의 선동전략과 지령, 선전활동이 주요 이유로서, 단순조치로는 해결될 수 없다. 선무와 교훈정책은 강력한 정책이 뒤따를 때만 효과적”이라고 언급.<sup>162)</sup>
- 7월 25일 제주도에 있는 스위니(Sweeny), 도우슨(Dawson) 신부는 미군이 떠나면 그날로 제주도에 내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제주도 파견대장 콜린 중위에게 밝힘.<sup>163)</sup>
- 7월 27일 제9연대 고문관 웨슬로스키 중위가 제주도파견대장 콜린 중위에게 어승생악과 노로악 인근에서 벌어진 경비대 작전에 관한 보고서를 건네줌. 1개 연대 전체가 이 작전에 참가했으며 M1 실탄 3만여발 사용.<sup>164)</sup>
- 7월 30일 딘 소장이 경무부장에게 “현 시점에서 제주도의 임시 과잉경찰력을 급속히 감축해서는 안된다. 항상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 1인자라고 경찰과 경비대는 치안과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지사의 도구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

157) U.N. Document, A/AC.19/SR.79, 10 July 1948.

158) 『서울신문』 1948년 7월 16일.

159) W. F. Dean, Military Governor to Major Edgar A. Noel, CCAO of 59th MG Company, 17 July 1948.

160) 제주도 파견대장 에드워드 콜린 중위가 제20연대장에게, 제주도 파견대 주간일지, 1948년 7월 20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9, 80쪽.

161) 위의 글.

162) Opinion on the settlement of the Cheju situation, Koh Pyung Uk, Superintendent of National Police Department, 23 July 1948.

163) 에드워드 콜린 중위, 앞의 글, 1948년 7월 25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9, 81쪽.

164) 위의 글, 1948년 7월 27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9, 82쪽.

- 해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 보냄.<sup>165)</sup>
- 8월 2일 시코어(Secore) 대위, 리드(Reed) 대위, 야고다(Jagoda) 대위가 낮 12시 35분 제주에 도착.<sup>166)</sup>
- 8월 3일 시코어 대위, 리드 대위, 야고다 대위, 웨솔로스키 중위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총살형 집행대에 의한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 3명에 대한 처형이 오후 3시30분 집행됨.<sup>167)</sup>
- 8월 4일 시코어 대위 제주도 이도.<sup>168)</sup>
- 8월 5일 제6사단장이 사단 작전참모부에 “보병 제1연대는 8월 26일부터 제주도에 1개 소총소대를 지휘, 작전, 보급할 책임을 지고, 이 소대를 활용해 군정중대나 유사한 미당국을 지원하며, 미국인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한 소요에 개입하지 않을 것”을 지시.<sup>169)</sup>
- 8월 6일 야고다 대위와 리드 대위 제주도 이도, 마이너 켈소(Minor L. Kelso) 중위가 제주도에 도착해 제3대대 고문관으로 배속됨.<sup>170)</sup>
- 8월 8일 딘 소장이 노엘 소령에게 “귀관의 임무는 이전처럼 자문하는 것이고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현직의 한국인들과 어떠한 직책이라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힘.<sup>171)</sup>
- 8월 중순 버제스(F. V. Burgess) 대위가 제9연대 고문관으로 부임.
- 8월 13일 박진경 연대장 암살사건 관련 고등군법재판에서 경비대 총사령부 총참모장 정일권 대령은 5월 3일 이후 브라운 소장<sup>172)</sup>, 딘 군정장관 등의 현지 지휘 사령부의 명령에 의해 단시일 해결책으로 공격작전으로 나가게 됐다고 증언.<sup>173)</sup>
- 제13연대장 김익렬 중령(전 제9연대장)은 “모든 군사행동은 당시 최고작전 회의 참모인 드루스 미군 대위의 지휘였다”고 증언.<sup>174)</sup>
-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165) Memorandum To: Director, National Police, Thru: Advisor, National Police, Subj: A Summary Report on the Jei-Ju Police, W. F. Dean, Military Governor, 30 July 1948.

166) 9th Regiment Daily Report, 2 Aug 1948, Lt. Charles L. Wesolowsky.

167) 위의 글, 3 Aug 1948.

168) 9th Regiment Daily Report, 4 Aug 1948.

169) 미보병 제6사단장 야전명령 제7호, 1948년 8월 5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8, 57-59쪽.

170) 9th Regiment Daily Report, 6 Aug 1948.

171) W. F. Dean to Major Edgar A. Noel, CO of 59th Military Government Company, 8 Aug 1948.

172) 로스웰 브라운 대령의 오기로 보인다.

173) 『한성일보』 1948년 8월 14일.

174) 『국제신문』 1948년 8월 14일.

- 8월 18일 제9연대 고문관 웨슬로스키 중위는 지시에 따라 서울로 귀환.<sup>175)</sup>
- 8월 24일 유엔조선임시위원단 캐나다 대표 패터슨(Patterson), 유엔에 제출할 보고서에 선거불만과 관련해 제주도의 선거 연기 문제가 거론돼야 한다고 주장.<sup>176)</sup>
- 8월 25일 미보병 제6사단 제1연대 제2대대 E중대 제1소대가 제주도 도착.<sup>177)</sup>  
제주도파견대장 에드워드 콜린 중위가 제1연대 E중대 조셉 워터버리(Joseph Waterbury) 중위에게 지휘권 넘김.<sup>178)</sup>
- 8월 27일 제20연대 1개 혼성소대 오전 7시 제주 출발.<sup>179)</sup>
- 8월 29일 응원경찰 800명, 제주도 파견.<sup>180)</sup>
- 8월 31일 판사들이 제주도에서 재판하는 것을 두려워하자 군정장관의 승인으로 광주에서 재판.<sup>181)</sup>
- 9월 제9연대 고문관에 해롤드 피쉬그룬드(Harold S. Fischgrund) 대위 부임.<sup>182)</sup>
- 9월 3일 제주경찰감찰청장 김봉호, 청장회의 참가 뒤 “응원대 내도는 단순한 증원이 아니라 단시일간에 사태의 전면적 결말을 짓기 위함이며, 딘 군정장관을 비롯한 중앙 권위쪽에서 미리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언급.<sup>183)</sup>
- 9월 13일 군사고문단장, “제주도 주둔 고문관들이 철수일까지 제주도에 남아있을 것이며, 비행장 막사에 거주할 것”이라고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보고.<sup>184)</sup>
- 9월 23일 미보병 제6사단 제1연대 제2대대 1개 혼성소총소대 제주도 도착.<sup>185)</sup>
- 9월 29일 통위부 고문관겸 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이 이범석 국무총리에게 “국방경비대의 작전통제권은 여전히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있으며, 경비대의 작전에 관한 모든 명령은 발표되기전에 해당 미고문관을 통과하여야 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는 내용을 상기시킴.<sup>186)</sup>
- 10월 6일 미보병 제6사단 제1연대 제2대대 1개 혼성소총소대 제주도 도착.<sup>187)</sup>

175) 9th Regiment Daily Report, 18 Aug 1948. 제9연대 고문관 Capt. F.V. Burgess.

176) U.N. Document, A/AC.19/SR.98, 25 Aug 1948.

177) Hq. XXIV Corps, 앞의 글, 28 Aug 1948.

178) 에드워드 콜린 중위, 앞의 글, 1948년 8월 25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9, 84쪽.

179) Hq. XXIV Corps, 앞의 글, No. 45, 4 Sept 1948.

180) 『조선중앙일보』 1948년 9월 1일.

181) USAMGIK, South Korea Interim Government Activities No. 34, 31 Aug 1948.

182) 해롤드 피쉬그룬드 증언.

183) 『서울신문』 1948년 9월 3일.

184) 주한미군사령관이 군사고문단장에게, 주간활동요약, 1948년 9월 13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8, 71쪽.

185) Hq. XXIV Corps, 앞의 글, No. 49, 2 Oct 1948.

186) 통위부 고문관 로버츠 준장이 국무총리 이범석에게 보내는 서한, 1948년 9월 29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8, 90-91쪽.

187) Hq. XXIV Corps, 앞의 글, No. 51, 9 Oct 1948.

- 제59군정중대 사령관 노엘 소령이 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에게 보스 (Voss) 중령의 요청이 기재된 무전기와 무기, 실탄 등의 보급 요청.<sup>188)</sup>
- 10월 9일 로버츠 준장이 제5여단 고문관 트레드웰(James H. W. Treadwell) 대위에게 “제9연대의 현재 작전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 보급 지원은 제5여단의 임무이지만, 제5여단은 적절한 지원을 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지휘계통을 통해 미군 고문관들 입장에서 즉각적인 시정행위를 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힘.<sup>189)</sup>
- 10월 22일 유엔 총회에 참석중인 웰즈(Wells)가 워싱턴으로 소련이 파리 유엔 총회에서 제주도 5·10선거가 실패했고, 제주도 인민들의 5·10선거 반대 때문에 이른바 국회에는 아직도 2석이 공석이라는 언급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급송문서 보냄.<sup>190)</sup>
- 주한미군사령부 G-3 고문관 웨스트(West)가 제9연대 고문관 버제스 (F. V. Burgess) 대위에게 “제주도 경찰을 시작하고 본토에서 파견된 반란군일 가능성이 있는 인물을 찾아낼 것”을 지시.<sup>191)</sup>
- 11월 3일 무초는 국무성에 “제주도 공산주의자를 섬멸하는데 있어 정부의 눈에 보이는 무능력에 대한 긴장감이 있다”고 보고.<sup>192)</sup>
- 11월 8일 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이 제24군단사령관에게 제주도에 반란군들에 대한 군경의 작전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고, 송요찬 연대장은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보고.<sup>193)</sup>
- 11월 12일 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이 주한미군사령관에게 “CIA의 활동이 우수하고 제주도에 있는 3개 대대를 주로 서북청년회원으로 충원할 계획” 보고.<sup>194)</sup>
- 11월 17일 정체불명의 전투기 6대가 제주도에 접근하는 것이 관찰됨. 이 전투기들이 관측되기 얼마전 B-29와 비슷한 유형의 폭격기가 2천피트 상공에서 제주도를 선회하는 것이 관측됨.<sup>195)</sup>

188) 제59군정중대 사령관이 군사고문단장에게 전문. 제목: 국방경비대 제9연대 교전, 1948년 10월 6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9, 85쪽.

189) 로버츠 준장이 트레드웰 대위에게 보낸 서한, 제목: 제5여단 소속 미군 고문관의 지위 및 능력, 1948년 10월 9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8, 91-92쪽.

190) Office Memorandum, UNP-Mr. Wells to DC/R, Oct 22, 1948.

191) Radio 32, Message, West, Advisor, G-3 to Capt. Burgess, Chejudo, 1250 22 Oct 1948.

192) Despatch No. 180, Muccio to Secretary of State, Nov 3, 1949.

193) 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이 제24군단 사령관에게, 군사고문단 주간활동, 1948년 11월 8일, 11월 15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8, 72-73쪽.

194) 군사고문단장이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주간활동요약, 1948년 11월 15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8, 71-72쪽.

195) 극동사령부 군사정보국 정보요약 제2265호, 1948년 11월 20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10, 79쪽.

- 11월 22일 미군 항공정찰대, 제주읍 산천단 항공정찰.<sup>196)</sup>  
 미사절단이 국무성에 한국정부 공보부위 발표와 관련해 “계엄령과 관련한 질문에 덧붙여 아직까지 진짜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았다. 언어 장벽 때문에 일부 오역이 있어왔다. 제주도와 순천과 같은 폭동지역에 아직도 효력을 발생중인 것은 ‘비상사태’일 것이다”고 보고.<sup>197)</sup>
- 11월 27일 제주도 상공에서 관측된 비행기는 미군기로 확인됨. 이전의 보고를 근거해 비행기들이 소련기라고 생각했던 것임.<sup>198)</sup>
- 11월 30일 미보병 제6사단 제1연대 제2대대 1개 혼성소총소대 제주도 도착.<sup>199)</sup>
- 12월 6일 군사고문단장이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송요찬 연대장의 적극 공세로 반란군들이 서서히 진압되고 있다”고 보고.<sup>200)</sup>  
 송요찬 연대장이 제24군단 사령관에게 “10월 10일부터 임무를 수행한 정찰 조종사 프레드 에릭슨(Fred M. Erricson) 중위가 반란군의 집결지, 사령부, 정부군과 반군간의 전투상황을 제9연대에 넘겨줘 부대를 출동시켜 진압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감사를 표시.<sup>201)</sup>
- 12월 15일 미보병 제6사단 제1연대 제2대대 1개 혼성소총소대 제주도 도착.<sup>202)</sup>
- 12월 20일 로버츠 준장이 이범석 국무총리에게 “송요찬 중령은 제주도민들의 적대적인 태도를 우호적, 협조적인 태도로 바꾸는데 대단한 지휘력을 발휘했다. 본관은 이런 사실이 언론과 대통령의 성명에 의해 일반에게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서한.<sup>203)</sup>
- 12월 21일 국방부 총참모장 채병덕이 로버츠 준장에게 “송요찬 중령과 미고문관은 매우 적대적인 제주도에서 어렵고 힘든 임무를 수행하는데 훌륭한 능력을 보여주었다”며 “가까운 장래에 국방부 총참모장 담화에 의해 소개되고, 대통령 성명을 발표하도록 추천할 것”이라고 답신.<sup>204)</sup>

196)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994, 22 Nov 1948.

197) Seoul Mission No. 226, 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 Nov 23, 1948.

198) 극동사령부 군사정보국 정보요약 제2271호, 1948년 11월 27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10, 81-83쪽.

199) Hq. XXIV Corps, 앞의 글, No. 61, 4 Dec 1948.

200) 군사고문단장이 주한미군사령관에게, 군사고문단 주간활동, 1948년 12월 6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8, 74-75쪽.

201) 송요찬 연대장이 제24군단 사령관에게, 서한, 경유: 군사고문단장, 제목: 프레드 에릭슨(Fred M. Erricson) 중위에 대한 추천, 1948년 12월 6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10, 206쪽.

202) Hq. XXIV Corps, 앞의 글, No. 63, 18 Dec 1948.

203) 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이 국무총리 이범석에게 보내는 서한. 이 서한은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국방부 총참모장, 참모총장, 한국군 미고문관이 참조하도록 했다. 1948년 12월 18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8, 97-99쪽.

204) 국방부 총참모장 채병덕 준장이 로버츠 준장에게, 서한, 1948년 12월 21일, 제주4·3위원회,

- 12월 22일 국방경비대 제2연대 제1대대 제주도 도착. 31일까지 연대 교체가 이뤄짐.  
 12월 제9연대 철수로 고문관 해롤드 피쉬그룬드가 이동하자 제2연대 고문관으로 사브레스키(Sabreski) 부임.<sup>205)</sup>

1949년

- 1월 11일 제6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으로 모슬포, 성산포의 각 경찰서 증설안 통과.<sup>206)</sup>  
 1월 21일 제12회 국무회의에서 이승만은 “미국측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동정을 표하나 제주도, 전남사건의 여파를 완전히 발근색원(拔根塞源)하여야 원조가 적극화할 것이고, 지방 토색 반도 및 절도 등 악당을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하여 법의 존엄을 표시할 것이 요청된다”고 발언.<sup>207)</sup>  
 1월 28일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이승만은 “제주도 사태는 미해군이 기항하여 호결과를 냈다하며 군 1개 대대, 경찰 1천명을 증파하게 됐으니 조속히 완정(完征)하여 주기 바란다”고 발언.<sup>208)</sup>  
 1월 31일 한국군 제6여단 유격대대 제주도 도착.<sup>209)</sup>  
 2월 2일 이승만이 굿펠로우에게 제주도에 대규모 경찰응원대를 파견했기 때문에 조만간 진압될 것이라고 언급.<sup>210)</sup>  
 2월 10일 군사고문단 보급고문관 우스터스(P. C. Woosters) 중령이 군사고문단장에게 “한국군과 경찰의 지역민에 대한 우월적 태도는 불필요하게 평화스런 시민들을 자극해 폭도활동에 가담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재판없이 지역민들을 처형해 계속적으로 주민들을 자극하고 있다”고 보고.<sup>211)</sup>  
 2월 15일 제주도 스위니 신부가 서울의 조지 캐롤 신부에게 “제주도 희생자는 최고 1만5천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소실 가옥수도 1만채를 넘고 있고, 주민들은 하루 평균 고구마 한 개를 먹고 있다”는 내용의 서한.<sup>212)</sup>  
 2월 20일 제주읍 도두리에서 ‘반도’ 76명 처형을 미군사고문단원 4명이 목격. 미군은

앞의 책 10, 206-207쪽.

205) 해롤드 피쉬그룬드 증언.

206) 제6회 국무회의록, 1949년 1월 11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4, 15쪽.

207) 제12회 국무회의록, 1949년 1월 21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4, 17쪽.

208) 제14회 국무회의록, 1949년 1월 28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4, 18쪽.

209) Hq. XXIV Corps, 앞의 글, No. 5, 5 Feb 1949.

210) Letr, Syngman Rhee, President to Col. Goodfellow, Feb 2, 1949.

211) 군사고문단 보급고문관 우스터스 중령이 군사고문단장에게, 제목: 보급 고문관의 제주도 제2연대 시찰보고, 1949년 2월 10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8, 109-110쪽.

212) 오스틴 스위니(Austin Sweeny)가 조지 캐롤(George Carroll)에게 보내는 서한, 1949년 2월 15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11, 67-68쪽.

“미군은 폭도라 하더라도 반인륜적 잔인성과 적법절차의 부정은 한국 고위 관리들의 관심을 강력히 불러일으켰으며, 그러한 폭력행위는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정반대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고 논평.<sup>213)</sup>

3월 8일 제25회 국무회의에서 이승만은 “제주도, 전남 등지를 국방, 내무 양장관은 철저히 소탕할 것이며, 불가능이면 결정적으로 보고하여 주기 바란다”고 발언.<sup>214)</sup>

3월 10일 국무총리겸 국방장관 이범석과 내무장관 신성모가 제주도 시찰.<sup>215)</sup>

주한미사절단 드럼라이트가 로버츠 준장에게 “제주도의 스위니 신부가 캐롤 신부에게 보낸 서한의 사본을 동봉하는데 이를 보면 제주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는데 동의할 것이라고 믿는다”는 서한.<sup>216)</sup>

존 로지어(John Rozier)가 참사관 드럼라이트에게 제주도 국회의원 오용국 등 제주도민 대표들이 경제상황에 대해 아더 번스 박사, 로버트 킨니와 협의를 나눈 내용 보고. 도민 대표들은 “가옥 2만채(전체의 3분의 1)가 소실됐고, 학교 건물 34개가 소실됐으며, 면단위 14개 관청이 완전히 파괴됐다. 6만5천 명이 집을 잃었으며 식량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번스 박사는 “경제협조처가 제주도 주민에게 직접 구호를 하는 것을 불가능하지만 한국정부를 통해서 원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킨니는 “신 내무장관과 국무총리가 현재 제주도에 있으며 내무장관은 제주도의 질서를 잡기 위해 당분간 그곳에 머물 것”이라고 말했다.<sup>217)</sup>

3월 11일 주한미군사령관이 드럼라이트에게 “본인은 최근에 한국 정부의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제주도의 게릴라와 군사상황 등에 대해 강력한 서한을 보냈다. 본인은 내무장관에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몇가지 제안을 했다. 본인은 제주도에 유능한 중령을 1명 파견했다. 본인은 제주도에 CIA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본인은 제주도에 새로운 사령관과 참모진을 보냈으며 그들은 현재 우연히도 새로 임명된 사령관 친구인 월터 하버러 중령의 권고를 받아들이며서 신중하게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모든 결과로서 한국정부는 활발히

213)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77, 3 March 1949, 극동군사령부 정보요약 제2375호, 1949년 3월 11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10, 102-103쪽.

214) 제26회 국무회의록, 1949년 3월 8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4, 23쪽.

215) 『동광신문』 1949년 3월 15일, 『자유신문』 1949년 3월 16일.

216) 드럼라이트가 로버츠 장군에게, 제목: 제주도 상황, 1949년 3월 10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64쪽.

217) 존 로지어가 참사관 드럼라이트에게, 비망록, 제목: 번스 박사와 제주도민 대표와의 회담, 1949년 3월 10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11, 66-67쪽.



움직이고 있다...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 나는 오직 고문관일 뿐이다. 고문관의 조언을 그들이 채택하지 않는다면 그만이다. 우리는 지도자들이 해당지역에 신속히 접근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왔으며, 더 많은 지원을 할 의사가 있다”는 서한.<sup>218)</sup>

3월 14일 드럼라이트는 국무성에 2월의 제주도 상황과 관련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전에 비해 더욱 악화됐으며, 이는 한국군 방어에 주력하는 바람에 게릴라들이 섬의 70%를 파괴했기 때문”이라고 보고.<sup>219)</sup>

3월 16일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제주도 작전에 대한 설명. 군은 3기 작전을 하여 제1기에는 군력을 각 부락에 평균 분배하여 인문 지리에 수련케 하고, 제2기는 군력의 중점 재배치한 후, 제3기는 산정을 향하여 공격소탕을 개시케하여 현재는 제3기에 해당함. 무장폭도 200명 가량이며 비무장폭도 1500-2000명으로 이달 말까지 완전 소탕 예정.<sup>220)</sup>

3월 17일 국무총리겸 국방장관 이범석이 국회에서 제주도 사태에 대해 낙관적으로 보고. 이승만은 손원일 제주도 파견해 추가보고토록 조치함.<sup>221)</sup>

3월 30일 제36회 국무회의에서 경찰력 이동배치와 관련해 제주도 1천명 파견경비 가운데 500명만 파견하였으므로, 그 잔여분 예산으로 충남경찰 500명을 전남으로 이동 강화하기로 의결. 이승만은 신임 국방장관에게 ‘적’ 완전소탕을 위해 내일이라도 제주도로 출장할 것을 명령.<sup>222)</sup>

4월 1일 주한미군사령부 G-2, 제9연대가 민간인 대량학살계획을 채택했다고 논평.<sup>223)</sup>

4월 4일 이승만, 무초, 드럼라이트간 대담. 무초는 이승만에게 “제주도와 전남에 만연하는 게릴라 도당을 제거하고 보안군을 훈련시켜 남한에서의 입장을 굳건히 해야 한다”고 주장. 이에 대해 이승만은 “남한에서 공산분자들에 대한 소탕의 중요성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끝내기 위한 조치가 진행중”이라고 밝히고, 국방장관과 사회장관에게 제주도에 가도록 지시.<sup>224)</sup>

제38회 국무회의에서 이승만은 “제주도, 전남지구 사태수습은 반공투쟁상 절

---

218) 주한미군사령관 로버츠 준장이 드럼라이트에게, 제목: 제주도 상황, 1949년 3월 11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11, 64-66쪽.

219) Despatch No. 142, Subj: Political Summary for February 1949, Everett F. Drumright, Counselor of Mission to the Secretary of State, March 14, 1949.

220) 제30회 국무회의록, 1949년 3월 16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4, 24-25쪽.

221)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93, 23 March 1949.

222) 제36회 국무회의록, 1949년 3월 30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4, 26-27쪽.

223)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97, April 1 1949.

224) Despatch No. 200, Inclosure No. 1, Conversation Memorandum, April 4, 1949, Subj: Transmitting a Memorandum of Conversation on Military Aid to Korea and Withdrawal of United States Troops, American Mission in Korea to the State Department, April 5, 1949.

대로 단시일내에 달성할 필요가 있으니 우선 사회장관은 국방장관과 동행한 후 사태수습에 책임을 담당할 것이며 도지사 군수 등은 적극성 있는 인물을 선택하고 청년단, 민병단 조직을 강화하고 해안경비를 엄중히 하여 반공태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sup>225)</sup>

4월 9일 이승만 부부 제주도 방문, 제주도 수석 미군 고문관 월터 하버러(Walter J. Haberer)중령과 신성모 국방장관 동행, 이승만은 연설을 통해 “정부와 미국인들은 항상 제주도에 대해 많이 근심하고 있다”고 연설.<sup>226)</sup>

무초가 국무장관에게 “제주도가 남한에 혼란을 퍼뜨리고 테러를 가하기 위한 소련의 주요한 노력의 장소로 선택됐다는 것은 통제를 받은 라디오 방송에서 나오는 선전의 본질로부터 분명해진다.…신 장관은 그들 가운데 다수가 북한으로부터 소형 어선편으로 제주도에 도착했다고 주장했다”고 보고.<sup>227)</sup>

4월 11일 이승만, 무초 대담. 이승만 토요일인 4월9일의 제주 방문 결과 알려주게 된 데 흥분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을 완전히 섬멸할 것이라고 확신함. 선거는 5월 10일 실시 예정.<sup>228)</sup>

4월 15일 극동사령부 G-2, “최근의 (제주도) 전투에서 노획된 소수의 무기는 사살 당하거나 사로잡힌 포로의 숫자와 비교해 볼 때 반군들이 거의 무장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산악지형의 작은 섬에서 벌어진 전투의 심각성은 살해당한 사람들과 재산의 피해정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약 1만5천여명이 전투에서 죽었으며, 섬에 있는 가옥의 3분의 1이 소실됐다”고 보고.<sup>229)</sup>

4월 16일 군사고문단장이 주한미군사령관에게 한국 국방장관과 군사고문단장간 회담 내용 보고. 합의된 내용은 일부 한국군 병력의 제주도 철수, 전·현 서청회원들을 제주도에서 철수시키는 방안 등이다.<sup>230)</sup>

4월 18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 3일 동안 방문.<sup>231)</sup>

4월 21일 김용관 사살.<sup>232)</sup>

4월 22일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제주도지사 임관호 면직, 후임에 김용하 임명.<sup>233)</sup>

225) 제37회 국무회의록, 1949년 3월 31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4, 27-28쪽.

226) 『자유신문』 1949년 4월 12일.

227) 특사 무초가 국무장관에게, 1949년 4월 9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11, 79쪽.

228) Memorandum of Conversation, Subj: President Rhee's Chejudo Visit and Military Aid, Participants: President Rhee, Muccio, 11 April 1949.

229) 극동사령부 민정정보국 정보요약 제39호, 1949년 4월 15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10, 23-24쪽.

230) 로버츠 장군이 신성모 장관에게, 4월 16일 회담 의사록, 1949년 4월 16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8, 112쪽.

231)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104, 18 April 1949.

232) 『경향신문』 1949년 4월 26일.

- 4월 29일 제5연대 I중대의 장교 1명과 사병 45명으로 구성된 시범소대(Demonstration Platoon)가 제주도에서 귀환.<sup>234)</sup>
- 4월 30일 유엔한위가 제주도 선거 감시 위해 5월 8일 제주도 갈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보 제12호 발표.<sup>235)</sup>
- 5월 2일 군사고문단장이 웨드마이어(Wedemeyer) 중장에게 “제주도에서는 게릴라가 진압됐고 대부분이 무기를 소지한 채 사살되거나 생포됐다. 이승만이 최근 제주도를 방문해 크게 환영을 받았는데 흠린이나 다름없다”고 보고.<sup>236)</sup>
- 5월 4일 주한미대사관 참사관 드럼라이트와 대사관 해군 무관 폴 가블러(Paul Garbler)가 3일 일정으로 한국군과 폭도들 사이에 존재하는 현재의 상황을 직접 보고, 나아가 제주도의 장래 이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제주도 시찰. 드럼라이트는 고문단, 제주도 주둔 한국군 지휘관, 제주도 주민들과 대화를 나눴다. 드럼라이트는 미군사고문단 파견대의 책임관 하스켈 대위, 호튼 소위, 제주도 주둔 한국군 사령관 유재흥 대령, 로이터와 INS 특파원으로 제주도를 취재하기 위해 머물고 있던 사라 박의 영접을 받음.<sup>237)</sup>
- 5월 8일 유엔한국위원단 대표 싱(인도) 앙리 코스티에(프랑스)를 포함해 10명이 제주도 재선거 참관 위해 방문, 5월 13일 귀경.<sup>238)</sup>
- 5월 10일 제주도 재선거 실시.
- 5월 14일 무초가 국무장관에 “국회의 마지막 2석에 대한 제주도 국회의원 선거가 1년 만에 끝났다. 이번 선거는 지난 4개월 동안 제주도에서의 한국군의 활동이 마침내 달성되고 1년 넘게 30만명 가운데 5%가 피살돼 조만간 혼란이 끝나고 평화가 제주도에 오는 통제를 상징화하는 것”이라고 보고.<sup>239)</sup>
- 공보처, 북제주군 을선거구에서 대한청년단 양병직이 5766표로 당선됐고, 양제박은 4764표로 차점자로 발표.<sup>240)</sup>
- 북제주 갑구 국회의원 개표결과는 홍순녕 9664표 당선, 함상훈 8700표 차점.<sup>241)</sup>

233) 제43회 국무회의록, 1949년 4월 22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4, 29-30쪽.

234) Hq. XXIV Corps, 앞의 글, No. 18, 6 May 1949; Demonstration Platoon은 적을 기만할 목적으로 실제 공격방향이 아닌 전선에서 실시하는 부대의 시위로서 실질적 공격은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소대이다.

235) 『경향신문』 1949년 5월 1일.

236) 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이 미육군성 전투작전 기획처장 알버트 웨드마이어(Albert C. Wedemeyer) 중장에게, 서한, 1949년 5월 2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8, 113-114쪽.

237) 드럼라이트, 제목: 제주도 방문, 1949년 5월 18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11, 111쪽.

238) 『국도신문』 1949년 5월 10일.

239) A-171, Muccio to Secretary of State, 14 May 1949.

240) 『국도신문』 1949년 5월 14일.

- 5월 17일 유엔한국위원단 공보 제16호 발표, 제주도 선거 시찰 소감 언급.<sup>242)</sup>
- 5월 19일 제주도 진압작전을 벌인 경찰특별부대 귀환 관련해 이승만 대통령의 환영사를 이범석 국무총리가 대독. “여러분의 공적으로 진압된 제주도의 완전 진압은 비단 대한민국에 대한 큰 충성일 뿐 아니라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을 공산주의 독재로부터 방어하는데 큰 공적이 있는 것이다”<sup>243)</sup>  
극동사령부 G-2, “제주도 2명의 국회의원 당선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200명의 의원을 둔 국회의 모습을 완벽히 갖추게 된 것”이라고 보고.<sup>244)</sup>
- 5월 22일 이승만이 맥아더에게 보낸 서신에서 제주도 소탕작전 훌륭하지 않은 것은 무기 때문이라며 무기 지원 요청.<sup>245)</sup>
- 5월 26일 무초가 자신을 방문한 한국의 국방장관과 교통장관에게 미군 철수 관련해 북한이 전면 침략을 감행할 수 없으며, 제주도와 지리산 작전에서 한국의 특별사령부가 이룩한 성과를 언급하고, 한국의 진압군이 잘 대처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한다고 언급.<sup>246)</sup>
- 6월 7일 이덕구 사살.<sup>247)</sup>
- 6월 9일 유엔한국위원회, 제주도 재선거 참관과 관련해 제주도의 주택 파괴 3만3489채, 피해액수 10억원 이상이며, 가축 4만6천마리 피해 액수 10억원 이상이라고 발표.<sup>248)</sup>
- 6월 10일 김대진 사살.<sup>249)</sup>
- 6월 16일 김용하 제주도지사가 대사관 드림라이트 참사관과 대담. 김 지사는 “제2연대와 서북청년회가 제주도민들에게 너무 고압적이어서 상당한 불만”이라고 발언.<sup>250)</sup>
- 6월 29일 미군사고문단을 제외한 남한의 모든 미군부대 철수.<sup>251)</sup>

241) 『동광신문』 1949년 5월 14일.

242)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Korea, Press Release No. 16, 17 May 1949, 『동광신문』 1949년 5월 19일.

243) 『자유신문』 1949년 5월 19일.

244) 극동사령부 군사정보국 정보요약 제2444호, 1949년 5월 19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10, 120-122쪽.

245) Letr, Syngman Rhee to General MacArthur, May 22, 1949.

246) Despatch No. 607, Muccio to Department of State, 26 May, 1949.

247)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128, 15 June 1949, 『동아일보』 1949년 6월 10일.

248) UNTCOK Document A/AC.26/SC.2/15, 9 June 1949.

249)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128, 15 June 1949.

250) Despatch No. 354, Inclosure No. 1, Memorandum of Conversation No. 63, June 14, 1949, Subj: Views of Governor's affairs in Chejudo, American Embassy to the Secretary of State, 16 June 1949.

- 7월 28일 로버츠 준장이 제2군사령관에게 “제주도에서 반도들의 저항이 확산된 것은 부분적으로는 경찰과 군의 무능한 지휘관 때문이다. 그들은 공산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자비하게 마을 주민들을 살해하고 마을을 불질렀다. 제주도에서 활동하는 부대를 철수시키고 새로운 부대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서한.<sup>252)</sup>
- 8월 14일 정부 수립 1주년을 맞아 이승만의 연설문에 “제주도 공산세력은 지난 봄까지 꺾멸됐고, 선거는 평화적으로 치러졌다”는 내용 포함.<sup>253)</sup>
- 10월 2일 ‘게릴라’ 249명이 이승만의 승인을 받고 제주비행장 인근 해안가에서 처형 됨.<sup>254)</sup>
- 10월 13일 무초는 국무장관에게 “제주도 작전이 너무 파괴적일 정도로 성공해 ‘반도’들이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섬’에서 어떠한 종류의 회복도 할 수 없음을 보고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보고.<sup>255)</sup>
- 11월 11일 제100회 국무회의에서 제주도지사 김용하를 의원면직하고 김충희를 후임에 임명.<sup>256)</sup>
- 11월 22일 군사고문단 G-3 부고문관 해롤드 피쉬그룬드 대위가 장창국 대령 제주도 시찰. 군사고문단장에게 한미경제협조팀의 제주도 감찰, 서청 철수, 군경 고문관의 정기방문, 특무대와 헌병 인원의 감축 등을 건의했다.<sup>257)</sup>

#### 1950년

- 8월 13일 주한미대사관 제주도에 있는 신부가 제주도에서 공산주의자들이 활약하고 있다고 보고.<sup>258)</sup>
- 8월 15일 주한미대사관 해군무관 존 세이퍼트(John P. Seifert), 2등 서기관 도날드 맥도날드(Donald S. Macdonald), 부영사 필립 로우(Philip C. Rowe) 등이 제

251) 극동사령부 군사정보국 정보요약 제2491호, 1949년 7월 5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10, 124-126쪽.

252) 주한미군사고문단 연락사무소가 제2군사령관 멀린스(C. L. Mullins Jr.) 소장에게, 서한, 1949년 7월 28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8, 116-118쪽.

253) Telegram No. 1023, 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 14 Aug 1949.

254) JOINT WEEKA No. 17, 7 Oct 1949.

255) The Ambassador in Korea(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 Oct 13, 1949, *FRUS*, 1949, VII, pp. 1086-1087.

256) 제100회 국무회의록, 1949년 11월 11일,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4, 36쪽.

257) Despatch No. 749, Enclosure No. 1, Subj: Tour of Chejudo by Capt. Fischgrund, 22 Nov, 1949, Subj: Transmitting report by Captain Fischgrund(KMAG) on trip to Cheju Island, 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 Nov 28, 1949.

258) Everett F. Drumright to John M. Allison, Department of State, Aug 29, 1950.

주도 상황 파악 위해 직접 시찰.<sup>259)</sup>

11월 20일 주한미대사관 3등 서기관 존 맥도날드(John E. Macdonald)와 항공연락장교 브라운(Brown) 대위가 제주도의 게릴라 활동 상황 파악 위해 한국 정부 계획 조사.<sup>260)</sup>

---

259) Memorandum for the record, Subj: Conditions on Cheju Island, John P. Seifert, Naval Attache, Donald S. Macdonald, Second Secretary of Embassy, Philip C. Rowe, Vice Consul, Aug 17, 1950.

260) Inclosure No. 1, Subj: Conditions on Cheju Island, John E. MacDonald, Third Secretary, Subj: Transmitting Report on Conditions on Cheju Island, Everett F. Drumright, Counselor of Embassy to the Department of State, Nov 21, 1950.

## 제주도 주둔 미군 장교 일람

### ◎ 제주도 제59군정중대

제59군정중대						
계급	민정장관	재임기간	계급	참모	직책	재임기간
소령	Thurman A. Stout	45.11.9-47.5.9	대위	Samuel J. Stevenson	법무관	47.2-47.12
대위	손훤 (민정장관 대리)	46.8-47.2.10	대위	John S. Partridge	경찰고문관	47.2-47.12
중령	Russel D. Barros	47.4.2-47.12.3	대위	David C. Kelly Jr.	재산관리관, 공보관	47.1.1-48.5
중령	John S. Mansfield	47.12.3-48.5	대위	Robert Burns	공안담당	48.4
소령	Edgar A. Noel	48.5-48.10.8	대위	Lester Chorpeneing	경찰고문관	47.6.13-48.7
			대위	Bangsbollo	경찰고문관	48.8

### ◎ 제주도 주둔 전술부대

미제6사단 제20연대					
계급	연대장	제주파견기간	계급	참모	제주파견기간
대령	Rothwell H. Brown	48.5.중순 -6월말	소령(부대장)	Russell C. Geist Jr.	48.5
			소령	Portius	48.5
			중위(6사단조종사)	Poindexter	48.4
			대위	James Leach	48.5-48.6
			중위	Montgomery	48.5

### ◎ 제주도 주둔 경비대 미고문관

국방경비대 고문관					
	계급	이름	재임기간	거주지	
9연대	대위	James Leach	48.5		
11연대	중위	Charles L. Wesolowsky	48.6-48.7	Florida	
9연대	중위	Charles L. Wesolowsky	48.7-48.8.18		
	1대대 중위	Minor L. Kelso	48.8.6-48.10	Nevada	
	2대대 중위	Joseph M. Edwin	48.8-48.10	Virginia	
9연대	대위	F.V. Burgess	48.8-48.12.8		
	중위	Harold S. Fischgrund	48.9-48.12	Virginia	
	중위	Sabreski	48.12		
	중령	Walter J. Haberer	49.4		
5연대	대위	Clarence D. DeReus	48.4		